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신규과제 발굴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분 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원의 연구진
총괄책임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소장	
총괄분과	이삼식 저출산정책팀장 오영희 평가관리팀장 박중서 선임연구원	최성재 서울대학교 교수 박병현 부산대학교 교수 최 균 한림대학교 교수
저출산분과	이삼식 저출산정책팀장 황나미 연구위원 신윤정 부연구위원 박세경 부연구위원 장보현 연구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사회분과	정경희 고령사회정책팀장 선우덕 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 최병호 건강보험팀장 유근춘 사회재정팀장 이소정 부연구위원 이윤경 선임연구원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준행 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장
성장동력분과	선우덕 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 이수형 선임연구원	김세중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 유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진영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홍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박태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황윤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으로 근대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전통적 가족유형 변화, 가치관 변화, 피임법 보급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보건의료의 발달은 사망률을 감소시켰고 각 지역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화되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과 인구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고, 20세기 후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적 처방으로는 성장동력 기반을 회복하기 힘들다.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을 무한정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일이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평균수명은 계속 상승하여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사회기반을 조속히 구축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한 이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중간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의 중기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둘째는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으로서 5대 지표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190여개의 국정과제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정책간 효과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율 회복을 통해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여성·노인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진정한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정부부처의 기초자료, 관련 의견 등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읽고 검독해준 본원의 장영식 연구위원과 이상영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결과임을 밝혀 둔다.

200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목 차

제1부 도입부	1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내용	22
제3절 연구방법	23
제2장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파급효과	26
제1절 저출산현상	26
제2절 인구고령화	49
제3절 저출산·고령화현상의 파급효과	56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보완의 필요성	67
제1절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	67
제2절 기본계획 수정·보완의 기본원칙	77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수정·보완	80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조	81
제1절 수립경위 및 기본특성	81
제2절 투입 예산	83

제5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86
제1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필요성	86
제2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방향	88
제3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91
 제3부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95
 제6장 저출산부문 기본구성	96
 제7장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향	99
제1절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임 강화’ 부문 중간점검	99
제2절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부문 중간점검	109
제3절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중간점검	111
제4절 저출산부문 종합평가 및 보완방향	118
 제8장 저출산부문 수정보완 방안	129
 제9장 저출산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136
제1절 결혼·임신 출산 사회적임 강화	136
제2절 보육·교육 체계 선진화	192
제3절 직장·가정 조화	237
제4절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263
제5절 가족사랑 문화조성	312

제4부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318

제10장 고령사회부문 기본구성 319

제11장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322

제1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부문 중간점검 322

제2절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부문 중간점검 326

제3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332

제12장 고령사회부문 수정보완 방향 337

제1절 기본계획 점검결과의 적극적 반영 337

제2절 노인의 권리와 욕구의 충실한 반영 341

제3절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345

제13장 고령사회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352

제1절 노후 안전망 구축 352

제2절 노인보호체계 강화 388

제3절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414

제4절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435

제5부 성장동력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459

제14장 성장동력부문 기본구성 460

제15장 성장동력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 방향 462

제1절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부문 중간점검 462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부문 중간점검	468
제3절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471
제4절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부문 중간점검	472
 제16장 성장동력부문 수정보완 방향	475
제1절 종합평가	475
제2절 보완방향	476
 제17장 성장동력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481
제1절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481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504
제3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522
 제6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부문 보완방안	572
 제18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573
제1절 전략적 교육·홍보	573
제2절 정책공동체 운영 및 사회적 합의 실천	581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585
 참고문헌	597
 부 록: 분과별 과제 색인	611
Ⅰ. 저출산부문	611
Ⅱ. 고령사회부문	614
Ⅲ. 성장동력부문	614

표 목차

〈표 2- 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	29
〈표 2- 2〉 초혼연령 변동 추이	33
〈표 2- 3〉 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율(총 출생아수 대비 혼인외 자의 구성비) ...	34
〈표 2- 4〉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5	35
〈표 2- 5〉 유배우부인(20~44세)의 현연령별·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37
〈표 2- 6〉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 1995~2004	38
〈표 2- 7〉 청년층 실업률 추이	40
〈표 2- 8〉 청년층 임시일용직 비율(취업자 중) 변화 추이	41
〈표 2- 9〉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44
〈표 2-10〉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44
〈표 2-11〉 미혼여성(20~44세) 연령별 결혼연기 이유	45
〈표 2-12〉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45
〈표 2-13〉 세대별 구성비 변화	47
〈표 2-14〉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1~2006	48
〈표 2-15〉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49
〈표 2-16〉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50	50
〈표 2-17〉 인구구조 전망, 2005~2050	51
〈표 2-18〉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5~2050	52
〈표 2-19〉 시군구별 인구고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비율), 2007년 기준	53
〈표 2-20〉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54
〈표 2-21〉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이	55
〈표 2-22〉 핵심근로계층(25~49세) 생산가능인구 변동 전망	57

〈표 2-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58
〈표 2-24〉 산업별 평균연령(세) 추이, 1993~2007	59
〈표 2-25〉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전망(2003~2050), 2004	60
〈표 2-26〉 자본스톡 증가율(TFP 증가율=1.5% 가정시) 전망(2003~2050)	61
〈표 2-27〉 노인 1인 가구 변동 전망(2005~2030)	62
〈표 2-28〉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63
〈표 2-29〉 공공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65
〈표 3- 1〉 새정부 국정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연관성	71
〈표 3- 2〉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7	76
〈표 5-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기간과 정책목표	90
〈표 6- 1〉 저출산부문 정책 구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추진계획 ..	98
〈표 7- 1〉 저출산부문 정책별 한계성과 보완방향	114
〈표 9- 1〉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및 성장발달 평가	143
〈표 9-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재원 및 비용: 2008년도	144
〈표 9-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144
〈표 9- 4〉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 장비 현황	148
〈표 9- 5〉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	149
〈표 9- 6〉 유배우 부인(15~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151
〈표 9- 7〉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170
〈표 9- 8〉 임신~출산후 1개월간 의료비 지출사례	170
〈표 9- 9〉 4가구유형별 소득세 부담률 격차 국제비교	184
〈표 9-10〉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도 도입 현황(2008.4월말 현재)	187
〈표 9-11〉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 (2001년 1월 현재)	191
〈표 9-12〉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7	193
〈표 9-13〉 최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와 실적	194
〈표 9-14〉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2007	201

〈표 9-15〉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201
〈표 9-16〉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 2008. 2	205
〈표 9-17〉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2008	205
〈표 9-18〉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선호도, 2005	209
〈표 9-19〉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217
〈표 9-20〉 아동연령별 보육시설이용 월평균비용	218
〈표 9-21〉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219
〈표 9-22〉 초등 보육프로그램 지원 계획	221
〈표 9-23〉 공시 정보의 내용(예시)	225
〈표 9-24〉 2006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	230
〈표 9-25〉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수, 2007	231
〈표 9-26〉 차등보육·교육비 지원계획	234
〈표 9-27〉 만 5세아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계획	235
〈표 9-28〉 산전후휴가급여 활용 실적	238
〈표 9-29〉 육아휴직 활용 실적	240
〈표 9-30〉 OECD 13개국의 모성 및 부성휴가제도 현황	242
〈표 9-31〉 13개 비교대상국가의 여성노동시장 현황	243
〈표 9-32〉 GDP 대비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	245
〈표 9-33〉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상태 및 휴가사용 현황	246
〈표 9-34〉 부모휴가제도 현황	247
〈표 9-35〉 주요국의 산전후휴가 사례	249
〈표 9-36〉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일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 ..	253
〈표 9-37〉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급실적	254
〈표 9-3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문 세부 사업별 점검결과 요약	266
〈표 9-39〉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률	272

〈표 9-40〉 시범사업 대상 아동수 및 추정 시범사업 예산규모(안)	280
〈표 9-41〉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07. 3월 기준)	281
〈표 9-42〉 2007년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288
〈표 9-43〉 소득수준에 따른 취약지역과 일반지역의 특성	295
〈표 9-44〉 아동기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WIC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비교	296
〈표 9-45〉 지역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수	298
〈표 9-46〉 우리나라 아동발달계좌(CDA)의 적립수준	302
〈표 9-47〉 아동발달계좌(CDA)의 월별 저축현황 추이	302
〈표 9-48〉 영국 아동신탁기금(CTF)의 아동 생년월일 기준 지급 수준	304
〈표 9-49〉 주요 국가의 아동발달계좌 유사 프로그램의 비교	305
〈표 9-50〉 아동발달계좌(CDA) 대상아동 확충방안	306
〈표 9-51〉 국외입양 추이, 1958~2007	307
〈표 10- 1〉 고령사회부문 정책 구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추진계획	321
〈표 12- 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수정보안 방안	339
〈표 12-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수정 전후 비교표	349
〈표 13- 1〉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353
〈표 13- 2〉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양성형태	380
〈표 13- 3〉 노인운동강습 추진현황	386
〈표 13- 4〉 종목별 운영현황	386
〈표 13- 5〉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88
〈표 13-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392
〈표 13- 7〉 최근 노인요양시설 확충 실적 및 계획	394
〈표 13- 8〉 EU 국가의 장기요양시설보호율	396
〈표 13- 9〉 일본 개호보험의 재가서비스사업자 운영주체별 추이	396
〈표 13-10〉 노인학대 상담건수 증가 추이	400
〈표 13-11〉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총예산	401

〈표 13-12〉 독거노인 증가 추이	406
〈표 13-13〉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 대상	407
〈표 13-14〉 사업 추진실적('07.6~11월)	407
〈표 13-15〉 노인소비자 피해건수	409
〈표 13-16〉 독일·일본의 성년후견제 비교	412
〈표 13-17〉 일본 법정후견제도 개요	412
〈표 13-18〉 일자리 희망노인 추계	415
〈표 13-19〉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통계 현황('07년 12월 기준)	416
〈표 13-20〉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420
〈표 13-21〉 노인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태	425
〈표 13-22〉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현황	432
〈표 13-23〉 고령자가구의 지역별/거주유형별 시설기준미달가구 비율	436
〈표 13-24〉 고령자의 주택내 안전사고 경험율	436
〈표 13-25〉 고령자가구의 최소주거공간규모(안)	438
〈표 13-26〉 주택개조 기준안	438
〈표 13-27〉 고령자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 우선분양 현황 ('04년말 기준)	440
〈표 13-28〉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05년)	448
〈표 14- 1〉 성장동력부문 기본계획 구성내용	461
〈표 15- 1〉 전직지원장려금 연도별 추진실적	464
〈표 15- 2〉 '07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465
〈표 15- 3〉 외국인력 도입업종	466
〈표 15- 4〉 선정대학 명단 및 프로그램명	468
〈표 16- 1〉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과 신규목차 및 수정·보완안	477
〈표 16- 2〉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과 수정 전후 목차 비교표	479
〈표 17- 1〉 재직자 향상 훈련의 여성참여 비율	483
〈표 17- 2〉 고용촉진훈련의 성별 훈련성과	484
〈표 17- 3〉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485

〈표 17- 4〉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494
〈표 17- 5〉 연도별 유학생 현황	496
〈표 17- 6〉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등록('07.12월현재)	497
〈표 17- 7〉 비전문취업사증(E-9) 외국인력의 합법체류 여부별 추이	498
〈표 17- 8〉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추이	499
〈표 17- 9〉 일반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체결과 입국자수 추이	499
〈표 17-10〉 국제결혼의 추이	503
〈표 17-11〉 외국인 배우자 체류현황(2004. 9월말 현재)	503
〈표 17-1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성과목표 달성도	506
〈표 17-13〉 실업자 등 직업훈련 참여율 및 취업률 목표치 달성	506
〈표 17-14〉 재직자 등 직업훈련	506
〈표 17-15〉 평생학습계좌 운영계획	507
〈표 17-16〉 클린사업 주요성과	517
〈표 17-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증 및 정보제공 현황 비교	526
〈표 17-1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별 우수사업자 시범 심사 및 지정 추진	529
〈표 17-19〉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의 기능 설정	532
〈표 17-20〉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의 보조기능	532
〈표 17-21〉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현황	536
〈표 17-22〉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구성	538
〈표 17-23〉 복지용구정보마당 DB 세부 내용	541
〈표 17-24〉 품목별 외국의 복지용구 관련 DB 구축 내용 비교	542
〈표 17-25〉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R&D) 분류 및 세부 연구 분야(안)	551
〈표 17-26〉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화 연차별 투자계획	559
〈표 18- 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1998, 2006년)	574
〈표 18- 2〉 유배우부인의 자녀의 필요성(1991, 2000, 2006년)	574
〈표 18- 3〉 사업시기에 따른 교육·홍보 대상	579
〈표 18- 4〉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580

〈표 18- 5〉 결혼 및 출산에 유리한 가치관 조성을 위한 홍보전략	580
〈표 18- 6〉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전략	581
〈표 18- 7〉 추진주체별 역할	583

그림목차

[그림 1- 1] 기본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23
[그림 1-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선 추진단(T/F) 구성	24
[그림 2-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7	26
[그림 2- 2] 가임기(15~49세) 여성규모 변동 전망	28
[그림 2- 3] 합계출산율 및 초혼연령 변동 추이	36
[그림 2- 4]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37
[그림 2- 5] 청년층 실업률 추이	40
[그림 2- 6]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 추이	41
[그림 2- 7] 초혼연령 변동 추이	42
[그림 2- 8] 성 및 연령별 고용율 추이	43
[그림 2- 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6
[그림 2-10] 소득수준별 출산 중단 이유(2자녀 이하), 2005	46
[그림 2-11] 미혼남녀(25세 이상)의 결혼에 관한 태도	48
[그림 2-12]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52
[그림 2-13] 시도별 인구고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7년 기준	53
[그림 2-14] 노인인구의 고령화 전망	55
[그림 2-15]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 가정)	57
[그림 2-16] 핵심근로계층(25~49세) 및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전망	58
[그림 2-17] 잠재성장률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TFP 증가율 1.5% 가정) ...	61
[그림 2-18]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변동 추이	63
[그림 2-19]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전망	64
[그림 2-20] 노인의료비 및 비율(전체 의료비 대비)	65
[그림 2-21] 치매노인수 추계(2005~2020)	66

[그림 2-22]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66
[그림 3- 1] 출산율 변동과 경기변동	73
[그림 3- 2]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7	76
[그림 4-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82
[그림 4-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추이	83
[그림 4-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도별 세부예산	84
[그림 4-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원유형별 예산 추이	85
[그림 5-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수정 방안	91
[그림 7- 1] 저출산대책 중간점검 결과로서 도출된 현 정책의 문제점	122
[그림 7- 2] 기본계획 영역 재분류 방안	128
[그림 9- 1]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상징물	146
[그림 9-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164
[그림 9- 3] 학원 이용현황	214
[그림 9- 4]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전망	220
[그림 9- 5] 평균보육료 및 소득대비 부담률 분포, 2004	231
[그림 9- 6] 근로형태 및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238
[그림 9- 7] 우리나라와 2만불 국가 연령별 여성경황을 비교	252
[그림 9- 8]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67
[그림 9- 9]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아동 발생추이	268
[그림 9-10]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및 학대의심 사례건수	271
[그림 9-11] 아동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률	275
[그림 9-1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별 핵심 사업목표	293
[그림 9-13] 시카고 아동-부모센터 프로그램 참여아동과 비참여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을 비교	296
[그림 9-1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	297
[그림 9-15]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비전과 목표	301
[그림 12- 1] 마슬로의 욕구론	345

[그림 12-2]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349
[그림 12-3] 기본계획의 수정 전후 비교	351
[그림 13-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370
[그림 13-2] 보건소 시스템의 예방위주 기능 전환 개념도	371
[그림 13-3]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	417
[그림 13-4]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421
[그림 13-5]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보급체계	422
[그림 17-1] 55세이상 근로자 산업재해발생 추이	491
[그림 17-2]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516
[그림 17-3] 산업재해 현황	520
[그림 18-1]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교육계획	577
[그림 18-2] 저출산·고령사회 범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592

제1부 도입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0세기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전통적 가족유형 변화, 가치관 변화, 피임법 보급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고령화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
 -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에서도 출현
- 우리나라 출산율(합계출산율¹⁾)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낮아져 저출산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
 -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2명 내외(특히 2005년에는 1.08)가 유지되는 등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수준 지속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은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방식과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방식으로 설명
 - 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가족부양기능 변화 등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
 - 문화적 가치와 함께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및 소득 불안정으로 인하여 가족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²⁾
-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함께 평균수명의 지속 상승 및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인계층으로 진입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
 -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수준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전망

1) 한 여성이 가임기(15~49세) 동안 출산할 평균 출생아수로 산정한다.

2) Esping-Andersen(1990)은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책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나라의 정치, 경기, 산업, 정책, 문화적 가치 등은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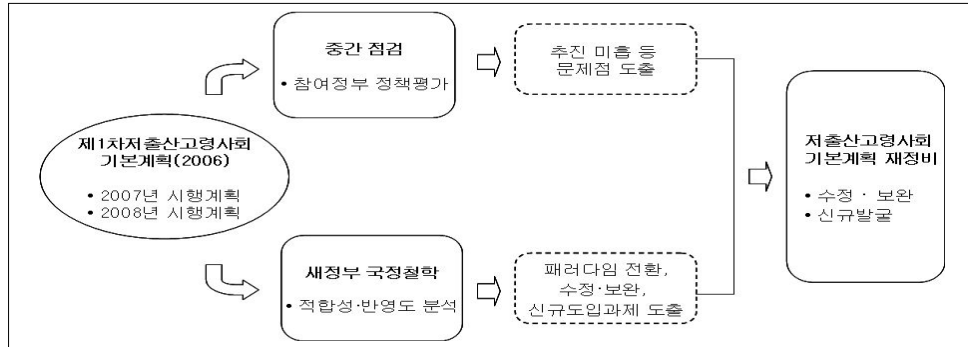
- 저출산으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이동성 감소,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인력재배치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 붕괴
 -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노동력) 감소로 세입기반이 감소하여 사회보장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 요구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
 -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처방적인 접근으로는 성장동력 기반을 복구시킬 수 없고, 늘어나는 사회보장부담의 무한정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
 - 출산율을 인구대치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다가 평균수명은 계속 상승하여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진행
 - 따라서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사회기반을 조속히 구축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시행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
 -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
 - 저출산·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한 이래 2년이 지난 현시점(제1차 기본계획 추진기간의 중간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중간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하는 노력이 중요
 -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정책 도입과 함께 기존 정책의 변환을 모색할 필요
 - － 특히, ‘경제회생 및 국가성장동력 확보’라는 새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중장기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재정비가 필요
-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활용되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그 결과로서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정책간 효과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기여
 - 출산을 회복을 통해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여성·노인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기여
 -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진정한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2절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세부정책들을 새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수정·보완
 - 구체적으로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주요 내용을 보완
 -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신규과제 발굴

[그림 1-1] 기본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제3절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외국사례 분석, 정책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T/F」 구성·운영 등
- 문헌 고찰 및 외국사례 분석
 - 연구 기본틀 설정, 외국의 효과성 있는 정책사례 벤치마킹 등
 - － 외국사례들은 해당 정책의 신규도입 내지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기 위한 준거로서 분석 및 제시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
 - －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환류시킴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제1차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의 근거와 방향은 성과평가에 기초한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설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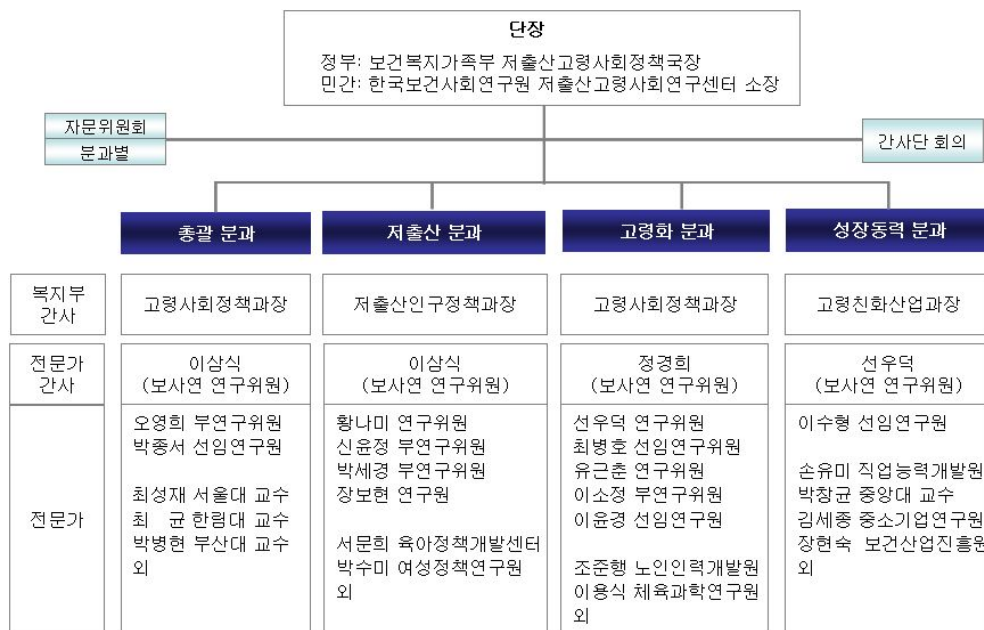
- 2007년도에 중앙정부³⁾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4대 분야 227개 과제(저출산 86, 고령화 77, 성장동력 59, 국민인식개선 5) 추진

□ 연구수행체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선추진단(TF 형태)」 구성

- 4개 분과(총괄분과, 저출산분과, 고령화분과, 성장동력분과)로 구성
- 동 추진단은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 참여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선 추진단(T/F) 구성



주: 별도 소속표시가 없는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3) 중앙부처는 총 13개 기관(12부·1청)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찰청이 포함된다.

□ 자문위원 운영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결과에 적극 반영
 - －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저출산분과, 고령화분과, 성장동력분과, 그리고 총괄분과의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 － 자문위원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위원을 포함한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와 정책담당부서 실무자들 포함

제 2 장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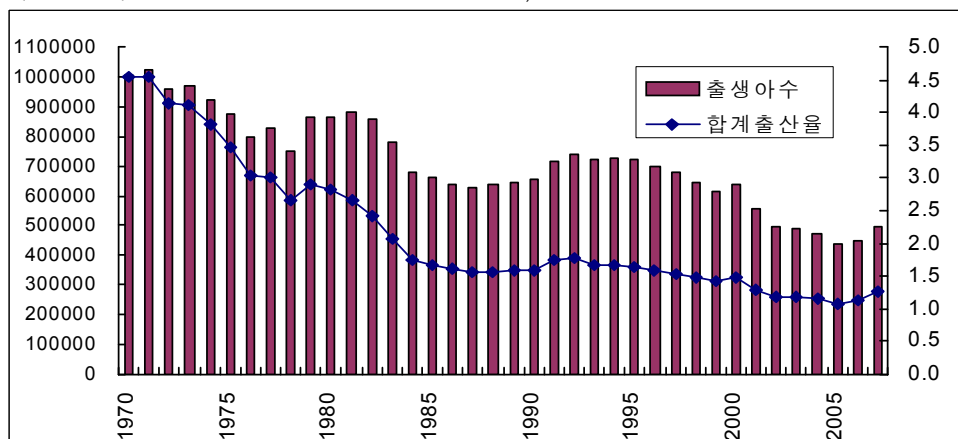
제1절 저출산현상

1. 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추이

□ 출산율 변동 추이

-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치수준(TFR 2.1)으로 급감
- 이후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다소 불규칙적이거나 1.6 전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 지속
 - － 합계출산율은 1998년 1.48에서 2001년 1.30, 2005년에는 1.08까지 감소
-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다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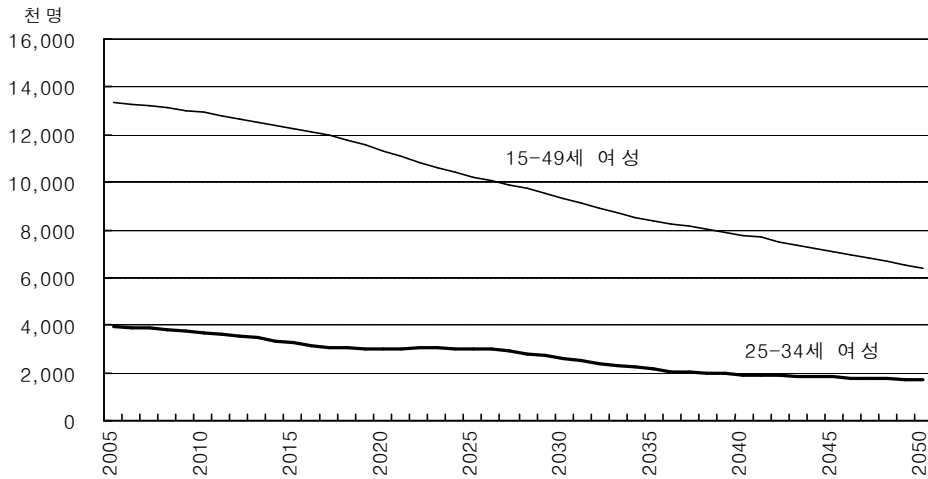
[그림 2-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7



자료: 통계청, KOSIS, 2008.

- 최근의 출산율 증가는 세 가지 요인들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2007)
 -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그 동안 연기된 결혼(초혼)이 2003년 이래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출산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
 - 결혼기간이 긴 부부들로부터 출산이 증가하여, 그 동안 미루었던 출산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
 - 셋째아 이상의 고순위 출산이 증가하여, 정책적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그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유리하게 형성되었기 때문
- 향후 전망
 - 과거 제1차 오일쇼크(1972~1975)와 제2차 오일쇼크(1978~1980) 그리고 IMF 외환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고유가와 고물가 등 경제적 불안정은 출산율 추가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음.
 -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출산율 회복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함.
 - 향후 인구구조의 변동은 출생아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해도 노동력 확보와 고령화 속도 둔화에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전망 가능
 - － 이는 과거 가족계획사업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코호트(cohort)가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주출산 연령층의 여성인구(25~3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
 - 예를 들어, 주출산 연령층 여성 규모는 2007년 386만명에서 2015년 325만명, 2030년 260만명, 2050년 172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
 - 전체 가임기 여성(15~49세)도 2007년 1,323만명에서 2015년 1,226만명, 2030년 931만명, 2050년 637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 요컨대, 출산율이 대폭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출생아의 절대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

〔그림 2-2〕 가임기(15~49세) 여성규모 변동 전망



자료: 통계청, KOSIS, 2008.

2. 주요 외국의 출산율 변동과 비교

가. 출산율 변동추이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⁴⁾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까지 감소하였다가, 2006년 1.32, 2007년 1.34로 최근 다소 상승
 - － 일본의 출산율 변동 추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수준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음
 - 유럽국가들 중 전통적인 가톨릭(catholic) 가족주의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인 독일(2006년 1.33)과 이탈리아(2007년 1.34)도 우리나라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 － 독일의 출산율은 최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4) 참고로 OECD 국가의 출산율은 평균 1.6 수준이다.

1995년 1.1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다만, 2006년 1.35에서 2007년 1.34로 다소 감소)

-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로 인식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
 - －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6년 1.66을 최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거의 인구대치수준에 근접(2006년 1.98, 2007년 1.96)
 - － 전형적으로 약 10년 주기의 경기변동(cycle)과 맞물려 롤러코스트(roller coast) 형으로 변동하고 있는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 1.50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경기회복과 맞물려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2007년에는 1.88까지 상승

〈표 2-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1970	4.53	2.14	2.48	2.44	2.48	1.92	2.03	2.42
1975	3.47	1.91	1.77	1.81	1.93	1.77	1.51	2.20
1980	2.83	1.75	1.84	1.89	1.94	1.68	1.53	1.64
1985	1.67	1.76	1.84	1.80	1.82	1.74	1.37	1.42
1990	1.59	1.54	2.08	1.83	1.78	2.13	1.45	1.33
1995	1.65	1.42	1.98	1.71	1.71	1.73	1.25	1.18
2000	1.47	1.36	2.06	1.64	1.87	1.54	1.38	1.26
2001	1.30	1.33	2.03	1.63	1.88	1.57	1.35	1.25
2002	1.17	1.32	2.01	1.64	1.86	1.65	1.34	1.27
2003	1.19	1.29	2.04	1.71	1.87	1.71	1.34	1.29
2004	1.16	1.29	2.05	1.77	1.90	1.75	1.36	1.33
2005	1.08	1.26	2.05	1.79	1.92	1.77	1.34	1.32
2006	1.13	1.32	2.10p	1.84p	1.98	1.85	1.33	1.35e
2007	1.26p	1.34p	-	-	1.96p	1.88	-	1.34e
역대 최저치	1.08 (2005년)	1.26 (2005년)	1.74 (1976년)	1.63 (2001년)	1.66 (1966년)	1.50 (1999년)	1.24 (1994년)	1.18 (1995년)

주: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임.

자료: 스웨덴 제외 2000년 이후 자료는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결과(보도자료)』, 2008. 8.

나머지 자료는 World Bank, 2007 *The World Bank Group(HNPStats)*, 2007.

스웨덴 2007년 합계 출산율 자료는 스웨덴 통계청, *Statistics Sweden*, 2008.

- 한편,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country)로서 미국과 영국의 출산율은 최근에 들어 뚜렷한 상승세 유지
 -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63을 최저점으로 2006년 1.84로 지속적 상승
 -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말 이래 2.0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2006년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대치수준인 2.1로 상승
- 이들 비교대상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 추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2005년 수준인 1.08까지 낮아진 적이 전혀 없이 1.5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회복세로 전환
 - 예외적으로 일본과 이탈리아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출산율이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들 수준 역시 우리나라의 역대 최저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
 - 이러한 비교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까지 감소하였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향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속도가 회복될 것인가는 중대 관심사로 등장

나. 외국 사례

-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회복 가능 정도 및 속도 등을 가늠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OECD 일부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추이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
- 일본 사례
 - 전 세계적인 가족계획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970년에 인구대치수준에 이미 도달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1989년 '1.57쇼크' 이후 일본정부는 1994년 12월 5년간의 엔젤플랜(Angel Plan)을 공표
 - 엔젤플랜은 일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 소득 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취업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수당제도 확대 등 실시
 - 그러나 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평생직장 보장'이 사라지면서,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어 출산율이 감소

-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까지 높였으며, 아동수당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확대
- 2004년에는 신신엔젤플랜(2004~2009)을 발표하여, 남성육아휴직, 기업의 보육시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경험 기회 확대 등의 조치
 - 그러나 일본정부는 가족정책에 있어 여전히 소극적이며,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 이래 꾸준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비해 출산율 감소속도가 아주 완만한 편
 -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시 급락했던 2001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일본 출산율보다 낮은 역전현상 발생

□ 프랑스 사례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7에서 1980년 1.95, 1990년 1.78, 1995년 1.7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90년대 중반 이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88, 2006년 1.98, 2007년 1.96으로 상승
 -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에는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저출산대책들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프랑스의 정책은 인구학적 성취(인구수 증가)를 위한 결과만은 아니며, 가구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에 본질을 둔 사회적 동기 부여에 기초
 - 지난 50년간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를 갖도록 한다는 새로운 윤리원칙을 따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2007).

□ 스웨덴 사례

- 스웨덴 정부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인구문제를 광범위한 개혁정책으로 확장시키고, 기혼여성의 취업과 연결시키는 전략적 선택⁵⁾
 - 스웨덴의 출산율은 70년대 말에 1.6까지 감소하였으나, 1985년 이후 제2차 배

이비뚝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인구대치수준까지 상승

-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경기와 변동을 같이하는 롤리코스트형 변화(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Andersson, 2000; Hoem 등, 1996)
 - 가장 최근 추세로는 1999년 이후 여성노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회복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상승세가 지속
 - 실업률은 1990년 10%에서 2006년 5%로 급락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75%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고⁵⁾,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지출 비율은 2001년 GDP대비 2.9%로 OECD평균을 상회
 - 이러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스웨덴의 출산율은 2007년에 1.88까지 상승

3. 출산율 변동 원인

-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
 -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비용, 소득 및 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보건(불임, 자연 유·사산) 등
 - 문화적 요인들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성분업적 역할규범 등 양성평등 관도 결혼 및 출산에 영향
- 궁극적으로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 및 문화적 요인들은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출산율 변동에 기여

5) 당시 불황으로 보수진영에서는 여성들이 실업남성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비판하였지만, 미르달부부는 양립지원의 결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공공사업을 늘리고, 건전한 경제계획을 세우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으로 모든 성인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ass, 1992).

6) 스웨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89~1990년 31.0%, 1995~1996년 42.0%, 2001~2002년 50.0%이다(스웨덴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가. 인구학적 요인

□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법률혼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가족형성 시기를 의미하는 초혼연령이 늦추어지는 만혼화현상과 결혼한 여성(부부)들이 자녀수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

○ 초혼연령은 남녀 공히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 －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1995년 0.5세, 1995~2000년 1.1세, 2000~2005년 1.2세로 점차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증가하여 2007년에는 처음으로 28세(28.1세) 상회
- － 남성의 초혼연령은 이미 2003년에 30세를 상회하였으며, 최근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2007년에는 31.1세 도달

〈표 2-2〉 초혼연령 변동 추이

(단위: 세)

구분	1972	198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성	26.7	26.4	27.9	28.4	29.3	29.6	29.8	30.1	30.6	30.9	30.9	31.1
여성	22.6	23.2	24.9	25.4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자료: 통계청, KOSIS, 2008.

- 초혼연령 상승은 궁극적으로 특정 연령층 인구 중 미혼인구의 비율로 측정되는 미혼율을 높이는 작용(역으로 유배우율을 낮추는 작용)⁷⁾
- 한국사회는 법률혼이 지배적이며,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으로부터 발생
 - － 법률혼으로부터 발생한 출생아수는 2007년도 전체 출생아수의 98.4%로 높아, 법률혼 이외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의 비중은 거의 무시할 수준
 - － 다만, 법률혼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은 출생아의 비율은 2000년까지 1.0% 미만에서 2001년 1.1%, 2003년 1.3%, 2005년 1.5%, 2006년 1.6%로 최근에 이르러

7) 유배우 인구는 배우자가 있는 인구로 이혼 또는 사별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인구는 제외된다. 따라서 유배우율을 (1-미혼율)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이혼율과 사별율이 낮다는 점에서 (1-미혼율)을 유배우율의 유사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높아지는 경향

-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출산율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혼외출산율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법률혼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율 상승 또는 유배우율 저하는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

〈표 2-3〉 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율(총 출생아수 대비 혼외 자의 구성비)

(단위: %)

연 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01	1.0	1.7	33.5	40.1	44.7	9.9	25.0
2002	1.1	1.9	34.0	40.6	45.2	10.9	26.1
2003	1.3	1.9	34.6	41.5	46.2	13.0	27.0
2004	1.3	2.0	35.8	42.3	47.4	14.9e	27.9
2005	1.5	2.0	36.8p	42.9	48.4	13.8e	29.2
2006	1.5	-	-	43.7	49.5	18.6	30.0
2007	1.6	-	-	-	-	20.7	30.8p

주: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

자료: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결과(보도자료)』, 2008. 8.

영국 통계청, *Population Trends 132-summer 2008*.

프랑스 통계청, *The population of France in 2007*.

독일 통계청,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

- 만혼화로 인하여 실제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이 급상승하여 유배우율은 감소
 - 전체 가임기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30.0%대에서 2005년에는 37.0%까지 높아졌으며, 저연령층에서 급상승
 -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57.2%에서 2005년 93.7%로 상승하여, 이들 여성으로부터 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 출산 연령층인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22.1%, 2005년에 59.1%로 상승하여, 절반 이상이 미혼상태
 - 30~34세 여성의 미혼율도 1990년 5.3%에서 2000년 10.7%, 2005년 19.0%로 급상승

〈표 2-4〉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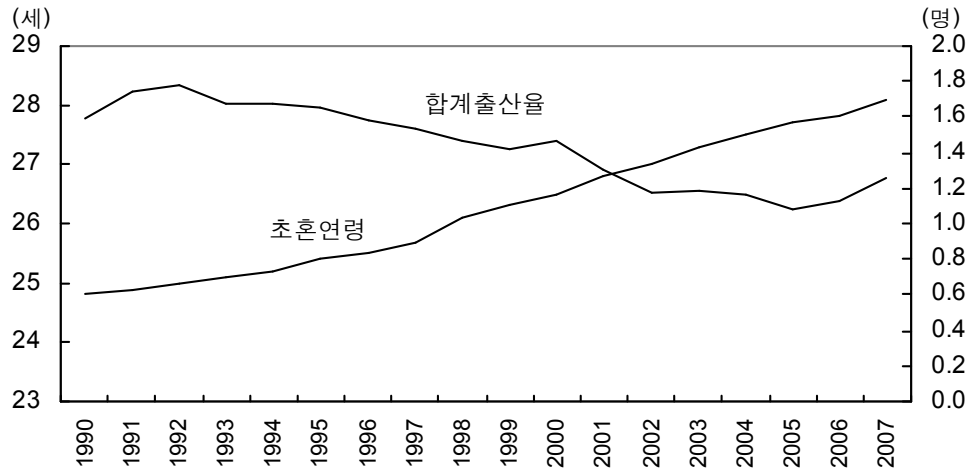
구분	여성 연령층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31.5	97.1	57.2	9.7	1.4	0.4	0.1	0.1
1975	36.0	97.4	62.5	11.8	2.1	0.7	0.3	0.2
1980	36.5	98.2	66.1	14.1	2.7	1.0	0.5	0.3
1985	36.3	99.1	72.1	18.4	4.2	1.6	0.7	0.4
1990	36.4	99.5	80.5	22.1	5.3	2.4	1.1	0.4
1995	34.6	99.2	83.3	29.6	6.7	3.3	1.9	1.0
2000	34.9	99.3	89.1	40.1	10.7	4.3	2.6	1.7
2005	37.0	99.6	93.7	59.1	19.0	7.6	3.6	2.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초혼연령 간의 역상관관계

- 물론 초혼연령 상승 즉 만혼화 현상은 순수하게 인구학적인 현상이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가정 양립 곤란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만혼화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메커니즘도 생리적 문제, 만산자녀에 대한 양육곤란 문제(본인 또는 배우자의 은퇴 후에도 자녀를 계속 교육시켜야 하는 경제적 부담 등) 등 복합적으로 작용
 - － 초혼연령 상승은 출산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여, 그 결과 남은 가임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후천성불임을 야기하는 등 가임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 － 또한 심리적으로 여성(부부)들은 만산으로 인한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 이상을 우려하여 임신·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초래

[그림 2-3] 합계출산율 및 초혼연령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2008.

□ 실제 조사결과 늦게 결혼할수록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남.

- 25세 미만에서 결혼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5명이나,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1.22명, 35세 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0.71명으로 결혼연령과 평균 출생아수간에 부적 관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5)
- 동일한 연령층에서도 초혼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생아수가 적음
 - － 조사당시 35~39세인 여성들 중 25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는 2.11명, 24~29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1.93명,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1.37명,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0.56명
- 결혼연령을 특정연도로 한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 － 현재 35~39세 여성으로서 25세에 결혼한 경우 출생아수는 2.0명에 이르나, 결혼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하여 29세에 결혼한 경우에는 1.63명으로 감소
 - － 이와 같이, 현재 동일한 출생코호트일지라도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는 급격히 감소

〈표 2-5〉 유배우부인(20~44세)의 현연령별·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단위: 명)

초혼연령	부인의 현재 연령					전체 (20~4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0.73	1.09	1.66	1.96	2.01	1.77
24세 이하	0.70	1.47	1.99	2.11	2.09	1.95
25~29세		0.66	1.51	1.93	2.00	1.65
25세		0.93	1.80	2.00	2.03	1.80
26세		0.71	1.69	1.95	2.00	1.69
27세		0.35	1.42	1.90	1.98	1.55
28세		0.38	1.07	1.95	2.15	1.50
29세		0.00	1.07	1.63	1.84	1.36
30~34세			0.65	1.37	1.67	1.22
35세 이상				0.56	0.86	0.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2-4〕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자료: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2005.

- 유배우출산율(marital fertility rate: 특정연도에서 유배우여성 천명당 출생아수)은 기 결혼한 여성의 출산력
- 20~24세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은 1995년 468.9에서 2004년 325.2, 그리고 25~29세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은 1995년 377.2에서 2004년 193.4로 각각 감소

- 반면, 30~34세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은 1995년 76.1에서 2004년 99.5로 다소 상승
 - － 유배우출산율은 30대에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대에서 감소폭이 커, 전체 유배우출산율은 감소 추세

〈표 2-6〉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 1995~2004
(단위: 천명, 여성1명당 출생아수, %)

기간	출생아수(천명)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여도(%)	
	기준연도	비교연도	차이	기준연도	비교연도	차이	유배우출산율	유배우율(초혼연령)
1995~1999	721	616	-105	1.65	1.41	-0.23	-2.0	102.0
1999~2004	616	476	-140	1.41	1.16	-0.25	49.1	50.9
1995~2004	721	476	-245	1.65	1.16	-0.48	29.0	71.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1995~1999년 기간에 유배우율 감소(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결혼률 감소)가 합계출산율의 감소(0.23명)로 이어진(기여도 +102.0%) 반면, 유배우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합계출산율 감소세를 다소 둔화(기여도 -2.0%)(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1995~1999년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는 전적으로 초혼연령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
- 1999~2004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25명이 감소하여, 1995~1999년 기간에서 보다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남
 - － 이 기간에는 초혼연령 상승에 기인한 유배우율 증가(기여도 50.9%) 뿐만 아니라, 유배우출산율 감소(기여도 49.1%)도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작용
- 결국 최근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동반하여 나타난 결과
- 한편, 1995~2004년 동안에 합계출산율은 0.48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초혼연령 상승(유배우율 감소)은 71.0%, 유배우출산율 감소는 29.0%를 각각 기여한 것으로 추정⁸⁾

나. 사회·경제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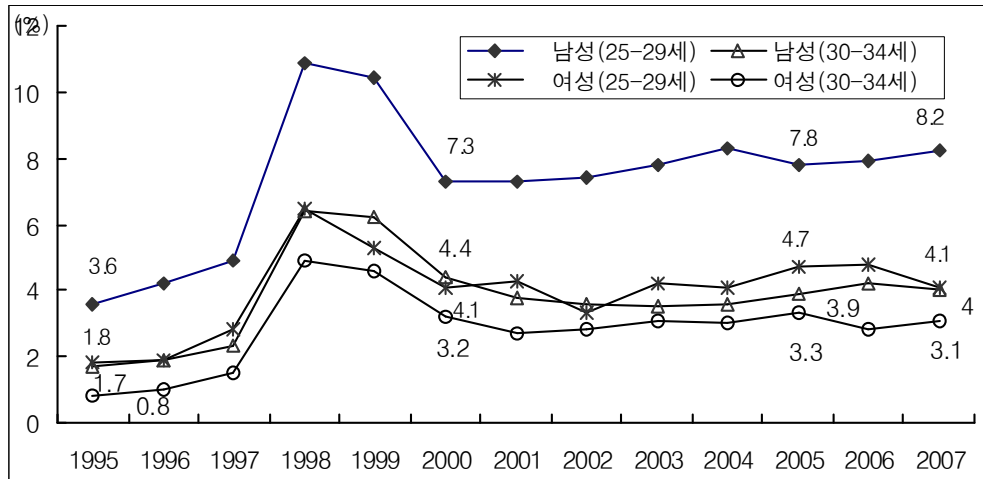
- 저출산현상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인구학적 요인들인 초혼연령과 유배우여성의 출산력을 변경시킨 결과
 - 저출산현상의 메커니즘 중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고용 등 경제상황, 교육수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여성경제활동참가, 산업·직업구조, 주거문제, 일·가정 양립, 육아지원 인프라, 육아의 가족지원기능, 자연유산·불임 등 출산건강 등이 포함됨.
 - 문화적 요인들로는 양성평등관, 자녀관·결혼관 등 주로 가치관이 포함됨.
-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 자녀 수 감소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1) 소득 및 고용 불안정

- 25~34세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
 - 25~29세 남성의 실업률은 1995년 3.6%에서 2000년대 초 7.0%대를 상회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8.0%대 유지
 - 25~29세 여성의 실업률은 1995년 1.8%에서 상승하여 2000년대에는 4.0%대 유지

8) 일본의 경우, 1975~1980년 합계출산율 0.2명 감소(1.94명→1.74명)에 대해 결혼행동변화(초혼연령 상승) 87%, 출산행동변화(유배우출산율 감소) 13% 기여. 1980~1990년간 합계출산율 0.19명 감소(1.74명→1.55명)에 대해 결혼행동변화 90%, 출산행동변화 10% 기여. 1990~2000년간 합계출산율 0.25명 감소(1.55명→1.30명)에 대해 결혼행동변화 39%, 출산행동변화 기여하였다. 과거에는 결혼행동변화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 1990~2000년 간 합계출산율 감소에는 출산행태변화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림 2-5]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표 2-7〉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도	남성		여성	
	남성(25~29세)	남성(30~34세)	여성(25~29세)	여성(30~34세)
1995	3.6	1.7	1.8	0.8
1996	4.2	1.9	1.9	1.0
1997	4.9	2.3	2.8	1.5
1998	10.9	6.4	6.5	4.9
1999	10.4	6.2	5.3	4.6
2000	7.3	4.4	4.1	3.2
2001	7.3	3.8	4.3	2.7
2002	7.4	3.6	3.3	2.8
2003	7.8	3.5	4.2	3.1
2004	8.3	3.6	4.1	3.0
2005	7.8	3.9	4.7	3.3
2006	7.9	4.2	4.8	2.8
2007	8.2	4.0	4.1	3.1

자료: 통계청, KOSIS(4주 기준).

□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

- 20대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5년 32.1%에서 2002년 43.7%로 높아졌으며, 이후 40%대를 꾸준히 유지
- 30대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5년 16.8%에서 2002년 24.0%로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22% 수준 유지
- 20대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5년 35.2%에서 2002년 46.0%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37.0%
- 30대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도 1995년 35.5%에서 2000년 44.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7년에는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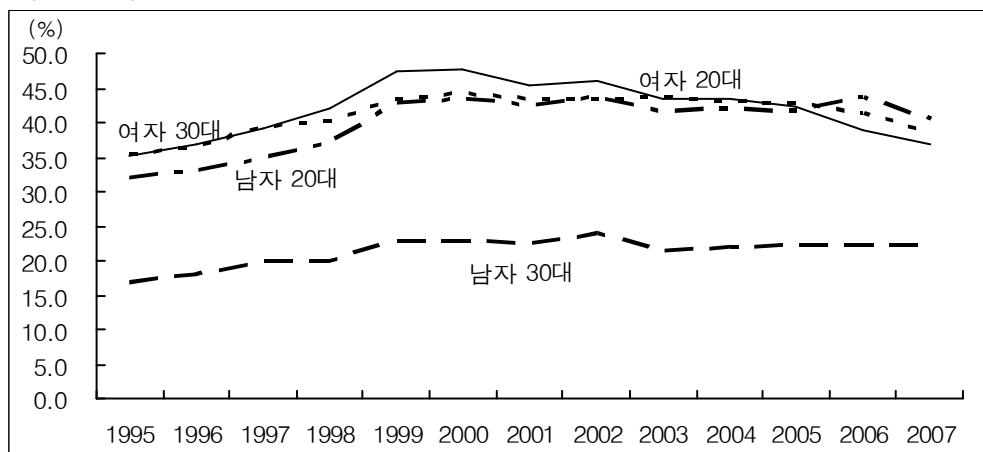
〈표 2-8〉 청년층 임시일용직 비율(취업자 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자20대	32.1	33.2	34.9	37.3	42.9	43.3	42.5	43.7	41.6	42.1	41.8	43.6	40.6
남자30대	16.8	17.9	20.0	19.9	22.8	23.0	22.6	24.0	21.4	21.9	22.4	22.4	22.4
여자20대	35.2	36.8	39.0	42.0	47.3	47.6	45.5	46.0	43.6	43.6	42.2	39.0	37.0
여자30대	35.5	36.7	39.4	40.2	43.4	44.3	43.5	43.4	43.6	43.2	43.0	41.3	38.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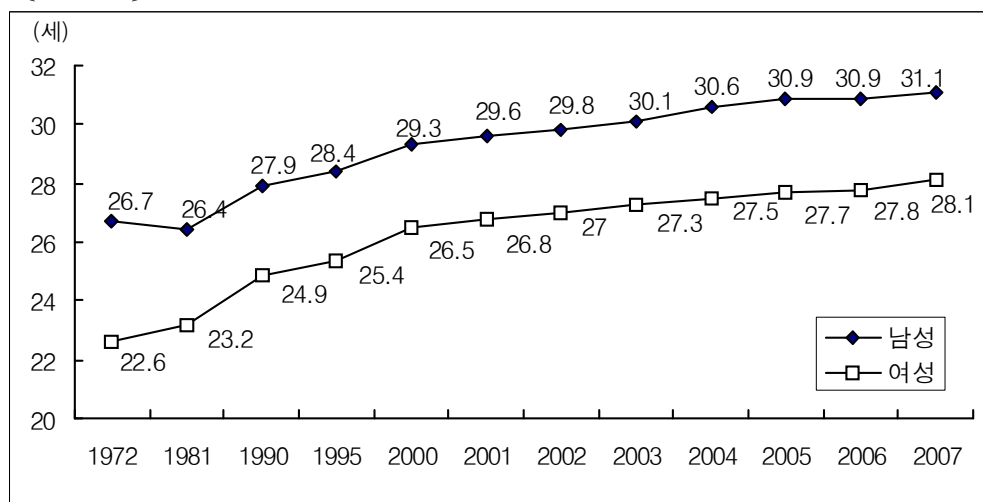
[그림 2-6]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유배우율 감소에 영향
-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07년 31.1세로, 여성은 1990년 24.9세에서 2007년 28.1로 상승

[그림 2-7] 초혼연령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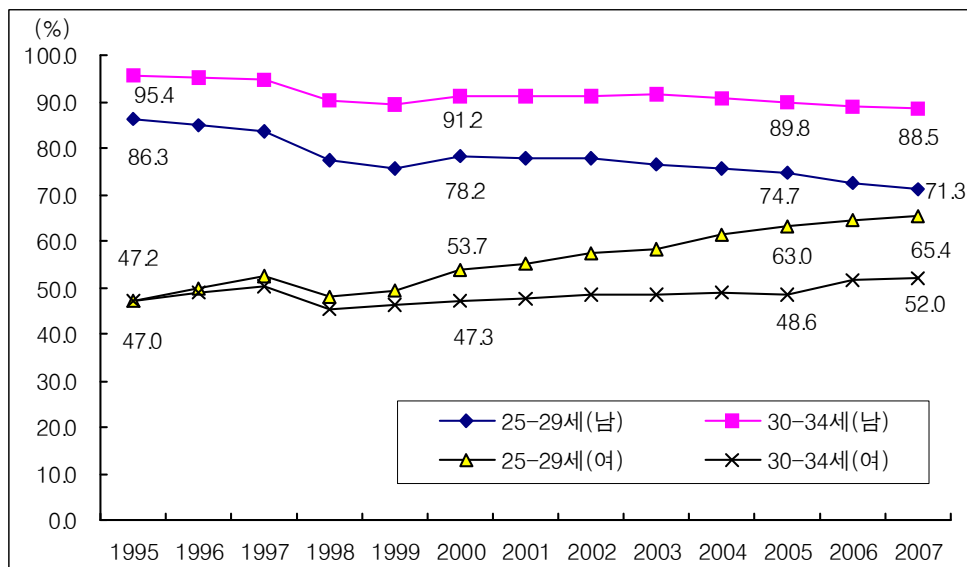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2008.

(2) 일-가정 양립 곤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미흡한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한 가정·기업·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구조 및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여 다수의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가족의 소득구조가 남성 1인 소득형태에서 맞벌이 형태로 점진적으로(급속하

- 게) 전환된 반면, 성분업적 전통가족문화 지속,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부재, 가족지원기능 미약,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양립곤란
- 근로시간의 유연성 부족, 육아휴직제도 활용도 저조 등 고용환경 요인과 함께 가정내 가사와 육아 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전통적 가족문화도 저출산 초래

[그림 2-8] 성 및 연령별 고용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부재

- 일과 가정간의 양립을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욕구로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부족
 - 남녀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정생활을 희생하는 경향이 높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

〈표 2-9〉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단위 : 시간)

순위	국가명	연간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연간근로시간
1	한국	2,357	6	폴란드	1,985
2	그리스	2,052	7	터키	1,918
3	에스토니아	2,001	8	멕시코	1,883
4	체코	1,997	9	슬로베니아	1,829
5	헝가리	1,989	10	이탈리아	1,800

자료: OECD, *OECD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8.

- 정규근무 시간이후의 초과근무가 보편화되어있는 근로행태와 직장분위기, 회식 등 기업문화도 일과 가정, 일과 육아의 양립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
-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경력 단절
 - 기혼여성(20~44세)의 61.2%가 결혼을 전후로 하여 직업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
 -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비율은 첫째아 출산시 49.9%, 둘째아 출산시 19.3%

〈표 2-10〉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단위: %, 명)

구분	평소대로 일함	시간줄여 일함	중단	육아휴직	새로 취업	계	(명)
첫째아	33.5	5.6	49.9	9.0	2.0	100.0	(1,255)
둘째아	53.4	11.5	19.3	12.9	2.9	100.0	(5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 청년층 여성의 결혼 연기 및 출산 중단 이유로 자아성취욕구도 높은 비율 차지
 - 25~29세 여성의 경우 결혼연기사유의 13.7%, 출산중단사유의 9.5%

〈표 2-11〉 미혼여성(20~44세) 연령별 결혼연기 이유

(단위: %)

구 분	20~24세	25~29세	30~34세	25~34세	35세 이상	소계
마땅한 사람 없음	3.5	25.0	33.3	27.1	23.6	14.1
수입 부족	4.1	4.4	3.9	4.3	3.6	4.2
집마련등 결혼비용	8.3	13.5	7.8	12.3	3.6	9.6
실업-고용 불안정	3.4	5.8	3.9	5.3	5.5	4.2
시간 부족	0.8	1.4	2.3	1.6	7.3	1.4
직장 문제	2.3	4.7	5.4	4.9	1.8	3.3
결혼하기 이른 나이	54.9	14.8	-	10.9	-	34.4
결혼생활 부담	3.5	6.3	10.1	7.3	12.7	5.5
자아성취	13.1	13.7	12.4	13.3	9.1	13.1
결혼시기 놓쳐	0.2	0.3	8.5	2.4	12.7	1.7
결혼 생각 없어	4.7	6.9	4.7	6.3	14.5	5.8
기타	1.2	3.3	7.8	4.5	5.5	2.7
계(명)	100.0(654)	100.0(364)	100.0(129)	100.0(493)	100.0(55)	100.0(1,2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2-12〉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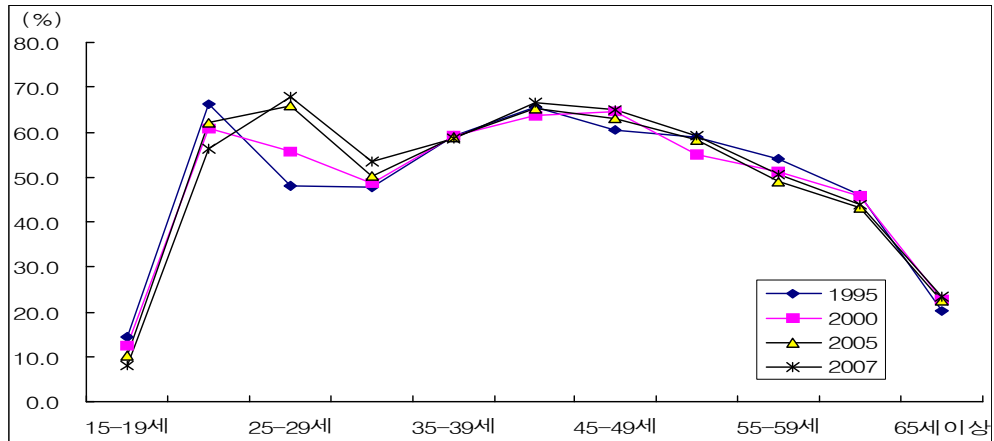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자녀양육 비용부담	육아인프라 부족	일-가정양 립곤란	출산건강 수준저하	여가 및 자아성취	기타	계	(사례수)
전체	25.2	43.9	3.1	2.5	7.2	4.5	13.6	100.0	(1,893)
25~29세	23.3	52.6	4.3	2.6	3.4	9.5	4.3	100.0	(116)
30~34세	23.2	52.9	4.8	4.2	4.4	4.4	6.3	100.0	(526)
25~34세	23.2	52.8	4.7	3.9	4.2	5.3	5.9	100.0	(642)
35~39세	26.4	42.2	3.4	1.6	8.0	5.3	13.1	100.0	(685)
40~44세	26.0	35.9	0.9	1.9	9.7	2.8	22.8	100.0	(5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여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
 - － 주출산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후진국형인 M-curve 현상 여전

[그림 2-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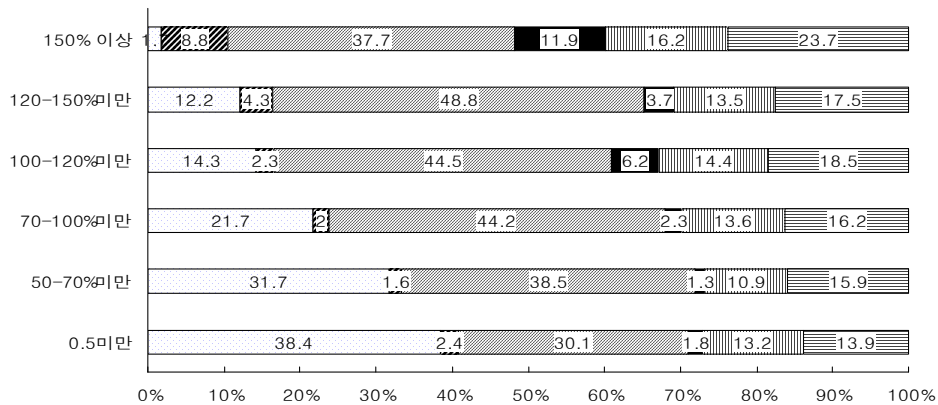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3)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 자녀양육 비용부담 증가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 보육비용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
 - 자녀양육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

[그림 2-10] 소득수준별 출산 중단 이유(2자녀 이하, 2005)



□ 소득고용불안정 ■ 육아인프라부족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 일가정양립곤란 ■ 출산건강수준 열악 ■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4)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부족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 － 시간연장 보육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미흡
 - 고소득층일수록 육아인프라 부족, 일-가정양립 곤란으로 인한 출산중단 비율 증가

□ 핵가족화로 인하여 육아를 위한 가족 지원망도 약화

-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은 1990년 12.5%에서 2005년에 7.0%로 급격히 감소하여, 가족 내 육아지원기능 약화(향후 '10) 6.8% → '20) 6.5% → '30) 6.1% 지속 감소 전망)

〈표 2-13〉 세대별 구성비 변화

(단위: %)

연도	총계(천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단독가구	비혈연/기타
1990	100.0(11,355)	10.7	66.3	12.5	9.0	1.5
1995	100.0(12,958)	12.7	63.3	10.0	12.7	1.4
2000	100.0(14,312)	14.2	60.8	8.4	15.5	1.1
2005	100.0(15,887)	16.2	55.4	7.0	20.0	1.4
2010	100.0(16,417)	16.5	55.3	6.9	20.1	1.3
2015	100.0(17,152)	17.1	54.6	6.8	20.3	1.2
2020	100.0(19,012)	19.4	51.6	6.4	21.6	1.0
2030	100.0(19,871)	22.2	47.3	6.1	23.7	0.8

자료: 2005년까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2010~2030년은 통계청,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 200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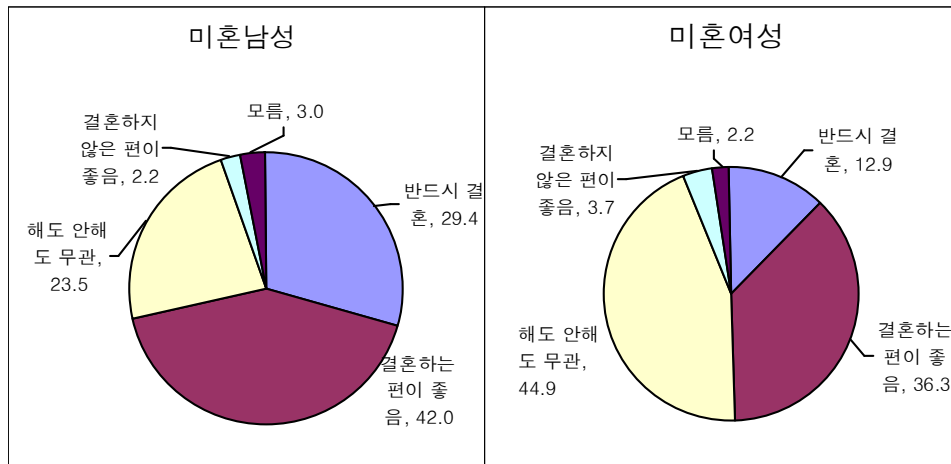
다. 문화적 요인

□ 결혼관 및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을 하락에 영향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로 이어져 출산을 하락을 초래

- 미혼남성(20세 이상)의 71.4%, 미혼여성(20세 이상)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

[그림 2-11] 미혼남녀(25세 이상)의 결혼에 관한 태도



○ 자녀관(자녀의 필요성)

-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부인의 태도는 1997년 24.8%에서 2006년 10.2%로 급격히 감소
-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1997년 39.4%에서 2006년 49.8%로 급격 증가

〈표 2-14〉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1~2006

연도	(단위: %)			
	반드시 가져야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1991	40.5	30.7	28.0	0.8
1994	26.3	34.3	38.9	0.5
1997	24.8	35.0	39.4	0.8
2000	16.2	43.2	39.5	1.1
2003	14.1	41.8	43.3	0.8
2006	10.2	39.3	49.8	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도 출산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요인

-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효용과 관련하여 전통적(도구적) 가치관(노후의 경제적 지원,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게 나타남.
 - － 전통적인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필요로 하나,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소자녀만으로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자녀관 변화는 결국 소자녀 선호로 연결

〈표 2-15〉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단위: %)

가치관	전직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전혀 찬성않음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64.1	33.7	2.1	0.1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	61.6	35.2	3.0	0.2	100.0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37.0	42.2	19.1	1.7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7	17.3	63.5	15.5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7.4	19.8	53.9	18.9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7.7	30.5	46.8	15.0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희생되지는 않는다	8.7	39.7	42.6	8.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2절 인구고령화

1. 개념 및 원인

-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보다 전체인구의 연령구조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 가능
 -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며, 이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상승(노동력 고령화), 노인인구 중 후기고령인구의 비중(노인의 고령화)으로 측정되기도 함
 -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인구고령화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유소년인구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과거 고출산시대에 태어난 연령층(cohort)이 노인층에 진입하는데다가 영양·건강상태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상승하여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함.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95년 남자 69.6세, 여자 77.4세에서 2005년 남자 75.1세, 여자 82.7세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남자 77.8세, 여자 84.5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표 2-16〉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50

(단위: 세)

연도	남자	여자	여-남	연도	남자	여자	여-남
1970	58.67	65.57	6.90	2015	76.9	83.6	6.7
1975	60.19	67.91	7.72	2020	77.8	84.5	6.6
1980	61.78	70.04	8.26	2025	78.7	85.3	6.6
1985	64.45	72.82	8.37	2030	79.5	86.0	6.5
1990	67.29	75.51	8.22	2035	80.3	86.7	6.4
1995	69.57	77.41	7.84	2040	81.1	87.4	6.3
2000	72.25	79.60	7.35	2045	81.8	88.0	6.2
2005	75.10	81.90	6.80	2050	82.5	88.6	6.0
2010	76.00	82.70	6.7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고령화 수준

□ 노인인구 규모 변동 전망

-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08년에 처음으로 50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2026년 1,000만명, 2040년 1,500만명을 초과할 전망
- 2016년 노인인구(659만명)가 청소년인구(65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표 2-17〉 인구구조 전망, 2005~2050

(단위: 만명, %)

구분	인구규모(만명)				구성비(%)				부양비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 능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 능인구	노인 인구	노년 부양비(%)	경제 부양비(명)
2005	4,814	924	3,453	437	100.0	19.2	71.7	9.1	7.9	12.7
2008	4,861	846	3,513	502	100.0	17.4	72.3	10.3	7.0	14.3
2010	4,887	791	3,561	536	100.0	16.2	72.9	11.0	6.6	15.1
2015	4,928	673	3,616	638	100.0	13.7	73.4	12.9	5.7	17.6
2020	4,933	612	3,551	770	100.0	12.4	72.0	15.6	4.6	21.7
2025	4,911	578	3,356	977	100.0	11.8	68.3	19.9	3.4	29.1
2030	4,863	553	3,130	1,181	100.0	11.4	64.4	24.3	2.7	37.7
2035	4,773	523	2,895	1,355	100.0	11.0	60.7	28.4	2.1	46.8
2040	4,634	478	2,652	1,504	100.0	10.3	57.2	32.5	1.8	56.7
2045	4,452	422	2,450	1,580	100.0	9.5	55.0	35.5	1.6	64.5
2050	4,234	376	2,242	1,616	100.0	8.9	53.0	38.2	1.4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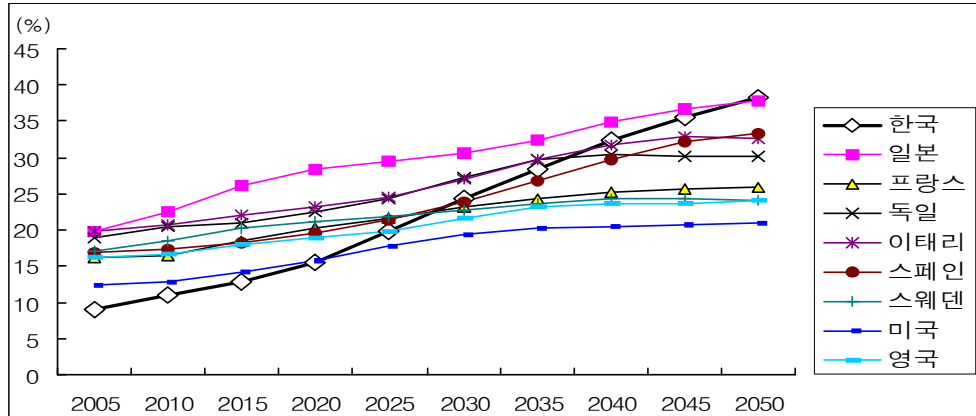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고령화 수준

-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고령화수준)은 2000년 7%(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래 계속 상승하여 2018년 14.3%(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8%(초고령사회 진입), 2050년 38.2%로 높아져 급격한 고령화 예상⁹⁾
 -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9) 노인인구 비중이 7%에 도달할 경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에 도달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에 도달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

[그림 2-12]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표 2-18〉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5~205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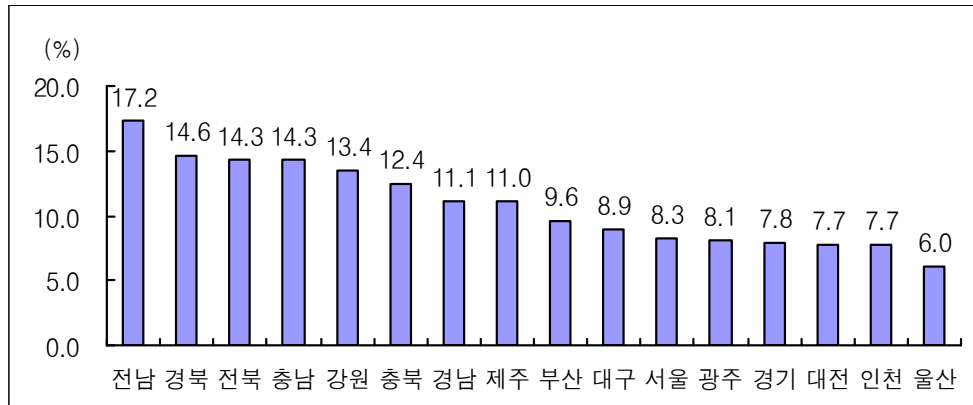
연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미국	영국
2005	19.7	16.3	18.8	19.7	16.8	17.2	12.3	16.1
2010	22.5	16.5	20.5	20.6	17.3	18.4	12.8	16.6
2015	26.2	18.5	20.9	22.1	18.3	20.2	14.1	18.1
2020	28.4	20.2	22.4	23.2	19.5	21.1	15.8	18.9
2025	29.5	21.7	24.4	24.6	21.4	21.9	17.8	19.9
2030	30.6	23.2	27.3	27.0	23.9	22.8	19.4	21.6
2035	32.3	24.3	29.8	29.6	26.7	23.7	20.2	23.1
2040	34.9	25.3	30.3	31.8	29.7	24.2	20.5	23.7
2045	36.6	25.6	30.1	32.8	32.2	24.2	20.6	23.7
2050	37.7	25.9	30.2	32.6	33.2	24.1	21.0	24.1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 지역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일부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초과
 - － 2007년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 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은 5~8% 수준
 - 이나, 농어촌이 많은 전남, 경북 등은 10%를 상회
 - － 고흥군, 군위군, 의성군 등 59개 기초지자체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 진입

[그림 2-13] 시도별 인구고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7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표 2-19〉 시군구별 인구고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비율), 2007년 기준

(단위: %)

순위	시군구	노인인구비율	순위	시군구	노인인구비율	순위	시군구	노인인구비율
1	고흥군	29.8	21	순창군	26.5	41	* 상주시	22.7
2	군위군	29.6	22	진도군	26.4	42	성주군	22.5
3	의성군	29.3	23	영덕군	26.1	43	고성군	22.5
4	의령군	29.0	24	청송군	26.1	44	담양군	22.4
5	영양군	28.2	25	강진군	26.0	45	* 김제시	21.9
6	산청군	28.2	26	보은군	25.7	46	* 강화군	21.8
7	예천군	27.9	27	구례군	25.5	47	* 나주시	21.6
8	함천군	27.8	28	고창군	25.2	48	울진군	21.5
9	보성군	27.8	29	무주군	25.0	49	금산군	21.5
10	함평군	27.6	30	서천군	24.4	50	영광군	21.4
11	임실군	27.3	31	진안군	24.3	51	고령군	21.4
12	곡성군	27.3	32	완도군	24.2	52	거창군	21.2
13	남해군	27.3	33	장수군	23.4	53	* 문경시	21.2
14	신안군	27.1	34	해남군	23.4	54	무안군	20.7
15	청양군	26.8	35	하동군	23.3	55	예산군	20.5
16	봉화군	26.7	36	부여군	23.3	56	횡성군	20.4
17	청도군	26.7	37	창녕군	23.1	57	단양군	20.3
18	장흥군	26.7	38	부안군	23.0	58	영월군	20.1
19	괴산군	26.6	39	영동군	23.0	59	옥천군	20.1
20	함양군	26.5	40	장성군	22.7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고령화 속도

-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비율 14%)로 이행하는데 18년 소요
 -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빠르게 진행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8년 소요
 - －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아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준비가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표 2-20〉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노인인구의 고령화

- 신체적 특성상 의료 수요가 많은 중기(75~84세) 및 후기(8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 총인구 대비 중기고령층 비중은 2000년 2.5%에서 2050년 14.4%로 증가하여 전기고령층 비중(15.8%)에 육박 전망
 - － 총인구 대비 후기고령층 비중은 2005년 0.5%에서 2030년 8.0%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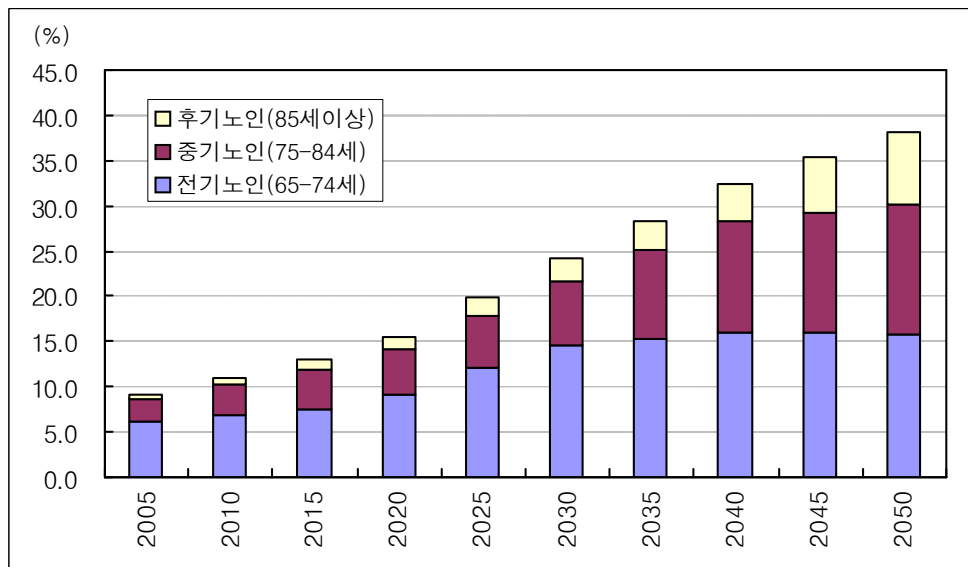
〈표 2-21〉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노인인구규모(만명)				총인구 대비 비율(%)			
	전체노인	전기고령층 (65~74세)	중기고령층 (75~84세)	후기고령층 (85세+)	전체노인	전기고령층 (65~74세)	중기고령층 (75~84세)	후기고령층 (85세+)
2005	437	293	120	24	9.1	6.1	2.5	0.5
2008	502	325	145	32	10.3	6.7	3.0	0.7
2010	536	334	165	37	11.0	6.8	3.4	0.8
2015	638	373	212	53	12.9	7.6	4.3	1.1
2020	770	449	244	77	15.6	9.1	4.9	1.6
2025	977	594	280	103	19.9	12.1	5.7	2.1
2030	1,181	711	346	124	24.3	14.6	7.1	2.5
2035	1,355	734	470	151	28.4	15.4	9.8	3.2
2040	1,504	742	566	196	32.5	16.0	12.2	4.2
2045	1,580	712	593	275	35.5	16.0	13.3	6.2
2050	1,616	668	610	338	38.2	15.8	14.4	8.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림 2-14〕 노인인구의 고령화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제3절 저출산·고령화현상의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가. 미래 성장동력 감소

□ 총인구 규모 감소

- 총인구는 2005년 4,814만명에서 다소 증가할 것이나,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234만명에 이를 전망

□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유소년인구 급격 감소

- 유소년인구(0~14세)는 1970년 이래 2005년 924만명으로 감소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현상으로 감소세가 지속하여 2050년 376만명에 이를 전망(현 수준의 40% 수준)
 - － 총인구중 유소년인구 비중은 2005년 19.2%에서 2020년 12.4%, 2050년 8.9% 감소전망

나.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 노동공급 감소

- 출생아수 감소는 20여년 후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의 감소를 유발하여 전체적인 노동력 규모의 감소로 이어짐.
-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3,453만명에서 2016년 3,619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2,242만명 전망(2008년 수준에 비해 약 1천만명 감소)
 - －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05년 71.7%에서 2016년 73.4%로 정점을 이룬 후 2050년 53.0%로 감소
 - － 핵심근로계층(25~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1,808만명, 2050년 996만명으로 감소 전망

〈표 2-22〉 핵심근로계층(25~49세) 생산가능인구 변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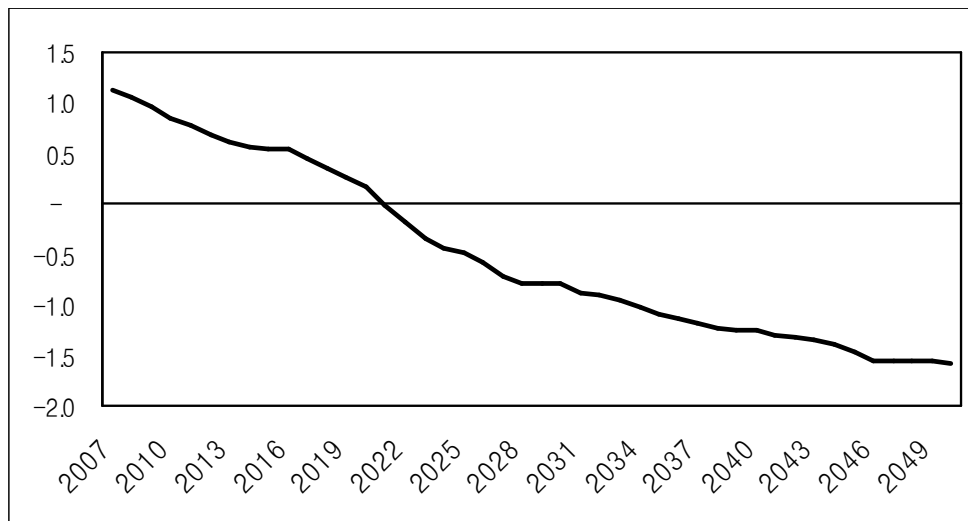
(단위: 만명)

연도	2005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핵심근로계층(25~49세)	2059	2059	2020	1897	1808	1690	1549	1389	1278	1126	99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취업자수 증가율(15세이상)은 '06년 0.96%에서 '20년 0.16%, '30년 -0.80%, '50년 -1.57%로 하락 예상(출산율 1.08명 유지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그림 2-15〕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 가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 향후 2020년까지 15~44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15세 이상)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 발생 전망

〈표 2-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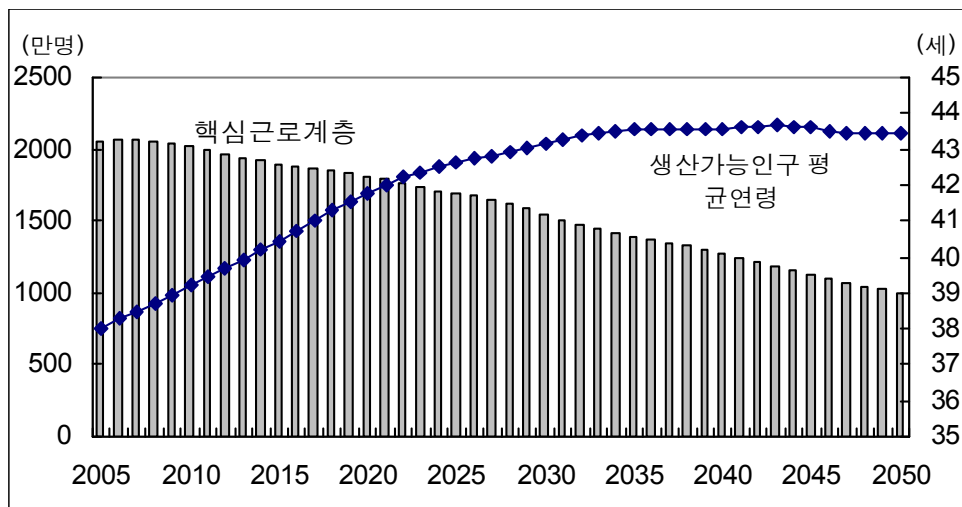
시기	인력수요(기본전망)	인력공급(65+ 경활인구)	과부족(공급-수요)
2015	27,084천명	26,454(2,011)천명	△ 630천명
2020	28,579천명	27,062(2,517)천명	△ 1,517천명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노동력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5년 38.0세(2008년 38.7세)에서 2020년 41.8세, 2050년 43.1세로 증가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예상되며,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전망

〔그림 2-16〕 핵심근로계층(25~49세) 및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실제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서 산업인력 고령화 가속화 및 이로 인한 임금부담 상승 심각한 산업경쟁력 저
하 우려 및 성장잠재력 확보 비상(대한상공회의소, 2005)

- － 섬유제품 제조업 종사자와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1993~2007년 동안 7.5세, 6.5세로 각각 증가하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름(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 － 수출주력산업인 제1차 금속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2007년 39.9세, 조선 등 40.4세, 자동차 등 37.6세 등으로 40대에 근접(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 산업현장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1980년 15.7%에서 2004년 39.5%로 증가, 20대 근로자는 1980년 60.6%에서 2004년 27.5%로 급감(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표 2-24〉 산업별 평균연령(세) 추이, 1993~2007

(단위: 세)

산업명	1993	1995	2000	2005	2007	증감('93~'07)
섬유제품 제조업	32.7	33.8	36.8	39.5	40.2	7.5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2.1	33.3	37.7	38.3	38.6	6.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6.0	37.6	39.2	40.0	41.5	5.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5.5	36.7	37.8	39.6	40.4	4.9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4.6	34.1	35.8	37.8	40.0	5.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2.9	34.5	35.4	36.4	37.3	4.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3.0	35.2	37.2	37.9	37.0	4.0
제1차 금속산업	36.7	37.8	37.6	40.2	39.9	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3	34.0	35.5	36.9	36.5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9	31.1	33.5	34.6	35.7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1	33.5	34.7	36.6	37.6	4.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 등)	35.9	36.6	38.8	39.3	40.4	4.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1	28.8	31.1	32.5	34.8	4.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8	29.4	31.2	32.1	32.2	3.4
숙박 및 음식점업	32.4	32.8	36.3	35.5	37.2	4.8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9.9	30.8	31.0	35.2	35.0	5.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31.7	31.4	30.7	32.1	32.5	0.8
연구 및 개발업	34.1	35.2	36.1	36.0	35.8	1.7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35.6	35.6	34.8	36.2	36.6	1.0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 노동생산성

- 노동력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 이는 노동이동성 감소를 유발하여 직종·산업·지역간 노동력 수급 불균형 초래
 - － 노동력 고령화는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을 낳고, 인력재배치 및 직업 훈련 등의 효과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
- 취업자의 성, 연령구조, 학력구조를 반영하는 인적자본지수 증가율은 2000년대 1.15%에서 2020년대 0.76%, 2040년대 0.19%로 감소 전망(TFR 1.2 유지 가정)

〈표 2-25〉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전망(2003~2050), 2004

(단위: %)

기간	2003~2010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1.15(100.0)	0.91(79.0)	0.76(66.0)	0.49(43.0)	0.19(17.0)

주: 1) ()은 2003~2010년간 증가율을 100으로 한 상대적 비율임.

2) 인적자본지수는 교육, 근무경험 등을 통하여 취업자에게 축적된 인적자본을 지수의 형태로 환산한 것으로 성별·연령별·학력별 상대임금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4.

나. 정부 재정수지 악화

- 급격한 고령화로 한국사회 보장재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후세대는 소득세 외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한국조세연구원, 2004)

다. 자본스톡 감소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감소와 사회보장 등예의 공공지출 증가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 유발
 - 합계출산율 1.2명 유지시 자본스톡증가율은 2000년대 5.14%에서 2040년대 0.8%로 감소

〈표 2-26〉 자본스톡 증가율(TFP 증가율=1.5% 가정시) 전망(2003~2050)

(단위 : %)

기간	2003~2010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증가율(%)	5.14(100)	5.69(111)	4.19(82)	2.16(42)	0.80(16)

주: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 총요소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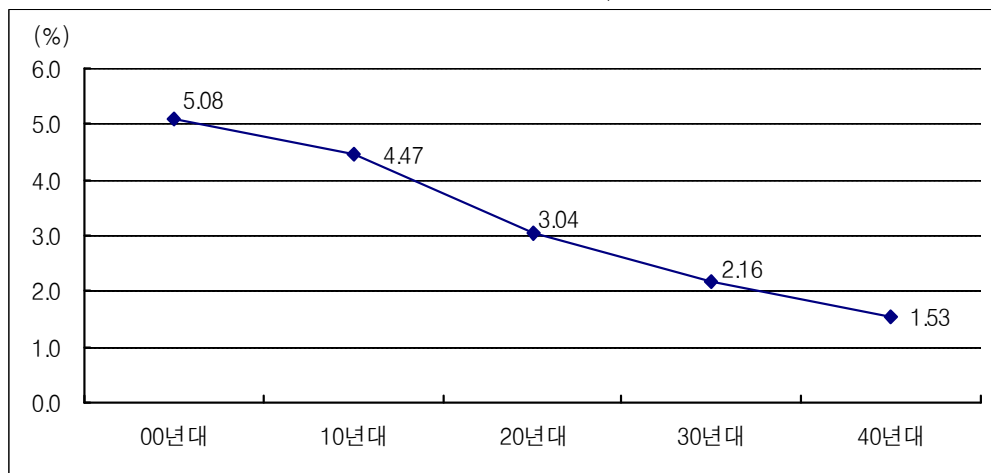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4.

라. 잠재성장률 둔화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축·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에서 2020년대 3.04%, 2040년대 1.53%로 감소 전망
 - － IMF는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1인당 실질GDP가 0.08%p 증가하는 반면, 고령 인구 1% 증가시에는 0.04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그림 2-17] 잠재성장률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TFP 증가율 1.5% 가정)



자료: 한국보건전선사회연구원,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2.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적으로도 증가하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등 부담 급증에 따른 세대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이 지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30년 2.8명, 2050년 1.4명으로 부담이 급증할 전망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가족분화가 더욱 촉진되며, 특히 노인단독가구 증가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사적부양부담이 증가할 전망
 - － 혈연기반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에서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
 - 노인단독가구는 2005년 777천가구(전가구중 24.4%)에서 2020년 1,512천가구(36.8%), 2030년 2,338천가구(49.6%)로 급증하여 전체 가구 중 절반이 노인 단독가구로 구성 전망

〈표 2-27〉 노인 1인 가구 변동 전망(2005~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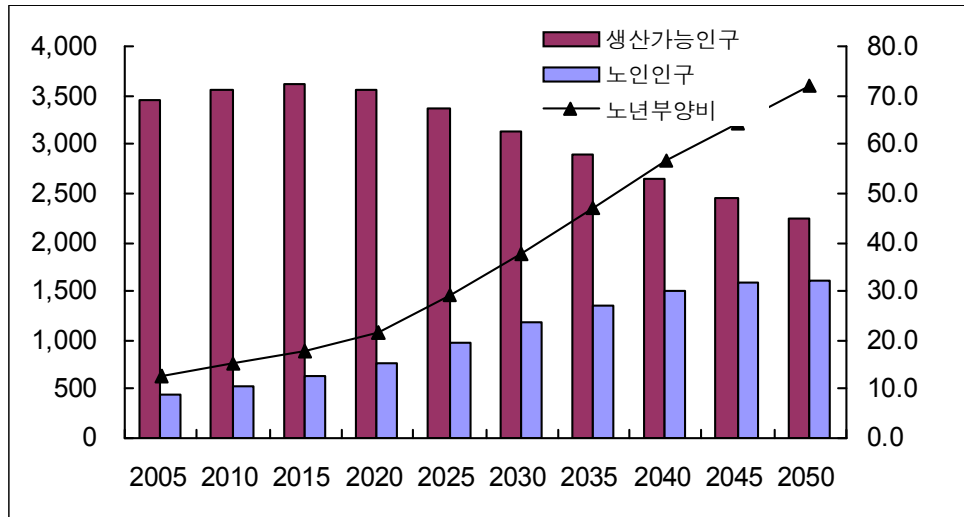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구 분	2005	2007	2010	2020	2030
가구(천가구)	777	883	1,021	1,512	2,338
전체 가구대비 비율(%)	24.4	26.8	29.4	36.8	49.6

자료: 통계청,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 2007.11.

- 전 세계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간 상호부양체제에서 공적연금 등을 통한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에 대한 전적 사회화에 한계가 존재

[그림 2-18]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2008년 7.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

〈표 2-28〉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단위: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수)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50
잠재부양비	17.7	16.3	13.5	12.4	7.0	6.6	5.7	4.6	3.4	2.7	2.1	1.8	1.4

주: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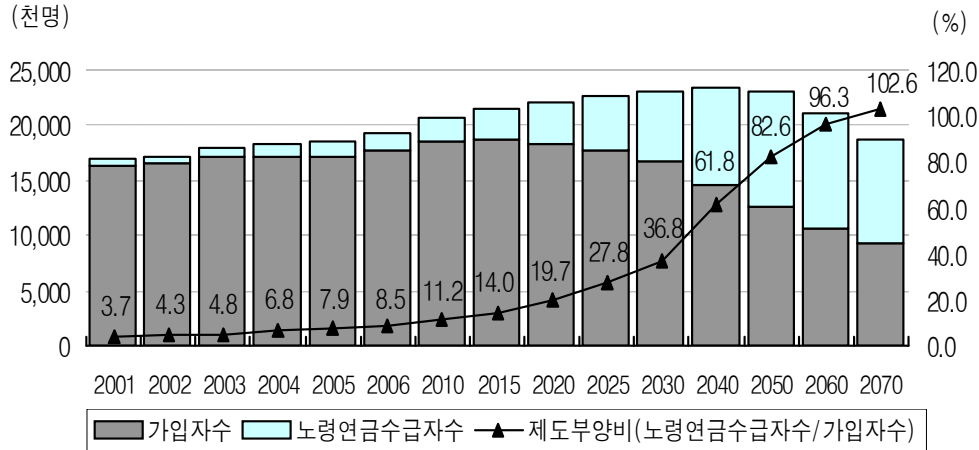
-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여 연금고갈 우려

○ 연금가입자는 2014년 1,877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

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 곤란(국민연금연구원, 『2007년 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추계모형 재구축 및 재정시뮬레이션』, 2007)

- 국민연금 당기적자는 2044년에 발생하며, 기금은 2060년에 소진할 것으로 추계
 - － 노령연금자수는 2070년경에 가입자수를 초과하여 제도부양비 비율이 100을 넘어설 전망(2007년 102.6)

〔그림 2-19〕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전망
(천명)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07년 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추계모형 재구축 및 재정시뮬레이션』, 2007.

- 노인의 절대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라 노인연령구조 변화로 중기(75~84세) 및 후기고령층(85세 이상)이 크게 증가하여, 노인층의 의료보장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특히, 75세 이상)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 200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은 9.2%이나, 진료비 비중은 28.2%에 달하며, 1인당 진료비(207만원)도 전체 평균(67.5만원)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
 - － 2007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9.1조원으로 2006년에 비해 22.8%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13.0%를 크게 상회

- 공공의료비 중 노인인구 의료비 비중은 2050년에 56.9%, 2070년에 60.4%로 상승 전망(KDI, 2004)

- GDP대비 의료비 지출비율은 2050년에 약 27%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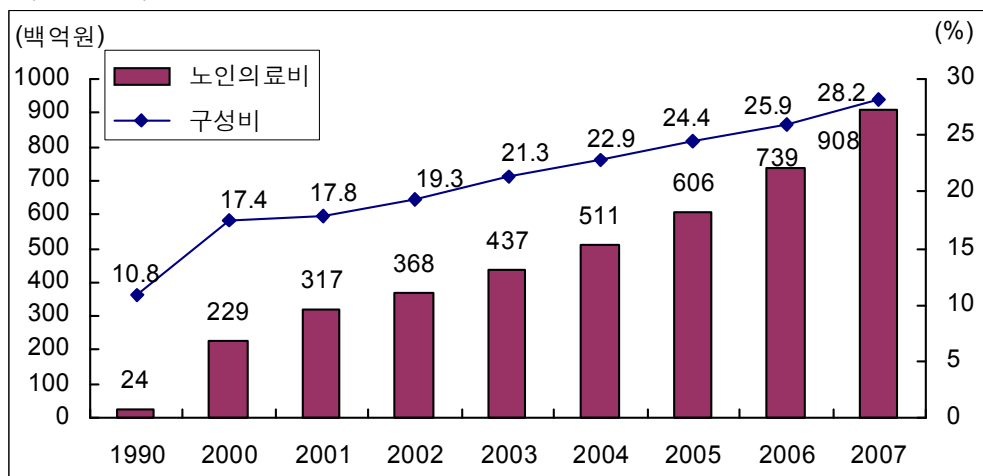
〈표 2-29〉 공공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백억원, %)

구분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의료비	222	1,314	1,782	1,906	2,053	2,236	2,480	2,856	3,226
노인의료비	24	229	317	368	437	511	606	739	908
구성비(%)	10.8	17.4	17.8	19.3	21.3	22.9	24.4	25.9	28.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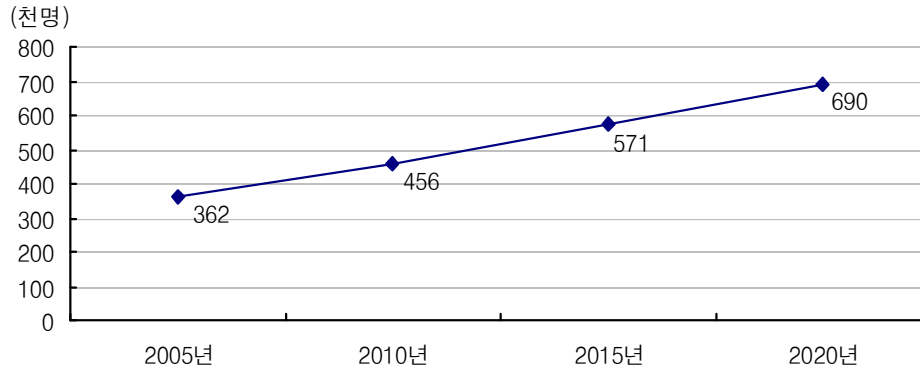
[그림 2-20] 노인의료비 및 비율(전체 의료비 대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노인 요양비용도 치매노인 수 증가('05년 36만명→ '20년 약 70만명)로 지속상승 예상

[그림 2-21] 치매노인수 추계(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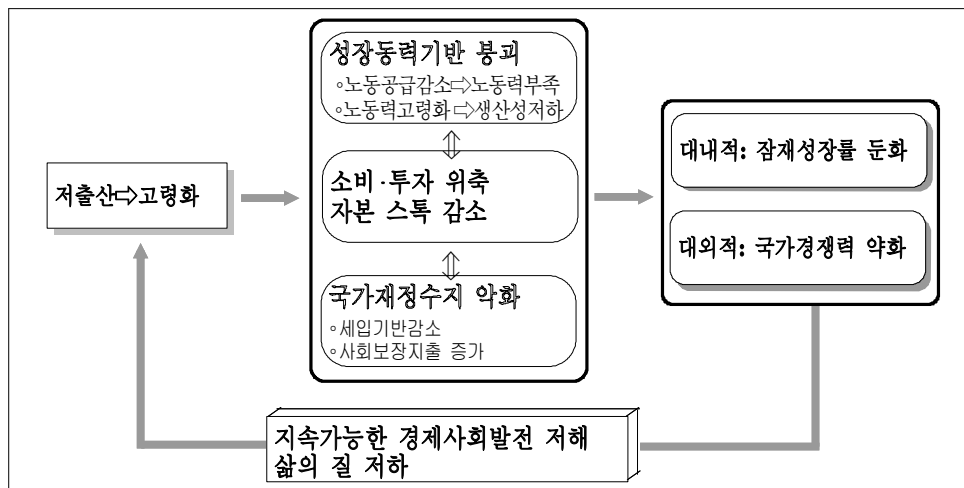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보건복지백서』, 2006.

□ 저출산·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노인세대도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나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 저하
 -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5년 기준 77.9세이나, 건강수명은 67.8세

[그림 2-22]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제 3 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보완의 필요성

제1절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의 중기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철학으로서 5대 지표(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190여개의 국정과제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 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함.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간점검 및 결과반영

- 제1차 기본계획은 2006~2010년간 5년 기간의 중기적인 계획으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
 - 따라서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간주
 - 2007년에 2006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이 2006년 8월부터 시행된 이래 짧은 기간이 경과된 관계로 성과평가는 시범적으로 실시
- 2008년은 제1차 기본계획 전체 시행기간(2006~2010)의 중간연도로서 의미
 -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

는 일은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

- 중간점검 대상이 되는 주요 관점들로는 기 수립·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들에 대한 정책의 합목적성, 새로운 환경 등에의 적합성, 정책대상 선정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합리성, 정책간 연계성, 정책의 효과성 등
- * 이러한 중간점검은 본 연구의 제2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2. 새 정부 국정철학과의 정합성 제고

-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철학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필요
 - 즉, 새 정부에서 국정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사회시스템 변화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이 적합하도록 유기적 연계성을 도모하는 등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 이에 따라, 새정부 국정철학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 간의 연관성을 5대 국정지표를 중심으로 진단 필요(표 3-1 참조)
- ‘활기찬 시장경제’의 국정철학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제도 혁신을 통하여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인적자원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추진을 제시
 -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이 중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는 저출산 영역(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주요 정책방향으로서 자녀양육과 일간의 병행을 유리하게 하는 수단적 기제로 접합시킬 수 있으며, 특히 출산 및 자녀양육 후 여성의 직장 복귀 등을 용이케 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은 현재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 배제’라는 한계성을

극복하는 노력과 연계 가능

-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300만 일자리 창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고령자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외국 인력제도 개선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잠재적 인력 활용 제고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성장동력 확보 노력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영될 필요
-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노인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안정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로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
- 새정부 5대 국정지표 중 ‘인재대국’의 주요 과제 중에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학습 유인강화, 산업계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등 제시
 - 이러한 국정과제들은 기본계획의 성장동력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반영될 필요
 - 국정과제로서 바른인성책임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저출산대책(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에서 정신적인 측면으로 강조될 필요
- 국정지표로서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로서 다문화가족 포용,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 포용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성장동력 영역(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들에 반영될 필요
- 국정지표로서 ‘능동적 복지’는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부분 국민(중산층 이하)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부담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수요자 중심의 보육, 노인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 등 평생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통합형 복지 투자

를 확대

○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통합적·맞춤형 복지로 전환

-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수요자 중심 보육·유아교육정책 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양육수당),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양성평등수준 향상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과제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마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 국정과제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안정적인 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에서 강조될 필요
- 새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의 핵심가치는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시키는 것
-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책임성의 강화 강조 필요
 - 제도 간의 연계·조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통합성이 강조될 필요
 -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증진과 직결

〈표 3-1〉 새정부 국정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연관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지표(V.첨기는 정부 제외)			
		I. 활기찬 시장경제	II. 인재대국	III. 글로벌 코리아	IV. 능동적 복지
저출산 영역: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양육수당)
	①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②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보육·유아교육정책 개편
	③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①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②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수준 향상 등
고령사회 영역: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②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일자리 창출 • 노인소득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노후건강관리기반 조성, 노인요양보호기반 구축,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지표(V.첨가는 정부 제외)			
		I.활기찬 시장경제	II.인재대국	III.글로벌 코리아	IV. 능동적 복지
성장 동력 영역: 저출산 고령사 회의 성장동 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용인력 활용 을 위한 생산적 고령 화 시스템 구축, 외국 적동포·외국인력의 활 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일자리창출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만들기 • 고령자일자리창출 • 사회적 기업 육성 과 취약계층 지원 • 외국 인력제도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포용 • 적극적 외국인 정책 추진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 체 구현 • 다문화 가족 포 용 등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선순환적 인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직업능력개발계 좌제 도입·확산 • 고등교육기관의 평 생교육 기능 강화 • 맞춤형 산업기 술인력 양성 등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고령친화사업을 미래 성 장동력산업으로 육성				

3.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 제고

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위기에의 대응 필요

□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에 의한 경제적 위기는 자연스러운 가족형성(결혼)을 저해하는 동시에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해 중대한 영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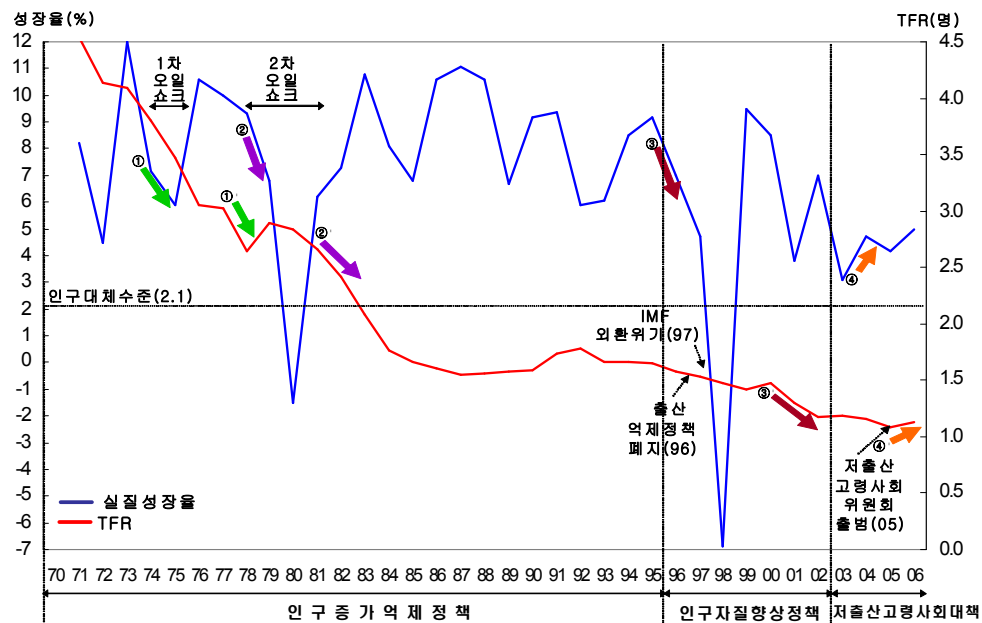
○ 실제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와 1980년 제2차 오일쇼크 그리고 IMF 외환위기 직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경험

— 이러한 경제적 위기 시기에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범위가 축소되며, 그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양육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율이 감소(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Hoem 등, 1996)

• 외국 사례로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1999년에 1.52까지 급락. 그 전

1990~1993년 사이 스웨덴의 GDP는 5%나 떨어졌으며, 고용 수준도 약 10% 감소. 낮은 생산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됨(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경기침체에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가족정책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부모휴직의 소득대체율, 보육의 질 및 아동수당 수준 등의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출산감소의 원인으로 작용(Hoem 등, 1996).

[그림 3-1] 출산율 변동과 경기변동



출처: 이삼식 외,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우리나라도 2003년 이래 결혼이 증가하여 최근 2년간 출산율이 반등하였던 추세
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의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사회정책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가능
 -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로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그리고 고령사회 삶의 질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
-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불안 상황과 재정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안정적인 기조 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
 - － 재정계획의 검토와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필요
 - － 특히 재정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저출산 현상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수행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토대 마련 필요

- 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민족·다문화 국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현상에 따른 국제결혼 증가, 인력수급 결여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증가, 세계 경제 조류 등에 기인
-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출산율 회복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에 이민정책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에서 논의 지속
 - 그 배경으로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합계출산율이 2015년경 1.6 수준이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해도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임.
 - 따라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 한편, 이민의 한 유형으로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고령화현상과 연계하여 그리고 다문화국가로 이행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영역

-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초기형태는 주로 1960~1970년대에 한국인여성들이 외국인남성들과 결혼하여 선진국에 정착
 - － 이러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약 4천건에 2005년에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도 약 9천건 이상으로 여전히 활발
 - －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은 1993년 3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결혼건수의 1%미만으로 ‘한국인여성+외국인남성’간의 결혼건수보다도 적었음.
- 그러나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은 1995년에 1만건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까지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며 5천건~1만건 사이에서 변동
 - － 2003년과 2004년에 연 2만건 수준으로, 2005~2007년 기간에는 연 3만건 이상으로 증가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대규모 국내 유입은 그 자체적으로 인구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 여성의 출산력 수준 역시 총인구의 출산력 수준에 변동을 가져와 결국은 인구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임.¹⁰⁾
-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또는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이후 본격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한 이민자들에 대한 내국인의 문화적 거부감을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
 - －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건복지 수준,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의 질적 수준은 전체인구의 자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노동력의 질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러한 관점들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재조망되고 강조되는 것은 매우 중요
- 여기에는 물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민정책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정책의 도입이 고려

10)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이민자의 고출산력에 의해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도 이민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2〉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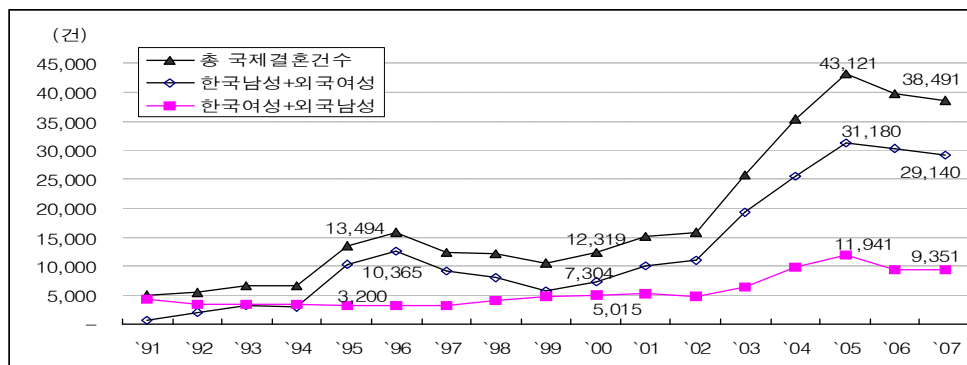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전체 결혼건수 ¹⁾	국제결혼건수			국제결혼비율		
		한국남성+ 외국여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소계 (C+D)	한국남성 +외국여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소계 (F+G)
A	B	C	D	E	F	G	H
1991	416,872	663	4,349	5,012	0.2	1.0	1.2
1992	419,774	2,057	3,477	5,534	0.5	0.8	1.3
1993	402,593	3,109	3,436	6,545	0.8	0.9	1.6
1994	393,121	3,072	3,544	6,616	0.8	0.9	1.7
1995	398,484	10,365	3,129	13,494	2.6	0.8	3.4
1996	434,911	12,647	3,299	15,946	2.9	0.8	3.7
1997	388,591	9,266	3,182	12,448	2.4	0.8	3.2
1998	375,616	8,054	4,134	12,188	2.1	1.1	3.2
1999	362,673	5,775	4,795	10,570	1.6	1.3	2.9
2000	334,030	7,304	5,015	12,319	2.2	1.5	3.7
2001	320,063	10,006	5,228	15,234	3.1	1.6	4.8
2002	306,573	11,017	4,896	15,913	3.6	1.6	5.2
2003	304,932	19,214	6,444	25,658	6.3	2.1	8.4
2004	310,944	25,594	9,853	35,447	8.2	3.2	11.4
2005	316,375	31,180	11,941	43,121	9.9	3.8	13.6
2006	332,752	30,208	9,482	39,690	9.1	2.8	11.9
2007	345,592	29,140	9,351	38,491	8.4	2.7	11.1

주: 전체 결혼건수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 모든 건수 포함.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2〕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7



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잠재인력활용 고도화를 위한 전략 강조 필요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을 경주
 - 더욱이 가속화되는 지식정보화에 따른 미래사회에서 인적자본의 중대성이 날로 증가하여 인력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력 부족시대에 진입하게 되며(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생산가능인구 전체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과 함께 여성과 노인 잠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인력 활용은 자칫 출산력 저하를 유도하여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악순환을 초래할 개연성이 큼.
 - 따라서 여성인력활용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충분히 제고하여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인력활용정책들은 출산율회복정책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설계·운영되어야 할 것임.
- 노인인력활용은 미래 노인의 건강수준이나 교육정도가 현재 노인보다 높아질 것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높은 방안으로 간주
 - 실제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상당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차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확보차원에서 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

제2절 기본계획 수정·보완의 기본원칙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3개 5개년 기본계획의 기초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정책목표도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으로 설정
 -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이어지는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의 주요 정책목표인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와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의 정책목표인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의 토대가 되는 것임.

- 따라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정책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정·보완될 필요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의 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회단체 등의 사전적 이해와 동의가 전제
 - 그 이유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 협동하여 수립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연석회의(국무총리실 주관) 등을 통해 각계각층(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과 협의하였기 때문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 등 여러 여건상 이들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것은 곤란
- 따라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되, 주안점은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2006~2007년간 실적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임.
 -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영역별로 수정·보완 방안들을 제시
 - 비용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관련 정책들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 － 특히, 정책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연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하는 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관성이 낮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 제시
 - 이미 완료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 제안

-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타 정책영역과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을 강화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도입하는 방안들을 강구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시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수정·보완

제 4 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조

제1절 수립경위 및 기본특성

- 21세기에 들어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법적 근간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 이에 근거하여 2006년에는 범정부차원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2006년 8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3회의 5개년 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
 -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기초단계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고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공고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까지의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점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
 - 정책목표로는 출산율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고, 고령사회 적응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관련 과제 추진
 - － 저출산 영역에 관한 것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

- 고령사회 영역에 관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
- 저출산과 고령사회 두 영역의 교량적인 위치에 있는 성장동력 영역에 관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의 국가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림 4-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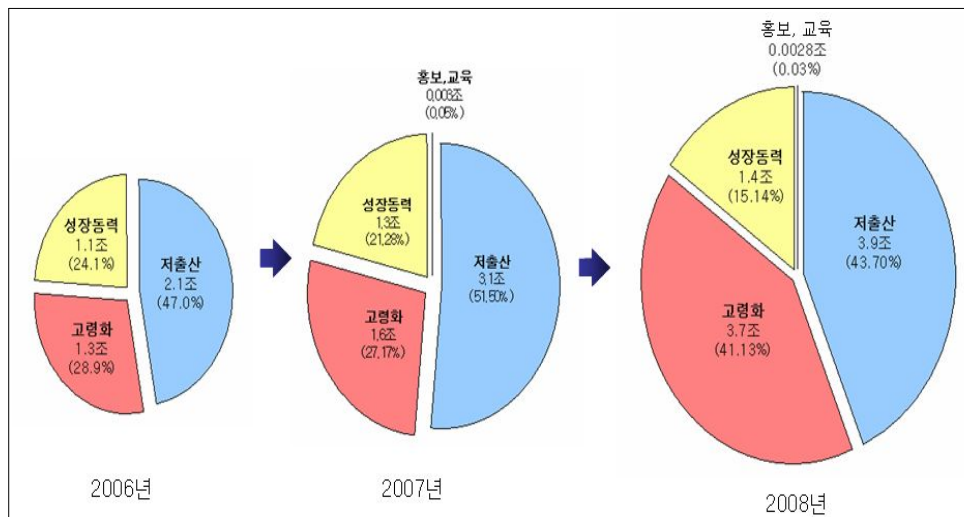


자료: 정부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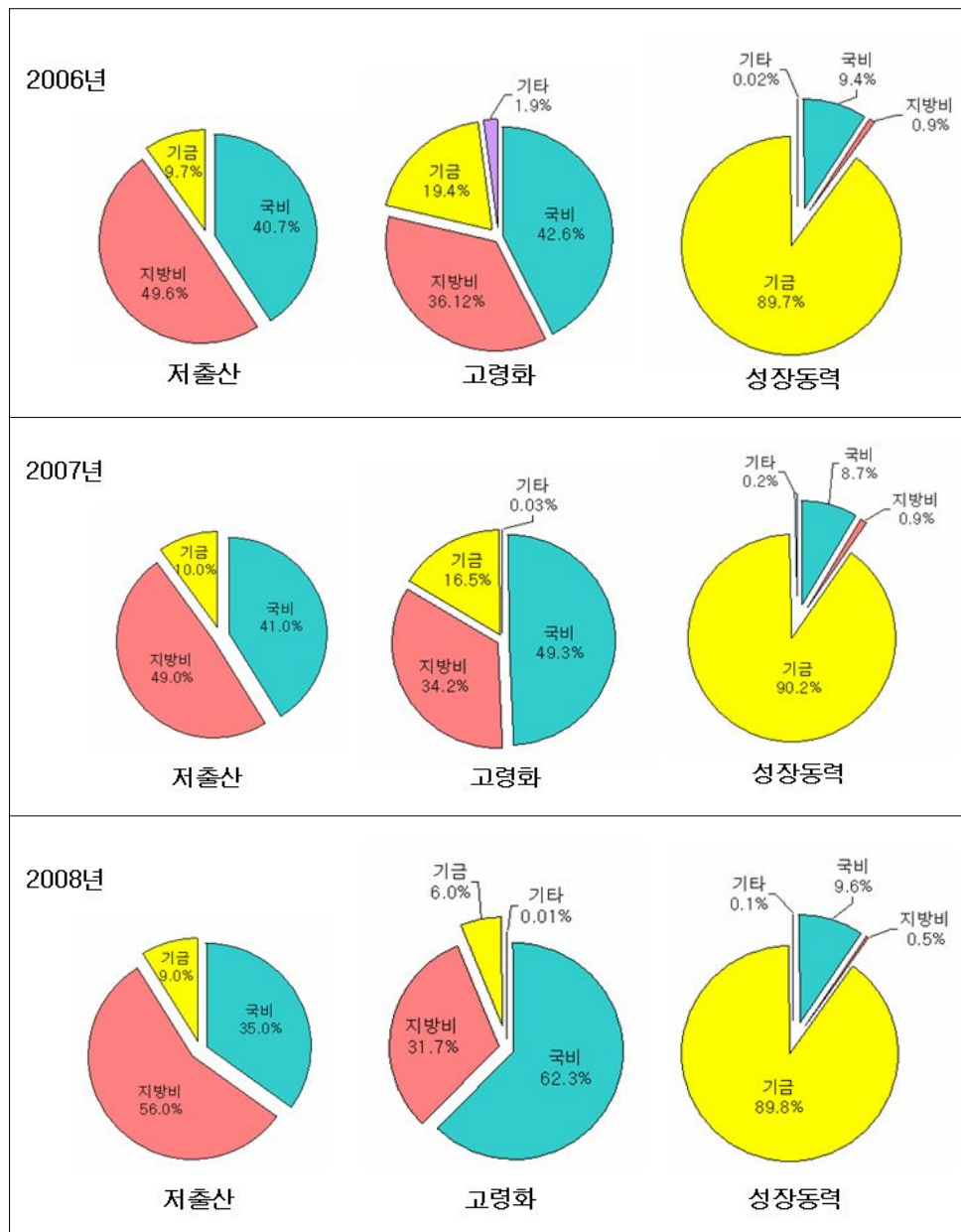
제2절 투입 예산

-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는 4대 분야(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사회적분위기 조성)에서 70대 이행과제와 242개 세부사업 추진
- 총예산 규모는 2006년 4.5조원에서 2007년 5.9조원, 2008년 8.9조원으로 급격 증가
 - 저출산부문은 2006년 2.1조원에서 2007년 3.1조원, 2008년에 3.9조원으로 증가
 - － 저출산부문 예산은 총예산의 절반 수준('06년 47% → '07년 51.5% → '08년 43.7%)
 - 고령화부문은 2006년 1.3조원, 2007년 1.6조(27.2%), 2008년 3.7조원(41.1%)으로 급증
 - － 예산 급증은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저출산부문 예산비중과 비슷한 수준('08년 41.1%)
 - 성장동력부문은 2008년 1.4조원으로 기본계획 전체 예산 중 15% 수준
 - 홍보·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 미만(2008년 0.03%)으로 거의 무시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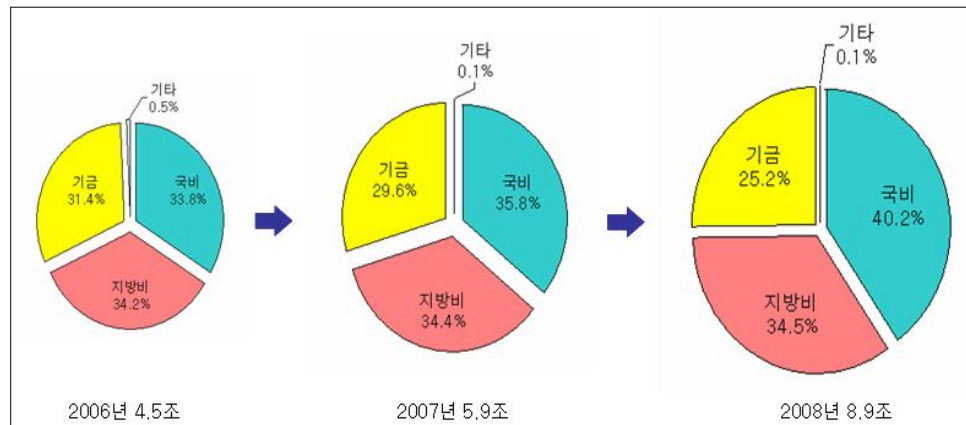
[그림 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추이



[그림 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도별 세부예산



[그림 4-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자원유형별 예산 추이



제 5 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제1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필요성

1. 그간 추진된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

-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제도적 기반 정비
- 보편적 복지서비스(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에 기여

□ 그러나 정책간 우선순위 설정 및 유기적 연계 미흡, 인적·물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미흡, 서비스 간 연계체계 마련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비효율성 비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표대상의 모호성
 - － 저출산대책의 경우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중산층 이상들이 배제되어 있는 한계성 존재
 - － 고령사회정책의 경우 고령화가 먼저 진척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실정 도외시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
- 정책간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미흡 및 정책간 연계성 부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시장경제(성장)와의 연계 미흡
 - －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성장동력확보정책의 기본계획 내 정책간에도 분절
- 인프라 구축 및 기존자원의 활용도(기능 전환, 재활용 등) 미흡
 - － 부문별 중감점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해당 부(部) 참조

□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국민의 낮은 체감도와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 제기

2. 그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처 필요

□ 최근 환경 변화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복지재정의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계획의 검토와 투자우선순위 조정 필요

○ 특히 재정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저출산현상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수행에서 국가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새정부 국정철학과의 정합성 제고 필요

○ 신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의 핵심가치는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시키는 것임.

－ 특히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책임성 강화가 강조될 필요

－ 제도 간의 연계·조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통합성이 강조될 필요

－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증진과 직결

제2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방향

- 비전 및 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지속성 관점에서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의 사업성과, 국정과제,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합적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시

1. 비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로 설정하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비판 제기
 - 기존의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는 너무나 광의적이어서 정책의 지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
 - －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정책목표가 담겨있지 않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력도 담겨있지 않은 모호한 표현이라는 비판 제기
 - －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만 간주될 수 있음.
 - 동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두려움의 사회나 부정적 사회로 전제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동 비전은 사회복지적 성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성장의 관점이 약하다는 비판 제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사회체계 전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를 두려움의 사회, 부정적 사회가 아니라 현재와는 다른 사회전체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준비로 관념화
 -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본적 인식을 사회제도의 일부변화나 아동복지, 노인복지, 경제 활성화와 같은 단편적이고 부분적 변화보다는 사회전체의 변화로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미래의 저출산·고령사회는 성장과 통합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¹¹⁾
 -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로 가는 기회이며, 이는 경제성장에 선순환적 기여 측면 강조
 - －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사회에 통합시키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지금보다 다른 사회체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향성 명료화
-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비전을 ‘성장과 통합이 동반 지속하는 사회’로 변경 검토

2. 목표

- 기본계획 상 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반 구축’과 같이 ‘저출산사회’(고령사회와는 다른 관점임)를 기정사실화하여, 사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 － 또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수단적인 것으로 추진과제로 적합하며,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수준(level)상 문제
 -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도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수준의 모순 발생

11)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미르달(Myrdal)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의 위기를 복지국가 발달의 기회로 삼았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사회서비스 국가에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이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에스핑 앤더슨은 스웨덴을 ‘사회서비스국가(social service state)’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회서비스 국가에서는 ‘돌봄’의 의무를 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공공부문이 책임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투입될 인력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

〈표 5-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기간과 정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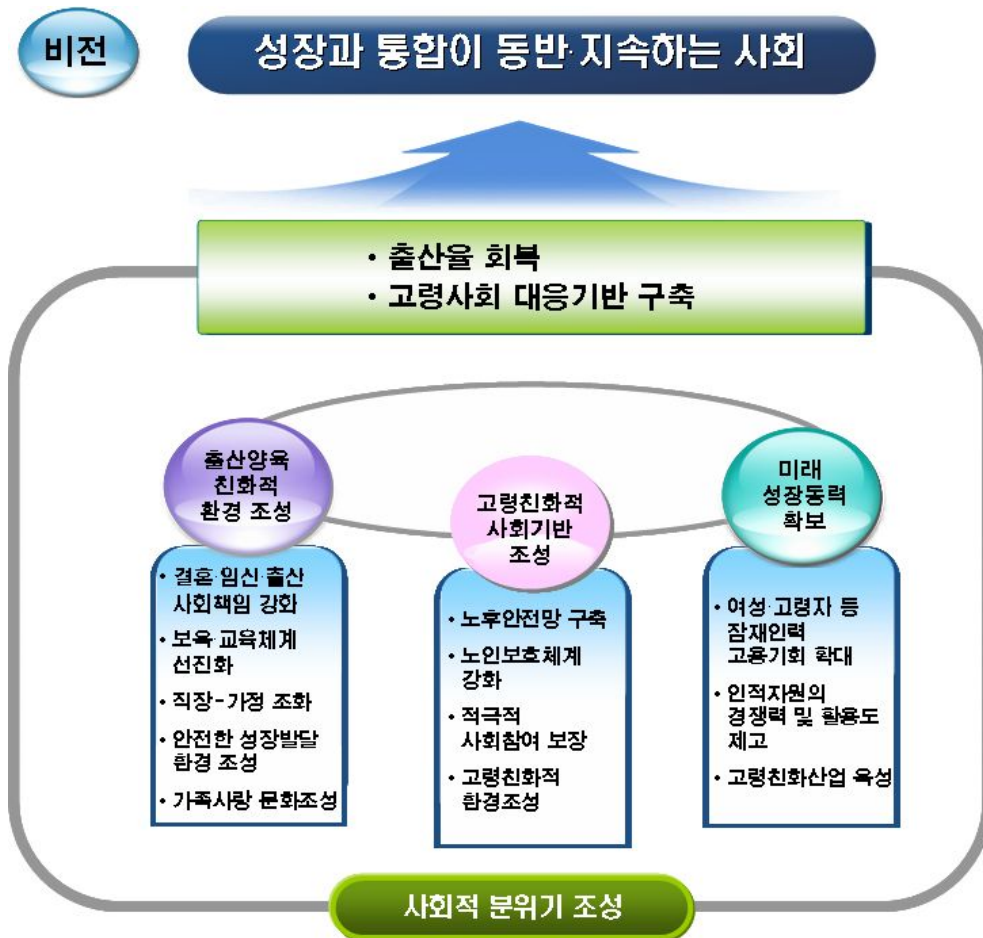
시기	추진목표
제1차 ('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 ('16~'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자료: 정부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6.

- 일반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서 출산율 회복과 사후치료적인 접근으로서 고령사회 대응으로 구분
 - ‘성장과 통합이 동반 지속하는 사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기본계획의 목표로 ‘출산율 회복’ 직접 설정
 - － 현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2011~2020년 기간의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목표는 전 기간(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
 - － 출산율 회복에 대한 국가적, 전사회적 노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목표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할 필요
 - 사후치료적인 접근으로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수용하여, 이에 적합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
- 이상 논의에 의거, 기본계획의 목표는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으로 설정 고려

제3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그림 5-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수정 방안



비전 : 성장과 통합이 동반 지속하는 사회

현재와 미래에 성장이 지속하면서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이 차별과 갈등 없이 통합하는 사회 구현

□ 성장

- 출산율 회복 및 건강한 양육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성장 기조 유지(먼 미래에 대비)
-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성장 기조 유지(가까운 미래에 대비)
-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경제활력 제고

□ 통합

- 모든 계층이 건강하게 출산하여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자녀양육안전망 구축
- 결혼, 출산, 육아, 연령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구축
- 장애없이 누구나 출산·육아기, 성장기, 노후기 등 전 생애주기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 사회 구현
 - － 가난의 대물림 차단, 양성평등 보장, 노인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왜곡과 차별 철폐
 - － 폭력, 유해환경,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목표 :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구성

□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결혼-임신-출산 사회 책임 강화

- －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게 ‘신혼부부 출발 지원’, 안심하게 낳고 싶게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게 ‘자녀양육 부담 경감’

○ 보육·교육체계 선진화

- － 키우기 쉽게 ‘육아안심’을 위한 국가책임보육제도 확립, 믿고 맡기기 편하게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 여건에 따른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직장-가정 조화

- －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동시 제고

○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 － 미래의 동력,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여 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 및 가난 대물림 단절

○ 가족사랑 문화 조성

- －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 문화 조성

□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노후 안전망 구축

- － 사회구성원 누구나 노후에 경험하게 될 위험인 소득상실과 질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노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 마슬로의 욕구론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노후생활의 실현

○ 노인보호체계 강화

- － 노화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UN의 보호와 존엄성의 원칙을 실현함.

○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 － 노후에도 자아실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인 노후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함.

- 마슬로의 욕구론의 상위욕구 충족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및 수준 향상
- UN의 참여와 자아실현의 원칙
-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에 기여

○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 노인이 Aging in Place의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교통, 주택환경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축과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함.
- 고령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생활의 편리성 증대
- UN의 자립의 원칙 실현

□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화
-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인프라 및 기반 강화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제3부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제 6 장 저출산부문 기본구성

- 이 장에서는 기본계획 상 저출산부문 정책들에 대해 그간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기존 정책방향과 새정부의 국정철학과의 정합성을 분석하며, 최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또는 보완 여부와 그 기본방향 등 도출
 -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제3부 제9장에서는 구체적인 수정보완 방안을 제시
 - － 제1절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계획 상 저출산부문 정책들의 기본구조 파악
 - － 제2절에서는 종합검토 작업을 실시
 - － 마지막 절에서는 수정보완 방향을 정리, 제시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저출산부문 정책의 기본방향은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국민이 갈등 없이 출산·양육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출산 선택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구체적인 실천전략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포함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영역은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 가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양육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고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자 함.
 - 그리고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영역은 출산·양육의 책임과 부담이 특정 성(性)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자연스러운 양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원하는 방식으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유연화 하여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는 노력임.
 -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내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영역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가족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안전사고·학대·학교폭력·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확립·내실화하고자 함.

〈표 6-1〉 저출산부문 정책 구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추진계획

부문		기본방향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①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②사교육비부담 경감지원 ③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④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⑤국내입양 활성화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②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③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①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②불임부부 지원 ③산모도우미 지원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 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①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②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유연화 ③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④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2-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①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②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①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②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③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강화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①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②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③ 아동청소년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⑤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제 7 장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향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저출산부문의 정책들은 크게 3개 중영역으로 구분
 -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해당

제1절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부문 중간점검

1. 기본계획 추진실적 중간점검

-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의 중영역에서는 주로 임신기부터 출산, 보육 유아교육, 취학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보건학적 지원에 관한 정책들을 포함
 - 소영역으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은 경제적 지원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사회적 지원에, 그리고 보건학적 지원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 해당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 소영역 정책 중간점검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는 주로 부모의 보육교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성하며, 저소득층 중심에서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자 함.
 - 지원 대상을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에서 2009년 130%인 가구의 자녀에까지 단계적 확대하고자 하며, 2007년에 계획대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수준인 가구까지 확대함.¹²⁾

-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노력도 기울임¹³⁾
- 자녀양육 가정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중간점검
 - 방과후학교를 학교단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2007년에 바우처제도(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쿠폰)를 도입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방과후학교 운영주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하여 맞벌이부부 등의 방과후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 보육프로그램 실시 학교를 2006년 1,100개교에서 2007년 2,508교로 확대함.
 - 사이버가정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시·도 교육청의 시스템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성능을 개선함.
- 조세,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정책 중간점검
 -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시행하여, 자녀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자녀 2인을 초과하는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추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출산·입양공제제도(해당 자녀에 대해 추가 200만원 소득공제)를 각각 도입함.
 -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생활수준점수 산정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2)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의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13)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단가는 2006년 158천원에서 2007년 180천원으로, 그리고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단가는 사립시설 기준으로 2006년 158천원에서 2007년 162천원으로 인상하였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를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0%에서 50%까지 인상하였다.

○ 자녀양육가정 인센티브 제공 정책 중간점검

-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수(자녀수)를 가점항목으로 하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여,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공동주택 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다자녀 무주택가구와 함께 초기 가정형성기에 있는 결혼예정자,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자금대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¹⁴⁾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중간점검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수수료 면제,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등을 실시함.
- 그 결과 국내입양비율은 2006년 41.2%에서 2007년 52.3%로 높아져 당초 2010년 달성목표 50%를 이미 상회함.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아동복지 증진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한 바 있음.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여역 정책 중간점검

○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정책 중간점검

-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을 충족시키고자 함
 -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95개소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53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아전담 국공립보육시설도 7개소를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이후 의무설치 보육시설 사업장수는 2006년 254개소에서 2007년 637개소로 확대.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설치 용자, 운영비 지원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보육시설

14) 0.5%p 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및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상황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장기분할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

-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유치원 통합 설치 및 지원,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영유아보육-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시범사업 실시 등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정책 중간점검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영아(0~2세)에 대해 기본보조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
- 유아(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보조금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2008년부터 실시할 계획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 중간점검

-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교사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간연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종일제 운영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 및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 정책 중간점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중간점검

- 신생아 건강정보관리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신부 등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
- 가임기여성의 생식계통 건강 증진과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등 임신 소모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예방차원의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프로그램 개발·지원
 - 특히,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소 통역요원을 파견
-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무상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보건소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예방접종

-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미숙아·중증질환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임신·출산 및 수유기의 여성과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보충 영양 관리사업을 확대
- 신생아 영양·건강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캠페인을 전개하고,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여 모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 불임부부 지원 중간점검

- 비자발적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일부, 인공수정 시술비용, 남성 불임치료비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

○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중간점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같이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육아를 지원

2. 기본계획과 새정부 국정철학과의 정합성 여부 검토

가. 새정부 공약 및 국정철학과의 관계성

□ 새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임신-출산-보육·교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자 함. 이러한 국정철학은 국가의 보·교육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출산에서 취학까지의 ‘Mom&Baby 플랜’으로 제시하며, 실천전략으로는

- 첫째, 낳고 싶게 ‘출산안심’을 위해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으로 공약으로 제시
-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

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

- 둘째, 키우기 쉽게 ‘육아안심’을 위하여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
 - － 동시에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
- 셋째, 믿고 맡기기 편하게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
- 이와 같이, 새정부에서 공약사항 또는 국정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는 낳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제도 구현은 기본계획 상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그리고 보건학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일치
- 즉, 새정부의 공약사항들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하고자 하므로, 기본계획 상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 필요
- 다만, 기본계획 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약사항 및 국정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임.

나. 새정부 국정철학(공약) 대비 기본계획 보완점

- (1) 기본계획 상 임신, 출산, 보육교육, 양육 등 생애주기별 접근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결혼에 관한 정책들이 배제
- 1990년대 중반 이래 최근까지의 저출산현상의 주요 원인은 인구학적으로 미혼여성의 만혼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감소에 기인하며, 그 비중은 거의 50:50으로 분석(이삼식 외, 2006).

- 초혼연령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출산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유발
- 인구학적으로 여성의 가임기간은 15~49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혼연령이 늦어지면 실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나머지 가임기간이 축소
 - － 여전히 법률혼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중요시되고 있으며, 출생 대부분이 이들 법률혼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현실(2007년 98.5%)에서 만혼은 가임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
 - － 특히, 만혼 여성들의 경우 후천성불임(2003년 13.5%)이라는 생리적인 문제가 흔히 발생하며, 그로 인해 비자발적 출산 포기 사례가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 이는 기본계획 상 불임부부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 과도 맥을 같이 함.
 - 또 다른 문제는 만혼화로 자녀 출산이 늦추어지는 경우, 부모의 은퇴기 등을 감안할 때 희망하는 자녀수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한계성이 존재
 - －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만산하는 경우, 둘째 이상 자녀들은 본인의 생애주기 상 경제활동 종료기에 주요 양육하게 되므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려로 결국 추가희망자녀 출산 포기 경향
- 이와 관련하여, 새정부 국정철학(공약사항)에서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적령기에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새정부는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가구 1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러한 주거정책을 출산장려정책과 우선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음.
 - － 이에 따라 새정부의 국정지표로서 매년 50만호씩 공급되는 신규주택 중에서 신혼부부들에게 12만호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¹⁵⁾

15) 공약 내용으로 공급. 대상을 여성이 주 출산연령인 34세 미만으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입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작업 등의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하고, 도시 주변 산지, 구릉지 또는 도시주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며, 국민주택기금과 재정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는

- 이러한 공약내용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에서도 당연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는 기본계
획에서 더 확장되어 신혼부부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관련 포괄적인 정
책들이 개발,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새정부 국정철학에서는 ‘출산안심’을 위해 임신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 전부터 전체 가임기 동안 생식계통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 기본계획에서 주로 정책 대상을 결혼 후 임신단계부터 설정하고 있는 한계
성에서 탈피하여, 결혼 전 미혼인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에 건강한 결혼과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프로그램 등 강화 필요
 - 이는 만혼화 현상에 대응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
- 의료서비스 지원은 결혼 이전부터 시작하여 임신과 출산은 물론 아동의 취학 전
까지 확대하여 이미 출산한 아동들의 자질을 높여야 할 것임.
- 0세부터 12세까지 필수적인 모든 예방접종항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
도 포함)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며(국정과제),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
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녀의 임신단계부터 취학전까지 의료지원체계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건강검진,
영양관리 등 관련 서비스의 확충 및 질적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그 실
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임.

10년 이내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하위 소득계층 4만8천가구에 대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80㎡(25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60㎡(18평) 이하 주택을 임대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보증금 1천만~1천5백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 되며,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 3천~5천만원에 장기저리 융자금 1억2백~1억4,040만원을 받고 월 40만~55만원씩 원리금을 30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7만2천가구에 대해서도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8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 또는 분양하겠습니다.

- 출산율 제고에 실효성이 높은데다가 불임부부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필요

(3) 국가의 보육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여 선진화할 필요

- 개인적인 사정이나 보육교육시설 부재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시설 비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설 외 형태의 보육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 그 일환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접근을 장기적으로 지향하고,¹⁶⁾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우선 보육교육시설 비이용 아동들에게 한정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이는 시설 이용 아동과 비이용 아동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책임보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시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기본보조금제도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자녀양육가정들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점 제기
 -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대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 기본보조금제도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장기적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차등보육교육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보조금의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 보육교육비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 이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 계층 대상의 보편적인 보육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발생

16) 조세감면혜택 등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가정에게만 부여되므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

- ☐ 현 보육교육비 지원수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취학전까지 실질적인 공보육을 구현하는 노력 필요
- ☐ 육아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공립보육교육시설과 민간보육교육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들을 모색
- ☐ 부모의 다양한 근로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간제보육 확충 필요

(4)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 해송 적극 모색 필요

- ☐ 취학 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공교육이 확립되어 있으나,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취업난까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은 최근 저출산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
- ☐ 기본계획에서는 방과후학교 확대, 초등보육프로그램,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내실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그러나 현재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정책의 효과성은 의문시
- ☐ 이와 관련, 실제 방과후학교, 방과후 보육·교육, 사이버학습 등이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사교육과 대등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 개선 필요
 - 적어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들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강구 필요

(5)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의 현실화로 국가책임보육제 확립 필요

- ☐ 새정부의 공약에서도 보다 일반적인 접근이나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포함¹⁷⁾
 - 아동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사회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이

17) 교육비 : 대학 700만원 → 1천만원, 고교 이하 200만원 → 300만원, 의료비 : 500만원 → 700만원

- 자녀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필요
-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모유수유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회용 기저귀, 분유 수유 등이 일반화되고, 아동용품들이 고급화로 양육비용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 미래 노동력의 혜택을 모두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을 양육하는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출산 축소 내지 포기 of 경향
- 따라서 다자녀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자녀양육부담이 자녀수에 따라 비례하므로,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 발생)
 - 조세 혜택 등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아동수당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고려

제2절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부문 중간점검

- 현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제시
-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직장문화 개선에 역점

1.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중간점검

가. 휴가휴직제도 개선 필요

- ☐
-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와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¹⁸⁾)에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 보험에서 지급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한계점 개선 필요
-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비율이 2005년 26.0%에서 2006년 27.9%, 2007년 36.3%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대체인력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인 증제와 연계 강화 필요
-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의 모성 보호가 사각지대
 - 새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비정규직 4대 보험 가입과 연계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여성의 출산 직후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3일간 무급 휴가를 유급으로 확대 필요¹⁹⁾

나.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강화 필요

-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을 도입하였으며, 산전후휴가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의지 강화 및 직장적응을 위한 단계별 교육(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를 운영하여 취업과 연계
 - 노동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특히 “여성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

18)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19)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2주, 네델란드는 2일의 아버지 출산휴가제 보장

다.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사업 강화 필요

-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새정부는 여성의 고용 확대와 출산을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탄력근무제, 가족친화 기업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강조

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 중간점검

- 기본계획 상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을 가족사랑, 가족돌봄노동분담 차원에서 재강조하여 현실성 제고 필요
 - 새정부에서는 가족사랑·가족돌봄노동의 분담을 위하여 가족사랑·성공가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
 - － 구체적으로 가족사랑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가족친화환경 조성 필요
 - － 향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서 만혼화 경향, 가치관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제3절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중간점검

- 기본계획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을 실천 전략으로 설정
 -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들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등 추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부 정책들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 이들 정책의 중요성은 대선 공약에 부각되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
 - 첫째, 미래의 엔진으로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와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포함²⁰⁾
 - 둘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자녀 안심 학교보내기, 그리고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화 역기능 해소 강조
 - － 학교폭력 근절과 자녀 안심 학교보내기 대책으로 체계적인 학교 부적응 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학교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가정·지역사회·학교간 협력체계 구축 포함
 - －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사이버중독 예방과 치료활동 강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가정 보호 등을 각각 제시²¹⁾

20) 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센터를 확대하여 청소년 인권 침해사례 및 청소년 권익 침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한 심의와 감시체계 강화,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기술적 통제시스템 구축, 청소년 유해업소·유해사범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청소년 음주·흡연·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및 사전예방 활동 강화, 인터넷·휴대폰에 의한 성매매 광고 등 신중 유해환경 근절,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처벌, 재범방지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해 의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지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 및 학교·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을 통한 피해청소년 구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1) 청소년의 인터넷 및 모바일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활동 강화, 체계적인 학교 부적응 지표개발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학교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연결되는 협력체계 구축(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문제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폭력예방조직 구성 및 지원 육성 등)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다.

- 셋째, 그들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할 것을 공약하고, 실천전략으로 드림스타트(Dream Start)운동 전개와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실시 제시²²⁾
- 새정부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로는 미래의 엔진으로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과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 등, 그리고 그들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난의 대물림 단절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그러나 기본계획 상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들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전 예방과 사후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으로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육성 정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성 존재²³⁾
-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계획 상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립 필요

22) 드림스타트 운동은 저소득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학 후 학업 성취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교육, 보건, 여가·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는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비, 자율형 사립고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하고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통해 가난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3) 예를 들어,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는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기회를 보장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함양 및 역량 강화,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경제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성숙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배제되어 있다.

〈표 7-1〉 저출산부문 정책별 한계성과 보완방향

세부 영역 및 정책	보완 방향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보·교육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 지원
신혼부부 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의 주원인으로서 결혼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적극 추진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 청소년의 임신·출산·육아 체험 학습 지원 - 결혼준비교육 지원 - 결혼·출산친화적 병역제도개선 및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 국정과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
①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세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 2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중심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대상 확대를 통한 보편적 접근으로 전환 및 지원수준 현실화 ◦ 장기적으로 기본보조금 등과 통합하여 단일보육교육지원체제로 운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보육제도(국가책임보육제도) -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보육비 절감
②사교육비부담 경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내실화 ▪ 저소득층 바우처제도 도입 ▪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지속 증가로 정책 효과성 의문시 ◦ 정책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사교육과 대등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 개선 도모 - 동 정책 이용 선호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의 절반 절감
③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등 확대 -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순위 등에 따른 차등 적용 ◦ 비과세 품목(육아용품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④자녀양육가정 인센티브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다자녀가정 육아지원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연계 	
⑤국내입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 지원요건, 절차 등 제도 개선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무상보육·교육비,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의료비 인상 등 		
⑥아동수당제 도입에 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각지대 존재 -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육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 이용금액 상

세부 영역 및 정책	보완 방향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미이용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으로 전환 도입(시설이용아동과 비이용아동간 형평성 제고 차원) ◦ 조세감면혜택 등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가정에게만 부여되므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	당액 지원 ※국정과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양육 수당))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수요 충족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교육시설과 민간보육교육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및 활용 방안 모색 ◦ 국공립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취약지역 우선적 공급 지향 ◦ 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균형 배치(취약보육, 포괄적 서비스, 교사와 시설 지원 기능 등)	◦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
②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기본보조금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기본보조금 제도의 전달체계 개선(전자카드 적용 등)	◦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③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확대·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유치원 종일제 확대 ▪ 시간제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 ▪ 문화시설내 시설 설치/운영 지원	◦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시간제보육 확충 - 영유아 일시보육시설 및 놀이집 단 서비스 제공 시설 설치 - 긴급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 수요자중심 보육·육아 정책 개편	◦ 시간제 보육제도 활성화 ※국정과제: 수요자 중심 보육·육아 정책 개편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①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신생아 체계적 건강관리 기반구축 ▪ 여성 생식보건 증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 ▪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모유수유 지원 확대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②불임부부 지원 ③산모도우미 지원	◦ 출산력 제고, 인구자질 향상 등 인구의 기초적인 부문으로 지속 확대 - 지방국립대학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 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필수예방접종,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지원 등 확대	◦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원에서 접종포함) 국가부담 -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 경감 ◦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 의료비 지원.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50%에서 100%로 확대 ※국정과제: 임신에서 취학전까

세부 영역 및 정책	보완 방향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지 의료서비스 지원
2.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①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지급의 완전사회화 ◦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모성보호 강화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연장, 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 새정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과 연계 등
②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형태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순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③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원확대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특히 “여성일자리창출”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국정과제인 맞춤형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여성일자리창출”
④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 기업인증제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증제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 여성 고용확대 위해 탄력근무제, 가족친화 기업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2-2. 학교·사회교육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교육 등 강화 	
②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랑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지역사회 가족친화환경 조성 ◦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다양한 가족 안전망 구축 ◦ 남성의 가정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촉진, 사회 각급 조직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등
3.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엔진,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함양, 역량 강화

세부 영역 및 정책	보완 방향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개발, 경제인으로 이행 과정 지원 등 성숙한 경제주체로 성장
①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안전수준제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분위기 조성 ▪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 공표 ◦ 아동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학교 부적응 지표개발 및 정기실태조사 실시 ◦ 학교폭력 학생징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학교 부적응 지표 개발, 학교안전도 제고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방임 조기발견/예방체계 구축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학대 예방홍보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③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친화적사회환경구축 -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한 심의와 감시체계 강화 -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기술적 통제시스템 구축 - 청소년 유해업소·유해사범 및 성매매 단속 강화 - 청소년음주·흡연·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및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인터넷, 휴대폰에 의한 성매매 광고 등 신종 유해환경 근절 ◦ 성폭력 및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처벌, 재범방지교육, 사후관리 강화 ◦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해 의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지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 및 학교·사회복귀시스템 구축 등 피해청소년 구제 ◦ 학교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연결되는 협력체계 구축 -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폭력예방조직 구성 및 지원 육성

세부 영역 및 정책	보완 방향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드림스타트 ◦ 아동발달계좌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화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관련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가난의 대물림 단절 - 드림스타트운동 전개 ◦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실시
② 아동권리 보호 사회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 보호 체계 구축, ▪ 민간 모니터링 기구 설치		◦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 - 청소년인권센터를 확대하여 청소년 인권 및 권익 침해사례 적극 대응
③ 아동청소년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④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유해환경 차단강화 ▪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사이버중독 예방/치료활동 강화 ◦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가정 보호
⑤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 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 감소사업 ▪ 학교-보건소 연계 강화		

제4절 저출산부문 종합평가 및 보완방향

1. 출산율 변동과 정책의 한계성 종합평가

-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 이후,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에서 200년 1.13, 2007년에 1.26으로 증가
- 출산 증가 원인은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결혼 및 출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2006년 출산가구 조사결과,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홍보,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다자녀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분위기 조성되었고, 이는 2006년 출산의 14%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

- 다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분위기는 조성되었으나, 이를 가능케 하는 여건으로 정책들의 효과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2007).
 - － 2006년 출산가구 조사결과, 4%만이 정책을 이유로 출산
- 2006~2007년간 나타난 출생아수 증가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곤란하며, 오히려 출산을 회복세가 멈추거나(초저출산수준에서 답보상태 유지) 다시 낮아질 가능성 존재
- 최근 고유가, 고물가 등 경제 불안에 따른 생활고 발생
 - － 과거 제1차('72~'75) 및 제2차('78~80) 오일쇼크와 1997년 IMF 이후 출산을 급감 경험 사례
 - － 실제 2008년에 들어 월별 출생아수가 점차 감소세
- 따라서 최근의 출산을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관건
 - 출산에 유리하게 조성된 사회적분위기를 실제 출산을 회복세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 불안 등 외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공약 및 국정철학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현 저출산정책의 한계점 보완 필요

2. 현 저출산대책의 한계성과 보완 방향

- 전반적으로 저출산정책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기본계획 상 일부 정책들은 저출산과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평가)
- 따라서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들은 해당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만을 선별하여 집중시키는 등 범위와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
-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대상이 명료화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부재

- 따라서 저출산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의 속성이나 정책 효과성을 토대로 정책 대상을 집중화할 필요
 - － 예를 들어, 모든 자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정책 목적에 집중할 필요
- 저출산정책의 대상 선정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단순한 복지적 접근이라는 비판 제기
 - 출산율 감소의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소득부족에만 기인하지 않고, 가치관, 고용 불안정,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및 일-가정 양립 곤란, 보건의료적으로 가임력 약화 등 경제사회현상 전반에 내재
 - － 특히 소득계층 중 중산층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 존재
- 정책간 연계성(특히 성장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다는 평가
 -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관점에서 중점을 둔 반면, 여성인력 활용(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부족
 - － 요컨대, 일-가정 양립은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과 우호적이지 못하는 등 성장 동력의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 따라서 저출산대책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정책 실행이 중요
 -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등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며,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평가
 - 예를 들어, 보육·교육 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간의 기

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평가

- 그로 인하여 기존 자원들이 비효율적으로 활용 또는 배치되고 있어, 자칫 관련된 물적 및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
- 서비스의 질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채, 공급과 수요간 괴리가 존속
- 보육교육 시설 및 서비스의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배치 및 질적 수준 미흡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간격을 보충하기 위한 비용 지원도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국민 체감도가 낮아데다가 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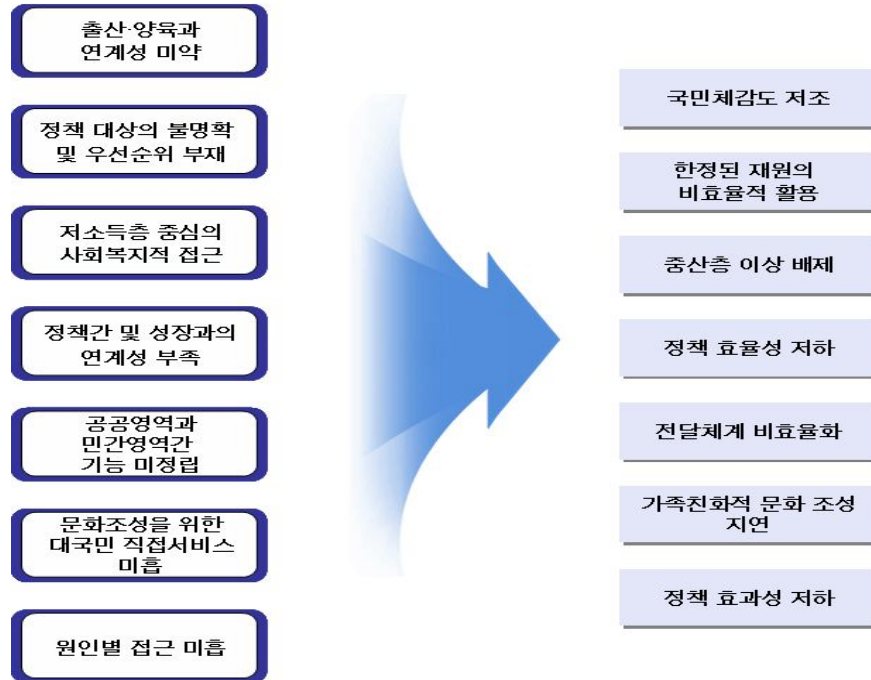
□ 일부 저출산 대응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평가

- 예를 들어,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조성의 정책 영역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미흡으로 인하여 관련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은 실정

□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결혼 지연(만혼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재하다는 평가

- 따라서 혼인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개발·시행 필요
 - 그 경우 여성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요구되므로,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그림 7-1] 저출산대책 중간점검 결과로서 도출된 현 정책의 문제점



2. 저출산부문 정책영역 재분류 방안

- 기본계획 상 저출산부문(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세 중영역으로 구분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는 실제 다른 중영역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간주된다. 그 이유로는 다른 두 중영역(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도 궁극적으로 사회책임으로서 정책들이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영역들을 재분류하고 명칭을 정책 대상이나 범위 및 성격에 따라 명료화할 필요

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조정안

- 우선 ‘1.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중영역에서는 주로 임신기부터 출산, 보육 유아교육, 취학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보건학적 지원에 관한 정책들을 포괄
 - 소영역으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은 경제적 지원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사회적 지원에, 그리고 보건학적 지원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 해당
 -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 소영역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을 포함
 -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수요 충족,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
 -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포함
- 국정과제로서 임신부터 취학전까지 국가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해당
 -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 임신과 출산의 거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있으며, 실제 최근의 저출산현상은 결혼지연(만혼화)에 기인하는 정도가 아주 높음.
 - － 결혼제도가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에서 일정 부문에 대해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으며 필요성도 있을 것임.
 - 따라서 동 영역의 범위에 결혼을 추가하여, 결혼부터 취학전까지로 정책 범위를 확대 필요
-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세부영역들간에도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은 자녀양육가정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며,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도 생애주기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만,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자녀양육 가정 및 아동들에 간접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함.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보육교육에 관한 영역으로 주로 시설 확충 등 물적인 차원과 서비스 개선 등 질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에 관한 세부정책들 중 보육교육 비용에 관한 지원은 육아지원인프라의 물적 및 질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왜냐하면, 보육교육시설의 양적 충분성과 지리적 분포 그리고 질적 수준은 보육교육비용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
 - －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기로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는 양육수당의 경우도 보육교육 비용으로 간주
 - 한편, 결혼부터 취학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에서 보육교육관련 정책들은 아동양육 지원과 여성 모성권·노동권 보장(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중여역 중 일-가정 양립관련 정책에 해당)간의 경계선 상에 있는 영역임.
 - － 더욱이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아동의 자질 향상을 위한 아동권 강화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정부에서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결론적으로 보육교육에 관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그리고 비용에 관한 내용은 보육교육정책의 독립적인 중영역으로 분리할 필요
-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라는 중영역은 2개의 중영역으로 분리·재편. 즉, ‘결혼·임신·출산 사회책임 강화’와 ‘보육·교육체계 선진화’로 구분
- ‘결혼·임신·출산 사회책임 강화’ 중영역에는 새로이 추가될 결혼부문에 관한 정책들을 포함한 ‘신혼부부 출발지원’과 기존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그리고 기존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로 세분화(소영역)
 - ‘보육·교육체계 선진화’ 중영역에는 보육교육의 물적(양적) 차원으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선 등 질적 차원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육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보육교육비용 지원체계 확립' 등 3개의 소영역으로 재편

나.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중영역 조정

- 현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소영역으로 구분. 전자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직장문화 개선에 역점. 후자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와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등 세부정책 포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노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새정부의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에서도 강조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에서 학교사회교육 강화는 수단적인 성격を 가지며, 가족문화 조성은 목적적인 성격 지남
 - 따라서 이들을 병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만큼 결혼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가족문화 조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대상의 속성(노동시장 내외) 또는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3가지 소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현 기본계획의 체계와 유사
-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경력단절 없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선상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구성. 여기에는 유사산휴가제와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등이 포함.
-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출산·육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구성. 여기에는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여성재취업장려

금', 산전후휴가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등 포함.

- 직장문화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로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이 존재
-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현 기본계획에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중 영역 하의 소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영역과 가족문화 조성 정책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별도의 중영역으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
- 일-가정 양립 정책영역은 대상(노동시장 내외 근로자, 직장) 등을 기준으로 '휴가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으로 소영역들을 재편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영역은 새정부의 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는 '가족사랑 문화조성'으로 변경하며, 소영역들로 '가족가치관 학교교육 강화', '가족가치관 사회교육 강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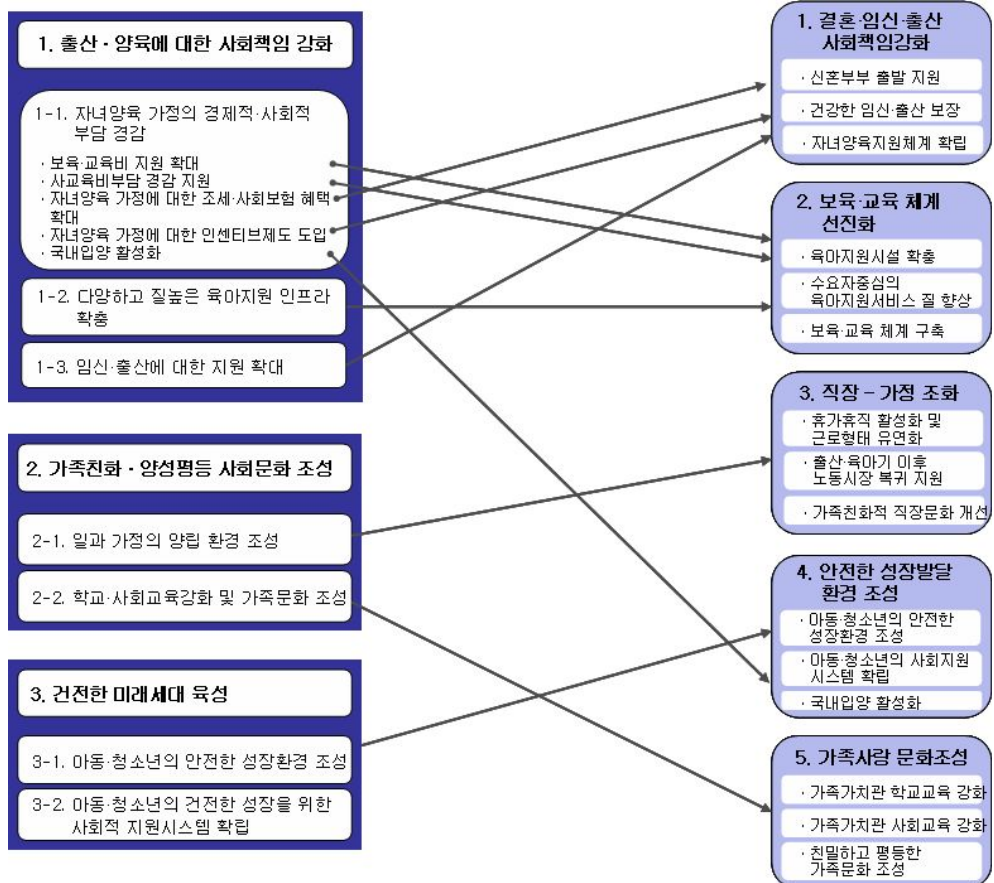
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조정안

- 기본계획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을 실천 전략으로 설정
- 동 영역은 대선 공약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 체계와 마찬가지로 유지
- 기본계획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들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이며, 이를 위해 출

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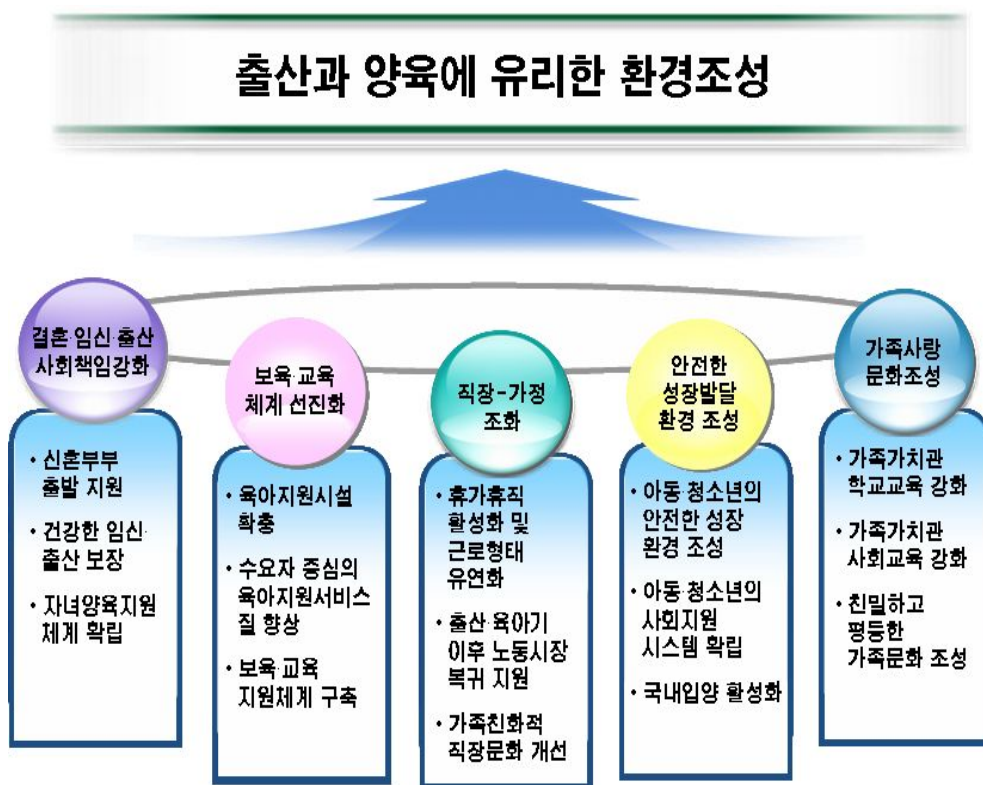
- 현실적으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정책들 대부분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구현 성격이 강함
- 출산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므로, 기본계획 상 성장동력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
 - － 그러나 새정부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등에서는 미래의 엔진으로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로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소극적 예방 및 보호)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으로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책들(공약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함양 및 역량 강화,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경제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성숙한 경제주체로 성장 등)이 포함
- 따라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에 속한 정책들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들만으로 한정하는 선택을 고려할 필요

수정 후



제 8 장 저출산부문 수정보완 방안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을 제고 및 건강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초기단계로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5가지 전략 추진



결혼·임신·출산 사회책임 강화

-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게 ‘신혼부부 출발 지원’
 - － 건강하고 안전한 결혼생활,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 등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 보장
- 안심하게 낳고 싶게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 －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상시적 체계로 구축하고, 낳고 싶은 부부의 불임문제를 해결
-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게 ‘자녀양육 부담 경감’
 - － 조세, 사회보험 등 사회체계를 자녀양육가정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고, 주거권과 양육권을 직접적으로 보장

보육·교육체계 선진화

- 키우기 쉽게 ‘육아안심’을 위한 국가책임보육제도 확립
 - － 낳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국가의 보·교육지원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 믿고 맡기기 편하게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
 - － 보육시설 수급 균형화 및 유형간 조화로운 역할 수행 도모
- 여건에 따른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 －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양질의 보육인력 및 서비스 확보, 보육유형의 다양화, 시간제 보육제도 활성화 등

직장·가정 조화

-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동시 제고
 - － 휴가휴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근로형태를 유연하게 적용

- 출산·육아기 이후 자유로운 노동시장 복귀를 통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동시 제고
 - － 적극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출산육아기 이후에 적합한 맞춤형 형일자리 창출 등
-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안전한 성장발달환경 조성

- 미래의 엔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여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 － 안전사고, 아동 학대·방임, 학교폭력, 실종아동 등에 대한 예방시스템 및 사후보호시스템 강화
- 아동청소년의 가난 대물림 단절
 - － 보육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조기교육 실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적 제공
-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일원으로 성장 지원
 - － 국내입양 활성화

가족사랑 문화조성

- 성장과정에서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수준 제고
 - － 가족 가치 중시를 위한 학교교육 강화
- 가족 등에 대해 차별과 왜곡 없는 인식 개선
 - － 가족 가치에 대한 사회 교육 강화
-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 문화 조성
 - － 지역사회의 가족친화환경 조성

□ 정책수단별 세부정책(신규과제 포함) 수정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하 내용 참조(○은 기존과제, •은 신규 또는 추가과제)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1. 결혼·임신·출산·사회책 임강화	1-1. 신혼부부 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준비교육 지원(신규)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신규, 국정, 공약) • 결혼·출산친화적 병역제도 개선(신규)
	1-2. 건강한 임 신·출산 보장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체계적 건강관리 기반구축 ◦ 여성 생식보건 증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공약) ◦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공약)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모유수유 지원 확대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 임신~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효율적 지원정책 개편(신규, 국정, 공약) • 지방국립대학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추가) <p>*** 찾아가는 산부인과</p>
		불임부부 지원	◦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용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3. 자녀양육 지원체계확립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 ※ 소득공제 등 확대(공약): 재정부담 경감차원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 적용 ※ 비과세 품목(육아용품 등) 확대(신규)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 다자녀카드 제도(신규)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 다자녀 가정, 초기가정형성기 등 실수요층에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혜택 부여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2. 보 육 · 교육 체 계 선진화	2-1. 육아지원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공약)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균형배치(신규) ◦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충
	2-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질 향상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기본보조금 * 전달체계 개선 등(공약)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 * 시간제보육 활성화(공약) ◦ 문화시설내 시설 설치/운영 지원 • 영유아 일시보육시설 및 놀이집단 서비스 제공 시설 설치(신규) • 긴급보육서비스 체계 구축(신규) • 수요자중심 보육·육아 정책 개편(신규, 국정)
		종일제 유치원 운영 확대	
		문화시설내 육아시설 설치·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의 절반 절감(공약)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 초등 프로그램 실시학교 확대 ◦ 방과후 보육·교육운영시스템 연계·통합 ◦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내실화 * 초등학교 유취교실 활용 국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 보육서비스 정보 공시 의무화 * 수요자 중심 보육·육아 정책 개편 * 보육비용 지원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개선 * 유아대상 기본보조금제 시범운영 후 도입 검토
	2-3. 보육·교육 지원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책임보육제도(공약) ◦ 만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신규,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신규, 국정)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3. 직 장 - 가정 조화	3-1. 휴가휴직제 활성화 및 근로 형태 유연화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급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지급의 완전사회화(신규, 공약)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도 도입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연장, 유급화(신규) •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모성보호 강화(신규) ※ 국정과제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과 연계 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공약)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신규)
		근로형태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형태 유연화 ※ 탄력근무제(공약)
	3-2.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제도 활성화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 국정과제인 맞춤형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여성일자리창출”
	3-3.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공약)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맞벌이부부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4.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4-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사항 ◦ 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 공표(추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강화 및 분위기 조성 ◦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 아동실태조사 실시(추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예방 홍보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 학교폭력 예방·근절지원추진체 운영 활성화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4.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4-2.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공부방확충 및 지원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추가) • 드림스타트(추가, 공약) • 아동발달계좌(추가)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관련 아동 복지교사 파견 지원(추가)
		아동권리 강화(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 민간 모니터링 기구 운영 활성화
		아동·청소년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 차단강화(공약) ◦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 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 감소사업 ◦ 학교-보건소 연계 강화
	4-3.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사업 추진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 개선 추진	
		입양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수수료 지원 확대 ◦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 입양아 양육수당 확대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5. 가족 사랑 문화 조성	5-1. 가족가치관 학교교육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5-2. 가족가치관 사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 개선 운동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사회교육 강화
	5-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가족사랑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지역사회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공약)

제9장 저출산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제1절 결혼·임신·출산 사회책임 강화

1. 신혼부부 출발 지원

가. 결혼준비교육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생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 결혼 준비, 부부관계, 부부와 가족의 역할 및 책임, 올바른 성문화와 부부생활, 임신·출산·자녀양육 준비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중요
 - 결혼 전 및 신혼기에의 건강검진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실질적 서비스 제공 중요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에 관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 아주 기초적이거나 단편적이며 접근성도 제약되어 있는 실정

2) 추진 실적

-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04년~)
 - 부부/부모교육, 예비부부/신혼부부교육, 가족문화사업, 가족상담사업 실시
 - '04년 3개소 → '05년 15개소 → '06년 49개소 → '07년 65개소 운영중
- ☐ 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 참여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07.10월)

- ☐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 필수사업 중 선택사업으로 지정

3) 향후 추진계획 ('09~'10)

- ☐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추진
- ☐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상담사업 매뉴얼 보완
- ☐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 주택 구입 및 임차(전·월세) 등 결혼준비비용 부담의 증가는 만혼화 경향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청약가점제의 도입('07.9)으로 인하여 신혼부부가 신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 ☐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출산을 촉진할 필요
 - 또한, 주택구입 욕구가 큰 젊은 연령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경우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
 - 주택구입 계획 비율 30대 이하 58.3%, 40대 43.6%, 50대 26.6%, 60대이상 17% (국민은행, '07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2) 추진 실적

- ☐ 청약대상자: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 대상주택 :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 특별공급비율은 30% 범위 내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여 탄력적 운영

- ☐ 청약통장 :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이상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금년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 가능
 -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3) 성 과

-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5.2~5.22)
-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7.2) 및 시행(7.15부터)

4) 문제점 또는 추진상 애로사항

- ☐ 출산의 개념에는 입양장려 및 입양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양도 포함하고 있으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청약신청자가 제출한 입양관련 서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를 통한 사전차단 노력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7.15 시행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다. 결혼·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 군입대전 결혼 또는 출산을 희망하나, 군복무 기간 중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담으로 인하여 결혼 또는 출산을 연기(경우에 따라서는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 내지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

2) 추진 실적

☐ 기혼자의 입영기일 연기

- 기혼자가 6세 이하(임신 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자녀를 둔 기혼자(현역입영대상자)가 원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 '08. 1. 1. 이후 상근예비역 입영자부터 적용
 - 시행시기: 입영기일 연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상근예비역 선발은 2008년 1월 1일부터
 - 인원: 입영기일 연기는 615명, 상근예비역 선발은 229명

☐ 현역병, 직업군인(하사관 이상),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관한 교육서비스 제공

- 사병, 직업군인, 예비군 등의 정훈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제공

3) 성 과

☐ 병무청 예규 개정

4) 기대 효과

☐ 기혼자에 대한 병역연기 및 복무형태변경에 따른 출산율 제고

☐ 향후 결혼 및 출산의 주 연령층에 결혼, 출산 및 육아에 관한 기초교육 제공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2.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 차세대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생애초기인 태아기 및 영유아기의 건강투자는 출생아의 건강잠재력 의 배양으로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됨에 따라 생산성 높은 질적 인구를 보장하는 지름길이어서 비용·효과 면에서 가장 효과적임.
- 평생건강의 기틀이 되는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in Life)의 보장을 위해서는 모성과 영유아기의 체계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데.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 등으로 출산율의 저하 및 출산연령의 고령화로 건강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5.3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사망원인이 신생아 호흡곤란(11.8%), 심장선천성기형(9.9%),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 관련장애(9.8%)와 영아 돌연사증후군(4.0%) 등임. 모성사망비의 경우 출생 10만명당 13명(2003)으로(한영자, 2003) OECD 국가 평균(11.6명)보다 아직도 높은 수준임.
 - － 현 사회구조와 의료체계 속에서 여전히 예방 또는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의료이용과 낮은 모유수유 실천율 등으로 인한 질병과 사고·손상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 이는 지나치게 의료화(medicalization)되어 있는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및 교육과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은 미흡하기 때문임.
 - － 핵가족과 저출산으로 관련 지식습득 기회가 거의 없는 반면, 임산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녀의 출산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민간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비용부담으로 인해 이용 제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검증 및 필수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보편적·체계적 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임.
- 한편, 모성의 출생아 양육에 대한 심각한 불안증가와 해체가정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초래되는 영유아 방치와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출산지원과 아울러

출생아의 사망 감소를 위한 인구 안정화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태아기부터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성의 건강 잠재력의 확보가 사회적, 국가적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고위험 임신 및 출산으로 초래되는 사산 등 주산기 사망의 감소가 관건임.

□ 영유아기 의료이용 증가

- 영아기 의료이용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규모 대비 총 입원진료일수의 실 증가비율이 2005년 131%이며, 입원·외래·약국의 총진료비는 160%이었음.
- 1~4세 유아의 의료이용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규모 대비 총 입원진료일수의 실 증가비율이 2005년 146%이었음(황나미, 2007).

□ 최근 정부는 임신 및 출산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경제적 부담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신·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종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표준 모자보건수첩 개발 및 보급

- 정부는 그간 보건소의 저조한 모자보건수첩 보급률과 민간 병·의원 및 분유회사 등에서 수첩을 자체 제작·보급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정보의 객관성 부족 및 건강기록의 단절로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을 문제로 인식하여 왔음.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 공공·민간 공히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개발, 보급하여 임신·출산 및 영유아기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정부가 개발한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신주수별 검사안내, 임신부 건강상태, 성장기록, 예방접종 기록, 신생아 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사항, 접종시 주의사항, 시기별 검진일정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로써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사회 및 가정 공히 출생한 영유아를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발달장애 또는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영유아의 균형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8개 보건소의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어 보건소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수행하여 왔음.
- 정부는 2004년 11월 희망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작성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내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을 세부추진과제로 채택함.
- 이에, 성장발달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일생동안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정신적·경제적·사회적 부담 및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건기관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도입,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05년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2010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을 확대, 정착하여 영유아 성장발달 장애를 낮추는 목표를 설정함.
-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실시 보건소는 2006년 145개소에서 2007년 162개소로 확대되었음.
- 이상과 같은 공공부문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2007년 11월 15일부터 기존 영유아 건강검진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생후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전체 영유아에게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무료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공급체제로 전환함.
- 이에 따라 그간 보건소 중심의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서비스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만6세 미만의 전국 영유아(약 295만명)가 5차례에 걸쳐(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을 포함한 성장발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2007년~)을 실시 중에 있음.

- 이로써 영유아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형평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표 9-1〉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및 성장발달 평가

검진 항목	검진시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문진 및 진찰	●	●	●	●	●
신체계측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영양	●	●	●	●
	수면	●			
	구강		●		
	취학 전 준비				●
	구강검진		●		●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2008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통해 정신지체 및 성장장애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차세대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함.
 - － 검사 종류는 2종류(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2006년부터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페닐알라닌혈증: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2차 정밀 검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환아에게 특수 조제분유 구입비 등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4인 기준)의 200%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에 대해 연 4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8).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단가를 2006년 6중 17,000원에서 2007년 6중 20,000원으로 인상함.

〈표 9-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재원 및 비용: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내 역			비 고
	계	국비(40%)	지방비(60%)	
계	10,793	4,317	6,476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9,400	3,760	5,640	○출생아수 : 470,000명 ○1인당 검사비: 20,000원
○ 환아관리비	1,393	557	836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특수조제분유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모자보건사업안내』, 2008

- 전국 표본조사결과, 2004년 1월~2006년 8월 기간의 출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수진 비율은 95.8%로, 검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1.3%는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2.9%는 검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승권, 2007) 여전히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

〈표 9-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단위:%)

구 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전체	73.6	88.8	89.7	95.8
동부	73.4	88.4	89.3	96.2
읍·면부	74.7	93.0	91.3	93.7

자료: 김승권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

- 정부는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들

에게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2005년 3개 보건소에서 시작하여 2007년 20개소, 2008년 현재 107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사업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임신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로서 영양 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임(보건복지가족부, 2008).

○ 이 사업은 보건소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 검진, 임신부 철분제 공급, 산모·신생아도우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리, 국제 결혼 이주여성 양육 도우미 등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하는 전략이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 정부는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을 위하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2002년 7월 1일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예방처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B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

－ B형간염 산모의 98%이상이 참여하여 수요자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2008년에는 신생아 13,000여명에게 면역글로불린 1회 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및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비용(118,000원)을 지원함(질병관리본부, 2008)l.

－ 또한, B형간염 산모가 사용하는 쿠폰이 들어있는 ‘B형간염 예방수첩’ 14만부를 산부인과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B형간염 예방관련 플래시 만화를 홈페이지 (<http://nip.cdc.go.kr>)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이 외 임신기간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임신소모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부의 사회적 배려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

－ 정부는 유·사산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여성의 유·사산 후 유급휴가와 함께 사전 방지를 위한 근로환경을 배려하도록 권장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을 위한 기업을 독려함.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지정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출산지원 및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 임신초기 임부임을 알려 공공장소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 임부에게 보급하여 모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함(그림 9-1 참조).

[그림 9-1]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상징물



- 또한 최근 산전검진의 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정상분만의 경우, 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보험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임부 건강검진까지 전면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계획이어서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보장성은 강화될 계획임.

□ 제왕절개분만을 증가

- 2007년 제왕절개분만율은 36.8%로 전년도보다 0.8% 증가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수준인 15%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병원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 최근 증가사유는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침 개발을 통한 표준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 정부(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침을 개발, 제시하여 모성들에게 영유아 표준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영유아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염병에는 BCG(피내용), B형간염, DTaP·Td, 폴리오,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그리고 고위험군에 한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임.

- 기타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한 예방접종으로 BCG(경피용), 일본 뇌염(생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Hib), A형간염, 폐구균이 있음. 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Hib), A형 간염, 폐구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 일부 국가필수예방접종만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무료이며, 일반 병원에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부담이 큼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 신생아 발생 증가
 - 일반적으로 출생아의 약 9%가 신생아 집중치료를 요하므로 연간 4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한다고 예상할 때 36,000명 정도의 고위험 신생아가 발생함.
 - 최근 산모의 출산연령 증가와 함께 다태아의 출생이 증가하면서 저출생체중아와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다태아출생률은 1995년 1.3%에서 2002년 2.0%로, 조산아는 2.6%에서 4.4%로, 그리고 저출생체중아는 3.0%에서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미숙아는 신생아의 7~8%(3만 여명)로 점차 증가 추세(대한신생아학회)
 - 고위험 신생아를 진료하는 ‘신생아집중치료(NICU)’에는 충분한 인원의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 간호사 및 치료장비와 특수시설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확보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 병실은 미국의 기준에 비하여 61.7%에 불과하며, 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유럽에서의 치료성과를 우리나라의 분만수에 적용해 보면 연 출생아수를 총 40만 명으로 추정할 때, 향상된 신생아 집중치료기술로 인하여 654명의 극소 저출생체중아를 더 살릴 수 있으며, 유럽의 뇌성마비 감소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뇌성마비의 발생 추정치는 302명에서 263명으로 낮출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정상 건강 생존아의 증가 및 뇌성마비 환아수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음 (김기수, 2006).
 - 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의뢰체계 구축 미흡
 - 미숙아 등의 고위험 신생아가 출생한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송용 보조환기기(인공호흡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환

자감시기, 이송용 보육기 등 장비가 구비된 구급차 등이 미비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망 및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9-4〉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 장비 현황

(단위: 대)

구분	병상 당 보유 수		집중치료가능 병상 당 보유 수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인공환기기	0.3	0.4	0.7	0.8
수액주입기	1.1	1.9	2.6	3.8
환자감시기	0.7	0.5	1.7	1.0

자료: 1) 황나미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체계 및 의료지원 방안』, 2000.

2) 대한신생아학회, 『신생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경영수지 분석보고』, 2004

□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정책 수립단계

-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시설에의 입원을 요하나 현재 국내의 신생아집중치료시설 현황은 고위험 신생아를 적절히 치료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 정부는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부족한 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자 전액 국가보조를 통해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하여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연차적 지원·육성할 계획임.

□ 저소득층에 국한된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신생아로 대표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출생아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저소득 가정인 경우에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1인당 최고 1천만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음(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 지원대상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출생 직후 또는 신

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출생아임. 여기서 다빈도 질환이란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임.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추진실적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 인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은 2006년 300~700만원에서 2007년 500~1,000만원으로 인상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은 2006년 300만원에서 2007년 500만원으로 인상
- 미숙아 또는 저출생체중아의 출생아수와 선천성이상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료보험급여진료실인원수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건수는 2006년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제 고위험신생아 진료건수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실정임.

〈표 9-5〉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미숙아등 지원자 수	1,049	1,171	1,580	3,075	9,490
지원액(백만원)*	1,829	2,110	2,859	5,143	10,501

주: 지원액은 국고40% 지방비60%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실적보고,

☐ 낮은 모유수유 실천율로 영유아 및 산모의 평생건강에 부정적 영향 우려

- 2004년 1월~2006년 8월 기간 중 출생아의 생후 4주시점의 완전 모유수유비율이

58%, 생후 5~6개월미만의 모유수유 지속율은 54.5%이며 11~12개월 지속율은 37.2%로 파악됨(김승권, 2006). 또한 15개월 미만 모유수유율로 완전모유수유와 모유·이유식 유아비율은 21.8%로 유럽 75%, 미국 52%, 일본 4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그동안 모유수유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유방관리와 수유기술 부족 등 개인적인 측면과 여성의 사회생활로 인한 직장에서의 여건미비가 모유수유의 실천·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모유수유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실적
 - － 직장 여성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모유 수유·착유실(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20호 설치
 - － 엄마젖먹이기 온라인 상담 사이트를 연중 운영하여, 소아과전문의 31명, 총 821건 상담 실적 달성
 - － 엄마젖먹이기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 <직장맘의 엄마젖먹이기> 500매, <함께 배우는 엄마젖먹이기> 1,000매를 제작 배포
 - －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시 모유수유 홍보물 전시와 임산부 대상 모유수유 교육 실시, 28개 병원에 대하여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재평가 실시
- 모유수유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모유수유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및 직장에 모유수유 클리닉 설치·운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공시설의 경우 수유부가 수유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조성이 미흡하여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원치않는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시술 방지 강화
 - 유배우 가임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비율은 2006년 전국표본조사 결과, 34%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그러나 2005년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건수가 미혼 14만4천건, 기혼 19만 8천건으로 추정되어 원치않는 임신의 예방은 생식건강 증진의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 － 유배우 가임여성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술 사유 중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이 38.4%로 2003년 45.4%보다는 감소하였음. 반면 경제적 곤란이 13.4%로

2003년 8.4%보다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한 피임교육의 강화가 요구됨(김승권, 2006).

〈표 9-6〉 유배우 부인(15~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단위: %)

구분	'97년	'00년	'03년	'06년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44	39	40	34

자료: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또한 출생아 전체 출생성비도 2002년 110.0, 2003년 108.7, 2004년 108.2로 완화되고 있지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출생성비는 각 년도 141.2, 136.6, 132.7명으로(통계청, 2005) 정상적인 출생성비가 1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 수치를 초과하는 숫자만큼은 태아 성감별을 통한 여아(태아)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2006년 전국표본조사 결과, 유배우 가임여성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술 사유 중 2.6%는 태아 성감별 실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어(김승권, 2006) 의료법을 위반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와 철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
- OECD 회원국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17개 국가들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용하는 6개 국가들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 보고체계를 갖추어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상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건수가 당해 출생아수 대비 76.8%를 차지하고 있어(고려대학교, 2005)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적 정비와 아울러 정기적인 통계생산체계를 구비하여 피임 및 조기 올바른 대처를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인공임신중절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후천적 불임 등 모성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므로 예방 대책이 시급함.
- 최근 미혼여성의 원치 않은 임신의 증가로 인해 혼전임신의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고 있어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됨.
 - － 또한, 임신중절 반대 및 허용에 대한 각계 입장의 차이를 조정해야할 필요성 제기
-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추진실적
 - －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시
 - －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 서울 및 부산 지하철 1,044량에 홍보포스터 게재
 - － 올바른 피임법 보급 및 교육 : 비디오(1,500장) 및 소책자 3,250부 제작 배포 (학교 및 보건소)
 -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지도 조사(671명 대상)
 - － 청소년대상 이동클리닉 운영 : 2,218명 건강검진 실시(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 별로 의료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모자보건 지표의 정기적 생산체계 구축 미흡
 - 출생신고 관련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모자보건법’ 등이며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모(부득이한 경우 동거가족 등)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생 의료기관에서 기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신고지연이나 주산기 사망 및 신생아기의 사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근거기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미비로 주산기 관련 병태, 모성 및 영아사망률 등 기본적인 모자보건 지표의 산출은 정기적 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임신 및 출산신고체계의 미비로 보건기관에서의 체계적인 모성 및 주산기와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함.

2) 외국 사례

가) 일본 정책사례²⁴⁾

- 영국의 비영리 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일본이 Children's Index²⁵⁾가 가장 높은 국가라고 평가함(Save the Children, 2006. 5).
 - 일본은 영아사망률이 출생 1천 명당 3.0명에 불과하고 신생아 사망률은 1.8명으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유아 건강수준과 가장 낮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5년 1.26인 가운데, 2009년까지 「영유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향후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정에서의 육아를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함.
 - 이에 임신, 출산, 육아와 영유아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과 방문지도의 건강관리 실시주체를 보건소에서 주민과 가까운 市町村으로 이관함.
 - 시정촌에서는 기본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수첩 교부, 보건지도, 임신부·신생아 방문지도, 건강검진 (임산부, 영유아, 1년6개월아, 3세아) 등임.
 - 도도부현에서는 전문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정촌에 대한 기술적 원조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내용으로는 미숙아 양육의료, 양육의료, 장애아의 의료양육 지도, 만성질환아의 의료양육 지도 등이 있음
- ‘질적 출산’의 보급 확대
 - ‘질적 출산’의 보급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출산 환경에서 출산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와 그 가족이 출산에 대해 만족해하고 이후 육아가 즐겁게 느껴지는 출

24) 황나미 외, 2000.

25) infant mortality rate, gross primary enrollment rate, percent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safe water, percent of children under age 5 suffering from moderate to severe nutritional wasting.

산을 보급하는 것임. 질적 출산의 보급 및 확대를 통해 가임기 남녀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불안 등을 제거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임.

-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향후 2009년까지 임신·출산에 대해 만족한 임산부의 비율을 84.4%(2000년 기준)에서 100%로 향상시키는 것임.

□ 주산기(周産期) 의료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및 네트워크의 정비

-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 또는 저출생체중아에게 1차 산과 병원과 3차진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주산기 의료의 진료보수상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역 내 적정자원의 배치를 기하고 질적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함.
- 이 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주산기, 신생아, 영아 및 유아 사망률을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의료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질환 발생시,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화(regionalization)에 의한 소아 구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소아의료체계를 충실히 하는 것임.
- 「신엔젤플랜(2000~2004)」에서 2001년 300지구, 2004년에는 360지구에 소아구급 의료지원을 추진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01년 34개 도도부현, 2004년에는 47개 도도부현에 주산기의료의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목표를 설정함(후생노동성, 2004).
 - 긴급시,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구급의료권을 가동하는 체계를 전국에 구축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호자 전용의 야간 전화상담체계 등을 구축
 - 소아·모자보건의료기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립 육성의료센터를 거점으로 임상·연구·정보를 보급하여 취약지역에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를 정비함.

□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예방 캠페인

- 영아돌연사증후군은 건강했던 영아가 사고나 질식이 아닌 수면 중 돌연 사망하는 경우로서, 생후 2~6개월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출생아 4,000명당 1명이 발생(2004년 232명 영아 사망)하여 일본의 영아 사인의 주요

원인임.

-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연구로 밝혀진 SIDS의 발생률을 높이는 3개의 육아 환경요인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즉, 가능한 한 아기를 혼자 두지 않고 위를 향하여 재우도록 하며, 금연(연구결과, 흡연 부모는 비흡연 부모보다 SIDS 발생이 약 4.7배 높고 영유아의 호흡중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과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SIDS(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전화 상담 실시

- 사망한 영유아 가족의 정신적 지원을 위해 전문가 등이 전화 상담을 실시함. 예를 들어 ‘동경 육아 정보 서비스’는 영유아의 사고예방이나 육아 불안, 긴급시의 대응책등에 관한 정보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음.

□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역재활센터 운영

- 건강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취업모성 자녀가 입원하거나 ADHD 등 정서적·심리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또한 미숙아 및 발달장애아에 대해서는 이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치료는 물론 재활을 위한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연계하여 운영되어 있고 공적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음.
- 건강검진 상에서는 장애아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 또는 운동 등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발달상담 및 발달 훈련지도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등의 전문직원이 이들의 가정을 방문함.
- 발달지연 또는 발달장애 아동과 만성질환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필요시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는 사업(short stay program)을 실시함.
 - 방문개호(봉사원 제도)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아 가정에 홈헬퍼 파견
 - 장애아에 대한 통원(day services)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아가 재활·훈련 시설 등에 통원이 용이하도록 함.
 - 특별히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자폐증 등 발달 장애아에 대한 상담 지원·요육지원·취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자폐증·발달지원센터’를 정비

□ 특정 만성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및 특정질환 수첩 교부

- 소아 만성질환 중 10대 질환인 악성신생물, 만성신질환, 천식, 만성심질환, 일부 내분비질환(성장호르몬 분비 부전성 저신장증(하수체성 소인증) 등), 자가면역질환(관절류마티스 등), 당뇨병, 일부 선천성대사이상(연골이영양증 등), 신경·근질환 및 혈우병 등 혈액질환 아동이 입원과 통원을 계속해야 할 경우 20세 까지 지속적 의료지원 및 관리를 행함.
- 해당 아동의 증상이 급변할 경우에는 일반인에 의해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결되고, 학교에서는 관계자가 아동의 상태를 이해하여 적절한 대응이 취해질 수 있도록 환자 건강상태, 관할 의료기관과의 연결방법, 긴급시 대응법 등이 기재된 소아 만성특정질환아 수첩이 교부되고 있음.

□ 모유수유 실천율 제고

- 모유수유운동에서 3개의 슬로건을 내걸어 추진하였는데 다음과 같음
 - － 생후 6주까지는 모유만으로 기르자
 - － 3개월까지는 되도록 모유만으로 버텨보자
 - － 4개월 이후에도 쉽게 우유로 바꾸지 말고 기르자

나) 미국 정책사례

- 미국 연방정부의 모자보건 정책은 「보건성(D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의 ‘모성 및 아동 건강국(MCHB: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에서는 ‘Healthy People 2010 Plan’을 수립, 작성하였는데 모자보건 목표를 영아 사망률 저하와 저체중 출생의 감소에 두고 있음.

- 영아사망률 감소를 위해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와 그 가족의 건강향상에 목적을 두고 임산부의 질환을 없애며, 출생전과 출산 관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없애고 모유수유를 실천하도록 계획하였음. 이의 일환으로 저출생 체중아 발생률 감소를 위한 임신 중 흡연·음주 및 약물복용의 금지와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 정부와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형성하면서 전개되고 있음.

□ The Healthy Start Program

- 건강한 여성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게 되며 건강한 사회활동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1991년 1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표적인 모자보건 프로그램이며 현재는 38개 주에서 99개 지역사회로 퍼져 나가 시행되고 있음.
 - － 사업지역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영아사망률이 평균보다 1.5배 높은 지역에 ‘Healthy Start Clinic’을 설치하여 사업을 전개함.
 - － 각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취약계층과 소수 민족을 위하여 주산기에 모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과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체계 접근의 장애와 차별을 제거하는 것임.
- 위험성이 높은 인구에서 영아 사망률, 저체중아, 주산기 합병증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여 HS(Healthy Start)는 지방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이 보건의료체계에 수요자 투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모성과 그 가족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을 증가시켜 모자건강의 결과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HS는 Title V MCH Block Grant, 메디케이드(Medicaid), 주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지역사회 보건센터 같은 주정부 주산기 의료체계와 협동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 － 이와 같은 서비스의 강한 연계로 담배, 술 같은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고, 모성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으로 이끄는 행위로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를 임신(주산기)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2년까지 어머니와 영아 건강을 위해 모니터링하고 지속하고 있음.

□ 주산기 우울증(Perinatal Depression) 관리

- 2004년부터 미국 의회는 출산 전후인 주산기 우울증에 관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2004년과 2005년에 주산기 우울증에 관한 1년 기획 프로그램을 10개 주에서 실시하였음.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의 공중 교육 활동이 집중으로 실시되어 주산기 우울증과 경고 증상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임산부와 그 가족의 정신건강 안녕을 도모하였음.
- 전국적으로 치료를 요구하는 임산부와 그 가족의 수가 증가하였고 주산기 우울증의 증상과 징후를 인식하는 지역사회 의료제공자의 수도 증가하여, 주산기 우울증을 스크린하고 사정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였음.
- 2006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모성과 영아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임신 동안과 적어도 산후 1년까지 불안장애, 상해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임산부와 영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모유수유 실천 프로그램

- DHSPS(Division of Healthy Start and Perinatal Services)는 모유수유를 시도하고 지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출산 후 직장 등 사회활동 여성에게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그리고 기업체의 고용주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직장에서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지 프로그램 ‘The 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

□ 산전관리 Hotline 운영

- 지역사회에서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여 (1-800-311-2229)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구할 수 있음. 영어사용이 어려운 인종의 경우, 스페인어 등 별도로 대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매년 약 1백만 명의 임부가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출산을 함. 그러므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한 임부에게서 태어난 영아는 산전관리를 받은 임부에게서 태어난 영아에 비하여 저체중아가 3배 더 많고, 사망도 5배가량 높음. 그리하여 정부는 건강한 임신과 아기의 출산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5가지를 하

도록 강조하고 있음.

- 임부는 산전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임부는 술과 담배를 금하며, 또한 약물남용도 금함.
- 임부는 과일, 채소, 저지방 우유, 달걀, 치즈, 곡류를 포함한 건강한 식사를 함.
- 임부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확실하게 운동을 함.
- 출산 후부터 아동기 동안 계속 의료인에게 아기의 건강을 검진 받음.

□ WIC(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 and Children)

- 연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으로서 영양상태에 위험이 있는 임산부, 모유수유부(1년까지 제공) 및 비모유수유부(6개월까지 제공), 5세까지의 영유아(미국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45%가 서비스를 받음)에게 각 상태별, 각 연령에 따라 충분한 영양상태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우유, 달걀 등의 영양식품을 일반 시내에서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지정식품 쿠폰을 발행, 지급하여 고위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임.
- 지방보건부, 건강센터, 병원 등에서 ‘WIC Clinic’으로 개설·운영되며 영양교육 및 상담, 건강문제 상담, 복지 또는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산전관리 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주정부 주산기 교육 프로그램: PEP(Prenatal Education Program)

-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그 영아들이 포괄적인 주산기(임신이 후 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산기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주산기 관리란 병의원, 건강부서, 분만센터, 기타 건강보호시설 등에서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된 인력에 의해서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텍사스 주정부의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에서는 PEP(Prenatal Education Program) 라는 산전·산후 및 주산기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음.
- 대상자는 연령이 19세 이하이면서 임신 5개월(임신 24주) 이하의 임신 여성으

로 교육비는 무료임.

- 서비스 내용은 교육강사가 집이나 학교로 방문하여 십대 임부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 프랑스 정책사례

- 프랑스는 시청 「가족·영아부」 「모자아동보호국(Bureau Du 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a la direction des familles et de la petite enfance de Mairie de Paris)」에서 관할하는 PMI(PMI: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에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MI는 조산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대도시 지역) 등의 인력이 근무하는 지역 사회 일선 보건기관으로 종합병원 등 공립병원의 연계 또는 부설시설로서 정부의 지원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시설의 형태는 영유아가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와 장난감이 구비되어 유치원과 같은 환경에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함.
- 소아과 전문의사는 소속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파견 나와(기관에 따라 다르나 주 2~3회 정도)성장발육 검사와 국가에서 권장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성장발육 상태를 체크하고 발달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함. 또한 소아과 의사는 유아원과 유치원(진료실 시설 마련)에 주 1회 정도 파견 나가 지역 영유아의 건강을 돌보고 있음.
- 모든 서비스는 예약제로 이루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나 특정요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다른 요일에는 오전만 운영하는 등 근무시간을 달리함으로써 직장여성 및 자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7개월까지는 월 1회, 임신 9개월까지는 2주 1회, 마지막 출산 달에는 주 1회 산전관리를 받음. 초음파 검사는 매 방문시 마다 받으며 초음파 검사는 보험에서 100% 적용됨. 임신 기간 중 건강검진횟수는 7회가 의무적임.

- 38세 이상 임부의 경우는 난자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아 출생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38세 이상 임부에 대한 난자검사는 재혼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 출산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유아기에는 3회 건강검진이 의무적이며 이들 내용은 ‘사회보장법’과 ‘공중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출생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 사회사업부, 재정부, 세 부처가 통합하여 활동하며, 출생아에 대한 출생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 산모가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분만한 경우, 분만 후 24시간이 지나면 출생아를 신생아 침대에 넣어서 산모와 같은 방에 동거시킴.
- 산모의 조기이상(early ambulation)을 권장하고자 모유수유 실천, 신생아 눈·배꼽관리 및 목욕 등 산모가 출생아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함. 신생아 침대는 산욕부 침대의 발측 끝에 접하게 놓는 경우가 많으나, 산욕부가 신생아를 쉽게 돌볼 수 있도록 고려된 움직임은 신생아 침대로 만들어지고 있음. 면회일은 엄중히 규제하고 있음.
- 신생아실의 신생아 침대는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원형으로 배치하여 상호 감염 전파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시청에서는 임신 및 출산력과 20세 성인 이전까지의 아동의 의사관찰, 진단 및 치료기록과 예방접종, 보건교육 내용을 수록한 ‘어린이 건강수첩’(Carnet de sante)을 출생 직후 발급하고 있음.
- 동 수첩에는 출산력, 부모의 취업여부 및 영유아의 양육환경(가정보육인지 시설보육인지 기록), 표준 예방접종스케줄, 건강검진 시기, 발달과 관련된 신체·정신·사회·언어 발달검사항목과 성장발달곡선, 눈·귀·구강 보건, 금연, 가정 안전사고 예방 관련 보건교육 내용, 그리고 동 수첩을 소지하여야 하는 이유와 방문시 지참하여야 할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음.
- 수첩에 제시된 발달검사 및 건강검진 시기는 생후 3~4 개월, 9개월, 10~24개월, 3~4세, 5~6세, 10~12세, 14~16세 등으로 구분되어 각 시기별 신체정신 발달상태 등을 체크하고, 표준 검진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생후 24개월이 되면 비타민D(영양제)를 연 2회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3~4세 부터 시력측정 및 시력검

진을 실시함.

- ‘어린이 건강수첩’은 초등학교 입학시 의무적으로 학교에 제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또한 영유아의 입원 및 외래진료 이용실태를 매 진료 이용시마다 의사가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 기록란이 마련되어 있음. 의사의 수술, 검진 및 치료내용은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어린이가 건강상태 점검이 요구되는 외부활동이나 여행을 하게 될 경우 동 수첩에 기록된 수술병력이나 의사의 진료사항(알러지, 안경 착용 등과 관련된 주의사항 포함) 등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활용됨. 따라서, 동 수첩은 가정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지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분실시 시청에 신고하여 재발급)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아동의 건강력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부모는 동 수첩에 기재된 최근의 진료내용과 특이사항 등을 복사하여 제출하게 됨.
- 한편, 정부는 보육시설 영유아와 학동기 아동에 대해 성장기 동안 또래와의 빈번한 접촉이나 신체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상해보험료는 1인당 보통 연 12~40유로 수준임. 상해보험 기관 및 종류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지만 상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골절, 타박상 등의 신체적 부상과 아동이 또래집단과 놀면서 안경이 깨지는 문제 등의 사사로운 일 등을 적시에 처리하여 이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나 또래 친구(부모)간의 진료비 보상문제로 진료의 차질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임.
- 상해보험 가입여부는 학교에서(고등학교 까지) 매년 학기 초에 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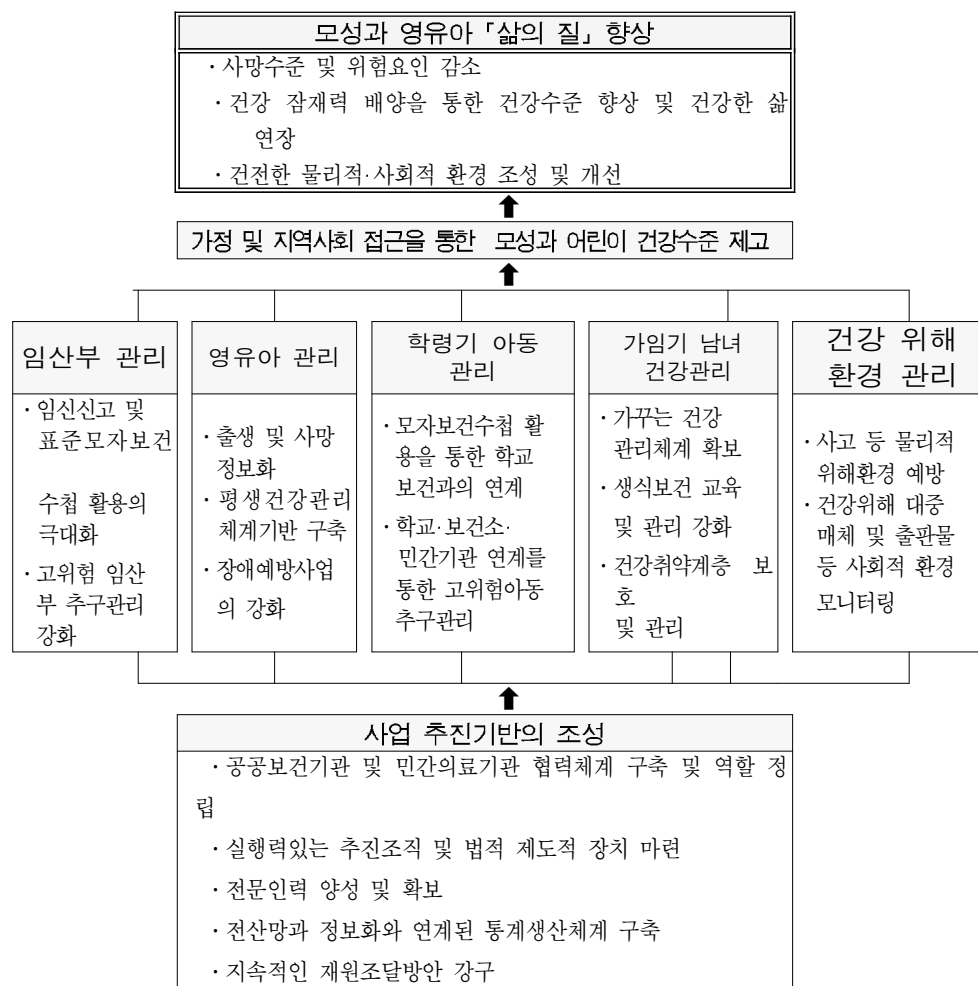
3) 향후 정책 방향

가) 질적인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서비스 제공 체계화

-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 및 모자 보건서비스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그렇지만 일부 대상에 국한되어 포괄적이고 전 대상을 목표로 하는 양질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요구됨.
- 1994년 유엔의 「인구개발국제회의(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구 개발(human development)정책으로 Reproductive health(인구 재생산 건강)와 Reproductive right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생식관련 정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저출산 현상으로 질적 인구의 확보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각종 시책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전반적인 산전교육시스템 즉, 임신 전 또는 임신 및 출산 이후의 상담의 보편화 등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임신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표준 산전·산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권장 홍보 강화
 - 최근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들은 임신, 출산 및 산욕기 기간 중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이 없는 단계에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
- 건강한 임신 및 출산과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올바른 건강교육 및 정보 제공 확대
 - 사후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비용효과적인 것을 물론 해당 당사자와 그 가족 및 사회에 건강한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 및 산후 건강관리와 출생아 양육에 대한 정보와 기술 습득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건강행위 실천이 중요
 - 이에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인 교육·상담 및 추구관리 등,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충족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표준화, 프로그램화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질적인 출산 보급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림 9-2]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 전 출생아에게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적기 검진의 중요성 홍보 및 추구관리 강화 필요
 - 기존 공공부문에서 실시되어 왔던 영유아 건강검진과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이 2007년 11월 15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생후 4개월 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모두에게 총5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은 전 영유아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고 추구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성 대두
- 직장·공공시설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 설치 지원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 직장 또는 공공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이 점차 확충되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사회 시설이 마련되었으나 그 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지리적 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실제 활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착유실이 유희화 되거나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하여 수유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위생적 관리가 요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산후 건강관리 시설 관리 강화와 산후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확대
 - 출산후 산육기 모성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후 건강관련 시설이나 활동 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감염사고 등 건강 위해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적인 환경위생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시설의 감독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산후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정상적으로 조기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 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영아 돌연사증후위험 예방 프로그램(Reducing the Risk of Sudden Death Syndrome) 실시

-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한 영아의 사망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 보건소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투자

- 전국 보건소의 47.1%가 예산부족으로 양질의 산전·산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11.8%의 보건소는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황나미, 2007). 이에 따라 지역 민간자원 활용이 어려운 보건소(군 보건소)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보건소 인력을 교육강사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소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보건소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중앙단위에서 각급 보건의료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 등 외부 자격을 갖춘 민간자원을 활용(outsourcing)하여 운영되도록 기관 인증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체계 확충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설치 및 운영 지원 방안 마련
 - －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은 원가보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수가 책정으로 인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증설 또는 신설의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므로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 － NICU 확충방안 마련: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지역별 혹은 권역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육성 필요
 - 권역별 소아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 이송체계 확립
 - －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예견되는 경우, 출생 전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지역화 하여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시 이송용 보조환기기(인공호흡기), 환자 감시기, 이송용 보육기 등 장비가 구비된 구급차 등 확충 필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등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관리사업 추진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요원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퇴원 직후 방문 간호 실시 강화
- 미숙아 어머니 자조그룹 구성 및 운영
-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추적관리 활동 전개
 - － 현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사업 연계운영

다) 영유아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범위 확대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범위 확대 필요

- 정부는 2007년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모자보건수첩에 제시하여 영유아 표준 예방접종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 － 일부 국가필수예방접종만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무료이며, 일반 병원에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자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반병원에서 표준 예방접종은 물론 기타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 많은 비용부담이 초래되고 있음.

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간 연계실시 및 통합적 · 체계적 관리

☐ 취약계층 임신·출산 및 수유기의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보건소의 보충영양 관리사업의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실시

- 보충영양식품의 가정배달, 개인상담 및 단체 영양교육,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 개선과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생아 영양·건강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 캠페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모유수유의 활성화에 지지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직장·공공시설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 설치시설 모니터링 강화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모자동실 운영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건소에서의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지원

- 보건의료인 대상 모유수유 전문교육 및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특히 매년 8월 첫주 모유수유주간 행사 실시)
- 인공수유에 관한 불법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마) 원치 않은 임신의 사전 예방 및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대책 강화

- ‘형법’(제269조, 제270조)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당사자인 여성은 물론, 촉탁을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료인의 경우에도 벌금 또는 일정기간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모자보건법’ 역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자나 신체질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시술을 행하도록 제한함²⁶⁾.
-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5년 조사결과에서 미혼 및 기혼여성으로부터 인공임신중절건이 연간 34만건으로 추정되어(보건복지부, 2005) 우리 사회에서性是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사후 초래되는 임신의 책임과 태아의 생명권은 간과되고 있는 풍토임.
- 한편, 남아출산을 위해 성감별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출생성비(출생여아 100에 대한 출생남아수)가 2002년 141, 2003년 137, 2004년 133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가 1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를 초과하는 수만큼 여아(태아)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원치 않는 자녀 또는 성별이라는 이유로 인공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사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출산중단을 목적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임. 또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성 질환임.

으로 실시하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방지 또는 법적 조항을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음.

- ☐ 종교계·여성계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 전개
- ☐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계와의 협력 강화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연구용역)를 통해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바) 정기적 종합적·체계적 주산기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

- ☐ 모자보건 지표의 정기적 통계 생산체계 구축
 - 주산기의 임신부 및 태아·출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거기반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전 건강검진서비스가 전면 건강보험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주산기감시시스템(Perinatal Surveillance System)을 구축함. 주산기 및 출생아 정보 구축을 통해 주산기 사망, 영아사망률 등 기본 모자보건지표를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함.
 - 전산체계 구축은 주산기 관련 병태를 파악하고, 신고 전 발생된 사산 및 신생아 사망건의 누락을 방지하며, 신고지연으로 누락되는 자료 확보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사) 임신에서 취학전 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 산전초음파 검진 등 산전진찰,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모든 임신부와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나,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거나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자녀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초음파 검진의 경우, 태아의 크기, 발육상태, 태아 상태와 기형 여부, 자궁·난소 상태(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
 - 모성 보호 및 태아기부터 취학 전까지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표 9-7〉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혈검사 ○ 소변검사 ○ 혈액형검사 ○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 HBsAg(B형간염 S항원 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중 Triple Test (α-FP, Estriol, β-HC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진검사(IgG, IgM) ○ 초음파 검사 ○ 유전학적 양수검사 ○ 자궁경부세포진검사 ○ 기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12.

〈표 9-8〉 임신~출산후 1개월간 의료비 지출사례(본인지출금기준,보험급여액 제외)

지출항목	자연분만가구(A)			제왕절개가구(B)		
	횟수	단가(원)	소계(원)	횟수	단가(원)	소계(원)
초음파	6	26,000	156,000	9	20,000	180,000
질초음파	-	-	-	2	17,000	34,000
임신성당뇨검사	-	-	-	1	3,277	3,277
소변검사	-	-	-	7	586	4,102
풍진검사	1	63,000	63,000	1	63,000	63,000
입체초음파	1	60,000	60,000	2	40,000	80,000
기형아검사	1	70,000	70,000	1	10,000	10,000
정밀초음파당검사	1	50,000	50,000	1	80,000	80,000
분만전검사	1	50,000	50,000	1	11,103	11,103
심전도	-	-	-	1	15,000	15,000
흉부X-ray	-	-	-	1	4,260	4,260
질병균 검사	-	-	-	1	175,590	175,590
입원료	-	-	-	1	480,000	480,000
기타수술비용	-	-	-	1	121,020	121,020
BCG	1	53,000	53,000	-	-	-
총계			502,000			1,261,3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07.

A 사례: '06년 출산, 29세, 인천시 거주, 연평균소득 1,800만원, 연평균지출 2,000만원.

B 사례: '06년 출산, 33세, 경남 김해시 거주, 연평균소득 2,500만원, 연평균지출 1,750만원.

(2) 추진 실적

□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 산전진찰 급여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방안 등 검토(4.18)

- 산전진찰 급여 확대 방안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산부인과 학회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5.6, 5.24)
- 초음파검사 실태조사 등 산모의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검토('08.5)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개발(1월~12월)
 - －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제2기, 제3단계) 개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 중(5월중)
-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구성('08.6)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실시('07.11~)

(3) 성 과

- ☐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시행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08.3.22)
-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단계적 시행

(4) 문제점 또는 추진상 애로사항

-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 수행하기 위한 '09년 예산 확보 필요
 - 중기사업계획('08~'12) '09년도 소요예산 1,137억원

(5) 향후 추진계획

- ☐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시행
 - (6.2~6.20) : 관련 단체(산부인과 학회, 의협, 병협 등) 의견수렴
 - (7.1~7.30)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 (8.11~11.21)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
-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단계적 시행
 - 의료인 교육 실시

-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제2기 3단계) 검토 후 사업 진행
- 위탁의료기관 교육,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시범운영('09)
- 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담 실시('09.7월부터 단계적확대, 년단위 지속사업)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08.3.22)으로 건강검진 품질관리 강화
 - (6월~계속) : 매월 1회 사업모니터링 회의 실시
 - (10월) : 발달이상, 시각이상에 대한 영유아 검진효과 분석
 - ('09.11월) : 지역사회 발달장애 재활프로그램 개발
 - ('10.3월) : 저소득층 대상 발달장애 확진검사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 ('10.12월) : 보건소 기반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후속 지원체계 구축

아) '찾아가는 산부인과' 프로그램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출생아 감소에 따른 군 지역의 기존 산부인과 폐업 및 개업 전무
- 산부인과 병의원 등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임산부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출산 및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
 - 임신하고도 산전 진찰 및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벽지지역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통해 모성건강 증진 및 영아 사망·장애아 발생 최소화 필요

(2) 추진 방안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 이동산전진찰반 구성(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실시
 - 월별 검사현황을 임산부에 통보하며 중증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2차 검진 의뢰

- 산전 진찰 종료 후 희망 분만기관에 연계
- 경남에서 추진중

(3) 문제점 및 추진상 애로사항

- ☐ 초기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 ☐ 산부인과 병의원 등의 반발 예상
 - 인근 지역의 임신부를 진찰·관리해오던 산부인과의 진료 감소
 - 산전 진찰 종료 후 희망 분만기관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특정 병·의원을 지정함으로써 환자 알선 등 의료법에 저촉 소지

(4) 향후 추진계획

- ☐ ‘찾아가는 산부인과’ 전국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09년 또는 ‘10년 추진 목표

나. 불임부부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 만혼화, 스트레스 증가 등은 불임증의 원인이 되며, 불임부부의 증가는 출생아수를 줄여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 출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5~39세(여성기준) 불임부부는 이미 출산을 경험한 부인을 제외할 경우 61만쌍으로 추정
 - － 출산이 보다 활발한 35세 미만(여성기준)의 불임부부는 42% 수준
 - 이들 불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90%는 불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으며 중단한 경우의 2/3가 불임치료에 성공했기 때문이며, 1/3은 경제적 이유, 스트레스(심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중단 불임부부 중 계속 치료를 받을 계획인 부부는 64.2%, 얼마간 받다가 중단할 계획인 부부는 26.4%, 곧 중단할 계획인 부부는 5.9% 등

으로 총 32.3%가 치료 중단할 계획이며 대부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

□ 불임은 2001년 6월 이후부터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행위에 국한되고, 고액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시험관아기 시술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 치료를 요하는²⁷⁾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대상에게 시술비(1회 150만원 총 2회까지)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 이들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 2006년에 총예산 465억원(국비 213억원, 지방비 252억원)을 확보하고 지원목표인원을 16,426명으로 예상

— 추진실적을 보면 16,321명(목표대비 99.4%)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예산372억원을 실제로 집행한 것으로, 그리고 이중에서 3,900 쌍이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 2007년에 불임부부 지원은 14,337쌍이었으며 이중에서 4,445쌍이 임신 성공(임신율 31%), 예산은 281억원(국비 127억원, 지방비 154억원) 집행

□ 한편, 2006년 정부의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2006년 시험관아기 시술건수가 전년 대비 약 100% 증가

○ 시험관아기 시술건수가 2000년 15,619건, 2002년 18,310건, 2004년 11,000건, 2005년 17,000건이라는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곧 불임진단 대상의 일부는 배란유도제,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까지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관아기 시술로 치료방식이 옮겨가는 ‘솔림현상’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이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낮은 출산율을

27) 시험관아기(IVF-ET),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등이 해당됨.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됨에 따라 특정 성선택 수정,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및 대리모는 제외됨.

보이면서 불임 대처가 저출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불임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그 동안 의료계에서 큰 문제로 삼지 않았고,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 분만진료건수는 2000년 60만 건에서 2006년 43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2000년 이후 신규 불임진단자는 매년 약 9만명이 발생되어 2005년까지 신규 불임진단자는 441,000명('01 : 90천명, '02 : 81천명, '03 : 92천명, '04 : 91천명, '05 : 87천명)임(건강보험관리공단, 2006).
- 1985년 국내에서 체외수정 시술에 의한 첫 시험관아기가 탄생된 이래, 불임(不妊)은 이제 난임(難妊)으로 인식되고 있음.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단지 임신이 어려울 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어서 지난 5년간 불임 진단자 44만 여명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에 임한다면 임신·출산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08)
 -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 지원액
 -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중 서울 30%, 자치단체 50%를 국가 보조
 - 총사업비268억원 (국비 109억원, 지방비 148억원)

2) 외국 사례

□ 개요

- 현재 세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국가들도 최근에 실시하여 그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
- 2004년 미국 생식의학회가 전 세계의 49개국대상으로 현황조사 실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윤태형, 2006)
 - 26개 국가는 국가적인 건강계획이나 사 보험회사에서 제3자에 의한 지불체계를 갖고 있지 않음.
 - 16개국(30%)은 국가건강계획(national health plan)에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나, 사보험의 지원은 없음. 완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under the recent criteria)와 체코공화국(IVF만 지원), 슬로베니아(4cycles) 그리고 이스라엘(두명의 아이 출생시까지) 임.
 - 7개 나라(14%)는 국가건강계획의 지원이 있고 또한 사보험도 지원도 있음.

□ 미국

- 미국은 각 주마다 불임에 대한 보험 규정이 각기 다름. 각 연방주의 법률이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15개의 주들은 불임치료의 보험적용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몇몇 형태로 법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국가적 법률은 없으나 시험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은 보조생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혼인관계이어야 하며 간접적인 대리모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2002년부터 불임치료지원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4년 4월부터 불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함.

□ 영국

- 2004년 2월 국립임상연구소에서 2005년 4월부터 39세 이하의 여성들은 국가의 료제도(NHS)의 기금으로 한 번의 무료 시험관아기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됨.

□ 프랑스

- 프랑스는 사회보장에서 불임치료를 100% 보장함. 검사, 약, 치료 비용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함. 불임치료가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100% 정부로부터 불임치료에 대한 상환을 받음. 민간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보험을 활용함.

□ 독일

- 독일에서는 ICSI의 4주기(four cycles)가 건강보험에 의해 상환됨. ICSI는 1999년까지 상환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건강보험에 의해서 적용안함.

□ 벨기에

- 2003년에 42세 이하, 기준에 속한 여성에 있어서 여섯 주기까지는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부분적 보조생식술의 70%까지 국가지원을 함.

□ 이스라엘

- 요구되는 주기에 대한 지원은 모두 하나, 두 명 출생할 때 까지만 제공함.
 - － 시사점: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불임지원책을 최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행결과와 비교분석은 좀더 시일이 경과되어야 할 것임.

3) 향후 정책 방향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차례 개선을 거듭해 온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2006년 도입되어 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불임대상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 현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의 질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될 것임.

- 불임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함.

- 소득기준 의료비 지원을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 대상기준으로 보완

- 배란유도제, 인공수정 등의 시술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관아기 시술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을 그 이전 단계도 포함시켜 의료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치료과정에서의 난소 과자극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예방함. 또한 인공수정, 남성의 비뇨기과적 치료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하여야 함.
- 불임 치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제한적 급여대상(불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수술 등)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시술에 따른 검사, 투약, 처치 등과 불임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 비뇨기과적 검사 및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이 요구됨. 일본, 호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공수정은 물론 불임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아기 시술까지 보험급여가 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비영리 생식세포 공여 관리기구 개설, 운영
 - 비배우자 인공수정 및 대리수태시술 등은 법률적·윤리적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요구됨. 관리기구는 공공성이 강한 설립주체의 인공수태시술기관을 지정하여 ‘생식세포 공여관리센터(가칭)’를 운영, 난자 및 정자 공여 지원자의 풀(pool)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불임 관련 정보의 획득 및 치료과정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불임치료(인공수태시술)기관은 불임대상자에게 치료과정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자 및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치료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으로 인한 질적 관리를 통해 개방화된 세계 의료시장에서 불임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불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체계 활성화
 - 불임은 개인 당사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나 불임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On-Line 커뮤니티 및 자조모임 등이 올바른 정보공유 창구로 활용되도록 함. 불임 대상자들의 정서적·심리적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인적 지원이 요구됨. 예를 들어 ‘동경도 불임 핫 라인’은 불임에 관한 고민에 대해 경험있는 여성 카운셀러(peer counsellor)가 정서적·심리적 상담에 응하고 의학적·전문적인 상담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불임전문상담센터」의 전문가와 연계 운영하고 있음.

- 불임 상담전문인력(Coordinator, 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nursing) 양성 및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일본 및 호주 등 선진국은 불임치료 과정에서 마음의 케어(care)도 중요한 치료의 하나로 간주하여 ‘불임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양성, 불임치료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에 설명해 줌으로써 불임대상자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불임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초래되는 불안과 의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심리학 및 여성학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1999년 신엔젤프랜의 일환으로 「불임전문상담센터」를 정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1999년 24개소, 2004년 47개소를 설립하여 가임기 남녀 생식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음.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2009년까지 모든 도도부현·정령시·지정도시의 보건소 및 보건복지사무소, 종합건강센터, 의대부속병원, 간호협회회관 등에서 「불임전문상담센터」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불임 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생식건강의 중요성과 35세 이후부터 여성의 수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가능한 출산을 늦추지 않도록 청소년기에서부터 인식시킴. 또한 불임이 의심될 경우, 치료는 빠를수록 치료효과를 높인다는 점과 배우자가 절반의 불임원인 제공자이므로 부부가 같이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홍보하여야 함.
- 취업남녀의 불임진단 치료에 따른 유급휴가제도 도입
 - 취업 여성 및 남성이 불임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불임 진단 및 치료로 인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유급휴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산후 도우미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산후 조리원과 산후 도우미 이용 증가

- 최근 핵가족화에 따라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아 줄 인력 및 여건이 부족하여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산모 도우미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 산후조리원의 경우 2~3주간 이용시 평균 1~2백만원이 소요되며, 산모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평균 1백만원 정도 필요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위험

-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함으로써 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한 위장관염 등의 전염 원인이 되고 있고, 실제 이로 인해 사망하는 신생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저소득층에 국한된 한정된 정부지원

- 2006년 4월 17일부터 저소득 가정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때 정부에서 파견하는 무료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는 4인가구 월소득 152만 원 이하(최저 생계비 130%이하)이거나 건강보험 납부액이 직장 33,600원, 지역 31,930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

☐ 고위험 신생아 지원

-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 신생아나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환아의 건강 및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지원 제공
 - － 정부는 2004년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등록아 중 11.7%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함
 - － 2005년부터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저소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2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저출생체중아의 출생수와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료보험급여 진료 실인원수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건수는 우리나라의 실제 고위험 신생아 진료 건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
- 2007년 정부는 산모 47,193명에게 2주(12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총 예산 220억원(국비 166억원, 지방비 54억원) 집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2008년도 지원대상은 2007년도 당초 계획 37천명에 비해 18% 증가한 44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은 2007년도 당초 계획 199억원에 비해 28% 증가한 254억원 투입 예정
- 2008년도 하반기 사업 지침에 따르면, '08년도 7월 국무회의에서 83억원의 추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은 연초 계획 44천명에서 62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 '08년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법에 따라서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반가정에 대한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청됨.
-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8천원) 이하의 가정 산모임
-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서비스제공('08년도 신규 지원)함. 단, 해산급여 해당자는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
- '08년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가격을 인상(07년 550천원 → 08년 613천원)할 예정임

- 또한 동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6천원(서비스 가격 613천원의 7.5%)을 납부토록 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전자카드식 바우처를도입하여 지불·정산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2) 향후 정책 방향

-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 추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같은 혜택을 차상위계층 산모에게 까지 확대
 -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와 신생아 육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연차별로 완화하여 추진하고, 지원방식은 바우처방식으로 산모에게 지급
-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산모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이중 효과 모색
- 분만 후 산모가 경제적인 근심 없이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산후 도우미의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켜 개인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체계의 재구성을 통하여 의료 시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시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3. 자녀양육 지원체계 확립

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가족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이 요청됨

- 각종 소득세 공제제도의 정책 목표와 출산률 회복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소득세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절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환경 조성 필요
-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동시에 출산률 회복에 기여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시행 (2007년 1월 시행)
 - － 자녀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자녀 2인을 초과하는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추가 100만원을 소득 공제
 - －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 (2007년 7월 소득세법 개정, 2008년 1월 시행)
 - － 출산·입양 공제 제도 도입 (2007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2008년 1월 시행)
 - －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해당 자녀에 대해 추가 200만원 소득공제
- 육아 휴직자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 (2007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 육아휴직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2007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여 7,700여명의 육아 휴직자에게 건강 보험료 1,789백만원 경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는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급여 산정에 반영
 - 2007년 7월 3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완료

- 2007년 12월 31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 준비 완료

3) 선행 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 OECD 국가의 경우 독신자와 자녀 2인을 양육하는 가족의 조세부담률 격차가 5.5%의 차이를 보이나,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여 조세형평성 차원 검토 필요

〈표 9-9〉 4가구유형별 소득세 부담률 격차 국제비교

구 분	OECD평균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독신자와 4인 가족간 소득세 부담률 격차(%)	5.5	1.2	3.1	18.5	19.5

자료: OECD, 『Taxing Wages 2004/2005』, 2006

- 외국의 경우, 출산 혹은 육아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에 대해 자녀양육 크레딧(Credit for childcare) 실시
 - 프랑스 2년, 독일 3년, 스웨덴 4년, 오스트리아 4년 인정
- 각국에서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출산후 어머니의 취업복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들을 제공
 - 예컨대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세금부과나 산정시 혜택을 주거나, 특별히 취업모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형태
 - － 이러한 세제혜택은 주로 세금환급(tax credit), 세금감면(tax reduction), 세금수당(tax allowance), 세금환불(tax rebate) 등의 방법으로 제공
- 국가별 사례
 - 스페인의 경우, 3세미만 아동을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1,200유로의 세금환급(tax credit)
 - 영국의 경우, 근로가족세금환급제도(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근로의욕 제고
 - 호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환불제도를(tax rebates) 확대하면서, 특히 이인소득자 가족보다 일인소득자 가족에 더 높은 환불 혜택 부여
 - － 하지만 호주의 세제는 누진적 개별세제이어서, 이인소득자 가족의 부부는 각

자의 소득을 똑같이 나누어 자산조사의 상실만큼 절약 가능(Sleeboos, 2003).

- 일본의 경우, 개인소득과세에 있어서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거나 확대
 - －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차세대육성지원의 확충은 육아휴업중의 보험료 면제 조치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
- 많은 국가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취업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자녀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연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으로 산정
- 여성들의 경우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빈번하여 연금 기여에 있어서 불평등한 접근권
- 이에 따라 연금크레딧 제도는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돌봄노동으로 인한 노동중단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
 - － 육아연금 크레딧제도 실시 국가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헝가리 등(Rand, 2004)
- 독일의 경우,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1991년 이후 출생하고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 아동양육에 근거한 연금수급권 부여
 - －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5%를 받는 것으로 책정하였다가 양육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 이후 90%로 증가
 - － 아동양육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지만 부모가 합의한 경우 남성도 인정(박영란외, 2000)
- 프랑스의 경우, 육아휴직수당(APE)을 받는 기간의 절반을 노령연금 기여기간으로 산정(홍승아, 2005).

4) 추진 방법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사업들은 특성상 단발적 사업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사업의 상징성,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한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계속 유지 필요
- 다만, 사업의 방향성을 다소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기본계획 상 계속 유지 필요
 - 제2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규 비과세 대상 품목 발굴, 소득세 추가공제 등 추진의 근거로 존속
-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사업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효율성 제고 도모 필요
 - 기본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계속추진 필요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가입자 고려 등)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도입 완료에 따라 제도운영의 내실화(홍보, 특별사례 관리 등)로 변경하여 계속 추진 필요

나.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도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를 도입하여 실행 중
 -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도는 다자녀가정(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발급해 주며, 이를 소지한 가족은 가맹업체들로부터 일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음
 - 동 제도는 다자녀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Win-Win 효과 발생 기대
-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는 '07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전국 시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면서, 카드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문제점 노출
 - 시도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구 중에서 별도의 카드를 추진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 초래
 - 참여 업체수가 아직 소수일 뿐만 아니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대형 업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특히, 가맹업체 중 영·유아 양육관련 지출이 많은 분야들이 상당 누락)

- ☐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우대 카드제의 활성화 노력 필요

〈표 9-10〉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도 도입 현황(2008.4월말 현재)

구분	지원 기준		카드 종류	
	2 자녀 이상	3 자녀 이상	BC카드	기타
지역	총 6개 시도 (서울,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총 10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 시도	5개 시도

주: 참여업체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실정(서울 40개소, 전남 3,200개소, 경북 2,098개소, 경남 2,297개소 업체 참여)

2) 추진 방안

- ☐ 중앙정부는 현행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족 우대카드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전국적인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연계
- 카드사간, 지역간 호환성 제고 등을 통해 상호 가맹업체의 할인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정
- ☐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자녀출산·양육 관련 업체들(예로 육아용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마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
- 이를 위해, 가맹업체에 대한 ‘출산·가족친화성’ 홍보, 정부의 조달물품 구입시 우선 대상 업체로 지정, 각종 세제 혜택 제공, 협력업체 인증마크 부착 등 검토
- ☐ 중앙정부는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를 소지한 가족에 대해 가맹업체에서 출산 및 육아용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다자녀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시 기여

3) 향후 추진계획

- ☐ 전국 다자녀가족 우대카드제 연계 방안 관련 연구용역 실시

- ☐ 전국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 소지자 및 가맹업체에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09년 하반기 또는 '10년부터 전국적 시행

4) 기대 효과

- ☐ 기존의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동 제도는 저출산대책으로서 보편성 확대
- ☐ 저출산대책에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 주택의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수급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와 무주택 저소득층의 부담 계속 증가
-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다자녀 가정 및 초기 가정형성기 등 실수요층에 주택 분양 및 주택자금 대출 등에 따른 혜택 부여가 요청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다자녀 가구에 주택 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저출산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주택 분양시 혜택 부여
 -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제 도입
 - 부양가족수(자녀수)를 가점 항목으로 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07년 8월 24일)

□ 주택자금 대출혜택 부여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다자녀 가정 및 초기 가정형성기 등 실수요층에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혜택 부여
-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대출 한도 상향 및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일시상환 방식을 장기분할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의 상환방식 변경 검토를 위하여 장기분할상환방식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모니터링 시행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4.5% 금리로 전세자금 융자지원, 2년 거치 일시 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 국토해양부 의견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채권 조성이 감소되어 기금 여유재원이 2006년말 4.5조원에서 2007년말 1.7조원, 2008년말(예상) 0.6조원으로 급격히 감소되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
 - － 따라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저소득가구 상환방식과 같이 15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 회수 지연(최장 6년 일시 상환→15년 분할상환)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
 - － 결과적으로 주택기금 재원여건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 공급제도 도입 (2008년 5월 2일 입법예고)

-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60㎡이하 분양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공급시 혼인 3년이내(1순위) 또는 혼인 5년이내(2순위)로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건설량의 30% 내에서 특별공급(자녀수가 많은 자 우선)
- － 소득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 문제점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들은 그 혜택이 자녀수별 차이가 크지 않아 실효성 의문시

3) 선행 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 및 출산결정의 시기에 영향(timing effect)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여, 일부 국가들은 저출산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장려하거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사례

- 공영주택의 입주 전형에서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이 3명 이상 있는 세대에 우선권 부여, 특정우량임대주택에서 동거친족이 많은 사람, 그 외 특히 거주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모, 추첨에 의해 입주자 선정

□ 싱가포르의 사례

-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보조금 혜택을 확대
 - 셋째자녀 우선지원 방안(Third-Child Priority(TCP) Scheme)으로 아파트 분양시 셋째자녀가 있는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TCP 신청자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의 5%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여 만약 다른 TPC신청자들과의 1차 추첨에서 5%내에 들지 못하더라도 2차로 일반 신청자와 재추첨을 하도록 혜택 부여)
 -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월 급여 싱가포르 \$8,000 이하) 미혼시 민에게 아파트구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위 지원금에 덧붙여 top-up 방식의 부가급여 신청자격을 부여

□ 프랑스의 주택 관련 지원 정책

- 주택보조금(Apl: 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가족주택수당(Alf: L'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familial), 사회주택수당(Als: L'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social)이 있음.
 - 이 중 가족주택수당(Alf)은 ① 출생한 아이, 출생할 아이, 혹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가족, ② 배우자 양쪽이 40세 이전에 결혼한 5년 미만의 부부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임

-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 가족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현재 주택 부담 비용(집세나 대출상환금)이 있어야 함.
 - － 주택이 주된 거주지이며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자가 적어도 1년에 8개월간 거주
 - － 본인 및 거주자의 재원이 최대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 － 프랑스의 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는 주택수당액수를 계산할 때 피부양자녀와 거주자 수, 거주지 위치, 임대료나 월간 대출상환금액, 소득 수준을 고려함.
- 한편, 가족 수가 늘어나서 이사를 하게 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특별수당(La prime de déménagement)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 피부양자녀 (출산한 혹은 출생 예정의)가 적어도 3명 있어야 함.
 - － 이사가 임신 3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1일과 막내 아이의 두 번째 생일 전달의 마지막 날 사이에 행해져야 함.
 - － 주택보조금 혹은 가족주택수당의 권리가 있어야 함.

□ 스웨덴의 주택 관련 지원 정책

-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가정에 대해 주거수당이 지급됨.

〈표 9-11〉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 (2001년 1월 현재)

구분		월 최대 급여액 (크로나)	최대 주거지 넓이(m ²)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수	2,500	80
	1명	3,175	100
	2명	3,900	120
	3명	3,900	140
	4명	3,900	160
자녀가 없는 가정 (부부연령 18~28세)		1,100	60

자료: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2003)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 주거 수당 액수는 주택의 크기, 주거비용, 소득에 따라 책정됨.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배우자 중 한쪽 일방의 소득이 연간 58,500 크로나 혹은 월 소득이 5,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감소함.
- － 한부모가정일 경우 연간 소득이 117,000 크로나 이상 혹은 월 소득이 10,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감소함.

4) 추진 방법

- 자녀수별로 실질적인 차등을 주어 다자녀가정에 보다 유리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 공급제도와 연계운영 고려)
- －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만혼화 예방을 위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사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제도” 도입)

제2절 보육·교육 체계 선진화

1. 육아지원 시설 확충

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강화 및 균형 배치

1) 필요성 및 목적

-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와 선호도는 높은데 반해, 이동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0.8%에 불과
 - － 중소도시 이하 취약지역의 국공립시설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편
- 국공립보육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저소득층이나 취업모 등을 중심으로 민간보육시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입지나 기능에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표 9-12〉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7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보육	직장
				법인·단체	민간			
시설수(개소)	30,856	1,748	1,460	1,002	13,081	61	13,184	320
(%)	(100.0)	(5.7)	(4.7)	(3.2)	(42.4)	(0.2)	(42.7)	(1.0)
아동수(명)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444	177,623	15,124
(%)	(100.0)	(10.8)	(10.7)	(5.1)	(55.7)	(0.1)	(16.1)	(1.4)

주: 직장보육시설에는 비의무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수 포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8. 3

- 그동안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에 주요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이후의 정책과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양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높지 않은 현상은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가격과 신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용 지원과 동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보육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국공립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 추진
 -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국공립화, 택지개발 사업 시행시 보육시설 용지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노력, 군관사 지역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 운영, 학교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추진, 통·폐합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등
- 그러나 시군구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민간보육시설의 반발로 여전히 설치 실적은 미진하여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함.

- 국공립보육시설 수는 2005년 1473개, 2006년 1643개, 2007년 1748개소로 확충 속도는 매우 더딤.
- － 2007년의 경우 목표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에 확충 95개소,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53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7개소로 총 148개소가 확충되어 목표 282개소 대비 달성률은 53%에 불과

〈표 9-13〉 최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와 실적

(단위: 개소)

연도	목표	설치
2004	53	48
2005	400	134
2006	110	104
2007	282	148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07.

- － 지자체 재정부담 과중 및 민간시설 반발로 국공립시설 설치를 회피하고 있고, 민간시설장들의 강한 반발과 지방비 확보에 대한 지방의회도 비협조적임.
- － 신축시 건축비의 75%(국가 50%, 시도 25%)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시군구 부담
-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단순 보육서비스 제공에 머물고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제공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제공 등에서도 민간보육시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음.
- 그러나 보육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볼 때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없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함.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저출산의 원인은 단선적인 요인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음.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의 변화, 문화의 변화 등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개별수준에서의 행위, 가치관,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에 의해 결과되는 복합적인 과정과 결과로 저출산현상이 초래됨

-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아동양육의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임
- Gustafsson, Kenjho and Wetzels(2002)는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결정요인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육서비스를 지적하며, 보육시설의 제공이 덜 발달할수록 여성들의 출산연기,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보고함
- “2005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국민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보며, 현재 이용아동 부모도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유형은 국공립 보육시설 56.2%, 비영리법인 6.9%, 민간보육시설 29.3%, 가정보육 0.5%, 직장보육시설 1.5%로 나타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가장 선호
 - － 현재 기관 이용아동 보호자 중 58.1%가 비용에 부담을 느낌
- 국공립시설이 지역사회 보육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시설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공립보육시설에서 강화되어야 할 기능은 취약보육 제공, 저소득층 아동에 포괄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지역내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으로 구분(서문희 외, 2007a).
-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과반수 정도가 국공립시설이 부족하고 거점형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봄.

나) 외국 사례

- 북구유럽 국가들과 프랑스에서는 공보육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보육이용률이 높고, 부모부담률이 0~15% 정도임(Cleveland & Krashinshky, 2003)
- 덴마크는 6개월 이상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70%가 공공 및 지역사회가 운영하고, 나머지 30%도 비영리로 운영되는 개별 또는 네트워크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OECD, 2006)

- 스웨덴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피르스콜라는 2005년 기준으로 75.1%가 공립이고, 보육아동 중 83.3%가 공립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다님. 사립시설 이용아동도 36%가 부모협동시설을 이용하고, 31.5%가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유미 외, 2005; OECD, 2006).
- 프랑스 3세 이상아가 이용하는 모성학교(Ecoles maternelles)는 대부분이 학교에 부설되어 있고, 모성학교 이용 아동 중 20% 정도가 사립학교에 다님. 또한 프랑스 3세 미만의 3%가 다니는 집단보육시설(Creches Collectives)의 64%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29%는 부모협동 등 단체가 운영하며, 개인 등 사립에 의한 운영은 소수에 불과함(OECD, 2006).
- 일본도 인가 보육시설 중 53.3%는 공립시설, 46.7%는 법인보육시설임(보육연구소, 2007)
 - － 민간개인에 의한 미인가 시설의 비중은 미미함
- 자유민주주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호주도 지방 및 지역정부에 기초한 공공보육시설은 종일보육시설 11.1%, 일시보육시설 22.9%, 학교 밖 시설 21.0%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보육시설 중 15.5%가 공공시설임.

4) 추진방법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 201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 연차별 확충
 -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 추진
 - 지자체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 사업 추진시 보육시설 설치 유도
- 국공립보육시설이 제공하는 기능 다양화 및 취약보육 기능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의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기능 확충
 -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 선정 기준과 연계
 -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

□ 지역사회 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균형 배치

- 시군구 또는 권역별로 지역사회 보육의 거점으로서 선도적 기능을 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 － 취약보육, 저소득층 아동 포괄적 서비스,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지역내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추진

나. 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균형 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정부가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지역사회 보육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에 맞는 위상을 정리하지 못하였음.
 - 국공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2개 시, 17개 군이며, 기 설치된 국공립 시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 보육 이외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음.
- 그 간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단순 보육서비스 제공에 머물고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제공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제공 등에서도 민간보육시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음.
- 지역사회내 핵심 보육시설로서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적 확충만을 강조하여, 적소에 균형배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님.

2) 추진 방안

- 각 지역에 지역사회 거점형 기능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을 배치하여 취약보육, 포괄적 서비스, 교사와 시설을 위한 지원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함.

3) 성 과

- '07년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역사회 거점형 보육시설로의 기능을 추가 부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매뉴얼 개발 및 시범시설 5개소를 지정하여 지역거점형 보육 시범사업 실시('07.9~11, 서울 3개소, 인천 2개소, 안산 1개소)

4) 향후 추진계획

- 시군구 또는 권역별로 지역사회 보육의 거점으로서 선도적 기능을 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 시설 규모, 지원 수준, 국고 분담 등 기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지원체계 및 특별 재원 확보 필요
- 거점형 보육시설 역할 모형 구축
 -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기능을 수행
 -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자원과 연계
 - 지역사회 보육시설, 교사 등 종사자 교육 등 보육분야 지원
 - 지역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등 지원 기능
- 기능 수행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배치
 - 기존의 보육교사 이외에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고정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 기능 수행

다. 통합적 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학교에 병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하여 아동 및 학부모에게 육아서비스 제공

-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활용하여 유치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며 학교의 유휴교실 활용도를 제고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12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기 운영되고 있고, 이외에 추가 설치 실적은 부진
 - 학교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실적은 2007년 1개소
 - 경기도 교육청이 「희망아가방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파주, 남양주시, 용인시 등에서 초등학교 내 영아전담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무산되었음.
- 2007년 정부는 육아정보제공 및 육아상담, 놀이공간 제공, 교재·교구 대여 등 지역 사회와 밀착될 수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시도별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시범운영을 계획
 -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역사회 거점형 보육시설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지역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매뉴얼 개발 및 시범시설 5개소를 지정하여 지역거점형 보육 시범사업 실시(서울 3개소, 인천 2개소, 안산 1개소)
 -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부진한 상황
 - 2007년 거점형 국공립 시설 1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지만, 5개소 설치에 그침
- 초등학교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는 공간 및 층수의 부적절성, 운영 시간과 초등학교 운영시간 격차에서 오는 관리의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외국 사례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능이 일원화되어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된 일본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이 통합된 인정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음.

- 영유아 시설의 상당수가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설치되고 있고, 국공립초등 학교 부설 보육시설이 상당수임.
- 프랑스 모성학교도 대부분 학교내에 설치

4) 추진 방법

- 유휴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학교 BTL 사업 실시 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추진
- 농어촌 초등학교에 영아보육 또는 방과후 보육·교육을 실시, 통합육아지원시설로 시범 운영
-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공립유치원, 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차량 지원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 지원
- 실적과 현실성 없어서 삭제 검토 필요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직장보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보육지원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직장가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 확충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자녀 양육을 정부의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직장가 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인력 수급의 용이성을 확보하며, 사기진작과 애사심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율 제고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2007년도 의무사업장은 791개소이며, 이 중 440개소(55.6%)가 의무이행 중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
 - 이행률: '05년 38.4%→'06년 47.1%→'07.6월말 52.1%→'07.12월말 55.6%
 - 2007년 말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320개소, 15,124명의 아동을 보육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나 인센티브는 미흡
- 부모의 입장에서는 직장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시간 보육이 가능하여 선호가 높으나, 아동 동반 출근의 문제 등으로 실제 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표 9-14〉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2007

단위: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
		계	설치	수당	위탁	
2007년도	791 (100.0)	440 (55.6)	253 (32.0)	147 (18.6)	40 (5.1)	351 (44.4)
2006년도	775 (100.0)	365 (47.1)	199 (25.7)	132 (17.0)	34 (4.4)	410 (52.9)
2005년도	787 (100.0)	302 (38.4)	170 (21.6)	105 (13.3)	27 (3.4)	485 (6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표 9-15〉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예산부족	장소 미확보	예산부족 및 장소 미확보	수요 부족	기타	계
2005년	116 (22.5)	90 (17.5)	31 (6.0)	162 (31.5)	116 (22.5)	515 (100.0)
2006년	171 (41.7)	96 (23.4)	- -	136 (33.2)	7 (1.7)	410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 결과.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음. 2007년도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조사에서는 기업에서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이상이 90%이었음(서문희 외, 2007b).
- 직장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남은 자리가 없다는 것이 29.4%로 가장 높았고 보육료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5%, 거리가 멀어서 14.7% 등 있었음
- 직장보육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무 기업 설치 법적 기준의 부적절성 및 강제성의 부재, 시설 운영 부담에 따른 직장보육 실시 기피, 직장에 보육시설 설치 위주의 지원 정책과 지역시설을 선호하는 근로자와의 괴리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이기숙 외, 2002; 김유경 외, 2003).

나) 외국 사례

-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타 정책에 비하여 그 비중은 낮으나, 직장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 지원이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은 1998년 차세대육성지원추진법으로 근로자 101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법제화함. 행동계획 중 보육서비스나 보육비용 지원이 포함됨.
 - － 2006년 현재 3,389개 사업소내 보육시설에서 약 48,00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사업소내 보육시설 중 2,126개는 병원에 설치
 - － 야간 연장근로 시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을 지원함. 베이비시터 할인권 지원에 참여한 사업소는 2006년 1,000여개소임.
- 호주는 1996년 사업장 관계법(Workplace Relation Act, 1996)으로 사업장별로 개별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함. 2001년 통계로 노사협약을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체 중 1%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7%의 근로자가 수혜를 봄.

- 사업장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65개소이고 약 600개 지역사회보육시설이 사업체의 위탁으로 근로자 자녀를 보육

4) 추진방안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별로 접근방식을 다양화하여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보육아동수 부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에 보육수당 지급 및 위탁보육 권장
-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무상지원액 및 교재교구비 지원 상한액 상향 조정
- 직장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학교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로 교직원과 학생부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학업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이 연기되지 않도록 유도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지원 현황에 대한 관리·평가 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

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질 향상

가.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 필요성 및 목적

-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하여 양적인 우세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안전·영양·건강관리·교육내용 등에서의 만족도가 낮으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 보육아동의 약 70%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충족률 82.1%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적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
 - － 일부 민간시설에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길고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민간보육시설 내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열악
 - － “2005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이고, 급여는 80~100만원 27.7%, 79만원 이하 25.7%, 100~119만원 22.7%
 - － 보육교사 임금은 유치원교사 임금의 67%수준이고, 민간시설 보육교사 급여는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 급여의 약 60~70% 수준임(서문희, 2004)
- 국공립보육시설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높아 부모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반면,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61.6%가 현 비용수준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영아에 대해서는 '06년부터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비용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
 - 민간시설의 영아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의 2006년 80%, 2007년 85%, 2008년

90% 수준으로 인상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영아보육 지원

- 지원 인원은 2005년 191천명, 2006년 210천명, 2008년 2월 현재 30만명으로 확충

〈표 9-16〉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 2008. 2

(단위: 명, %)

구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법인의외	민간개인			
지원인원	305,202	-	151	1,352	155,929	401	147,032	330
비율	100	-	0.05	0.44	51.09	0.13	48.18	0.1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 영아 기본보조금제도 시행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영아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감과 동시에 시설서비스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
- 영아 기본보조금의 지원조건으로 교사전원 4대보험 가입, 보육교사 최저 보수 기준 이상 지급, 총 정원 및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등 제시

〈표 9-17〉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2008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 인건비	▪ 영아반 80%, 유아반 30%
민간보육시설	▪ 영아 기본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 340천원 • 1세 : 164천원 • 2세 : 109천원
	▪ 교재교구비	▪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2008.

- ☐ 유아는 기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단가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
- ☐ 영아기본보조금 등 민간시설을 이용 아동 지원이 서비스 제고로 효과를 내기 위

해서는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

- 영아 기본보조금이 서비스 제고 및 부모 체감도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조윤희, 2007)
- 민간보육시설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성이 기반되지 않으면 공공재정의 적절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양, 교육, 건강, 안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 따라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제2세대를 키워내는 사회적 책무이며,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의 역할 수행
 -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조기교육 및 보육의 역할은 아동빈곤 방지, 교육 및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
- “2005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보며, 현재 이용아동부모도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 현재 기관 이용아동 보호자 중 58.1%가 비용에 부담을 느낌
 - 국공립보육시설 선호이유로 비용저렴 54.1%, 신뢰 43.1%로 나타나 비용과 신뢰가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음

나) 외국 사례

-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유럽국가에서는 보육노동이 여성직종화되어 있지만 많은 종사자들은 공공부문에 준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크게 저임금군으로 구별되지는 않지만, 반면에 시장화된 보육서비스가 발달해 있는 영미권에서는 보육교사는 최저임금군에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음(Christohperson, 1997, Gornick & Meyers, 2001에서 재인용; Morgan, 2005)

-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추세는 부모의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유사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OECD, 2003)
 - 벨기에 정부는 민간보육자에게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 하에서 공적자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민간보육자의 절반가량이 보조를 받고 있음. 즉 정부의 강력한 질규제와 재원제공이 결합되어 제공되고 있음(Dumon, 1992)
 - 핀란드, 스웨덴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표준화, 전문화를 위하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OECD, 2004)
 -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2/3가 민간시설인 호주는 정부부조금과 인증제도를 철저하게 연계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

4) 추진방법

- 영아 기본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유아는 차등보육료 체계를 재 편성하여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서비스 수준 차이를 완화
 - 정책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 및 지도 역할이 중요
 - 특히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규제가 확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투입의 성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려움
 - 영아 기본보조금제도 등 정부 지원의 정책목표와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인 개선과 연계되도록 함.
 - 보육비용 정부보조금 전달방법은 전자 카드 형태로 전환하여 부모의 체감도 제고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지원과 연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9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
 - 2009년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제1차적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향후 매 4년마다

재인증 추진

-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 공립·법인, 일정규모 이상 민간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부모의 취업여부와 근로형태, 지역별, 아동특성별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이에 대한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 곤란
 - 다수의 보육시설은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종료되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서비스 제공 보육시설은 전국 3만개 보육시설 중 약 12% 정도
-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 및 긴급보육시설 부족
 - 가사(육아포함)와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가 높음.
 - －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20~44세 유배우부인 중 ‘2자녀이상+시간제’(54.2%)와 ‘1자녀+시간제’(10.0%)를 선호하는 비중이 총 65% 수준
 - － 미혼여성(20~44세)도 47%가 ‘2자녀이상+시간제’(36.3%)와 ‘1자녀+시간제’의 파트타임 선호
 -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63.4%가 시간제 보육 희망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 아동이 아프거나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체계 미흡
- 영유아 시설이 보육시설로 획일화되어 종일제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제 이용 제도가 없으며, 놀이집단 서비스 제공 시설은 부재

〈표 9-18〉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선호도, 2005

(단위: %, 명)

연령	무자녀 + 전일제	무자녀 + 시간제	무자녀 + 비취업	1자녀 + 전일제	1자녀 + 시간제	1자녀 + 비취업	2자녀 이상 + 전일제	2자녀 이상 + 시간제	2자녀 이상 + 비취업	계(사례수)
유배우부인	2.1	0.5	0.1	6.0	10.0	0.9	11.2	54.2	15.1	100.0(3,566)
20~29세	2.5	0.4	0.0	6.8	11.9	1.6	11.5	46.7	18.5	100.0(501)
30~34세	1.9	0.6	0.1	6.5	10.9	0.8	10.5	52.0	16.8	100.0(1,005)
35~39세	2.6	0.4	0.1	5.3	9.2	0.9	10.8	57.2	13.5	100.0(1,103)
40~44세	1.2	0.7	0.1	5.9	8.9	0.6	12.2	57.3	13.1	100.0(958)
미혼여성	2.9	0.6	0.4	10.3	10.3	1.8	21.1	36.3	16.3	100.0(1,459)
20~29세	2.8	0.3	0.1	12.5	10.7	1.6	22.4	37.0	12.5	100.0(1,016)
30~44세	3.7	0.5	0	13.8	14.4	1.1	14.4	43.1	9.0	100.0(188)

자료: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및 교사인력 지원 확대(2007년 3,668명)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시간연장 활성화 추진
 - － 19:30까지 3명 이상 보육하고 21:00까지 1명 이상 보육
 - － 국공립·법인 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최고 3인까지 지원
 - － 국공립 시설 위탁 및 재위탁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시설에 가점 부여
-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 시간제보육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부진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아동연령별, 거주지역별, 부모의 취업여부,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보육의 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제공 역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함.

- 취업부모의 경우 보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육서비스 운영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현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보육운영시간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
- “200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수요에서 24시간제, 야간 보육 부족- 74%
 - 이외 시간제 일시보육 부족 52.8%, 휴일보육- 부족 78.6%, 방과후보육 부족 55.9%, 장애아보육 부족 80.6% 등

나) 외국사례

- 일본은 엔젤, 신엔젤플랜에 이은 자녀양육지원플랜 등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일본 후생노동성, 2004)
 - 야간, 주말시간대에 보육시설 연장운영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음.
 - － 2006년 현재 인가시설의 62.1%가 1일 11시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법인 등 민간시설은 상업성, 경쟁으로 공립시설에 비하여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 시설 비율이 더 높음(보육연구소, 2007)
 - 일본에서는 아픈 아동이나 회복기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시설은 2004년 507개소에서 2009년 1,500개로 확충할 예정임.
 - 전업주부를 포함하여 보호자의 육아피로, 관혼상제 등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부모를 위한 일시 특정보육 서비스 제공 시설을 2004년 5,935개소에서 2009년 9,500개로 확충할 계획
 - 지역사회 자녀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자녀양육지원센터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함.
 - － 광장사업은 2004년 171개소를 2009년 1,600개소로 확충할 계획임

- ☐ 호주는 일시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과 비용지원은 시간 단위로 하여,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오스트리아에서는 방과후 오후시간에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시 보육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비상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OECD, 2003b).

4) 정책 방안

-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시간연장, 야간, 휴일 보육 등)의 안정적 이용방안 마련
 - 시간연장 서비스제공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비스를 활성화시킴
 - － 야간보육을 위한 보육교사를 매년 1천명 증원하여 인건비 지원
-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의 다양화
 - 단기간 이용가능한 시간제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 － 파트타임 근로자 확대에 대응
- ☐ 영유아 일시보육시설 및 놀이집단 서비스 제공 시설 설치
 - 놀이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의 공동 놀이참여 기회를 마련함(예; 서울시 육아 플라자)
- ☐ 긴급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 파견보육(아이돌보미) 형태의 긴급보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유사시 대응을 높임.

다. 종일제 유치원 운영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 맞벌이 부부 및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종일제 유치원 확대 요구

- 종일제 유치원 선택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일제 운영 확대
- 질 높은 종일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의 만족도 제고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2001년 12.7%, 2003년 34.3%에서 2005년 62.5%, 2007년 85%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유아발달에 적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 2007년 1,510개원에 종일제 프로그램을 위한 수면실, 욕실, 주방 및 보안시설 설치 지원
 - 종일제 교사 인건비 지원
- 지속적 시설환경개선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

3) 외국사례

-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어 보호와 교육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 종일제로 운영
-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된 일본은 공립유치원의 44.6%, 사립 유치원의 87.6%로 총 유치원의 70.6%가 정규 교육시간이 끝난후 아동을 맡아주는 보육서비스를 실시(保育研究所, 2007)

4) 추진방법

- 종일제 유치원 전체 유치원(100%)으로 확대
 - 시설환경개선비 지속적 지원
 - － 2008년도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유치원 1,500개 목표
 -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라. 문화시설내 육아시설 설치 운영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에 육아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문화활동 기회 제약
- ☐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건립하고 있는 지역별 문화회관의 이용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육아시설 설치 요구가 증대
 - 전국 139개 문화회관 운영 및 37개 건립 중
- ☐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영유아 동반 문예회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문예회관 등 국공립 공연장부터 우선 지원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2007년 8월 현재 전국 159개 문예회관 중 41개 문예회관에 육아시설 설치
 - 광역시를 제외한 다수 문예회관 육아서비스 시설 미확보
- ☐ 문예회관 내 육아시설 설치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므로 지방정부 자체예산 확보 필요

3)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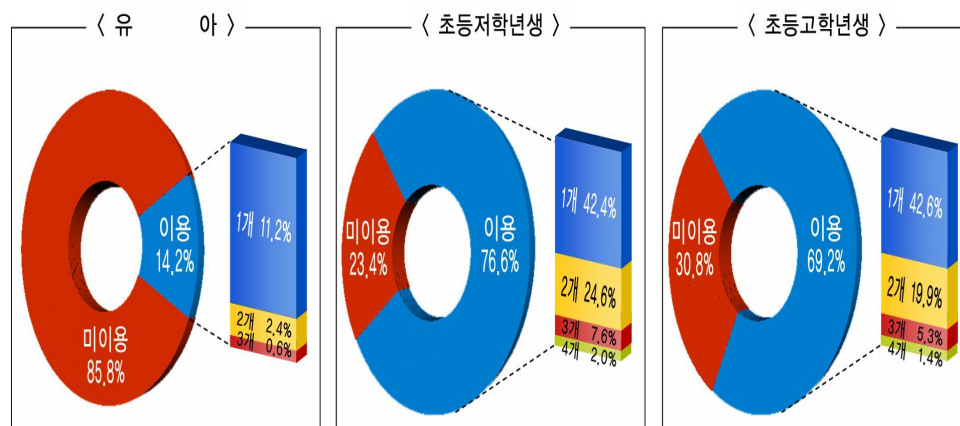
- ☐ 국공립 공연장부터 우선 지원
- ☐ 기존 문예회관과 신규 건립 예정인 문예회관에 육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을 점검

마.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지적
 -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출산 중단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제시(이삼식 외, 2005)
 -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비는 자녀양육 가정에 큰 부담이며, 출산 중단 of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동(장혜경 외, 2004 등)
- 방과 후 가정 내 보호 곤란 및 학습 보충 등을 이유로 방과 후에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 증가
 - 초등학교 학생의 학원 이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귀가 후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76.6%, 고학년은 69.2%

[그림 9-3] 학원 이용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2005.

-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가정에 홀로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다수
 -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비율은 9.4%에 불과하며,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내는

아동의 비율은 4.5%(저소득가정의 아동은 10.6%)

- 이들 아동에 대한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동안의 보육서비스 확충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
-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는 높으나 부처의 분산과 기관의 다양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교실(교육인적자원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방과후 아카데미(보건복지가족부) 등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초등 학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의 확대 및 질적 개선 필요
 - 이와 관련,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체제로는 다양한 과외욕구 해소에 한계가 존재하여, 특히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후 교육기회 확대와 여성 인력의 사회적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곤란
 - 따라서 학교의 보육기능 확대 및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대의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방과후 학교 활성화

- 방과후 학교 운영체제 적용을 위한 정책연구학교 운영
 - 대상학교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교 각 1개교씩 총 48개교와 학교장 운영 32개교, 위탁 운영 16개교(학부모회 12개교, 사회복지관 1개교, YMCA 3개교)
-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 개발
 - 초·중·고교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형 9종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89개 시·군을 공모 선정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비, 시설비 및 기

자재비, 인건비 등)

-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 비율은 농산어촌이 대도시에 비하여 6.8%p, 8.3%p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하도록 자유수강권(바우처) 지급(1인당 연간 30만원)

- '07년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연간누적인원수 2,436,985명

□ 방과후 초등 보육프로그램 실시 학교 확대

○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의 시설비 지원

- 2007년 현재 2,508개 초등 학교인 44%가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보육·교육 운영시스템 연계·조정

○ 정부의 방과후 활동 사업 부처가 4개에서 교육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2개로 축소

○ 「비전 2030」 이 50개 핵심 과제에 방과후 활동 확대 포함

- 부처별 방과후 보육 사업 예산 조정

□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내실화

○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

- 04년 9월 3개 시도 교육청(대구, 광주, 경북)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05년 4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서비스 확대

- 초4~고1 학생 5개 주요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수준별 콘텐츠 및 비교과(환경보호, 직업체험 학습 등) 콘텐츠 개발

-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률 지속적으로 증가

- 서비스 가입자: 05년 8월 769,940명, '06.12월 2,234,098명 '07.12월 3,396,501명

- 1일 평균 접속자: 05년 8월 42,664명에서 2007년 7월 187,743명으로 340% 증가

- '07.12월 기준, 전국 중점서비스대상학생 163,011명 중 81,544명(50%) 가입

- 유관기관 협의체인 「사이버가정학습추진협의회」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화와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상시 협의 및 개선 추진
 - － 중앙센터(KERIS) : 표준개발, 제반연구, 시도 컨설팅, 중앙 및 시·도별로 서비스 통합 운영(인터넷교육방송, 에듀넷)
 - － 시도시스템 평균 성능 개선율 : 약570%(시도 사이버가정학습 성능개선보고서, 2007)
-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 － 제1회 유네스코-바레인국왕 교육정보화상 수상('07.01.12)
 - － IMS Learning Impact 2007 대상(Platinum) 수상('07.04.18)
 - －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 : 국제 이러닝 표준화 기구

〈표 9-19〉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구분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방과후교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
대상아동	저소득 초·중고생 (만 6~17세)	초(4~6년), 중(1~2년)생, (만9~13세)	저소득 중고생 (만12~17세)	초·중학생 (1~3학년) (만6~8세)	초·중고생 (만 6~17세)	초·중학생(1~6학년) (만5~12세)
운영시간	8시간/일 (11시~19시) (토요일운영)	5시간/일 (15시~22시) (토요일 운영)	15시간/일 (8시~23시) (토요일운영)	4시간/일 (13시~17시) (토요일운영 포함)	자율적으로 운영 (토요일운영 포함)	4시간이상/일 (토요일운영)
이용자 부담	무료	월160~178천원 (저소득층은 무료)	일 300~500원	월5~7만원 (저소득층은 무료)	과약 중	0~30만원 (저소득층은 무료)

자료: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안 공청회 자료집」, 2006.

□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미흡
 - － 저소득층 학생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므로 자유수강권 활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참여율 예측에 한계가 있음

- 맞벌이 가정 등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 비하여 초등 보육교실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요구됨
- 전반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조정하는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함
 - － 보건복지부(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교육인적자원부(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여성가족부(방과후 보육) 등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초등학교의 보육비용은 10~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0~5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의 순으로 월평균 보육비용은 20.4만원 수준
 - 영·유아와 비교하여 볼 때, 초등학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평균 비용 증가
- 〈표 9-20〉 아동연령별 보육시설이용 월평균비용

(단위; 명, %)

분류	비용 안됨	10만원 미만	10~30 만원미만	30~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무응답 /결측값	전체	평균 (만원)	지불자 평균(만원)
영유아										
0~2세	3(1.0)	3(1.0)	18(5.9)	8(2.6)	0(0.0)	1(0.3)	273(89.2)	306(100.0)	19.6	21.6
3~5세	6(1.2)	34(6.8)	305(61.0)	47(9.4)	10(2.0)	0(0.0)	98(19.6)	500(100.0)	19.6	19.9
소계	9(1.1)	37(4.6)	323(40.1)	55(6.8)	10(1.2)	1(0.1)	371(46.0)	806(100.0)	19.6	20.0
초등학생										
6~8세	2(1.0)	33(16.3)	107(52.7)	20(9.9)	2(1.0)	1(0.5)	38(18.7)	203(100.0)	17.9	18.1
9~11세	3(0.6)	51(10.9)	220(47.2)	72(15.5)	20(4.3)	2(0.4)	98(21.0)	466(100.0)	21.6	21.8
소계	5(0.7)	84(12.6)	327(48.9)	92(13.8)	22(3.3)	3(0.4)	136(20.3)	669(100.0)	20.4	20.6
전체	14(0.9)	121(8.2)	650(44.0)	147(10.0)	32(2.2)	4(0.3)	509(34.5)	1477(100.0)	20.0	20.3

주: 중복응답 결과(무응답/결측값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실태조사』, 2005

□ 육아·교육비용 부담으로 출산의 중단

- 자녀양육·교육(조기교육, 사교육)의 고비용 사회구조 지속
- 학부모의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 －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 중 부모부담은 약 70%(2003년)

- 가계가 부담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에서 2004년 30.4%로 증가

〈표 9-21〉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단위: %)

교육비	2000	2001	2002	2003	2004
공교육비	67.1	63.7	62.3	60.3	58.8
사교육비	26.6	29.2	29.4	30.6	30.4

자료: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2005. 4. 1.

- ☐ 방과후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비중이 47.2%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실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적고,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학생 참여도가 저조(초등학생 31.3%, 중학생 20.2%)
 - 농산어촌 등 교육소의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미흡

나) 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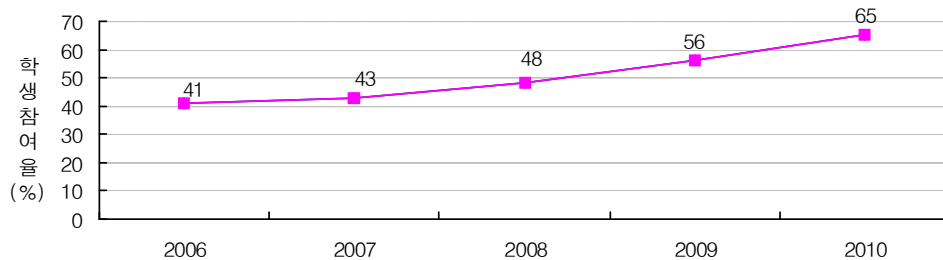
- ☐ 프랑스의 경우, 방학기간 중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보육레크리에이션 활동 지도(대학생 아르바이트, 교사 활용)
- ☐ 스웨덴의 경우, 방과후 공공 보육시설인 레저타임센터(7~12세), 레저클럽(9~12세)에서 레크리에이션과 보육서비스 제공
- ☐ 호주는 보육정책 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과후아동 보육시설이 2004년 2,137개소이고 방학보육시설도 1,340개소에 달함.
- ☐ 일본의 경우,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2004년 15,133개소의 방과후 교실을 2009년 17,500개소로 확대할 예정, 전체 초등학교의 3/4이 실시

4) 추진방법

- ☐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학교단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함
 - －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간 선택권을 보장
 - －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시설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인력 등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
 - － 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방과후 학교」 지원 방식 개선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 －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쿠폰 지원(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쿠폰)
 - －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2007)에서 차상위 계층(2008)까지 확대
 - － 이용기관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민간기관 프로그램(2008)으로 확대
-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은 전체 시군 140개로 확대
 - － 다양한 프로그램 등 운영모델 지원, 전문인력 확보,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등

[그림 9-4]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전망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6

□ 초등 보육프로그램 실시학교의 확대 추진

- 부모의 자녀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방과후의 초등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토록 추진

－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표 9-22〉 초등 보육프로그램 지원 계획

(단위: %)

교육비	2008	2009	2010
대상학교	3,400	4,400	5,400
대상자(천명)	68	88	108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6.

□ 방과후 보육·교육 운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영유아 보육 지원, 문화관광부의 학교연계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연계 체계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 － 단기적으로 방과후 활동 사업간 조정을 위한 협의회 실시, 부처간 사업추진체계 개선안 마련
 - － 장기적으로 통합적 「방과후 안전망」 구축·운영

□ 사이버 가정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이버 가정학습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실질적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관련 연구, 표준개발, 시도 교육청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 콘텐츠 제공
 - －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법을 보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 중장기적으로 e-러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보완재로서의 기능 강화

바. 초등학교 유희교실 활용 국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1) 배경 및 필요성

- 영아의 경우(0세~2세) 부모의 육아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영역이 진입할 여지 부족
 -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보육 강화로 국민 보육만족도 제고 필요
- 영·유아보육시설 추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인해 현재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 또는 추가 지원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은 보류된 상태
 - 인건비 지원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사업안내(지침)를 통해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로 한정
 -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지원,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농어촌 경우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이 중단되어 민간 영아전담시설은 사실상 확대 불가
 - 이에 따라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정책 방향도 영·유아 통합시설로 전환한 상태
- 당초 영아전담시설은 영아보육을 확충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등으로 제도가 폐지되면서 영아만 보육하는 시설 자체까지 금지
-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12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기 운영되고 있으나, 이외에 추가 설치 실적은 없음.
 - 초등학교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는 공간 및 층수의 부적절성, 운영시간과 초등학교 운영시간 격차에서 오는 관리의 문제 등 극복 필요

2) 추진 실적

-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약 77개소) 활용 및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아가방 사업(영아전담 보육시설) 추진
 - 교실 활용도 제고, 예산절감, 부모의 접근성 제고 효과 기대
 -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시설이 초등학교에 이미 다수 설치되어 있어 영아(0~2세) 전담보육시설로 추진(경기도내 초등 1,047개소 중 910개 병설유치원 설치)

3) 향후 추진계획

- ☐ 인건비 등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의 영아전담보육시설과 영아만 보육하는 영아보육시설과의 개념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아만 보육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정원 조정을 허용하되 지원은 국공립수준으로 유지
 -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수준은 영아전담시설 지원수준과는 도시에서 다소 차이(원장 및 보육교사(영아반 2개 이상) 인건비의 80%지원, 농어촌 경우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차량운행비 20만원 지원)

4) 기대 효과

- ☐ 초등학교 인근 주민에 공공 보육서비스 증대
 - 학교인근 주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여성경제활동참여율 제고)
- ☐ 유휴교실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국공립시설 확충 기여
 - 부지확보 및 신축비 절감
 - 리모델링비용만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기여

사. 보육서비스 정보 공시 의무화

1) 배경 및 필요성

- ☐ 보육시설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부의 미흡으로 인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을 선택하는데 한계
 - 실태조사 결과,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맡기지 못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경력단절 등 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 ☐ 보육정보의 제공 및 수집 등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설치대상 지방보육센터(250개소) 중 32개소(12.8%)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서울특별시, 15개 광역시도,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
-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와 각 지방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모가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는데 미흡한 현실

<현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검색서비스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별 보육시설의 정보를 제공
- 정보 내용 : 시설 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등), 시설장(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운영체(성명), 신고일자, 시설특성(장애아전담·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전담·통합, 시간연장), 홈페이지, 이메일, 교사수, 아동정원, 건물면적, 평가인증여부, 우수보육시설(지정·미지정)

- 부모가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보육시설 현황을 인지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은 보육료 지원 등에 있어서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
-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부모가 보육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육시설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

2) 추진 방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미 이행 시 불이익 처분 검토
- 정보공시 방법, 관리주체
 -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각 시도별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 다만, 공시된 정보에 대해서 각 지자체는 수시로 점검하여 허위 공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역할 담당

〈표 9-23〉 공시 정보의 내용(예시)

유 형	내 용
시설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시설장, 대표자, 개원일 ◦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이메일 ◦ 정부지원 여부 ◦ 시설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 시설특성(장애아전담·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전담·통합, 시간연장) ◦ 차량운행 여부(몇인승, 대수) ◦ 평가인증여부 ◦ 보험가입여부(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 대기자가 있는 경우 가정특성별 입소우선순위 대기아동수 ◦ 월보육료, 특기정성프로그램별 내용, 비용
아동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정원 및 현원 ◦ 연령별 반의 편성 현황 및 반별 아동수·보육교사수
보육교사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보육교사수, 교사1인당 아동수 ◦ 교사의 인적사항, 호봉, 자격사항
기타 정보	◦ 우수보육시설 인정여부 등 개별 보육시설이 공개하고자 하는 운영 현황

3) 기대 효과

- ☐ 보육소비자의 알 권리 및 효율적 시설 선택 보장
 - 지역사회내 보육시설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에 소요되는 심리적·시간적 부담도 경감
- ☐ 시설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
 - 개별 보육·교육시설에 대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에 대한 동기 강화
 - 지역사회내 보육시설간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해 질 높은 육아인프라 구축
 - 가격규제, 기본보조금을 통한 질향상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질 관리 강화
- ☐ 자생적 감독체계 형성을 통해 정보 선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및 투명한 정보 관리 실현
 - 기존시설 이용 부모들이 게시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별도 비용 없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리·감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아. 수요자 중심 보육·육아 정책 개편

1) 성 과

-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액션플랜 초안 마련(5월 중순)
- ☐ 액션플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5월 말)
 - 영유아보육학회(5.29) 등 보육분야 전문가 대상 액션플랜 초안 논의
 - 보육시설연합회·부모 등 수요자 대상 의견수렴
- ☐ 수요자중심보육정책 Action Plan 초안 확정(5월 말)

2) 문제점 또는 추진상 애로사항

- ☐ 예산확보 미흡
 - 양육수당 도입(432억원), 보육료지원확대(800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430억원), 다문화영유아 보육지원 강화(655억원) 등을 위한 추가소요 예산이 부처내 한도(실링)에 미반영
- ☐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 및 보육시설의 반대 예상
 - 현재 일부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전자바우처를 잘못 이해하여 바우처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음
 - － 학원은 바우처 대상기관이 아니고, 보육료 자율화는 바우처와는 무관하고, 영아기본보조금은 기존대로 계속 지원할 계획
 - ⇒ 정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을 통해 제도 도입 추진
 - － 5월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정책설명회 개최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 ☐ Action Plan 확정(6월말)
 - 6개분야 24개 과제로 구성 예정
- ☐ Action Plan 및 주요 핵심과제(바우처,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한 홍보 강화(6월~)

□ Action Plan의 세부추진과제 실행추진(6월~)

자. 보육비용 지원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금을 보육시설에서 수령하므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체감도가 낮고, 재정지원의 서비스 개선 효과도 낮다고 평가
 -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성 제기
- 지난 수년간 보육재정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대부분이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등 보육시설 운영비로 사용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부모 대신 보육시설에서 수령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음.
- 영아 기본보조금은 아동별 부모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게 되면서 그 성격이 모호해지고 재정지원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였음.
 - 가격대비 서비스 질 향상으로 보조금 대상 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부모의 보육료 부담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서비스 만족도, 교사임금 향상 등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조병구 외, 2007).
- 보육비용 지원 대상 아동이 증가하면서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도 크게 증가하여 보육담당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짐.

2) 추진 방안

- 보육비용 지원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모의 결제 행위를 통하여 보육비용 지원금을 보육시설에서 수령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육재정 흐름의 투명성 제고
 - 영아의 경우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3) 향후 추진계획

- ☐ 보육시설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모 보육료와 정부의 지원금은 모두 전자카드를 통한 부모의 결제 과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보육시설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함.
- 정부 재정지원과 서비스 질적 수준 연계
- 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육재정 흐름의 투명성 제고로 지원비용의 효율적 사용 증대 기대

차. 유아대상 기본보조금제 시범운영 후 도입 검토

1) 기본계획에의 반영여부 검토 의견

- ☐ 기본보조금제도는 우리부를 포함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었던 과제이며 시범운영 결과 전면도입에 대하여 찬성부처 전무
-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조정으로 동 계획의 타당성 및 실천력 유지 필요
 - － 국가재정운용계획 육아분야 T/F 공개토론회자료 참조
- ☐ 변경 과제 :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대상 학원 등 난립되어 있는 육아 지원 기관간 근거 법령, 제도, 지원 방식 및 입장이 달라 바우처 본래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기존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으로 과제를 정리함이 타당

2) 관련 정책 추진현황

- ☐ 대통령직 인수위,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정책개편’ 국정과제 확정 : ’08. 2
 - 주요 과제 : 유아교육비 지원체계 개편, 지원방식 개선 등
- ☐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정책방안’ 부내 토론회 개최 : ’08. 5.
 - 유아교육 관련 학계, 공·사립유치원계 등 단체 의견 수렴 : ’08. 4~5
- ☐ 전자카드제 도입관련 관계부처, 기관 협의 : ’08. 6

3) 향후 추진계획 ('09~'10년)

☐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 '09. 9~

4) 기대 효과

☐ 유아교육비 지원의 대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

☐ 유아교육비 전달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취학전 연령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회적 합의 도모

3. 교육·보육 지원체계 구축

가.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

○ 보육시설이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집중된 국·공립과 법인시설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부모 부담 보육료가 높은 상태

－ 그러나 전체 보육아동의 70%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모의 보육 부담이 높은 실정

☐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

○ 특히 영아를 둔 취업모에 대한 육아 지원이 부족

－ 영아를 둔 취업모의 61.9%가 양육을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에 의존

－ 영아를 둔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5.8%이며, 탁아모 이용률은 9.6%(여성부, 2004 전국보육실태조사)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정부는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의 차등 적용
- 2008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영유아(만 0~4세 아)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 취학 준비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 욕구가 높은 만 5세 아동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 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을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용하는 유아에게 차등교육비 및 만 5세아 교육비 지원('09년까지 한시적 적용)
 - 육아지원시설 이용 장애아에게 가구소득 수준 관계없이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 두 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50%를 경감
 - 일정 규모이하의 농지(2006년 이후 5ha 미만) 소유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 2007년 말 농업인 영육비 지원 32,00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46,000명

〈표 9-24〉 2006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만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 보육료단가의 100, 80, 50%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보육·교육비 전액 보육시설·사립 유치원, 월 167천원
두자녀이상 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둘째아부터)	보육·교육비의 50%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보육시설 이용 만12세이하 장애아	보육료 전액(월 361천원)
	유치원 이용 만5세 이하 장애아	교육비 전액(사립 유치원 월 361천원, 국공립 유치원 월 90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교육비의 70%(만5세아는 100%)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교육비의 35%(만5세아는 50%)

주: 1) ()안의 대상자수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유치원 이용아동

2) '0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398만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내부자료, 2008.

〈표 9-25〉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수,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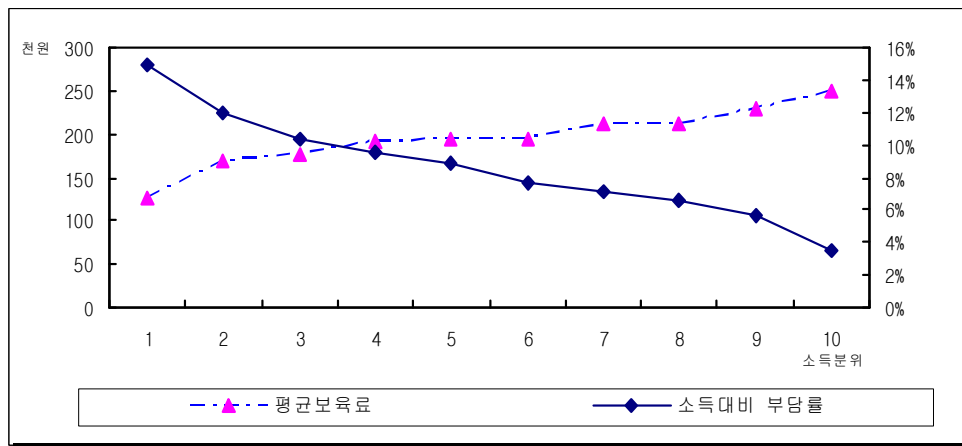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계	저소득차등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5세아무상 보육료	장애아 아동지원
보육시설	859,353	586,836	109,599	145,303	17,615
유치원	247,233	109,023	14,210	122,000	2,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보육통계, 2008;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유치원현황, 2007.

-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육아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지원에 대한 체감도 저조
-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 대비 육아비용 지출은 평균 8.3%
- 2002년 이후 보육관련 예산이 7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
- 전체 보육비용과 유아교육 예산을 합하면 총 비용 대비 정부 재정분담률은 2008년 62% 수준으로 추정되나, 서비스 질적 수준과 가격이 제한된 상태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은 여전

〔그림 9-5〕 평균보육료 및 소득대비 부담률 분포, 2004



자료: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2005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별 기본보조금 지원을 전체 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사용되도록 제도상 연계가 필요
 - 이 과정에서 보육료 자율화 문제 제기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과 자녀양육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이삼식 외, 2005; 장혜경 외 2004; 여성가족부, 2005, 서문희 외, 2004 등)
 - 핵가족화와 이인 소득자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개별가족의 아동돌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개별가족의 아동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국가적인 책임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 강조
- 또한, 많은 연구들은 보육비용의 부담은 많은 가정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이삼식 외, 2005; 장혜경 외 2004; 장혜경 외, 2005; 여성가족부, 2005 등)
 - 여성가족부의 「2005년 전국가족실태조사」 결과, 영·유아 월 보육비용은 10~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0~5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의 순
 - 월평균 보육비용은 19.6만원
 - 「2004년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 결과, 아동 1인당 보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취학아동 아동 1인당 평균 157,600원(표준편차 174,800원으로 매우 큼)
 - 연령별로 보면 0세아의 경우 평균 411,400원으로 가장 높고, 1세아의 경우 287,300원, 3세아의 경우 204,200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4세아에서 219,900원으로 다시 증가 양상

나) 외국 사례

- 외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출산장려책으로 재정 지원을 통한 육아비용 경감을 적극적으로 지원(OECD, 2003; 2004; 2005)
 - 프랑스의 경우 영아와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체계를 구분하여 보육시설(Creche)은 만3개월부터 만3세까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2년 3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이용함. 모두 종일제로 운영.
 - 2세 반 아동의 10%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료 이용)하며, 평균 가구소득의 12% 수준
 -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무상 공교육기관인 모성학교는 2세반 아동의 35%, 3세 이상아의 거의 100%가 등록하며, 부모는 부가 서비스 비용만 부담
 - 가정내보육 제공자를 고용하는 가정에도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
 -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교육시설(퓌르스콜라) 확대와 유지 등에 투자하여, 공보육·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기관 이용률은 전체의 13% 수준
 - 2005년 현재 만 2세 미만 영아의 45%, 2세 아동의 85%, 3세 이상 아동의 90%가 보육서비스를 이용(OECD, 2005)
 - 보육시설 이용료가 부모 소득의 1~3% 수준으로 상한선을 제한
 - 독일의 경우 보육서비스 자체는 유상이나 부모의 수입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 혜택 부여
 - 부모는 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16~20% 정도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

4) 정책 방안

- 보육예산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분담율이 낮아 부모부담이 여전히 높으므로, 보육비용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은 부모의 부담 완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보육예산의 확충 필요

□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 저소득층에 한정된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2009년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가구까지 단계적 확대
 - － 차등보육료 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개별부모의 보육료부담에 실질적인 완화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표 9-26〉 차등보육·교육비 지원계획

(단위: %)

구분	기준	아동비율	지 원 비 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계층	11.5	100	100	100	100	100
3층	~평균소득 50%	10.0	70	80	80	80	80
4층	~평균소득 70%	25.0	40	50	60	60	60
5층	~평균소득 100%	20.0	-	20	30	30	30
6층	~평균소득 130%	10.0	-	-	-	30	30

주: 보육·교육비 대비 정부지원액 비율=(정부지원액/보육·교육비)×100

자료: 여성가족부,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006.

-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7년 전체 만 5세 아동의 50%에서 2009년까지 전체의 80%(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로 확대
- 두 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 현재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단가의 30%(2006년)에서 2007년 이후 50%로 인상
 - － 두자녀 가구의 경우 “두자녀 모두 보육시설 이용” 조항을 폐지하여 두 번째 자녀의 혜택을 높임
 - － 지원비율: 평균소득 100%이하, 지원단가의 30% 지원('06년) → 평균소득 130%이하, 지원단가의 50% 지원('10년)

〈표 9-27〉 만 5세아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계획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00%이하	100%이하	130%이하	130%이하
	대상아수(천명)	358	333	380	378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100%이하	130%이하	130%이하
	보육·교육비 대비 지원액 비율(%)	50	50	50	50
	대상아수(천명)	90	93	96	99

자료: 여성가족부,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006.

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삼식 외, 2006)
 -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7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였고,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은 월평균 40만으로 최소 7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함(김승권 외, 2006).
-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모 자녀 양육기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 이외에 분유, 아기용품, 보모 고용 등에 폭넓게 사용가능한 구매력 지원 요구가 제기됨.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양육환경 개선, 아동복지 증진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제고 도모
 - 기존의 지원정책과 달리 아동 있는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 및 정책체감도 향상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현재 중앙정부의 보편적 자녀 양육수당은 없고, 지방정부에서 출산 대책의 하나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이 증가
 - 영양군 등 38개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은 셋째아 이상이고 지원기간은 5년이 가장 많음.
 - － 서울시의 경우 '08년부터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 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OECD 20개국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는 남성 일자리 우선권, 파트타임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 등으로 측정한 양성평등 환경조성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자녀 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이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이들 요인을 개선할 경우 출산 수준이 1.5까지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최숙희 등, 2006)
 - 아동 연령, 출생순위, 소득수준, 모의 취업 등 다양한 요인을 단수 또는 복수로 고려하여 적용(서문희, 2006).

나) 외국 사례

-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는 아동수당임.
 - OECD 30개국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유럽의 15개국이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2개 국가는 고용과 연계하며 13개국은 미도입 상태임(보건복지부, 2006).
 - －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임.
 - 세계적으로는 조사된 175개 국가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25개국이고, 피고용자에

만 지급하는 국가는 27개국, 이중 2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보건복지부, 2006).

- 아동수당 도입 국가는 대부분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

4) 추진 방법

-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양육)수당 도입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보육·유아교육비 지원과 중복은 조정
-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사용처를 아동 관련 물품으로 제한

제3절 직장-가정 조화

1. 휴가휴직제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부분적 시행
 - 근로기준법상 출산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 휴가가 보장되며, 그 기간 중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고용주가 지급
 - 이러한 산전후휴가제도는 2001년에 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연장된 30일 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 그러나 산전후휴가기간 60일 분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함에 따라 여성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2006년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휴가기간 90일 전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부분적인 사회보험화를 이룸(월 135만원 한도내에서 산전후휴가자의 통상임금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제조업 5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
 - ILO협약에서도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함.
 - 그러나 산전후휴가급여의 완전 사회화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국한된 상황이어

서 기업의 휴가급여 부담에 따른 여성고용 회피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전면적인 사회보험화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9-28〉 산전후휴가급여 활용 실적

(단위: 억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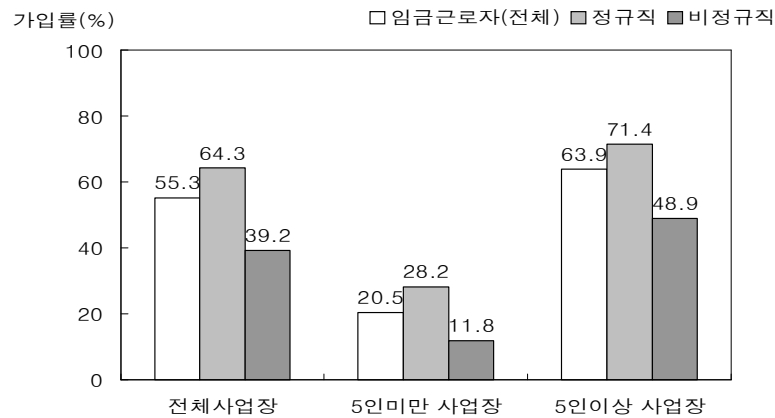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지급액	336	416	460	909	1,324
수혜자 수	32,113	38,541	41,104	48,972	58,368

자료: 노동부

□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등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 여전

- 4대 사회보험의 법 적용상 사각지대는 해소되었으나(전국민 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대상 확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사회안전망 기능 취약

[그림 9-6] 근로형태 및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3.7%(610만명 중 266만명)으로 남성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32.2%)보다 높은 수준

- 전체 임금근로자 중(적용제외대상 포함)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율은 29.7%(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로 남성(43%)에 비해 낮은 수준(정규직은 여성 52.1%, 남성 67.1%)
- 이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0%이상이 고용보험에 의한 모성보호(산전후휴가 등),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들 비정규직 여성은 산전후휴가제도 등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복지후생이 넉넉한 기업의 근로자들만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격차는 더욱 커짐.

□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도입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로 2008년 6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시행 예정임.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임.
-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법제화했으므로 이제 출산휴가일수를 외국사례 수준(1주~2주)으로 늘이고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유산·사산휴가제도 도입 단계

- 2006년부터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30일~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제도와 동 급여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음.
- 그러나 자연유산의 80%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므로 향후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음.

□ 경직된 육아휴직제도 및 낮은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요건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생후 ‘만 1세 미만’영아 부모에서 ‘만 3세 미만’영아 부모로 조정함.
 - 2005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됨.
-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업여성의 임금 대체효과를 다소 높임.
-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이용자는 2007년 산전후휴가 사용자의 36%에 불과하여 여전히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임. 육아휴직수당이 월 통상임금의 26.7%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비현실적이고(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6년 187만원) 직장복귀 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업무단절로 인한 기업의 부담 등에서 연유된 것임.

〈표 9-29〉 육아휴직 활용 실적

연도	지급액 (백만원)	인원(명)			1인당 월 지원액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자 비중(%)
		전체	여성	남성		
'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21
'04	20,803	9,304	9,123	181	40만원	24
'05	28,242	10,700	10,500	200	40만원	26
'06	34,521	13,670	13,440	230	40만원	28
'07	60,989	21,185	20,875	310	50만원 ('07.4.27부터)	36

자료 : 노동부

-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을 통상임금수준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풀의 형성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대한 법제도화 정비, 2008년 6월 시행 계획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탄력근무제도 등 출산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율이 낮은 실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기업 비율 2.7%, 시차출퇴근제 시행기업은 2.7%(노동부,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 100인 이상 기업 실태조사시, 시차출퇴근제 시행기업은 2.3%에 불과하며, 그 중 금융업 7.7%(근로기준협회, 2004)
 -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와 우수사례의 발굴·전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주40시간제 도입 및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간담회 실시(2007)

- 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배포(1만 5천부)
- 주40시간제 무료교육 실시(2007. 4. 3 ~ 6.8, 총 64회 4,574명, 한국노동교육원)
- 지방관서별 교육 279회(17,088명)·간담회 147회(971개소) 실시

□ 출산시 일-가정 양립곤란으로 높은 경력단절

-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취업기혼여성(20~44세) 중 49.9%가 취업 중단(경력단절)
- 기혼여성(20~44세) 중 64.8%가 시간제 근무 희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 출산 순위별로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에 차이 있음. 취업상태에서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 출산 이후 급격히 비취업상태로 전환됨.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비취업 상태로 전환할 확률이 높음(박수미, 2002).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출산순위별 차등 지급도 여성의 취업지속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함.

나. 외국 사례

- 모성휴가는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부성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임
- 모성휴가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제도화되어있고 급여도 책정되어 있음
 - 표에 제시한 OECD 13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제도화 되어있음
 - 급여도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급.
- 부성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제도화도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음.
 - 비교분석 OECD 13개국 중 부성휴가가 제도화된 국가는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 모두 8개국.
 -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6개 국가에서 유급 부성휴가를 제도화
 - 휴가기간이 가장 긴 핀란드의 경우 3주의 유급 부성휴가를 제도화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단 2일의 부성휴가가 보장 되고 있음.

- 부성휴가의 소득대체율은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임금의 100%를 보장.
- 유급부성휴가를 제도화된 국가 중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평균임금의 55%를 보장.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추가적인 휴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고용주들이 100%의 임금대체를 해주고 있음
- 호주도 법률로 제도화된 부성휴가는 1주의 무급휴가지만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수준의 임금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9-30〉 OECD 13개국의 모성 및 부성휴가제도 현황

국 가	모성휴가기간(주)	모성휴가 소득대체율(%)	부성휴가 기간 (주, 일)	부성휴가 소득대체율(%)
스웨덴	60 ¹⁾	80	2주	80
덴마크	18	55%법정(100%단체협)	2주(10일)	55
핀란드	17.5		3주	65
영국	26+26	60(0)	2주	90
아일랜드	18+8	70(0)	-	-
캐나다	15	55	-	-
호주	52주 ¹⁾ (부모휴가포함)	무급	1주	무급
뉴질랜드	20	무급	2주	무급
오스트리아	16	100	-	-
스위스	-	-	-	-
네덜란드	16	평균의 115%	2일	100
포르투갈	8.5	100	20일(5+15)	75
일본	14	60	-	-

주: 1) 부모휴가 포함, 스웨덴의 경우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없는 모성휴가는 7주
 자료: OECD (2002~2005) 「Babies and Boses」 에서 재구성

□ 휴가 및 휴직제도의 의의²⁸⁾

- 현대에 와서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나 잔여적(자본주의적) 복지국가를 막론하

28) 이 부분은 OECD(2002, 2003, 2004, 2005)의 「Babies and Boses」 vol. 1~4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고, 아동수당과 같이 모성역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신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 방향

－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국가마다 강조점의 차이 존재

- 장기간의 휴직과 시간제근로로 부모의 직접 양육(parental care)을 지원하는 방식과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양육을 사회화(non-parental care)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현대적 의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보육서비스의 확대 정책에 비해서는 여성의 양육역할을 온존시키는 방식이므로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강조는 약화

－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휴가제도는 그 설계에 따라서 여성의 양육역할 지원 의미가 강조될 수도 있고, 노동시장 통합 지원의 의미가 강조될 수도 있음.

□ 13개 비교대상국가의 여성노동시장 현황

〈표 9-31〉 13개 비교대상국가의 여성노동시장 현황

(단위: %)

국 가	여성경황(2002)	여성취업자 중 파트타임(2002)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율	16세이하 자녀를 둔 가족, 부모 모두 취업 비율
스웨덴	76.9	20.6	71.9	84.1
덴마크	75.9	23.5	71.4	75.2
핀란드	72.1	15.0	52.1	64.1
영국	69.2	40.1	49.2	67.2
아일랜드	56.0	33.0	45	36.1
캐나다	73.0	27.9	58.7	64.6
호주	65.5	40.7	45.0	56.3
뉴질랜드	69.1	36.1	42.0	44.4
오스트리아	62.3	24.8	32	67.0
스위스	73.9	45.3	59	51.6
네덜란드	65.7	57.2	-	42.0
포르투갈	65.0	14.4	71	63
일본	60.1	30.2	24	49.0

자료: OECD, 2002, 2003, 2004, 2005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로는 대체로 북유럽국가와 캐나다와 스위스 등.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들 간에 차이가 줄어들어는 양상
 - 그러나 고용의 질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한 노동공급은 여전히 차이 존재
 - 캐나다를 제외한 영어권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여성 취업자 중 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상회.
- 3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율이나 자녀를 둔 가족의 부모 취업비율을 지표로 삼아 가족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력단절의 정도를 가늠해보면,
 - 스웨덴과 덴마크가 여성고용의 연속성 측면에서 월등
 -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하위그룹 위치
- 13개 비교대상국가의 양육지원제도의 특징
 - 보육서비스, 휴가급여, 아동수당의 세 가지 종류의 정책에 대한 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개별 국가의 양육지원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 육아휴직 이용률과 공보육 이용률의 조합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설명력을 가짐
 - 보육서비스에 많은 지출을 하는 국가는 북유럽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핀란드 보다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지출비율이 높음.
 - 모성휴가와 부모휴가급여가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순서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순
- 13개 비교대상국가의 부모휴가제도 개요²⁹⁾
 - 분석대상인 OECD 13개국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도화된 부모휴가 도입³⁰⁾
 - 1974년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되었고 1996년 유럽연합에서 부모휴가명령(the Parental Leave Directive of 1996)이 채택된 이후 아일랜드,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도입(Leria, 2002; 윤홍식 2005 재인용)

29) 부모휴가라는 명칭으로 흔히 비교 분석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에 해당

30) 스위스의 경우도 법제화된 부모휴가는 없지만 노사간의 개별 단체협약에 의해 부모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OECD, 2004).

- 부모휴가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104주(24개월)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스웨덴이 69주의 부모휴가를 제공
 - 한국도 대략 43주의 부모휴가(육아휴직)를 법제화하고 있어 OECD 14개국 중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긴 부모휴가 기간을 제공
- 비교대상 국가 중 호주,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은 부모휴가가 무급이며, 나머지 9개국만이 유급부모휴가를 제공
 - 이들 국가 중에서도 부모휴가 급여가 평균임금의 50%이상을 보존해주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5개국
 - 한국은 유급휴가를 제도화한 국가 중 오스트리아와 다음으로 소득대체율(22.9%)이 낮음.

〈표 9-32〉 GDP 대비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

(단위: %)

국 가	보육서비스	모성휴가/부모휴가급여	가족(아동)수당
스웨덴	2.0	0.90	0.93
덴마크	2.1	0.5	
핀란드	1.1	0.62	1.02
영국	0.4	0.11	0.90
아일랜드	0.32	0.06	
캐나다	0.2(퀘벡 0.8)	0.24	0.69
호주	0.3	-	
뉴질랜드	0.35	0.05	0.89
오스트리아	0.43	0.37	
스위스	0.19	0.09	1.03
네덜란드	0.2	0.21	
포르투갈	0.36	0.13	0.53
일본	0.32	0.1	

주: 자료는 국가별로 2002년에서 2003년까지로 차이가 있음

자료: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OECD(2001d) and national authorities for spendings for childcare and pay during leave.

〈표 9-33〉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상태 및 휴가사용 현황

(단위: %)

국 가	고용율	고용상태		
		전일제	파트타임	출산/육아 휴직 중
스웨덴	71.9	45.1(37.0)		26.8
덴마크	71.4	49.0	2.4	20.0
핀란드	52.1	33.8		18.3(21.8)
영국	49.2	30.5(61.6)		18.7
아일랜드	51.1	25.6	18.8	6.6
캐나다	58.7	39.1(30.4)		22.0
호주	45.0	15.0	30.0	-
뉴질랜드	42.0	18.0	24.0	-
오스트리아	71.9	14.7	17.2	40.0
스위스	59.0	17.0	42.0	-
네덜란드	60.4	-	-	-
포르투갈	71.0	63.9	7.1	-
일본	28.5	9.9	15.4	3.2

주 1) 아일랜드 2002년, 오스트리아와 일본은 2001년, 호주는 2000년,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1999년 자료.

2)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는 휴직 중인 경우의 비율을 따로 계산하지 못하고 In Work을 표시.

3) ()안은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 비용자 중 파트타임의 비율이며, 핀란드 ()안은 Home care leave의 비율.

4) 네덜란드는 6세미만 자녀 둔 여성.

자료: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 부모휴가의 아버지할당

- 선진국에서도 부모휴가를 여성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남성의 양육참여가 저조
 -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부모휴가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부모 중 한 부모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하는 추세
 - － 아버지할당제는 1993년 노르웨이에서 제일 먼저 제도화되었으며, 1995년 스웨덴, 1999년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서 제도화
 - － 스웨덴 방식은 기존의 휴가기간 내에서 아버지할당기간을 나누는 방법이고, 노르웨이 방식은 기존의 부모휴가기간에 추가적으로 아버지할당기간을 더해 총 부모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 스웨덴은 1994년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할당제를 도입하지 못하였으나, 2004

년 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비율도 확대

- 노르웨이는 부모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아버지할당기간을 배치(1986년 단지 25%의 아버지만이 부모휴가를 이용하는데 반해 아버지할당제를 시행한 이후 무려 70~80%의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

〈표 9-34〉 부모휴가제도 현황

국 가	부모휴가 기간(주)	부모휴가 소득대체율	아버지할당제	권리의 단위
스웨덴	69	80%(0.09%)	있음	가족
덴마크	10	55	있음	개인
핀란드	26	65	있음(보너스방식)	
영국	26	무급	-	개인
아일랜드	14	무급	-	개인
캐나다	35	52	-	가족
호주	(52)	(무급)	-	가족
뉴질랜드	12+26	100(0)		
오스트리아	104	13.3	있음(보너스방식)	
스위스	-	-	-	-
네덜란드	26(part-time)	50	-	개인
포르투갈	8.5+13	무급	-	-
일본	44	30	-	가족

□ 부문육아휴직제

- 일본에서는 1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가 계속 취업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강구(육아개호휴직법)
 - 단시간근무제도 설치
 - 희망하는 노동자에 대해 탄력적 근무제도의 이용과 시차출근제도설치
 - 소정 노동시간을 넘겨서 노동시키지 않는 제도 설치
 -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편리 제공
- 전일 육아휴업이 원칙이나 공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육아휴업도

가능

- 부분휴업은 정규 근무시간이 시작해서 마치는 1일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타아형태, 통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가능
-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을 상한으로 심야근 무가 면제되는 권리 부여

다. 향후 정책 방향

□ 산전후휴가제도의 완전 사회화 실현

-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모성보호 기반 조성
 - ILO협약에서도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
-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산전후휴가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하는 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소함.
- 모든 기업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중소기업, 대기업 순)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물가 상승과 육아휴직 전 생활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
 - 현행 50만원 지원의 정액제를 정액제+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예로 월 급여액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06년 여성근로자 월평균 급여 : 1,487천원(노동부 임금구조 통계))
 - 일본 사례: 휴직전 임금의 총 40%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스웨덴 사례: 휴직전 임금과 연동하여 유급 390일(정률제) + 90일(정액제 보험급부)

- 육아휴직급여의 정액지급 부분에서 현재 월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인상 지급 방안 검토
 - － 둘째 출산 이후 급격히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기혼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유형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첫째아는 현행 유지 둘째아는 6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정액 차등 지급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표 9-35〉 주요국의 산전후휴가 사례

국 가	도입시기	휴가기간	휴가급여(임금대비)	재원부담주체
영 국	'48	26주	92~104%	사회보험
프 랑 스	'28	16~24주	100%	건강보험
독 일	'79	14주	100%	건강보험
일 본	'80	14주	60%	건강보험
스 웨 덴	'74	60주	80%	부모보험
캐 나 다	'71	17~18주	55%	실업보험
네덜란드	'76	16주	100%	실업보험

자료: 노동부

□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기간 연장 및 유급화 추진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현행 3일에서 외국사례 수준인 1주~2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이는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른 제도이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도움
- 출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유급으로 도입되어야하며, 그 비용은 사회보험화하는 것이 타당함.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육아휴직장려금 단가 인상

- 육아휴직급여액의 단계적 인상
 - － 일본: 휴직전 임금의 총 40%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스웨덴: 휴직전 임금과 연동: 유급 390일(정률제) + 90일(정액제 보험급부)

○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구분	현행	개선 방안
대체인력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육아휴직기간까지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1인당 월 10~15만원	1인당 월 20~30만원

□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모성보호체계 강화

○ 육아휴직 관련제도 지도감독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여성근로자 후견 감독관제」를 강화하여 상담·관리 실시
- 모성보호 신고사건 처리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제도이용방법, 권리침해시 조치 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시스템」 확대 운영

○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08년 상반기),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08년 하반기)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실태 조사, 미가입 원인분석 등을 통한 대책 강구(비정규직 가입촉진을 위한 4대보험 관리체계 보완 및 지원방안 모색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육아기간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민간영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 지속 추진

- 육아휴직 미이용자의 45.2%가 시간제 육아휴직 희망(노동연구원, ‘03년 육아휴직 실태조사)
- 프랑스, 스웨덴은 육아기간동안 1/2 또는 3/4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부분휴직 방식을 도입 운용

- 일본의 경우, 전일 육아휴업이 원칙이나 공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육아휴업도 가능(부분휴업은 정규 근무시간이 시작해서 마치는 1일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타아형태, 통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가능)
-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지원제도 마련
- 근로형태 유연화
 - 시차별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활성화
 - 공공부문부터 우선 확대한 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으로서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 지속
 - 공공부문의 운영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사업장에 전파 및 적극 홍보(필요시 사업장에 컨설팅 제공) 지속
 - 양질의 자발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지속
 - 재택근로 관련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적 규율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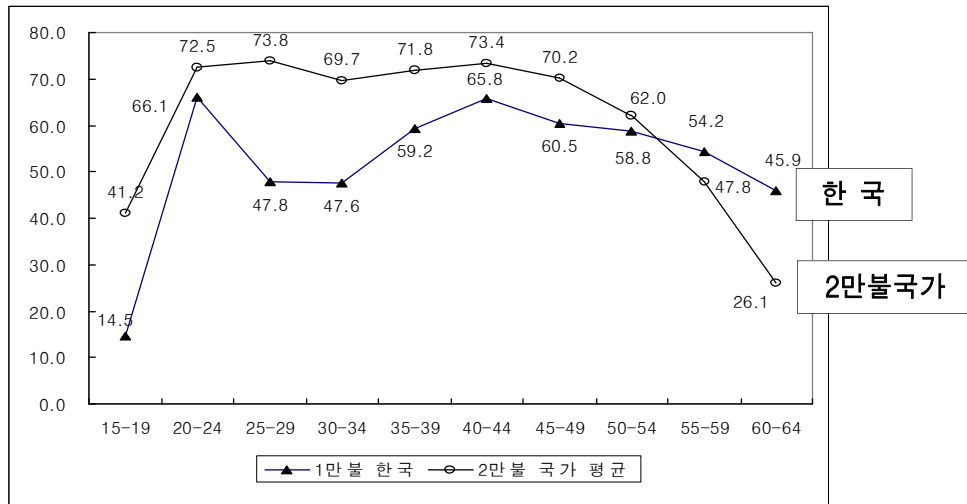
2.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사회 여성의 노동공급유형은 출산·육아기 경력단절로 인한 M자형 취업곡선
 - 출산·육아부담의 상존, 특히 2세미만 영아보육부담 영향 등으로 인하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M-curve)현상과 대졸여성의 노동시장 퇴장 이후 재진입포기(L-curve)현상 지속

[그림 9-7] 우리나라와 2만불 국가 연령별 여성경황을 비교

(단위: 연령, 백분율)



자료 : OECD, 2003.

- 결혼 및 출산으로 직장에서 퇴출한 여성들은 2명의 자녀 양육 후 직장에서의 복귀에는 6~7년 소요되나, 지식과 기술 등 낙후, 시장에서의 차별,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시에도 지위 현저한 하락 등으로 직장에서의 복귀 곤란(사회복귀 곤란)
-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및 경력단절을 막기 위하여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 증가
- 일반적인 경력단절 현상에 더하여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이 타집단 여성에 비해 낮아서 전체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을 하향화
- 한국사회에서 출산이 거듭될수록 노동시장 이탈 비율은 점차 증가. 일단 노동시장에서 이탈시 직장 복귀 매우 제한적이며, 출산이 반복되면서 재 이탈 경향. 경력단절 후 직장 복귀의 경우에도 직종이나 종사상지위가 하향 이동 경향
-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20~44세)의 첫 번째 직종이 전문직인 경우 경력단절 후 28.8% 직종의 하향 이동(5.1%는 사무직, 13.6%는 서비스·판매직, 10.2% 생산·노무직)

- 첫 번째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경력단절 후 57.1% 직종 하향이동(서비스·판매직 42.9%, 생산·노무직 14.3% 등)
- 첫 번째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경력단절 후 62.0%가 임시·일용직(28.4%),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33.7%)로 이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가 높으나 현행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 내포
 - EU의 취업형태를 보면, 남성은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5% 미만인데 비해, 여성은 육아 등의 이유로 1/3을 차지함
 - 향후 출산시 희망 근무형태: ‘평소대로 일하겠다’ 42.5%, ‘시간을 줄여 일 하겠다(시간제 근무)’ 31.7%, ‘일을 그만 두겠다(취업중단)’ 25.9%(이삼식 외, 2005)
 - ‘2자녀+시간제취업’ 54.3%, ‘1자녀+시간제취업’ 10.0% 등으로 시간제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64.3%

〈표 9-36〉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일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명)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전체	2.0	5.9	11.2	0.5	10.0	54.3	0.1	0.9	15.0	100.0(3,801)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2.9	5.0	9.6	0.1	10.8	56.4	0.3	1.0	13.8	100.0(872)
60~80%미만	1.1	4.0	10.5	0.7	10.7	54.8	0.1	0.6	17.4	100.0(806)
80~100%미만	1.5	6.0	10.8	0.8	11.0	52.9	0.0	0.4	16.6	100.0(518)
100~150%미만	1.9	7.0	11.3	0.6	9.0	54.1	0.0	1.3	14.8	100.0(1,043)
150% 이상	2.5	8.2	14.6	0.5	8.6	52.2	0.2	0.7	12.5	100.0(5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05.

□ ‘출산여성 재취업장려금’과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개월이후 5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에서 재고용한 경우, ‘출산여성 재취업장려금(1인당 월30~4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용 저조

- ‘출산여성 재취업장려금’ 정책 집행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활용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출산시 사업주가 신규고용 및 재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 불안정 심각
- 이에 2007년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함. 이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이직한지 5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2개월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제 법제도적 도입단계임.
- 1인당 지원금액: 처음 5개월은 월 60만원, 그후 6개월은 월30만원.

〈표 9-37〉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급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인원(명)	지원금액(백만원)	1인당 지원기준
2002	333	232	월 30만원 6개월
2003	224	159	"
2004	154	106	월 30~40만원 6개월
2005	261	123	"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신설

- 2007년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16주 이상)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함.
-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후 또는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직 여성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원.
- 유기계약: 6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6월간 월 60만원 지원.
- 2007년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여성근로자는 40명에 불과하여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함.
-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기간 등 법정 모성보호휴가기

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 및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12월 현재 주부단기적응훈련에 5,223명이 참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이에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알선 등 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취업을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임.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를 운영하여 여성인재의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업 운영중이나 2008년 전체 예산이 8,000만원에 불과하며, 경력단절 여성 인재뱅크 프로그램 방문자수 폭주로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나. 외국 사례

□ 여성노동의 큰 특징은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단절 현상(박수미, 2002; Chang, 1996; Moen, 1985)

- 2004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은 극적인 차이를 보임(통계청, 2005)
 - 남성의 노동력 공급곡선이 전 생애에 걸쳐서 취업연속성을 유지하며 ‘고원형(∩자형)’을 띄는 반면, 여성의 노동력 공급곡선은 출산과 자녀양육이 집중되는 30~35세에 저점을 이루는 전형적인 M자형을 보여 줌.
-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함. 젊은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이 곧 자신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결혼을 늦추려고 함. 특히 커리어 지향적인 여성일수록 결혼 시점은 더욱 연기될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강해질 것임.

-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 극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의 중요한 한 요인이기도 함(박수미, 2005).
-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으로나 여성 개인에게나 커다란 손실이 야기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일임.
-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분석 결과, 한 자녀를 둔 여성들 가운데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여성의 ‘취업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드러남.
 - 취업여성들 중 경력단절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의 둘째 출산 의향은 상대적으로 저조
 - 경력단절 및 그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걱정하는 취업여성들에게 출산·육아기 노동시장 복귀가 정책적으로 보장된다면 출산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 조지아대학은 “성인대학”(Adult College)을 운영
 - 고교 졸업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내 대학에 다닌 경험이 없는 성인을 위해 학점제 야간 과정을 제공
 - WANTO 프로그램(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 Act '92)을 통해 비전통적인 직종에 여성의 직업탐색, 직업훈련, 경력개발을 지원
- 스웨덴: 직장 및 생활경험을 대입요건으로 인정하여 주부들의 입학기회를 확대

다. 향후 정책 방향

- 한국사회의 M자형, L자형 취업곡선을 역U자형 취업곡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의 비용을 여성개인에게 지불하게 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기혼취업여성의 취업연속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의 재취업 제고를 위해 도입된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노력이 요구됨.
 -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

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 복귀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장려금의 형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함.
 -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전후휴가 기간 등 법정 모성보호휴가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여성이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노동시장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한 지원
 - － 사회복귀(재취업)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기회 및 비용 제공 등
 - 장기간 비경활인으로 있던 주부들의 재취업의지 강화 및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 실시
 - － 1단계: 직업 소양교육
 - － 2단계: 기초직무능력 배양
 - － 3단계: 전문·심화 직업능력개발
 - － 4단계: 고용지원서비스
 -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알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확대 운영
 -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DB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안임.
 -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사이트와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훈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의 전국망 구축 필요함.

3.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출산 및 자녀양육(가사)의 양립이 어려운 직업구조 및 사회분위기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양립을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로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부족에 기인
 - 퇴근이후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회식 문화 등 가족·생활 친화적이지 못한 직장 문화가 만연
 -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기업 문화 존재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출산 및 양육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직장문화 확산은 미흡
 - 취업여성이 직장과 결혼·가정생활 중 하나를 포기하는 사례 빈발
 - － 초혼연령 상승('90년 24.9세→'04년 27.5세), 여성(25~29세)의 독신을 증가('70년 10%→'04년 40%)
 - － 기혼여성(20~44세)이 결혼전후 6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61.3%에 달하며, 일과 가사의 양립 곤란, 임신·출산 등이 그 주요 이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 시간외근무 등 장시간 근로관행, 회식문화 등이 여전하여 취업부모가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법규위반의 경우가 많음.
 -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미흡
 - 특히 주당 46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장가정 일의 상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

- 가족친화제도의 핵심적 항목인 탄력적 근무제도의 운용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홍보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체계 미확립으로 효과 반감
-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2007년 기업, 대학, 정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FFI) 측정하여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착수와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와 같은 평가 노력이 좀 더 광범위한 기관에 적용됨으로써 한국적 가족친화 기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홍보, 확산해야 할 것임.
- 2007년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마크 개발,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시작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확대가 필요함.
-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직장내 가족친화교육 실시, 가족친화 교육 전문 강사 양성 등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나. 외국 사례

- 2003년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식부문 노동자 440명(남자 352명, 여자 88명) 가운데 출산휴가제도나 주5일 근무제도와 같은 가족친화기업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20%에 불과
- 일과 가정의 양립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실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
 - 1990년대 이래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은 축소되어 왔으나 여전히 주당 46시간 내외로서 상당히 길며, 특히 초과근로시간이 긴 특징을 보임.
 - 연간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 600~900시간 정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서 약 500~600시간 정도 길며,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서도 긴 게 현실

□ 미국

-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효과, 구체적으로 탄력근무제와 집중근로시간제의 효과
에 대해 연구한 1974년부터 1987년까지의 27개 연구물이 있음.
- － 이에 따르면, 대체로 생산성 제고와 결근율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실제로 제록스(Xerox)사는 근무시간 조정 이후 결근율이 30% 하락함(L.
Gregg, 1998, 한국여성개발원, 2005에서 재인용).

□ 독일

- 독일의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SD&M사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파트타임 제도 등
의 탄력적 근무제도, 보육시설 운영, 부모휴가제도, 가족 참여행사 등의 정책
시행 결과, “아이가 아플 때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근무해도 눈치보지 않
아도 될 정도”의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 그 결과 직원들의 근무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90%,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도는 97%로 나타났고,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기업 우선순위에 올랐음(한국여성
개발원, 2005).

□ 외국의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실시 및 포상 사례

- 'Employer of the Year Award'(영국)
- 'National Work and Family Award'(호주)
- '차세대 인정 마크제'(일본) 등 다수

다. 향후 정책 방향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범정부적 가족친화
기업 인증위원회 구성 및 가족친화인증 실시 확대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실시 및 언론 연계 기업이미지 홍보 등 지원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여부, 근로시간 등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 부여
- 저출산 관련 국정 홍보시 기업시책 소개 등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지원
-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방안 강구: 장려금 지급,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기준에 가족친화 경영 항목 포함(중기청),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조달청),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복지사업 우선순위 부여, 공기업 및 정부산하 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케하는 직장환경 조성이 기초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 － 가족친화적 국내 기업사례 발굴 지속
 - － 국내외 가족친화제도의 생산성 연구물 축적과 이에 대한 홍보
 - － 노동자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 유도: 노동자들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관심과 기업의 지원 유도
 - － 기업내 가족친화제도 지원센터 운영
 -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장려금 지급 및 세제 지원, 표창 제도 도입 등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 완화, 직무만족도 제고, 아버지의 보살핌노동권 회복,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일·가정의 건강한 환류 과정 진작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장시간 근로조건과 야근, 회식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기업문화는 보다 가족·여가 친화적으로 변화 모색
 - 일과 가정의 양립이 남녀 근로자 모두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 대한 경제계 분위기 조성
- 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 정도와 노동생산성·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축적함으로써 한국형 가족친화 기업 경영모델 개발 및 홍보

-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및 근무조건 → 근로자의 가족시간 증대 → 근로자의 만족도 증대 → 기업의 생산성 증대 → 기업 이익 증대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정착

□ 가족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캠페인 지원

- 가정의 날, 육아데이 지정, 직장내 수유시설 확대 등
- 가족 친화 기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 기업·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행사 유도
- ‘아버지 일찍 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역점
 - － 언론·시민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회운동화 유도
 - － 접대문화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교육 확대
- “1직장 1가족문화운동” 전개
 - －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친화문화 교육 강사 풀 운영 및 지원

□ 맞벌이부부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직종이 전문직, 사무직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간 활용에 있어서 융통성 제약
 -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인식개선이 미비하여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예로, 태아검진휴가제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검진서비스 등을 받은 것이 곤란하며, 휴일에는 대부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이 휴진하여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이로 인하여 근로여성 및 그 자녀의 건강 등에 문제 발생 우려
- 추진 방안
 - －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지역사회 내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휴일에

검진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둘 필요

서비스 내용(예시)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모성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산부 산전후 관리, 영양제 공급,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 유축기 대여 등

- 사례로 경기 성남시(직장여성 임산부의 날)와 김포시(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토요검진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 맞벌이부부들의 일-가정 양립 제고와 함께 모성 및 영유아 보호 강화

제4절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될 아동·청소년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 성장발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분야가 신정부 국가발전 전략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 국정지표에 나타난 ‘따뜻한 사회-인재대국-능동적 복지’와 아동·청소년

-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환경의 조성
- 인적자본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투자적 아동복지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기회의 평등 실현
-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달환경 제공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관련 신정부 국정과제

- 핵심과제_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 핵심과제_통합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아동안전 제고
- 중점과제_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중 아동·청소년 특화사업
- 일반과제_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 신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 검토 가능 사업 분야
 - －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아동기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건강발달을 아우르는 전인발달 및 조기발달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지원체계의 마련
 - －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일반과제 중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도 포함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기적 관계에 기반하는 발달환경 조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 모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성과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서 능동적 참여를 도모
 -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및 올바른 성의식의 형성
 - －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
 - － 약물, 음주, 흡연에 대한 적극적 거부
- 물리적 환경의 안전은 물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풍부한 정서함양이 가능하도록 비물질적 환경의 안전도를 제고
 - － 학대, 방임, 폭력 및 성적 자극으로부터의 안전
 - － 사고로 인한 질병·사망으로부터의 안전
 - － 왕따, 차별, 배제 등으로부터의 안전
 - － 범죄,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의 안전
-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특성별 교육을 통해 즐거운 학습환경을 조성
 - － 바람직한 조기교육의 기회를 통한 전인발달의 기회
 - －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지원
 - － 인성과 사회성의 발달을 통한 전인발달 도모
 - －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올바르게 긍정적 가치관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 전술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행복한 성장의 기억을 제공하고 모든 아동

· 청소년의 생애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수행 주체들의 혁신과 통합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종 전달체계의 통합(integrated frontline delivery)
-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의 통합(integrated assessment and process)
-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된 전략의 수립(integrated strategies)
- 공급주체, 정책추진 체계의 통합(inter-agency governance)

— 지역사회 기반한 다양한 자원들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활성화 시급

○ 정책추진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 성과에 대한 합리적·지속적 관리체계의 구축

— 추진되는 단위사업별로 세부 점검과제(inspection tasks)와 중점 점검사항(target indicators) 및 최종성과(outcomes)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운영

—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증거에 근거한(evidence-based) 정책추진이 가능

〈표 9-3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문 세부 사업별 점검결과 요약

세 부 과 제	유지·강화	수정·보완	신규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의 조성			
3-1. 발달환경의 개선			
3-1-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1) 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추진	○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강화 및 분위기 조성	○		
3)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		
3-1-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1)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		
2)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		
3) 아동학대예방 홍보	○		
4)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		
3-1-3.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1)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3)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		
3-1-4. 건강한 정신, 행복한 성장 정서지원 서비스 확충			●
3-2.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3-2-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1)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2)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		
3)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3-2-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1)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		
2) 민간 모니터링 기구 설치	○		
3-2-3.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1)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		
2)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3-2-4.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 유해환경 차단 강화	○		
2)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3-2-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1)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		
2)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내실화	○		
3)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		
4)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		
3-2-6. 드림스타트 활성화			●
3-2-7. 아동발달계좌의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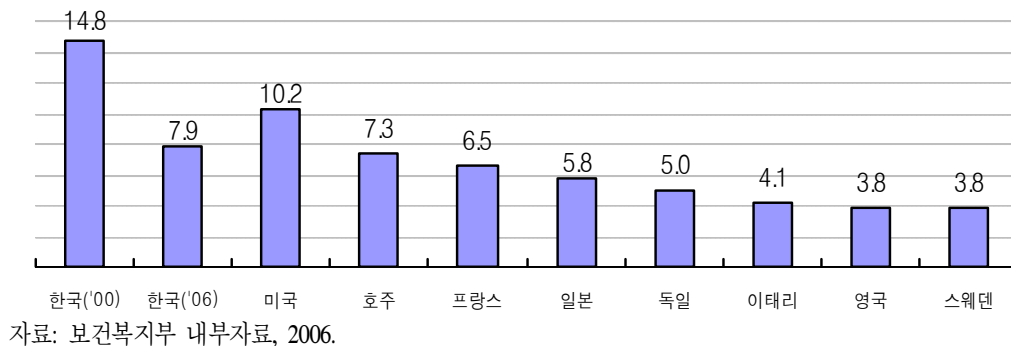
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1)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예방중심의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
 - 아동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적이며, 아동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
 -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활성화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림 9-8]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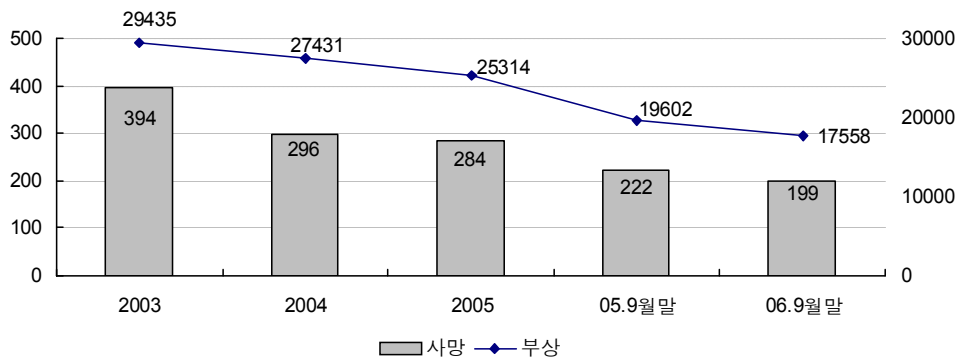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안전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아동안전사고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
 - 아동안전 통합매뉴얼의 개발, 아동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전문화의 확산 등 아

동의 성장환경에 대한 안전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체계 강화

- 학교주변의 아동 보행권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 등으로 아동 교통사고 발생률이 '05년도 대비 10.4% 감소
- 6세 미만 아동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의무화를 위해 보호장구 및 안전 띠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림 9-9]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아동 발생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재인용, 2006.

-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립·추진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음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세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수첩과 안전용품(Safety Box)을 제공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식약청,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권리 박람회’(‘07. 5. 1~5. 7)를 개최
 - 아울러 16개 시도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배고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07. 5.~11.)
 - 어린이 교통공원에 안전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일반 생활안전에 관한 체험위주의 교육 실시

- 한편, 아동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 관련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취약분야의 개선 및 아동안전종합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기반을 형성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사업의 추진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 아동과 아동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안전문화와 안전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임
- '07년도 시행실적을 검토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정책효과를 가시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추진방법

- 아동사고 유형별 안전대책의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어린이용 공산품의 유해물질 선정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지속적 확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육아지원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매뉴얼 및 시설 표준모형 개발하여 보급
 - 청소년 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관리·보수단의 운영 및 안전등급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
 - 안전 및 활동환경이 취약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
- 아동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전체 사회가 안전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강화 및 아동보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 안전체험 행사개최 등 안전문화 확산

- 아동안전사고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을 바탕으로 기초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 추진
 - 안전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 사망통계,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시스템 개선
 - －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조사 범위 확대 및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보고기관 확대
 - － 선진외국의 통계관리 사례 연구 및 어린이 안전통계 지표 발간
 - 각 부처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의 분야별 특화 및 국가통계로 작성·관리하여 통계적 효용성 제고
 - － 교통사고(경찰청), 화재 및 익사(소방방재청), 식중독(식약청), 생활안전(소보원) 등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 학대 및 방임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목표로 교육·홍보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아동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아울러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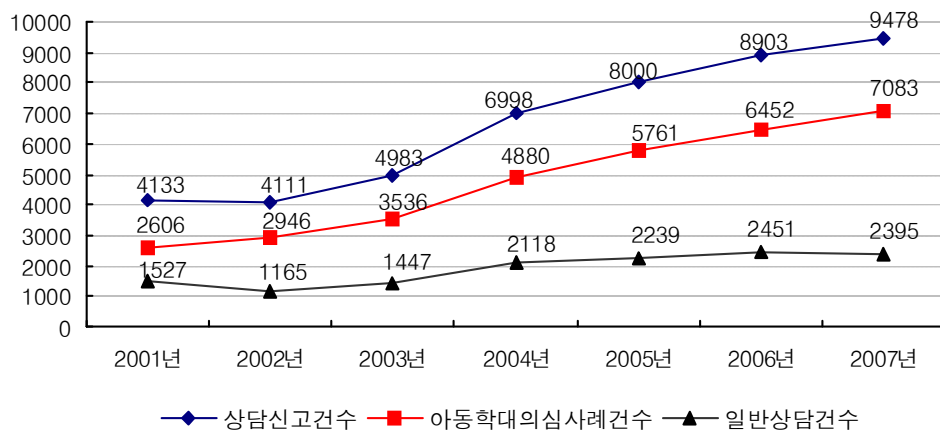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아동학대와 방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의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해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 지원과 투자가 요구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의 신고 및 접수·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사례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 보건소(20개소)를 중심으로 아동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학대·방임으로부터 아동보호방안 추진

[그림 9-10]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및 학대의심 사례건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8.

- 아울러 아동학대상담원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학대예방 홍보물 배포 등의 교육·홍보사업도 진행
 -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5억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아동의 일시보호, 치료, 상담서비스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
 - － 전국 아동학대사례 통계 및 전국 아동학대사례 현황보고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연차별로 발간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과 실종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하였고, 무연고 아동·장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보호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

한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유전자 정보 DB 구축을 구축하여 '06년 6월말 현재 총 60,103건을 관리

-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종 및 유괴시 대응과 신고요령 전달 등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 진행
- 실종아동의 가족에 대해서는 상담비, 의료비, 부모활동지원비, 실종아동 전단지 제작비 등을 지원

〈표 9-39〉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률

(단위: 건, %)

유형 \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체학대	476(22.6)	254(10.3)	347(11.9)	364(9.4)	423(9.1)	439(8.9)	473(8.5)
정서학대	114(5.4)	184(7.4)	207(7.1)	512(9.0)	512(11.1)	604(11.6)	589(10.6)
성적학대	86(4.1)	65(2.6)	134(4.6)	206(4.5)	206(4.8)	249(4.8)	266(4.8)
방임	672(31.9)	814(32.8)	965(33.0)	1,635(35.1)	1,635(39.1)	2,035(39.1)	2,107(37.7)
유기	134(6.4)	212(8.6)	113(3.9)	147(3.2)	147(1.5)	76(1.5)	59(1.0)
중복학대	623(29.6)	949(38.3)	1,155(39.5)	1,710(38.8)	1,710(34.6)	1,799(34.6)	2,087(37.4)
전체	21.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8.

- ☐ 실종아동의 발견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동 사업이 특정 대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심화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추진방법

- ☐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
- 취약지역 영유아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하여 학대·방임예방 및 아동건강 상담 등 통합서비스 지원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수행시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양육 상담과 함께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 마련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와 방임의 근본적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체계 마련
 - 지역별로 활용 가능한 공공·민간의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하며, 특히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종교단체, 병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광역단위 교육청-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확산 및 시설과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 아동보호체계의 접근성 제고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기관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전문상담원 확충
 - 신체학대, 성학대 등 학대 유형별 전문 대응기법 개발 보급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TV, 라디오 등 다양한 대중매체와 포스터, 캐릭터 제작 등을 통해 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 신체학대, 성학대 등 학대 유형별 홍보 및 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소관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 적극 전개 및 지도 감독 실시
 - 아동학대 주요 가해자로 주목되고 있는 성인(부모 포함) 교육 등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상별 세분화·전문화
 - 아울러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호서비스의 전달과 학대아동의 자립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보호시스템 구축
 - 공익광고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업참여 확대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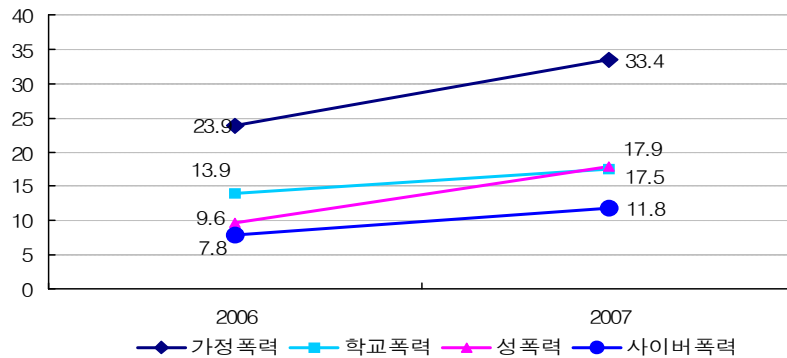
1) 필요성 및 목적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입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폭력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체계적 보호와 지속적인 치료서비스의 제공함으로써
 -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
 - 아울러 학교폭력은 주로 개별 학생의 일탈 또는 비행과 관련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결과는 개인과 사회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양산하므로 보다 적극적 개입과 예방노력이 요구됨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04년 7월 제정된 이후 '08년 3월 전면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 예정
 - － '05년 2월에는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교직·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5개 영역, 46개 과제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과 이들간의 갈등조정 등의 통합적 보호·지원이 제한적으로 진행
 -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 소극적 문제인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근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그림 9-11] 아동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률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7.

- 다양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특정 영역,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효과성과 파급력이 전체 학교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
- 세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 학교주변과 교내에서의 각종 안전지도 및 비행, 일탈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순찰활동 중심의 ‘배움터지킴이’를 전국 100개교에 각 2명씩 배치·시범운영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배치
 - －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SOS지원단’을 운영
 - － 학생의 비행정도에 따라 범법행위에 따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관찰학생과 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
 - － 법적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비행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을 실시
 - － 단순하고 우발적 비행으로 학교 내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시·도교육

청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형태의 「친한 친구 교실」 등을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학교폭력예방 강사요원 집중연수(201명), 180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360명), 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장(360명)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08.3.12~6.11)

3) 추진방법

□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학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를 구성하여 입체적인 활동지원망 운영
 - 지역단위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시·도 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전담부서’,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활성화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 교육의 강화 및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교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내실화

□ 학교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피해학생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로 전문병원 지정
 -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상담, 의료, 수사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지원센터 확대
-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교의 학생 보호 및 자립기능 강화
 - 연중 운영 가능한 대안 위탁 교육기관 확보·운영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학부모의 협조,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한 다양한 선도처분 방식 개발

□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활성화

- －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상담망을 폭력관련 신고 및 상담만을 전담하는 단일화 시스템으로 구축

○ 학교중심의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활성화 및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입체적 상담망 구축

- － 인성교육, 폭력예방, 청소년심리, 교정, 의료분야 등의 전문가로 전문 인력풀 구성
- － 학교내의 전임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교육 강화

- － 사이버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학부모 참여 확대
- － 학교 폭력 예방·근절 우수사례 전파

□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입안의 과학적 근거 확보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라. 건강한 정신, 행복한 성장 정서지원 서비스 확충

1)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청소년기 문제행동 및 정서적·심리적 장애의 조기 발견, 치료서비스 제공 및 발달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아동의 전인(全人)발달 도모

○ 아동의 전인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제행동 및 심리·정서장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합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필요

- － 초등학생 4명중 1명이 문제행동 및 심리·정서장애를 경험하는데(보건복지부, 2006),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 조기발견과 치료 중요
- － 소자녀 출산으로 양육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가족 지원망 축소로 올

바른 양육기술과 태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욕구 증가

- 아동의 전인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제행동 및 심리·정서장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합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시장의 체계적 정착 및 관련 전문가 관리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기대

2) 선행연구의 고찰 및 외국사례

-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장기 문제행동 및 정서적·심리적 장애 경험률이 약2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다양한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DHHS, 2005)
 - 아동 발달지원 양육기술(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에 관한 부모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발생 이전에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
- 미국 약물중독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의 아동가족서비스 제공체계
 -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적 서비스 전달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의 정신보건 및 약물중독 또는 각종 정신적, 정서적 장애 관련 문제의 예방을 주요 목적 함
 - 예방중심, 조기개입과 치료를 서비스 제공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 9~17세 아동의 약 5~9%가 심각한 정서장애와 이와 관련된 약물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의 8.8%가 약물 및 알코올의존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아동가족 통합 지역정신보건 서비스>
 Comprehensiv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gram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연방지원 보조금(Federal grants)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구매계약(Purchase of Services) 체결
-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 대상인구(아동청소년 중심) 규모, 파악된 정신적, 정서적 장애관련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관 단위로 통합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 서비스 제공계획을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 또는 공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 심사대상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서비스 대상: 아동과 그 가족
 - 제공원칙:
 - i) 정신건강 관련 주요 서비스 및 아동복지, 교육 및 각종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기반
 - ii) 보호체계(System of Care) 기준 적용·준수: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장애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보건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아동복지, 교정 등 관련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체계의 구축
 - 주요 서비스 내용: 아동 및 해당가족에 대한 집중지원 서비스, 보호자 및 주양육자 지원, 주간보호, 학교기반서비스, 위기관리 및 긴급지원서비스, 상담치료 사례관리 서비스, 치료적 가정위탁서비스 및 진단평가(diagnostic & evaluation) 서비스 등
 - 대표 프로그램 예시
 - i) 아리조나주 Project MATCH(Multi-Agency Team for Children)
 - ii) 델라웨어주 FACT(Families and Communities Together) 프로그램
 - iii) 플로리다주 THINK(Tempa-Hillsborough Integrated Network for Kids)
 - iv) 플로리다주 Family HOPE(Helping Organize Partnerships for Empowerment) 프로그램

3) 추진방법

-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의 행동, 정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의 치료·개입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
- 0~12세 미만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심리적 장애 경험률 및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전국조사의 실시
- 아동행동치료 서비스 욕구실태 및 아동 임상치료사 양성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모델 선정
- 실태조사 결과 및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전문적 검토과정을 거쳐,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대상 시범사업 진행 후 단계적 확대

〈표 9-40〉 시범사업 대상 아동수 및 추정 시범사업 예산규모(안)

(단위: 명, 천원)

시범 사업 지역	아동 인구 규모 ¹⁾	시범사업 대상 I (수급계층)			시범사업 대상 II(차상위계층)		
		아동수 (A) ²⁾	대상 아동수(B) ³⁾	추정소요 예산 ⁴⁾	아동수 (A) ²⁾	행동치료 대상아동수(B) ³⁾	추정소요 예산 ⁴⁾
서울	1,363,920	42,282	8,456	761,067	75,016	15,003	675,140
부산	483,825	14,999	3,000	269,974	26,610	5,322	239,493
대구	391,719	12,143	2,429	218,579	21,545	4,039	193,901
인천	428,664	13,289	2,658	239,195	23,577	4,715	212,189
광주	257,854	7,994	1,599	143,883	14,182	2,836	127,638
대전	247,208	7,663	1,533	137,942	13,596	2,719	122,368
울산	195,284	6,054	1,212	108,968	10,741	2,418	96,666
전체	3,368,474	104,424	20,887	1,879,608	185,267	37,052	1,667,395

주: 1)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0~12세 이하 아동인구 규모

2) 이현주·백화중·신영성 외, (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에서 추정한 소득집단별 아동인구비율(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3.1%와 차상위계층 비율 5.5%)을 6개 광역시 아동인구수에 적용한 결과

3) 보건복지부 자료 및 미국 NICHD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행동, 정서·심리장애 경험률 20%를 (A)에 적용

4) 행동치료 대상 아동 가운데 30%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급계층은 30만원의 바우처, 차상위 계층에는 20만원 바우처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

2.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확립

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의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발달환경의 조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극적 개입전략을 개발하여 수행해야 할 것임
- 아동과 청소년의 다면화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지역사회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불가피하게 직면한 각종 발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보호·육성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별, 지역별 서비스 제공 기반의 편차가 발생
- － 국고지원 운영시설은 '06년 902개소에서 '07년에는 1,800개소로 양적인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시설당 월 운영비 200만원 지원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내 빈곤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한계
 - － 이용아동의 서비스 수요와 복지욕구 및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2,655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중 사자 교육, 이용아동 욕구 및 실태조사 등 지역 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표 9-41〉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07. 3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지역아동센터 설치	895	1,709	2,029	2,029
국고지원 시설	454	800	902	1,800
(국고지원시설 비율, %)	(55.0)	(46.8)	(44.5)	(89.0)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 한편, 방과후 아동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각종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사고, 일탈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공간의 제공 및 학습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설을 '07년 150개소 확충하여 63백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07년 기준 343개소를 운영하여 약 35백

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

3) 추진방법

-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거점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며, 특히 센터의 일부를 위기아동(정서·발달 장애아동), 학업중단 아동 및 빈곤 중·고등학생 등 소외계층 및 요보호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운영
 - － 지역사회 빈곤, 결혼아동에 대해 보호와 학습지원, 급식, 상담서비스 등 지역사회와 연계 등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 위기아동(정서·발달장애아동), 학업중단 아동 등 소외아동에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10% 정도)
 - 지역사회 빈곤·결혼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학습능력 제고하고 특기적성 교육 제공과 급식 지원 및 쾌적하고 능률적인 학습공간 지원
 - 다양한 방과후활동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육·문화적 격차보완과 학습능력 향상
 - －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위주의 전문선택과정 운영
 - － 건강검진, 상담,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복지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파악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치료, 자활 등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통합지원

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UN 아동권리협약과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등은 국제협약 내용과 행동계획(Action Plan)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국가적 의무로 권고하고 있는바, 주요 협약내용의 이행을 1차 정책방향으로 설정
 -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 권리의 보장이 고려
 -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그리고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등을 4대 일반원칙으로 하고 제시
 - －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에는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의 철회, 아동정책 총괄 중앙상설기구의 설치,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포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04년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모니터링 기능 수행에 한계
 -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를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
 - 국내 정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상설기구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활동 중(’06. 10)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인프라의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장기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

속적 사업추진이 요구됨

- 주요 실적내용에는 아동권리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의 제고를 위한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주간」의 운영, 아동권리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이 포함
- 아울러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UN 제출
- 실질적인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실적으로는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07년 1,152개 업소, 53건 적발) 및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 등 전개('07)

3) 추진방법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활성화
 - 아동·청소년 인권의 주요 내용과 실천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활성화
 -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홍보 확대
 -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³¹⁾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국제협약 비준시 유보조항³²⁾에 대한 국내 상황 검토 및 비준 시도/노력
 - 아동권리 홍보 확대, 아동권리 연구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기반 마련
 - 아동권리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중장기적 아동권리 발전계획 마련 추진
- 아동권리 보호체계의 정책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31)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참여에 대한 선택의정서 등 2가지임.

32) 비준 당시 우리나라의 협약유보조항은 부모와의 면접교섭권 보장(CRC 제9조 3항),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규정(CRC 제21조 a호), 소년재판에 관한 상소권 보장(CRC 제40조 2항) 등임.

다.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인재의 양성 및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학업성취로 가늠되는 지적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함
-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의 광풍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전인발달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며, 취약계층 자녀의 경우 인성함양을 위한 발달자극을 접할 기회마저 차단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 이에 아동청소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발달경험과 발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부문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달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
 - － 아동복지시설(203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7,269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
 - －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국악 분야 강사풀제도를 운영하면서 전국 3,158개 학교에 1,764명의 강사를 파견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여 약 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
 - － 문화예술분야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하여 현재 17개 연구모임에서 약 300여 명의 교사가 훈련받고 있음
- 지원규모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국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일부만이 동 사업의 혜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본 인프라의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강사료 지원 등 간접

적 투자에 치중

- 그 결과, 투입된 사업예산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문화예술 특기의 향상 등 충분한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
- 문화예술 교육 일자리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추진방법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 활성화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전문인력의 파견지원을 통해 학교교육 질적 수준 제고
 - 학교 규모별, 교육과정별 수업시수 차등 지원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
-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이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의 교과과정과 문화기반시설 등 지역내 전문시설 및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
- 지방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국악, 연극, 영화 등 6개 장르의 전문예술강사 파견
 -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역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단체 등 연계
 -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1) 필요성 및 목적

- ☐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유해매체,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

- 청소년 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등으로, 이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훼손 할 우려가 매우 높음
 - －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 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들며,
 - －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주거나, 제2 비행의 관문(Gateway)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차단해야 함
-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최근 1년간 음주율은 2002년 26.0%에서 2006년 47.6%로 4년 사이 21.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율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
 - － 청소년들이 음주로 사망하는 등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으로 한국금연운동 협의회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실시한 2007년도 중·고등학생 흡연율 조사에 의하면 2007년도 중학교 남학생 흡연율은 4.8%, 여학생 흡연율은 2.6%,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은 16.2%, 여학생 흡연율은 5.2%로 나타남
 - － 청소년 흡연 문제는 신체적인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 －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집중력 감퇴 및 음주, 폭력, 절도와 같은 비행의 계기가 되고 있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기존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대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 하여 작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효과적 이라는 근거가 명백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해약물, 음주, 흡연 관련 청소년보호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 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
 - － 인터넷·방송·영상물·간행물·음반 등 매체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고발조치·심의요청·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약물예방 시범학교 운영(전국 12개 중학교)하면서 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인식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
 - － '07년에는 전국 중학교 20개교 선정하여 '담배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금연지도사 양성 및 멘토링 추진(3회 506명 참여)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내에서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이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지 역할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표 9-42〉 2007년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구분 연도	지지 상담	정보 제공	긴급 구조	입소 의뢰	일시 보호	식사 제공	가족 상담	의료 지원	기관 연계	조사 동행	법률 지원	교육 지원
2006년	73,468	47,725	1,311	1,154	3,898	8,032	9,447	1,406	5,519	231	327	1,957
2007년	107,048	85,484	1,482	1,579	6,652	12,227	18,605	1,658	12,174	334	427	3,205
구분 연도	합의 중재	의복 지원	자립 지원	귀가 지원	행정 지원	상담 종결	사후 관리	문화 활동	교통비 지원	기타	합계	
2006년	360	1,309	495	1,598	404	1,247	2,710	2,166	0	8,893	173,657	
2007년	3,205	663	2,439	1,469	2,424	892	2,118	3,346	2,374	822	278,301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3) 추진방법

-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일탈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
 - 매체와 약물, 업소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법령의 체제 정비
-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사전적 차단기능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방안 마련
 -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단체의 통합적인 협력망 구축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Youth Patrol) 프로그램 확대 및 보급 활성화
 -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전문화된 치료-재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 기준 설정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 지역사회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감시활동 전개 및 지역간 연대사업 추진
 - － 청소년스스로지킴이(Youth Patrol, YP운동)를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 － 사이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리 강화
 - 지역별 감시활동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마.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1) 필요성 및 목적

- 학교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

-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확충,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예방과 치료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교육,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현재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진단하여 치료적 접근을 시도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학교 보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신체발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질병예방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흡연, 음주, 약물중독 등 심신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관련사업의 대부분이 일부지역 또는 일부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
 - －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됨
- 대부분의 사업이 대상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 → 학교 → 교사를 통한 일방적 전달방식으로 사업내용을 전파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인식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학교 보건교사의 확대배치 노력의 결과로 '06년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67.4%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각종 보건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예방지도를 강화
 - －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약물사용 경험의 유무 및 위험노출 정도에 따른 약물 오남용 예방 표준프로그램,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 등을

- 개발·보급하였으며, 시도 교육청을 통해 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 지침을 시달
- 초중고 등 학교급별 및 대상학생의 비만위험 정도에 따른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06. 9월), 시도교육청별로 질병예방시범학교, 선도학교 및 각종 캠프 등을 운영
- 만성질환으로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병원학교' 18개교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치료 학생들의 학업지속성 및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한 치료효과 증진

3) 추진방법

- ☐ 학교의 보건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배치확대 및 교육과정 보완을 추진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강화
 -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 개선·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 실질적인 학생의 건강상태 평가와 질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생건강검진 및 건강실태조사의 내실화
 - 학생비만예방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학교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 구축
 - 일선학교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자료·정보의 DB화 및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 구축
- ☐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 흡연, 음주,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확대
 -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흡연, 음주, 약물남용 예방프로

그림의 개발·보급

- 지역의료기관의 금연 및 금주클리닉과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강화
 -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기능의 일환으로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진료서비스 제공
 - － 구강보건검진, 금연·금주 상담 등 학교보건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보건소와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에게 제공
 - 학생에 대한 보건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의 연수를 활성화하고, 보건소 인력,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학교보건사업 참여를 확대
 - 보건소와 학교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바. 드림스타트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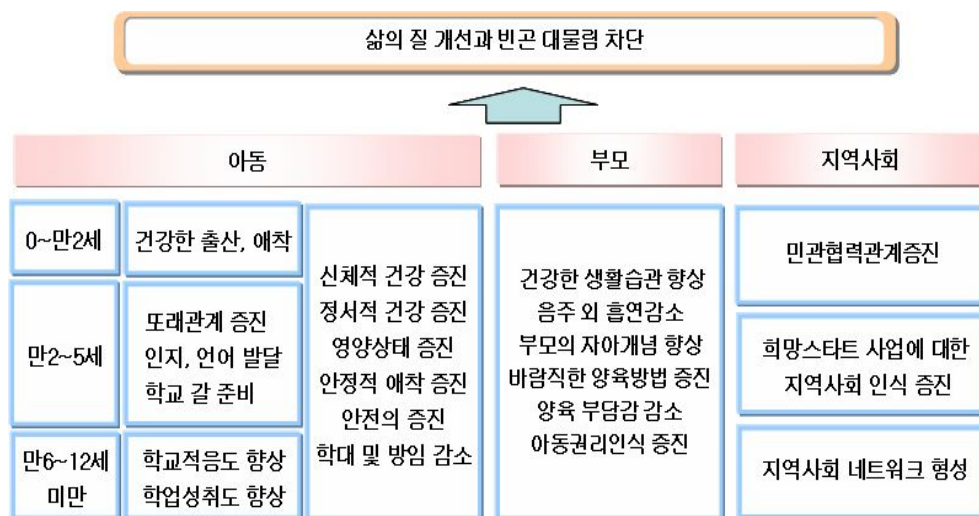
1) 필요성 및 목적

- 아동기는 청·장년기를 거쳐 전 생애의 방향과 사회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인간발달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 아동기 빈곤은 생존 및 건전한 성장발달에 요구되는 기본자원의 부족,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결여 및 이로 인한 인간발달의 기회박탈을 의미
 - － 빈곤은 생존과 건강, 영양과 교육, 참여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아동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 － 빈곤아동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인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소득간의 상관관계 계수 : 미국 (.289), 영국 (.271), 핀란드 (.147), 캐나다 (.143), 스웨덴 (.143), 노르웨이 (.139)
 - － “아동기 빈곤은 부모세대 빈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이들은

또다시 빈곤한 아동의 빈곤한 부모가 된다.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빈곤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UN, 2004)”

-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전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가족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을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동시 개입을 통한 2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을 지향하며, 임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종합적이고 능동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그림 9-1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별 핵심 사업목표



자료: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 2008.

2)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아동빈곤 문제는 인간발달의 핵심위험요인(core risk factor)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실업과 소득불안정, 질병과 장애, 약물중독, 일탈과 폭력, 복지의존 등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비용 유발
 -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소득수준, 교육수준, 주거환경, 교통, 고용여건, 도시화 정도 등)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은 빈곤 세습의 주요 요인
 -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개별가정의 물질적 안녕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과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
 - － 취약지역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제한된 공공서비스 접근권, 불충분한 사회 기간시설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기회의 제약 및 탈선, 범죄, 폭력, 약물 중독 등 일탈행위에 노출될 가능성 농후
 - － 그러나 취약지역에 따라 현황 및 주요 사회문제가 다르고, 이에 따른 아동기 발달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욕구파악 및 진단, 서비스 차별화 중요
- 취약지역 빈곤아동이 성장발달의 위험요인(risk factors)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 역량(competence)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아동기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인
 - 대부분의 실증연구 결과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장·단기에 걸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을 확인
 - －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실증연구들은 조기개입프로그램의 효과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고용, 범죄, 소득수준, 교육성취도 측면에서)
 - － 아동의 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범죄 및 약물중독, 일탈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효과 증명
 - － Neighborhood Effects(Shaw & McKay, 1969; Sampson et. al, 2002; RAND Report

재인용) : 빈곤율, 범죄율, 주거환경, 교육환경, 여가시설, 공공기관 설치 수준 등으로 표출되는 개별 지역사회 여건은 지자체의 정책역량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아동 및 가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과 지역사회 여건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표 9-43〉 소득수준에 따른 취약지역과 일반지역의 특성

지역사회 특성	취약지역		일반지역	
	극빈계층 밀집	저소득계층 밀집	소수 저소득층 생활	극소수 저소득층 생활
인구센서스 자료				
평균소득('90)	\$18,250	\$26,060	\$38,330	\$62,510
주택소유율	24%	36%	52%	78%
인구밀집도	22,501	17,790	10,463	5,470
여성가구주 비율	16%	11%	8%	4%
주거환경 수준 ¹⁾	-1.2	-0.4	0.6	1.2
생활쓰레기 수준 ²⁾	1.4	0.6	-0.9	-1.4
사회환경				
사회통합도 ³⁾	15.8	16.4	17.7	18.9
아동중심 공공행정 ³⁾	25.6	26.8	28.8	30.9
사회신뢰도 ³⁾	3.2	3.3	3.7	4.0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여건이 양호함.

2)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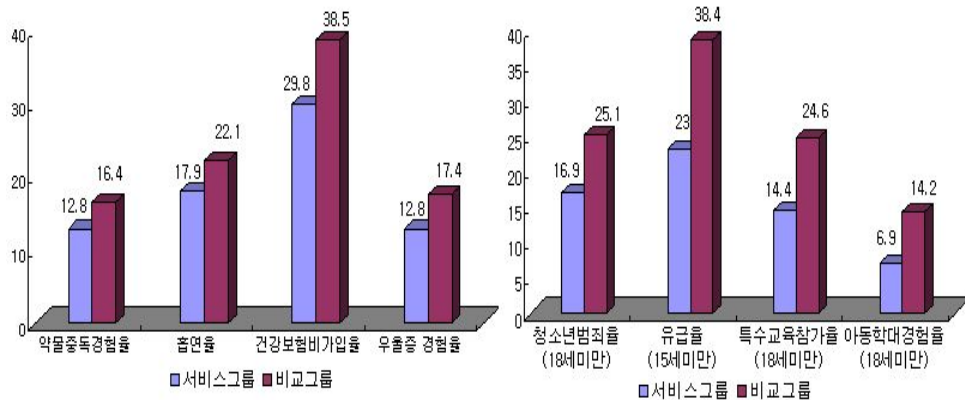
3)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통합도, 아동중심의 정책운영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함.

자료: LA가족및지역사회실태조사 결과, '00~'01.

○ 989명의 시카고 아동-부모센터 프로그램(Chicago Child-Parent Center는 미국의 대표적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아동과 550명의 비교그룹 아동에 대한 21년간 종단연구결과에 따르면,

- 부모와 아동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및 성장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성취도, 직업안정도, 소득수준 등에서 프로그램 그룹 아동이 양호

[그림 9-13] 시카고 아동-부모센터 프로그램 참여아동과 비참여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을 비교



자료: Reynolds, A. J., & Temple, J. A, Prevention and Cost-Effectiveness in Early Intervention: A 20-year Follow-up of a Child-Parent Center Cohort, 2006.

- 아동기의 발달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조기개입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의 비용-효과성 입증
 - 성장기 교육비용, 복지지출, 범죄관련 사회지출, 개인 소득수준 및 조세부담 및 의료비용 측면에서 재정적 이득은 물론 사회비용 절감효과 확인

〈표 9-44〉 아동기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WC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비교

프로그램명	투자비용 \$1당 환원(\$)	순이익(효과 - 비용, \$)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1)	\$8.74	\$128,766
Carolina Abecedarian Project1)	\$3.78	\$99,682
Chicago Child-Parent Center Program1)	\$10.15	\$70,977
Women, Infant, and Children2)	\$3.07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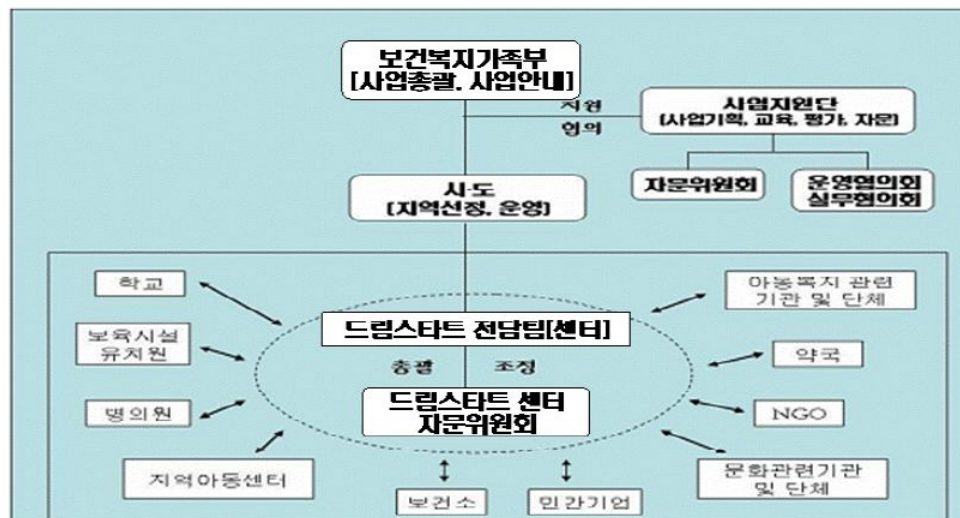
주: 1) 미국의 대표적 아동기 조기개입 프로그램. 2) 임신부와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프로그램.

자료: Reynolds, A. J., & Temple, J. A, Prevention and Cost-Effectiveness in Early Intervention: A 20-year Follow-up of a Child-Parent Center Cohort, 2006.

3) 추진방법

- 드림스타트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바, 국가인재 양성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견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지원단을 통해 개별 단위사업의 기획과 평가,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 시도 및 시군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드림스타트센터는 시군구 주관으로 설치·운영

[그림 9-1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



자료: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 2008.

〈표 9-45〉 지역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수

2007년도 사업추진 지역				2008년도 사업추진 지역			
지역	센터수	지역	센터수	지역	센터수	지역	센터수
서울	1	경기도	2	서울	1	경기도	2
인천광역시	1	경상북도	1	인천광역시	-	경상북도	1
대전광역시	-	경상남도	1	대전광역시	1	경상남도	2
광주광역시	2	전라남도	2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대구광역시	1	충청북도	-	대구광역시	1	충청북도	1
울산광역시	1	충청남도	-	울산광역시	-	충청남도	-
강원도	1	제주도	1	강원도	1	제주도	1
전체		16 개소		전체		16 개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환경의 조성

○ 서비스 통합과 전달체계의 혁신(Integration & Innovation)

- Multidimensional Approach :취약지역 빈곤아동의 성장환경에 대한 다면적 접근
- Focusing & Targeting Strategy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선정의 집중화
- Active Participation : 취약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중앙정부 전체의 적극적 참여
- Community Partnership :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
- Service Timing & Scope : 정책적 개입시기와 개입범위 다각화

○ 아동 및 부모/가족 단위의 기대효과

- 취약지역 빈곤아동의 출신배경 및 성장환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달기회의 제공
- 기능적 가정생활 지원을 통한 적극적 지역사회활동 참여
-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의 최대 발현을 위한 사회적 지지(encourage) 및 지원
- 아동의 긍정적 자기정체성 확립과 행복감 제고 및 부모의 자립·자활의지 증

진과 삶의 질 제고

○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기대효과

- 의료, 교도행정 등 사회비용의 절감
- 교육불평등, 고용불평등 해결을 통한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 사회구성원의 능력손실 억제 및 인적자본 개발을 통한 사회생산성 제고
- 생활환경 개선, 범죄율·자살율 감소, 행복감 증진, 능력발휘 등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 사회서비스 정책 차원에서의 기대효과

- 서비스 대상의 욕구에 부합되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 파편적·분절적 서비스에서 통합적 연계서비스의 실현을 통해 복지체제의 효과성 제고

사. 아동발달계좌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인적자본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투자적 아동복지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
 -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 이루어질 필요
-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자산을 형성·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회적 배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빈곤계층에 대한 현금지원보다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이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라늘 실증연구 결과(Sherreden, 1991)

- 자산지원 형성프로그램은 빈곤탈출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탈출가능성을 제고(Midgely, 1999)
- 개인의 물질자산은 미래지향적 태도의 함양, 미래 설계를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감 형성, 개인효능감의 증대 등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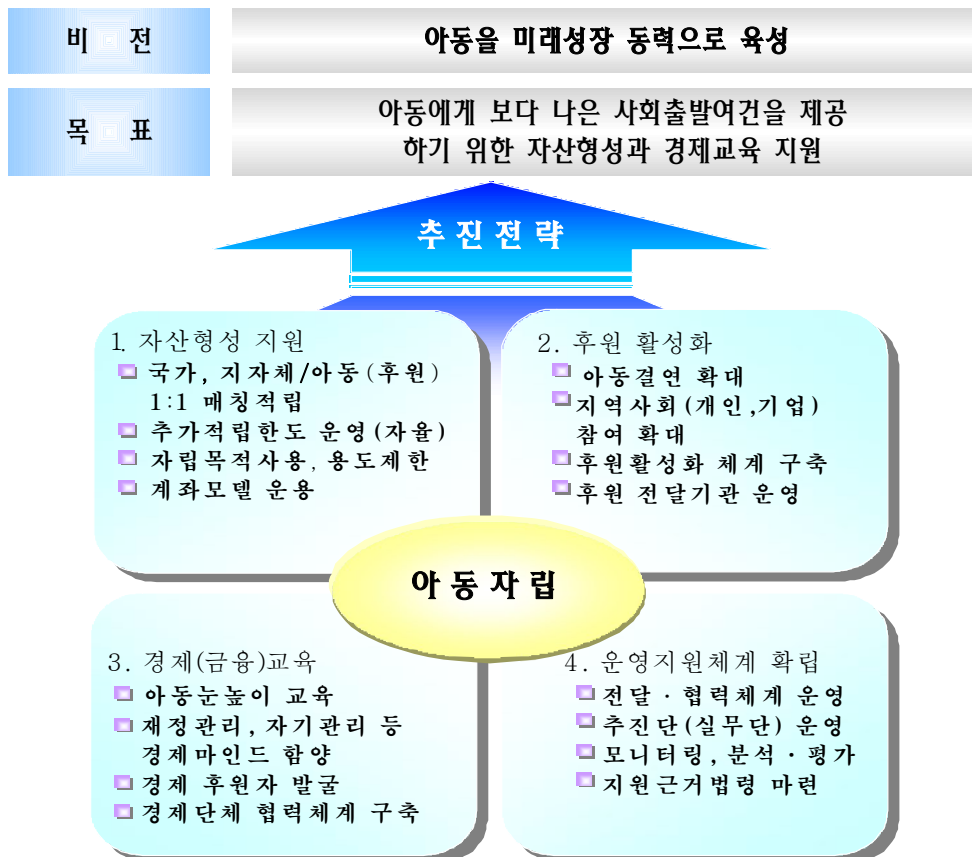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요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 이들 아동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사업을 시작³³⁾
 - CDA사업은 지원대상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액의 사용시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
 - 지원대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이 포함되는 요보호아동(약 32천명)
 - 단, 만 18세 이후 및 보호기간 6개월 미만인 요보호아동은 제외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CDA지원 기간 중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
 -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

33) 김미숙·홍미(2007), 「아동발달계좌(CDA)사업의 의의와 과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하였음.

- 요보호아동과 국가의 매칭비율은 1 대 1(월3만원)으로 하고 18세 미만까지 운영
- 아동계좌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운영하고, 정부 매치지원금 계좌는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운영
- CDA대상아동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경제(금융)소외상태를 해소하고, 아동이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생각과 올바른 소비습관 및 경제정보 등 경제마인드를 교육시켜 ‘현명한 소비자, 행복한 경제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

[그림 9-15]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비전과 목표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 지원수준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비 등 자립목적에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
-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3만원 내로 적립하면 그에 대해 정부에서도 3만원 내에서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본인 3만원 내 + 국가 3만원 내 = 6만원 내/월·인)
- 아동들이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여유가 되면 별도로 월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어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천 9백여 만원의 목돈 마련

〈표 9-46〉 우리나라 아동발달계좌(CDA)의 적립수준

구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기본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원금	투자신탁	36	180	360	540	648
총이자		3	88	381	971	1,490
총원리금		135	748	1,701	2,951	3,866

주: 아동적립 월3만원, 추가적립 월5만원, 정부(지자체)매칭 월3만원 적립시.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표 9-47〉 아동발달계좌(CDA)의 월별 저축현황 추이

구 분	4월	5월	6월	7월	누 계
통장발급(명)	28,899	29,797	30,399	30,688	30,688
저축아동수(명)	23,397	27,343	26,423	26,494	29,668
저축률(%)	81	92	87	86	97
저축액(백만원)	568	791	716	726	2,805
1인당 평균 저축액 (원)	24,269	28,949	27,088	27,413	71,11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7.

- 자산형성을 통한 빈곤탈출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주의적 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발달계좌(CDA) 사업의 경우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대상자 선정을 일부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동발달계좌의 적극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와 관리운영 시스템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외국의 아동자산형성 관련제도는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hild Trust Fund), 캐나다의 교육저축 프로그램(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싱가포르의 아동저축계좌(Children Development Account), 미국의 아동발달 투자계좌(Kids Investment & Development Savings Account: KIDS) 등
- 영국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이하 CTF)
 - 출생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성인이 출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저축 및 재정운용 관련 건전한 생활습관 강화를 위해 설치(05. 4 블레어 정부 도입)
 - 장기 신용투자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되지만 18세 이전은 물론 아동 본인 이외의 인출 절대 불가
 - 주요 대상은 '02.9.1 이후 출생하고 아동수당(Child Benefit) 수급 아동
 - － 아동수당제도와 연동되어 있어 아동수당 신청시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동신탁기금의 운영(아동신탁기금법 입법, '04)
 - － 세금청(HM Revenue & Customs)은 출생 직후 개별 아동에 대해 「CTF 안내 패키지」와 함께 최초 CTF 계좌 개설 바우처 발송
 - － 지원수준은 £ 250 기준으로 하며 저소득층 신생아의 경우 추가적으로 £ 250 지급(총 £ 500)
 - － 아동 연령이 7세 도달시 CTF를 재 지급(연도별 지급수준 결정)하여 총 2회 지급

- 정부는 대상 아동의 초등학교 졸업 연령 도달시 3차 CTF 지급방안 논의 중
- CTF 계좌에 대한 개인의 연간 납입한도는 £1,200 이며 전액 비과세
- CTF 바우처를 수령한 개별 가정에서는 계좌 개설자(부모 또는 주양육자), 계좌 유형 등을 결정하여 다음 단계별로 진행
 - 출생 직후 아동수당(Child Benefit) 신청하면 CTF 자동 신청
 - 계좌 개설자는 「CTF 안내 패키지」에 제시된 CTF 설치 계좌의 유형을 선택·지정
 - CTF 계좌 유형 : ① 직접 투자형 계좌, ② 간접 투자형 계좌, ③ 저축성 계좌
 - 「CTF 안내 패키지」에 제시된 CTF 공급자 중 1개를 선택
 - 정부 공인 CTF 공급자: 40개 직접 투자 기관, 13개 간접 투자 기관, 16개 저축 기관
 - CTF 제공자와 접촉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최초 계좌개설자는 동 계좌 주 관리자로 등록(registered contact)
- 요보호아동을 위한 CTF의 운영
 - 정부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CTF 지급하며, 요보호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차등 CTF 계좌 개설
 - 요보호아동의 법적후견인, 관선변호사 등이 계좌 개설 및 관리 책임

〈표 9-48〉 영국 아동신탁기금(CTF)의 아동 생년월일 기준 지급 수준

기준 생년월일	02.9.1~03.4.5	03.4.6~04.4.5	04.4.6~05.4.5	05.4.6~
CTF 지급수준	£566	£548	£523	£507

〈표 9-49〉 주요 국가의 아동발달계좌 유사 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싱가포르 Baby Bonus + Edusave	영국 Child Trust Fund	캐나다 RESP(CESG + CLB)	미국 Proposed KIDS
내용	출산을 제고와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둘째이후 출생아들에게 정부에서 매칭펀드 제공('01.4월 도입)	'02.9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정부 및 민간지원예금으로 미래의 자산 구축('05.4 토니 블레이정부 도입)	고등교육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저소득층의 CESG와 중위소득가족을 위한 CLB로 구성 /'04년 도입)	아동의 저축 장려와 재정능력의 확대, 젊은 성인들을 위한 기회확대의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이 매칭펀드 제공('06년)
대상	둘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급 (6세까지)	모든 출생 아동(18세까지)	모든 출생 아동(17세까지)	'06년 이후 모든 출생 아동 (18세까지)
계좌 개설	출생신고 시 개설	출생시 계좌개설 가능한 바우처 지급	RESP 가입 후 신청	2006. 12. 31.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계좌 개설
급여 수준	첫째 : Cash Gift S\$3000 둘째~넷째 : S\$ 3000 +S\$12000까지 매칭 지원 셋째자녀부터는 2배의 보너스 지급	일반아동 £ 250, 저소득층아동(전체 1/3) £ 500 지급 가족 및 친척은 매년 £ 1,200까지 적립 가능	C\$2000에 대해 1:0.2% 매칭 저소득가족은 매년 C\$500에 대해서는 1:0.4% 매칭	계좌 개설시 최초 적립금 US\$500 지원 부모 및 후견인은 매년 US\$ 2000까지 적립 가능 저소득층 아동은 US\$500 추가 적립
매칭	1:2 매칭	매칭 없이 총 2회 지원 (출생, 7세)	1:0.2-0.4 매칭	1:1 매칭
사용 용도	아동 보육비 + 교육비 Edusave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며, 8세 이후에는 개인계좌로 이전 가능	주로 대학등록금, 취업훈련비, 자립자금 등으로 활용하나 사용 용도의 제한은 없음 18세 이전 환매 불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정부가 승인한 고등 교육기관의 교육비로 활용 17세 이전 환매 불가	주택, 교육훈련, 창업 등 다양 18세 이전 환매 불가하며 그 외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벌금 적용.
관리 운영	구좌개설 : 금융기관 (우체국은행/DBS은행) 담당 주관부서: 정부(MCYS 가족지원팀)	구좌개설 : 금융기관 담당 정부 : 바우처 발행, 경제 교육 주관부서 : 국세청	구좌개설: 각 금융기관 담당 주관부서: 정부 (인적 자원 및 사회개발부)	구좌개설: 금융기관 담당 주관부서: 재무부 (아동발달 투자계좌 펀드운영위원회)
특징	연령대별로 자산형성 제도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계좌이전 가능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확충	정부의 매칭 없이 일시금 지급 비과세	정부의 매칭 지원금 미사용시 국가로 회수 비과세	제한된 목적 이외 적립금 인출시 패널티(penalty) 적용 비과세

자료: 김미숙·홍미(2007)

4) 추진방법

- ☐ 아동발달계좌(CDA) 대상아동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현행 요보호 아동에 국한된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추진

-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성숙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사업확충에 따르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충
 - － 현재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 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표 9-50〉 아동발달계좌(CDA) 대상아동 확충방안

(단위: 천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32	32	38.7	62.7	61.7
요보호아동	32	32	33	33	33
국기초 수급아동	-	-	5.7	5.7	5.7
차상위계층 아동	-	-	-	24	23
당해연도 출생아동수	449	445	440	434	427
18세 이하 아동인구수	10,750	10,561	10,338	10,086	9,820

자료: 김미숙 외, 아동발달계좌(CDA)사업 관리운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아동발달계좌(CDA) 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 － 동 사업 담당인력은 기본적인 대상아동의 발굴이외에도 계좌신청 및 중도, 만기 해지사유 및 용도파악, 전출입 신고, 월별 아동 적립현황 파악, 정부지원금 매칭 업무 등을 수행
 - － 아울러 대상아동에 대한 저축안내, 후원실태 파악, 후원자 발굴 및 미후원 아동 결연, 경제교육의 실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됨.

3. 국내입양 활성화

가. 필요성 및 목적

- 1980년대 후반 전체 입양아 중 국내입양 비율은 26.8%, 1990년대 초반 34.6%, 1996년 37.1%, 2000년 41.7%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입양의 비율이 국외입양 비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

- 소자녀관의 만연으로 적은 수의 아동을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혈연중시의 경향으로 인하여 국내 가정들이 입양을 꺼리기 때문(이삼식 외,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1998)
- － 분만시 저체중, 미숙아, 유전 등의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한 아동의 국내 입양 매우 저조

〈표 9-51〉 국외입양 추이, 1958~2007

(단위: 명, %)

연도	전체 입양아	국내입양아	국외입양아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22	11,079	30,243	26.8
1991~1995	16,791	5,817	10,974	34.6
1996	3,309	1,229	2,080	37.1
1997	3,469	1,412	2,057	40.7
1998	3,869	1,426	2,443	36.9
1999	4,135	1,726	2,409	41.7
2000	4,046	1,686	2,360	41.7
2001	4,206	1,770	2,436	42.1
2002	4,059	1,694	2,365	41.7
2003	3,851	1,564	2,287	40.6
2004	3,899	1,641	2,258	42.1
2005	3,562	1,461	2,101	41.0
2006	3,231	1,332	1,899	41.2
2007	2,652	1,388	1,264	52.3
1958~2007	220,635	70,327	160,308	31.9

출처: 이삼식 외, 남북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인구전망과 정책, 2005; 2005년 자료부터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해외 입양의 지속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초래
- 연간 해외 입양아수는 2,200~2,400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약 60% 수준을 차지

- 지난 45년 동안 입양아동의 수는 22만명이며, 이들 중 국외입양 아동수는 30% 수준인 155천명
- 정부는 1961년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로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 국외입양의 증가에 따라, 해외 교포 및 외교관들이 국외 입양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기존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1976년 12월에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강조하는 정책 추진
 -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1982년부터 국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던 계획을 그 이후로 변경(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국외입양 개방정책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외국인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관심으로 확대되자.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국외입양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로 다시 전환. 1995년에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명칭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 그 결과 국내입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비율을 국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중한 미래자원인 아동인구의 해외유출 방지가 시급하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분위기 조성은 매우 미흡한 실정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하여만 양육보조금(양육비용 및 의료비)을 지급하고 있어 국내입양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충분한 지원 부족
 - 국내입양가정의 58%가 월소득 340만원 이하('04년)
 - 입양에 따른 수수료(200만원)를 입양가정이 부담
 - 분만시 저체중, 미숙아, 유전 등의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한 아동의 국내입양이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해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액: 504백만원(05년)

- 지원인원 : 100명
- 지원수준: 입양양육보조금 525천원/인·월, 의료비 2,400천원/인·년
- 입양부모 지원요건 규제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입양 저조
 - 국내입양은 아동인수(친부모 상담, 서류작성), 요보호아동수용승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후견인설정·부양의무자확인공고, 무적아인 경우 성·본 창설, 입양희망 부부의 입양신청 및 정보제공(상담, 예비교육, 입양신청서 교부, 서류제출), 가정조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절차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등 입양절차가 비효율적
 - 불임진단서, 부부건강진단서 등 아동 양육과 직접 관련없는 구비서류 제출 의무
 - 특히, 입양부모의 기존 자녀수,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등 규제 위주
-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지원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
 - 입양장려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의 이해가 필요

나. 실적 및 문제점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 추진
 - 캠페인, 세미나, 교육, 입양가정 사례발굴을 통한 입양홍보
 -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반편견입양교육(48회), 입양부모 교육 실시
 - 입양축제(6월), 입양캠페인(5회), 입양세미나(8월), 연구발표 세미나(2월), 전국 입양가족 대회(11월) 개최
 - 캠프 등 행사를 통한 홍보
 - 입양가족 캠프(10월), 입양아동과 비입양 아동이 함께 하는 캠프(8월) 등 개최
 - 입양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무가지를 통한 입양홍보(4회)
 - 지역별 입양가족모임을 통한 입양홍보

- － 입양관련 강의 및 사례발표, 입양캠페인 활동, 전국 17개 지역모임 활동(75회)
-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입양대상 아동 결정 후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07.1)
 - 독신자 입양 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50세~60세미만),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 제한 삭제 등 입양 자격요건 완화 ('06.12)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08. 2)
- ☐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 예산 삭감으로 미 추진
-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수수료 지원단가 : 약200만원/회
- ☐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의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 ☐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대상 146명에서 186명으로 확대
 - 장애아동 국내입양율 7.4%(국내입양장애아동 40명/입양대상장애아동 540명)×100

다.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 사례

- ☐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적극 활성화하여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활용
 - 아동의 국외입양에 따른 인구유출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의 인구정책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역행

- 아동의 복지에도 문제 발생 가능
- 프랑스의 경우, 출산지원과 관련하여 입양수당을 제공
 - 입양이나 위탁할 경우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자산평가의 경우, 자산평가기준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소득을 가진 가족에 혜택) 수당이 있음. 이 수당은 21개월간 지급되는데 혹은 영유아수당의 “긴 기간” 중의 첫 9개월간 지급될 수 있음.
 - 2001년 1월 현재 월급여액은 154유로

라. 향후 정책 방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을 통해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국내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 및 홍보
 - 입양의 날(5.11)및 입양주간(5.11~16) 행사 활성화
 - 입양의 날(5.11) 제정을 계기로 국내입양 홍보사업을 활성화하여 혈연중시 및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문화를 개선
 - 모범적 입양가정에 대한 사례 홍보 및 표창·시상으로 사회적 관심 유도
 -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강조
 - 교육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학교교육 실시
 - 종교계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 유도
 -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해 국민의식 개선
-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0~4세 입양아의 보육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 가정의 육아지원시설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용 전액 지원
- 장애아동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양육보조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 분만시 조산·체중미달·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

제5절 가족사랑 문화조성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한 아동 청소년 교육실태 및 정책추진 현황
 - 청소년 대상 직업정보 제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적 직업관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
 - － 가치관 형성기부터 양성평등,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의 중요성,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관한 교육 필요
 -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가족·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과정 개발 미흡
 - － 교육과정 개정 공시후 이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추진됨으로 신속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에 어려움 존재
-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나,
 - 저출산·고령화 관련 가족가치·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
 - 시민단체·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긴요

나. 실적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사회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관련 사항 포함

- 2007년도 사용 교과서의 관련 내용 수정 보완(고교 기술·가정 3권, 중3 사회 3권)

다. 외국 사례

-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아동과의 만남 촉진사업 실시
 - 육아체험을 통한 육아에 대한 불안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효과 기대
 - 신엔젤프로그램(2004년 12월 수립)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시책과 목표
 - － 체험활동을 통한 풍부한 인간성 육성, 어린이의 학습 지원
 - －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부모가 될 준비를 위한 육아이해강좌 개설

라. 향후 정책 방향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방안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과정의 강화
 - － 결혼·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중요성, 출산·육아의 행복과 가치의 인식 등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
 - －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편견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과성 내용의 수정·보완 등과 같은 교과서 개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을 위한 자료 발간 및 보급
 - －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교에 보급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을 위한 지도자료 발간 및 보급
 - －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용 자료 및 교구의 개발·보급
 - －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연수 추진 및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지역토론회, 인구교육 연구모임 등)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방안 마련

-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대상의 특성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교육사업 지원 및 민관 협력사업 개발
- 가치관 형성기부터 결혼준비기, 출산·자녀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교육 프로그램(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정생활교육, 노후대비 교육 등)의 제공
-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에서 가족캠프,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을 교육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가.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녀의 사교육기관 이용시간 증가 등 가족원의 개인적 외 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 부모-자녀간 유대 약화
 - 가족내 유대감은 가족원간 상호 존중,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치관 형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그동안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강화시킨다고 지적되어 온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의 기반이 마련됨
 - 현재 일부 추진중인 평등가족실천교육 및 건강가정교육으로 등으로는 아동학대, 청소년가출,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에는 미흡
 - －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가족시간의 창출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되어 건전한 가족단위의 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가족내 유대 강화 기회로 활용
 - 중소기업의 토요일무 : 21.1%('04)→54.2('05)('05, 산업연구원)
 - 상업주의 문화의 확산과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가족의 안전·건강을 위협하

는 다양한 환경요인 증가

- 가족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 증대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전통적 공동체가치 약화
 -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개인·가족·공동체의 공존문화 조성 필요

□ 정책 추진 현황

-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여행 바우처 사업,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 등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평등가족실천교육 및 건강가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미흡
 - 평등부부교육 252쌍, 가족관계 및 문화관련 교육 상담 74,898명('05, 여성가족부)
- 일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학교 등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가족 등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시도
 - 아이, 부모, 이웃 등 계층간 소통이 원활하고 마을 전체가 아동을 같이 키울 수 있는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용인의 느티나무 도서관, 전북완주 삼오 초등학교 등

나. 실적 및 문제점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 72개 사찰 지원, 81,652명 참여(관광기금 150억원)
-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지원 : 다목적캠핑장(8개소), 국립공원내 야영장 건립(4개소)
-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지원 : 8개 시도 24개소(10억원)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확대 운영 : 07년 66개소 운영
 - 연도별 센터 수 : 3개소('04)→16개소('05)→50개소('06)→66개소('07)
- 건강가정지원센터 참여 : 연 45만명

- 가족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2종)
 - －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중년기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 가족교육·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내실화
 - － 생애주기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실시
 - － 찾아가는 교육 상담서비스 확대 등 가족교육·상담서비스 내실화
 - － 학교, 보육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활성화
 - 가족교육 : 2천('04)→10만6천('07), 가족상담 : 1천('04)→7만6천('07)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 ‘가족형’ 모델 시범지역 3개 마
 - 을 선정(강원 영월, 충남 논산, 전남 장흥)
 - 가족친화 시설·마을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 －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다. 향후 정책 방향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다양한 가족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 문화예술체험, 생태체험 등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취약가족의 복지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예비부부, 장애인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 및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문제 유형별 전문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가족상담 서비스 기관들 간의 연계방안 마련
 - 자녀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는 ‘좋은 아버지상’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 가족문화운동 전개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을 부모와 자녀, 이웃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친화 공간으로 활용
 - － 생태마을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 － 가족친화적 마을 인증 시스템 마련(미국의 친환경마을 인증제도)

3. 가족문화 조성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사업목적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으로 가족갈등의 적극적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 제고
- 가족·이웃·지역이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이웃과 지역공동체의 가족지원 사업
-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체험 사업
- 가족단위 문화활동 분위기 조성 및 세대간 소통 지원 사업

나. 추진실적

□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문화조성사업 실시('07.3월~12월, 14개 단체 14개 사업)

- 이웃과 지역공동체의 가족지원 사업(5개 단체 5개 사업)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조성사업(4개 단체 4개 사업)
- 다양한 세대간 소통지원 사업(5개 단체 5개 사업)

□ 소통과 돌봄이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07.6월~12월)

제4부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제 10 장 고령사회부문 기본구성

- ☐ 이 장에서는 기본계획상의 고령사회부문 정책들에 대해 그간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기존 정책방향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의 정합성을 분석하며, 최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또는 보완 여부와 그 기본방향 등을 도출
- ☐ 본 장에서는 기존의 기본계획 상의 고령사회부문 정책들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제11장에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의 개별정책의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보완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작업 실시
- ☐ 제12장에서 본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고령사회부문의 수정보완 방향을 정리·제시
- ☐ 제13장에서는 개별 정책별로 수정보완 방안을 정리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의 고령사회부문 정책의 기본방향
 - 노인복지전반에 대한 예방과 사전적인 대비,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의 모색, 정책대상자·수혜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활용에 기초하여 노인들이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구체적인 실천전략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 우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이라는 정책영역은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계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다양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가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
 -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위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내용 설정

-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부문은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여가·문화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유쾌하고 신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수행의 목적

〈표 10-1〉 고령사회부문 정책 구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추진계획

부문	영역	하위영역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①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②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③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④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경로연금 확대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①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② 개인연금 활성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②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③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2. 고령사회 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②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④ 요양산업 활성화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 한 생활체육 활성화	①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②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①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①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 경 개선 ②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②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 여건 조성 ③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 ④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제 11 장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고령사회부문의 정책들은 크게 3개의 중영역들로 구분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 ☐ 아래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루어진 이들 영역에서의 정책수행 현황을 점검하여 수정보완 작업의 기초로 활용

제1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부문 중간점검

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검토

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에 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추진이 이루어졌음.
- ☐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만 이루어졌을 뿐 보험료 인상(9%→12.9%, '18)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 또한 재정추계위원회 및 운영개선 위원회 구성·운영이 이루어져 2차 재정계산이 실시되었으며, 2008년 10월 이후 재정전망 등이 공시될 예정임.
- ☐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세어질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나.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실정임.
 - 사학연금은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책임준비 계산 규정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부족책임준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경우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논의를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 정책건의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불안정이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무리없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의 제도적 유사성을 제고시켜가야 할 것임.

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고자 하는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였음.

라.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 연금수급자가 수급시기 연기시 연기한 연도당 6%씩 급여액을 급여하는 안, 60세 이상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경우 연금 감액율은 5%에서 6%로 확대하는 내용의 급여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으나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장기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의 수행현황과 문제점

가. 경로연금 확대

- 2006년 이후 경로연금을 대체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되지 않았던 신규 제도가 도입되었음.
 - 즉,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온 경로연금을 2007년부터 노인의 60%에게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2007년 현재 월 8만4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확대개편하여 실시 중임.
 - 또한, 제도 시행 전에 2009년도에는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등 제도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시한부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60~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대상이 폭 넓은 제도이지만,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제도의 성격이 모호함.
 -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정립,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모색 등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차원에서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나.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 소득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신고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수 또한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 등 일용직근로자 관리도 강화되고 있으며, 4대보험 부과기준 징수방법 일원화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

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공공부문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등은 노사 및 관계부처간 입장차이가 커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임.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마련 등도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과정임.
- ☐ 따라서 기존에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방안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나. 개인연금 활성화

- ☐ 개인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기본계획의 방침에 따라 개인연금 세대 정비의 방안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입안한 바 있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영역의 수정보완 방향

- ☐ 전반적으로 기존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안의 충실한 수행이 요구되므로 그 동안의 수행실적을 반영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공적인 연금제도는 재정안정화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도달하여야 할 것임.
- ☐ 개별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각각 이러한 목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
 - 따라서 현재의 공적연금제도의 내실화 및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2개

의 영역으로 분리된 구조를 통합하여 ‘공적 연금제도의 체계화’라는 소영역으로 통합하도록 함.

- 또한 경로연금은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제도설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장기적인 비전 없이 개별적인 정책들이 도입(예: 기초노령연금제도)되어,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개별적인 정책의 발전방향 제시가 시급함.
- 구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 특수직역연금 - 국민연금의 체계화 및 연계방안 모색을 부각하도록 함.

제2절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부문 중간점검

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평생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등의 사업 등이 실시되어왔음.
 - 기본계획 수립 후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제공인력을 2,000명 채용하였으며, 저소득층 450만 취약가구 중 87만 가구에 대한 등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도시보건지소 6개소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추진을 위하여 토지매매 및 용역과제를 실시한 바 있음.
-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는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내 제한된 자원인 보건소만을 활용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를 보임.

나.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추진
 - 호스피스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화, 시범사업의 실시, 호스피스 수가 마련 등이 수행되었음.
 - 요양병원(노인병원)에 적용되는 수가를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제로 전환.
-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급사업, 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는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 중임.
 - 그러나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는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 보건소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노인운동교육자료 개발, 노인건강대학 운영, 방문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또한 장수체조 개발과 보급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은 국민생활체육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중복성 문제로 '06~'07년 사업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음.
 -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수체조(노인건강체조)를 개발하여 860개소에 보급

-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활성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운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운동강습을 추진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운동 전문인력을 지역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300명 배치)
-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전국노인건강대축제(보건복지가족부): 년1회 개최
 - 전국, 시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문화체육관광부): 년 17회 개최
-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동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따라서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기관간의 조율을 필요로 함.

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수발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2007.4.2)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의 실무조직 구성, 인력배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
 - 1,2차 시범사업에 이어 3차 시범사업('07.4월~'08.6월) 실시하였으며, '08.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본격시행을 위해 08년 4월초부터 요양인정 신청 접수 및 등급판정 실시하였음.
- 수발보험제도 도입은 제도의 이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뀌는 등 제도명칭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도입준비가 진행되었음.

나.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10)의 수립을 통해 '08년 6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은 전국 94%임.

- 단, 수도권외의 충족률은 85%로 낮게 나타남.
- 질 높은 서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양보호사 제도를 법제화함.
 - 2008년 4월 현재 교육기관은 917개소, 수강생은 56,000명, 자격증 발급 6,600명임.
-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함.

다.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전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등록 치매노인수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강화가 이루어졌음.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확충을 위해 7개소 790병상 건립하여 목표대비 190병상 초과달성함.
-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보수비 융자 지원
 - 장기요양병상 수급상황을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장기요양병상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음.
-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효과제고
 - 사례관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치매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음.
- 치매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비전 수립
 - 노인돌봄미바우처 실시를 통하여 치매극복을 위한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였음.
 - 치매 인프라 구축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음.
-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치매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적 도입으로 인하여 치매노인관리시스템과의 중복되는 서비스의 조율을 필요로 함.

- 또한 치매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민간재가서비스 활성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민간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민간 재가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대여사업 추진은 미진한 상태임.

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 체육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작업의 일환으로 야간조명시설 지원을 통한 개방확대가 이루어졌음.
- ☐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음.
- ☐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학생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청에 의한 학교스포츠 클럽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대 참여 주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음.
- ☐ 즉, 제시된 정책은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

나.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의 일환으로는 ‘학생 건강체력평가제’가 시범운영되었고, 직장운동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부 주관으로 체력측정

실 운영이 이루어졌음.

- ☐ 체육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운동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음.
- ☐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회 조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속 개최,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 요약하면,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은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

4.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영역의 수정보완 방향

- ☐ 기본계획에서의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기본방향 달성을 위한 기존 사업의 수정보완과 사업간 조정을 필요로 함.
 -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사업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호스피스 사업의 실시를 통한 보장성 확대, 요양병원 수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간의 조정 등의 수정 보완 실시
 -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서비스,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의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체감복지를 증대시켜가야 할 것임.
- ☐ 중복성의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부처간 또는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사사업, 유사 인력관리 시스템의 조정을 통하여 지역내에서 유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노인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진 상태이므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원활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함.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간의 역할의 조정, 예방-치료-요양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연계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으로 기본계획 수정보완에서 일부삭제를 고려하도록 함.
-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와 통합·조정을 필요로 할 것임.

제3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인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및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과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 중임. 본격적인 주택개조 지원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필요로 함.

나.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위해 고령자 중장기 주거지원 계획(안)과 고령자주거지원법률(안)을 마련함.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 중임

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대한 공무원·교통사업자 교육
 - 저상버스가 도입되었고, 이동편의 시설 실태조사 및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평가 지표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중임.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행이 이루어졌음.
 -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지침 제정 및 전국 33개소에 시범운영 실시중
 - 전국 2,129개소 노인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연장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
 - 도시철도(수도권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 국도변 보도설치(07년 56km²)
- ☐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력 향상을 위한 목표 제시 등을 필요로 함.

나.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 실버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실버마크 150,000매 제작, 배포하였음.
 - 그러나 고령자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은 미실시되었음.
- ☐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시군구별 1개봉사단운영
 - 고령자(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내실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야광 안전모자 21600개) 배포, 농촌지역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 ☐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안

전운전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부족함.

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관련 정책의 수행 현황 및 문제점

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 사업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아직 일자리 희망 노인의 일부에 대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주로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 복지형) 일자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노인 소일거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 ☐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 분야에서의 노인적합 전략직종의 개발·확산의 필요성이 높음.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확산이 요구됨.

나.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노인자원봉사 축제 개최 등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가시화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음.
- ☐ 문화바우처 제공, 소비자로서의 노인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
- ☐ 고령친화적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토지매입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종교시설에 고령친화 문화공간 조성,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실버카페 리모델링 등의 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며 실행되고 있지 못함.
- ☐ 이는 기본계획의 관련내용이 너무 세분화된 상태로 실행계획 없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타 영역에 비하여 우선 순위 설정이나 방향성 제시 없이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임.

- ☐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동시장 참여, 자원봉사,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여가·취미활동 참여 등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 ☐ 노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방정부 사업인 관계로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못함.

다.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농촌진흥청), 전원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등이 계획되었으나 실제 수행된 내용은 계획에 미달하고 있음.
- ☐ 정책방안 중 일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과 요양인프라 확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다른 일부는 지역성을 감안한 지역사회개발의 성격 갖고 있어 세부영역의 정체성이 불명확함.
 - 기본계획 수립 후 다양한 지역사회개발 방안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4개 지역에서 바람직한 고령사회 미래상을 제시할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을 시행중임.
- ☐ 따라서, 장기요양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은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검토 하도록 하며, 본 세부영역에서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개발에 초점을 두도록 함.
 -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이 2007년 1년간 진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업이 내실화되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함.

라.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 ☐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증대하고 있으며,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전후 홍보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효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였고, 효행

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확대, 효행법을 제정하였음.

- ☐ 보호가 필요한 학대노인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며, 예산 확보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피학대 전문센터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방향

-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토록 함.
-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을 따르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 보행자로서의 노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운전자를 고려하여 정책을 보완하도록 함.
- ☐ 노인의 최저생활수준 확보에 초점을 두어와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선 상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기초노령연금제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보장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공적, 생산적 노후생활 추구에 대한 정책적 여력이 존재함.
- ☐ 기존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안의 충실한 수행이 요구되어지므로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기본계획의 구체성을 높이도록 함.

제 1 2 장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부문 수정방향

제1절 기본계획 점검결과의 적극적 반영

1. 기본계획의 종합점검 결과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 큰 성과를 이루었음.
-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연금의 개선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요양보호인프라의 괄목할 수준의 확충 등의 성과를 이룸.
- ☐ 또한 안전한 주거공간과 교통환경 조성은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음.
- ☐ 이에 반해 활동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과 노력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편중되어 추진되었음.
 - 활동적인 노후생활보장의 실천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노인일자리 사업 또한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 복지형) 일자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노인 소일거리 수준에 불과하며,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노후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자원봉사, 여가문화활동 등에서는 정책적 추진노력이 미흡하게 나타남.
 - 더불어, 활기찬 시장경제추구라고 하는 국정지표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노인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요

구됨.

- 또한, 다양화·고도화해가고 있는 노인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어온 정책에서 벗어나 자존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노후의 소득, 건강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미래 노인세대에 대한 배려는 정책에서 배제되어있는 한계를 나타냄.

2. 점검결과에 기초한 고령사회 영역의 수정방향 설정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건강과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노인보호체계 구축이라는 기반마련을 전제로 활동적인 노후생활과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즉, 노후에 최저생활수준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정책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적극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곧 노후에 진입하게 될 장년층에게도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 인구고령화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고령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물리적 및 문화적으로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부각하도록 함.
- 나열식으로 제시된 정책간의 연계방안 모색, 유사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이러한 수정방향에 기초할 경우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구성은 <표 12-1>과 같이 정리됨.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가시화함.
 -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공적-사적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를 가

시화하도록 함.

- 사적소득보장제도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사적인 차원에서의 소득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 소요재원,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제도변화의 반영 및 제도의 체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정·보완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제고방안을 모색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관련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함.
-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노인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우 내실화 및 전문화 방안 마련
 - 전문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을 추가 제시하도록 함.
- 노인의 사회참여실태를 가시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을 제고하여 편리한 노후생활영위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

〈표 12-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수정보안 방안

주요 내용	수정보완 방안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①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②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③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④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변화(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반영 및 제도의 체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정보완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공적-사적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하도록 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 소요재원,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경로연금 확대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①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② 개인연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내용의 유지 및 보완 • 사적소득보장제도의 시행방안 구체화

주요 내용	수정보완 방안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②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③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정책 간 연계방안에 관한 내용 보강 ·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 추가 제시 ·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 노인전문의 제도 도입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 ‘노후안전망구축’ 영역에서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소영역으로 분리
2-2. 고령사회 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②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④ 요양산업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보완작업 -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원활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기본계획 보완 · 장기요양대상 노인 가족 수발자의 사회보장적 지원체계 마련 - 유사·중복 사업 간 역할의 조정방안 제시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①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②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저출산고령사회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내용 일부 삭제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와 중복되는 내용 통합 및 연계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①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기존내용 유지 및 구체화 *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보장’ 영역으로 분리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①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②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경제활동-자원봉사-문화여가활동) 맥락에서 정책방안 제시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국정철학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
②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	- 영역의 부각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주요 내용	수정보완 방안
여건 조성	보강작업 · 노인여가관련 인프라 확충방안 (신규) ·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 전략 마련(신규): 내용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③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 관련 내용에 따른 분리하여 재배치 · 노인복지서비스 →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에서 논의 · 사회참여 기반 확충 →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에서 논의 · 지역사회개발의 성격을 가진 세부영역 →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수정
④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 노인학대와 효문화 조성을 분리하여 재배치 :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 보강 - 고령친화적인 가치기반 조성 방안의 하나로 세대이해 증진방안 제시 : 기존 효문화의 효과적인 활용 등 - 기본계획 수립 후 도입된 독거노인도우미 제도의 반영 및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제시 · 노인학대 → ‘노인보호체계 강화’영역에서 논의 · 세대이해 증진 → ‘고령친화적인 환경 보장’ 영역에서 논의

제2절 노인의 권리와 욕구의 충실한 반영

□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한 노인의 기본 권리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UN이 정한 노인을 위한 원칙과 마슬로의 욕구론에 기초하여 본 부문이 추구해야 할 영역을 설정하고자 함.
- 그에 따라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임.

1. UN의 노인을 위한 원칙

- UN의 노인을 위한 5개의 원칙인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립(Independence)의 원칙
 - 소득보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스스로의 힘을 통해 적절한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및 훈련의 기회보장으로 노인은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노인은 개인적인 기호와 능력에 적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으로써 자립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
-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 참여는 노인을 적극적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임.
 - 예를 들어 노인은 사회와 통합하여 노인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젊은 세대와 더불어 노인들의 지식과 기량을 공유하여야 함.
 - 또한 사회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며,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위치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은 노인권익옹호운동 또는 노

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함.

□ 보호(care)의 원칙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가치 체제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보살핌과 보호의 혜택을 누려야 함.
- 노인은 의료혜택을 누려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복지를 최적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인은 그들의 자율성과 보호 및 간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또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재활, 사회적 또는 정서적 격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노인은 그들의 존엄성, 신념, 욕구 및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시설 또는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라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

- 노인은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가짐.

□ 존엄성(Dignity)의 원칙

- 노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됨.
- 노인은 연령, 성별, 민족이나 인종배경, 장애나 다른 지위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경제적인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함.

2. 마슬로의 욕구론

□ 마슬로의 욕구론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계별 요구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생리적 욕구: 음식, 물, 수면, 배설, 성이 대표적인 생리적 욕구로 인간존재의 생물학적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됨.
 - 생리적 욕구의 각 측면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음 단계 욕구들에 앞서 충족되어야 하며, 모든 욕구 중 가장 강력함.
- 안전에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욕구와 같은 안전에 관한 욕구가 생김.
 - 안전욕구는 환경 내에서의 확실성, 안전, 질서, 고통의 회피, 보호 등에 대한 욕구임. 안전욕구는 사회의 법, 질서, 권위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더 절박해짐.
- 소속과 애정의 욕구: 생리적 욕구 및 안전욕구가 보장되면 동반자와 가족에 대한 욕구가 생겨(관계) 남들과 어울리고 애정을 나누고 싶어함.
 - 집단의식이 개인의 주요목표가 되는 것임.
 - 건전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
 - 애정의 욕구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도 포함하는 쌍방적인 것임.
- 자존의 욕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 자기존중은 능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의미하여, 다음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은 명성, 수용, 주목, 평한, 영광과 명예를 말함.
- 자아실현의 욕구: 마지막 단계의 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가 충족되면 발현되는 욕구로,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임.
 - 즉,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려는 욕구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의 구체적인 형태이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매우 큼.

[그림 12-1] 마슬로의 욕구론



제3절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 ☐ 기본계획 점검결과와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본 부문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정책과제를 개발하도록 함.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 비전

- ☐ 노인의 기본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행을 통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 고령친화적인 사회기반 조성을 통하여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노후생활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영유가 가능한 사회 구현

2. 정책목표

- ☐ 노인복지정책의 수준 향상: 노인의 최저생활수준 확보에서 적정생활수준 확보로 정책목표를 상향조정함.
- ☐ 노인복지정책 영역의 확대: 생존의 욕구 충족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정

책으로 기본계획이 포함하는 내용을 확장함.

- ☐ 노인복지정책의 체감도 제고: 정책의 연계성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하도록 함.
- ☐ 노인복지정책의 지평 확장: 미래의 노인의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준비가 가능하도록 함.

3. 정책 수단

가. 노후 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및 의의

- 사회구성원 누구나 노후에 경험하게 될 위험인 소득상실과 질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노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마슬로의 욕구론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노후생활의 실현

☐ 정책수단

1-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1-2.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소영역	세부영역
1-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①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및 개선 ②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및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재구조화 ③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2.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① 사적 예방적 보건의료체계구축 ②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③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나. 노인보호체계 강화

☐ 주요내용 및 의의

- 노화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UN의 보호와 존엄성의 원칙을 실현함.

□ 정책수단

2-1. 노인요양보호체계 강화

2-2. 노인권익 보호 강화

소영역	세부영역
2-1. 노인요양보호체계 강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수급대상자 확대 ② 노인요양인프라확충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구축
2-2. 노인권익보호 강화	①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② 독거노인의 보호강화 ③ 노인의 권익 보호

다.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 주요내용 및 의의

- 노후에도 자아실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인 노후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함.
- 마슬로의 욕구론의 상위욕구 충족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및 수준 향상
- UN의 참여와 자아실현의 원칙
-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에 기여

□ 정책수단

3-1. 노인의 사회적 기회 확대

3-2.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 제공

소영역	세부영역
3-1. 노인의 사회적 기회 확대	①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②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
3-2.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 제공	①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라.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의의

- 노인이 **Aging in Place**의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교통, 주택환경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축과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함.
- 고령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생활의 편리성 증대
- UN의 자립의 원칙 실현

☐ 정책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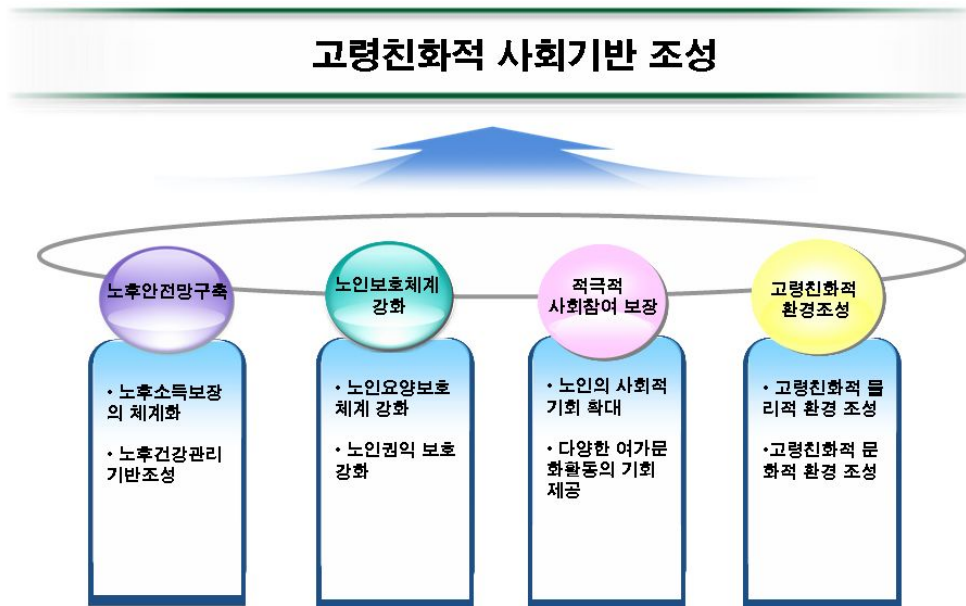
4-1.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구축

4-2. 고령친화적인 문화적 환경 구축

소영역	세부영역
4-1.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②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③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2. 고령친화적인 문화적 환경 조성	① 세대간 이해증진
	② 노후준비를 위한 기반조성

☐ 이러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정리하면 [그림 12-2]와 같음.

[그림 12-2]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 <표 12-2>와 [그림 12-3]에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된 정책방안을 수정보완 전의 내용과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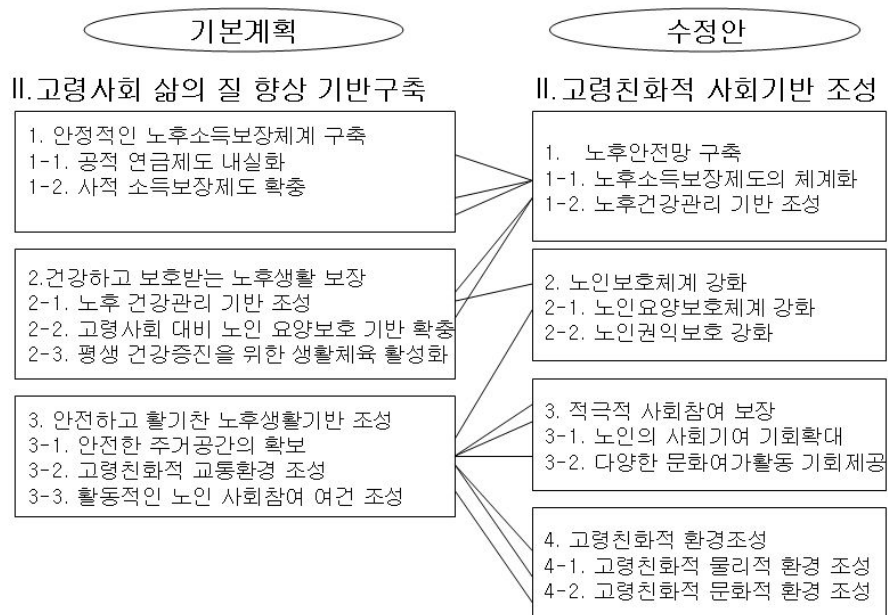
<표 12-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수정 전후 비교표

수정보완 전	수정보완 후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①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②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③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④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경로연금 확대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 노후안정망 구축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①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및 개선 ②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및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재구조화 ③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수정보완 전	수정보완 후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①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② 개인연금 활성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②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③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1. 노후안전망 구축 1-2.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②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③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2. 고령사회 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②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④ 요양산업 활성화	2. 노인보호체계 강화 2-1. 노인요양보호체계강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수급대상자 확대 ② 노인요양인프라확충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구축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①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②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2-3. 노인권익보호강화 ①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② 독거노인의 보호강화 (3.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서 이동) ③ 노인권익 보호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4.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
3-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①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4-1.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②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③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①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②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4-2. 고령친화적인 문화적 환경 조성 ① 세대간 이해증진 ② 노후준비를 위한 기반조성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②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	3. 활동적인 노인생활 보장 3-1. 노인의 사회적 기여 기회 확대 ①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수정보완 전	수정보완 후
여여건 조성	(국정철학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신규) 3-2.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 제공 [1] 노인여가문화활동 인프라 구축 (신규)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3]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내용별로 분리하여 재배치)
[4]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내용별로 분리하여 재배치)

[그림 12-3] 기본계획의 수정 전후 비교



제13장 고령사회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제1절 노후 안전망 구축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가.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및 개선

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가) 필요성 및 목적

☐ 2007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안정 요인 상존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당초 방안이 아닌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변형되어 통과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소득대체율 인하만 이루어졌을 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상존

☐ 제2차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위원회 및 운영개선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2차 재정계산이 실시되었음.

－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혁방향, 제도개혁 시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불가피함.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주요성과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07.7.3)

- 소득대체율을 인하('07년 60% → '28년까지 40%로 단계적 조정)하여 재정안정화 기간을 연장('47년→'60년으로 13년 연장)
- 그러나 당초 재정안정화 법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9%→12.9%, '18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 불가피

〈표 13-1〉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단위 : 조원, %, 배)

연도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보험료율	적립률 ²⁾
	계	보험료	투자수익			경상 가격	불변 가격 ¹⁾		
2009	47	25	22	10	37	317	282	9.0	29.2
2010	52	27	24	10	42	359	310	9.0	31.5
2015	77	37	40	17	60	619	461	9.0	32.4
2020	113	49	64	31	83	989	635	9.0	29.5
2025	142	63	79	55	87	1,402	776	9.0	23.9
2030	183	78	105	91	93	1,856	886	9.0	19.4
2035	208	90	118	141	67	2,234	920	9.0	15.4
2040	234	104	130	213	21	2,437	866	9.0	11.3
2041	237	107	131	228	9	2,446	844	9.0	10.7
2042	240	109	131	243	-3	2,443	818	9.0	10.1
2045	246	119	127	291	-45	2,354	722	9.0	8.2
2050	243	139	103	379	-136	1,861	492	9.0	5.3
2055	199	155	44	472	-273	769	175	9.0	2.2
2058	161	164	-3	539	-378	-254	-53	9.0	0.2
2060	172	172	0	589	-417	-	-	9.0	-
2070	225	225	0	842	-617	-	-	9.0	-

주: 1) 2005년 불변가격

2) 당해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을 뜻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제2차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및 운영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재정추계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 회의 18회, 전체회의 9회 개최
- 운영개선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 회의 6회, 전체회의 3회 개최

- '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개년도 추진사업인 관계로 국민연금법상 '08년 3월까지 재정계산 완료, '08년 10월 이후에 재정계산결과 공시예정

다) 추진방법

☐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 2007년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불가피
 - － 잦은 제도 개선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개혁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개혁이 불가피
- 2차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개혁시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할 제도개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 2차 재정계산 실시

-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계산을 시행하는데 통상 2년이 소요됨.
 - － 2007년에 시작된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결과가 2008년 10월에 공시된다는 점에서 계속과제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2차 재정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도 계속과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1차 재정계산과 달리 2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평가 기준 등 재정계산 및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과 관련된 중요 연구과제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
 - 1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평가기준 등 재정안정화 관련 주요 주제들이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아닌 제도발전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
 - － 1, 2차 재정계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정계산 업무절차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2)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가) 필요성 및 목적

- ☐ 국민연금과 달리 제도 성숙단계에 진입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함.
 - 2008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약 1조 2,500억원, 군인연금이 약 9,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제도 현대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함.
-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인연금은 군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군인연금 가입대상자의 대다수가 45세 이전에 강제 퇴직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시급함.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주요성과
 -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구성·운영('06~'08)
 - －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06~'08)
 - －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제도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
 -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08~)
- ☐ 문제점
 - '07년 1월 공무원연금 제도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임

- 제도개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재정계산업무를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계산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특정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대두
- 특수직역연금간의 제도개선 논의의 구체성과 논의진행 속도에 있어 차이 존재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제도개선 논의를 너무 늦게 시작하였음.
 - 논의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선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다) 추진방안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계산 실시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6년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재정계산을 실시하였음.
 - 반면 사학연금은 위원회가 아닌 특정기관(한신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재정계산으로 대체하였음.
 -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재정계산 절차 마련이 필요함.
- 군인연금 역시 특정기관(국방연구원)에 재정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이를 재정계산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음.
 -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재정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재정계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재정계산을 통한 부담 및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 기본계획 수립이후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부담 및 급여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조치가 없었음.
 -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공무원연금의 경우 제도개편 대안별 책임준비금 적립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 사학연금은 책임준비금 계산규정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에 부족책임준비금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음.
- 연금제도 개편방향과 책임준비금 적립여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 －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불안정과 책임준비금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3)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가)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연금체계 구축 필요
 - 연금재정의 안정화 뿐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조기퇴직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은퇴를 늦추는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급여체계 조정(독일, 스위스, 미국 등)
- 현행 국민연금 급여제도는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령사회의 고용형태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
- 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 개인의 근로능력과 선호를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개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금 수급제도는 개인의 퇴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비자발적 조기퇴직시 국민연금 수급시까지 고령근로자의 소

득 보장을 위한 제도 구비 : 독일·스웨덴·오스트리아·덴마크(부분연금), 스위스(가교연금)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2007년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고령자 근로유인을 위한 연금체계’가 구축되었음.
- 연기연금제도 도입
 -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가 수급시기를 연기할 때 연도당 6%씩 급여액 증액
- 조기 연금수급 감액률 조정
 -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60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비율은 5%에서 6%를 확대함으로써 조기퇴직을 억제함.
- 소득활동 인센티브 부여
 - － 소득이 없이 60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55~59세 연령군의 경우는 소득활동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는 소득활동 기간 1년당 6%씩 증액한 연금 지급
 - － 60~64세 연령군은 소득활동기간 동안 기존에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며 변경 후에는 연금액의 50~90%를 지급하고 소득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금 지급

다) 추진방안

- 2007년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한 성실한 추진이 요구됨.

나.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및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재구조화

1)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가) 필요성 및 목적

- 민관 교류 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차원에서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간에는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
 -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 일례로 공무원연금에 15년,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할 경우 23년간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적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음.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주요성과
 - 공적연금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06~'07)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용역발주 및 보고서 확보('07. 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공적연금 연계방안에 대한 부처협의 진행
 - － 연계방안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도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입법절차를 주요 국정과제로 인계하였음('07. 12).

다) 추진방안

- 가입기간 연계의 원칙 및 연계의 내용
 - 연계의 기본원칙, 연계 선택여부, 연계 대상자, 연계연금 급여수준, 연금 수급연령과 관련된 연계방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공적연금 개혁협의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함.

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가) 필요성 및 목적

- ☐ 현 노령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격 규명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현 노령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및 제도발전방향에 관한 논란이 거세질 것임.
-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기초연금(Universal Coverage, Basic pension)과 달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속성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에 관한 청사진 마련이 시급함.
- ☐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과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세질 것임.
-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의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설정하였음.
 - 2007년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200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당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비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약화된 제도 개선안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논의가 불가피함.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계 설정 및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불가피함.
- 이에 따라 현재 총리실 내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설치, 복지부 내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편방향을 논의 중에 있음.
 - 통합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통합방안 논의를 위하여 개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07. 4월 국회 통과)
 - '08.1월부터 노인대상(70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 시작
 - '08.7월부터 65~70세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급여인상
 - － 65세 이상 노인의 60%(301만명)가 월 8.4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령)
 - － '09년에 추가로 60만명에게 확대하여 전체노인의 70%(363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할 예정임.
-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08. 7)
 - 소득대체율을 인하('07년 6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기금소진 시점을 연장('47→'60으로 13년 연장)
 - － 그러나 '70년대 중반까지 재정안정이 가능하였던 당초 재정안정화 방안보다는 대폭 후퇴한 재정안정화 방안임.
 -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안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의 필요성 대두
 - 국민연금의 구조개편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임.
 - － 현재 균등부분(A)과 소득비례부분(B)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본틀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의 구조개편 논의가 제기될 전망
 - － 특히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기초노령연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다)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일본의 경우, 지난 1985년 연금개혁을 통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이원화시켰음.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이원화시켰음.
 - －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을 도입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하

였으나, 다수의 납부 예외자로 인한 기초연금 공동화 현상 및 보험료 미납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전체 국민연금 재원 소요액의 50%를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97년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형(NDC)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1985년경부터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정당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침내 1997년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었던 연금 체계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100% 소득비례연금인 명목확정기여형(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과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이원화시켰음.
 - －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대상의 최저보증연금(Minimum Pension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된 공적연금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소득비례연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였으나, 연금조사(Pension Test)를 통해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음.
 - －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약 53% 정도에 불과함.
 - －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만액 기초연금 수급자(Full Basic Pensioner)의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의 8% 정도에 불과함.

라) 추진방법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기에 연금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연금

개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항임.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붕괴되는 경험(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등)을 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 당시와 상이해진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개혁이 순탄치 않은 실정임.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의 경우 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후 세대에 미칠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도 참여자들의 가입 유인제고 및 후 세대 부담 완화 등의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편 방안 모색이 필수적임.
- 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및 통합 소위원회에서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통상 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구 및 토론을 거쳐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다는 통합 소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제도 개편 대안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국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방향 및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위원회 밖의 연금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총리실의 공적연금개혁협의회 등)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확정시키도록 함.

다.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가) 필요성 및 목적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완적인 다층보장체계를 이룰 때 잘 구축될 수 있고 또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보완체계의 중요한 축인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 세제보완은 아직 논의나 건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도입 역시 아직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완료수준에 머물고 있어 계획대로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유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그리고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는 노조의 반발, 노사 및 관계부처 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퇴직연금 교육
 - － 노사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관한 무료교육을 전국적으로 총 64회, 3,403명 실시
 -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 － 자체적인 제도 설계가 어려운 54개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절차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
- 퇴직연금 세제 보완
 - 2007년도 조세감면평가서 및 건의서 제출(퇴직급여보장팀-2110, '07.5.15)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 인정 건의(현행 개인연금 합산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 별도 연간 260만원 소득공제)
 - 노·사·정·전문가의 실무논의 기구인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통해 세제혜택 개선 방안 논의('07.11~12월, 총 4회)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퇴직연금에 관한 지표개발 편성하여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였으나 공기업 노조의 반발
 - －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공기업 평가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완화(퇴직연금 도입 공기업만 가점부여, 최대 10점 격차 ⇒ 미도입 공기업의 도입노력에 가점 부여, 최대 3.5점 격차)
- 컨설팅·무료교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계획」(퇴직급여보장팀-3693, 2007.9.6) 마련 배포
-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확산에 제약이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 4인 이하 사업장의 확대적용을 위한 적정 시기, 급여 및 부담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노·사·정 전문가의 실무논의 기구인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방안 논의
-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과 관련 노사 및 관계부처 간 입장차이가 커 합의 도출 어려움이 있음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선택적 강제화 방안에 대하여 노·사·정 전문가 실무논의기구인 퇴직연금실무위원회에서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사단체 및 관계부처 간 이견대립으로 합의도출 곤란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도입

- 퇴직연금제도 예금자보호 적용에 대한 의견을 재경부에 송부
- 퇴직연금제도 예금자보호를 위한 관련 공청회 등에 참석하고 퇴직연금제도 지급보장 장치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 노·사·정 전문가의 실무논의 기구인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다) 추진방법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퇴직연금 세제 보완,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도입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인 추진

2) 개인연금 활성화

가) 필요성 및 목적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완적인 다층보장체계를 이룰 때 잘 구축될 수 있고 또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보완장치 중 개인연금의 활성화는 특히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방안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입안되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자산운용 수단을 다양화하며 개인연금 펀드 운용성과의 투명성 제고장치,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관련 다양한 펀드상품 개발 및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이 2007년 계획대로 이루어짐.
 -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적정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입안됨.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실적이 없음.

다) 추진방법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2.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은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여러 가지 질환이 중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노인의료비는 증가 추세이며 보험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7%에서 1995년 12.2%, 2004년 22.9%, 2006년 25.9%로 증가(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치료위주, 고급기술위주로 발전하여 예방위주, 저급기술에 의한 진단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매우 더딘 편임.
 - 당뇨, 심장질환의 증가, 비만 질환 등과 같은 현대 생활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대
 - 운동, 식습관을 비롯한 건강생활습관, 전 생애에 걸친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함.
 - 이를 위해 현 보건의료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 장기요양 서비스 등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질개선을 필요로 함.

2) 현황 및 문제점

-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체계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나, 점차 평생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임신기부터 영유아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장년기, 노년기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체계 취약, 학교의 보건교육 부족, 사업장의 불건전한 환경으로 인한 높은 사업재해율 등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 관행이 이루어져, 투약과 검사위주의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인 보건소에서도 치료 중심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 및 범정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서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안을 제시하여 하였음.

○ 그러나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의 미비, 농촌의 경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대한 변화 전망이 부재, 보건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능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 － 사전예방적이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모자보건, 학교보건, 직장보건, 노인보건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체계화
-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학교 건강상태 평가, 임신·출산 total care, 지역산업보건센터 확충 지원 등을 실시함.

○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제공인력 2,000명을 채용하고, 방문건강인력의 전문교육을 실시, 저소득층 450만 취약가구 중 87만 가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07년).
-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및 서비스에 대한 DB를 구축하며, 사업의 표준화

평가체계를 개발함.

-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은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취약계층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건강증진 및 예방 사업을 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기능전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며, 도시 및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인력보강, 지역보건 의료체계 개선사업 지원에 활용하고자 함.
- 대구북구, 인천계양구 등 도시보건지소 6개소에 대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함.
- 도시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증대 및 보건의료안전망구축
- 보건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보육시설 및 학교 등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부족

○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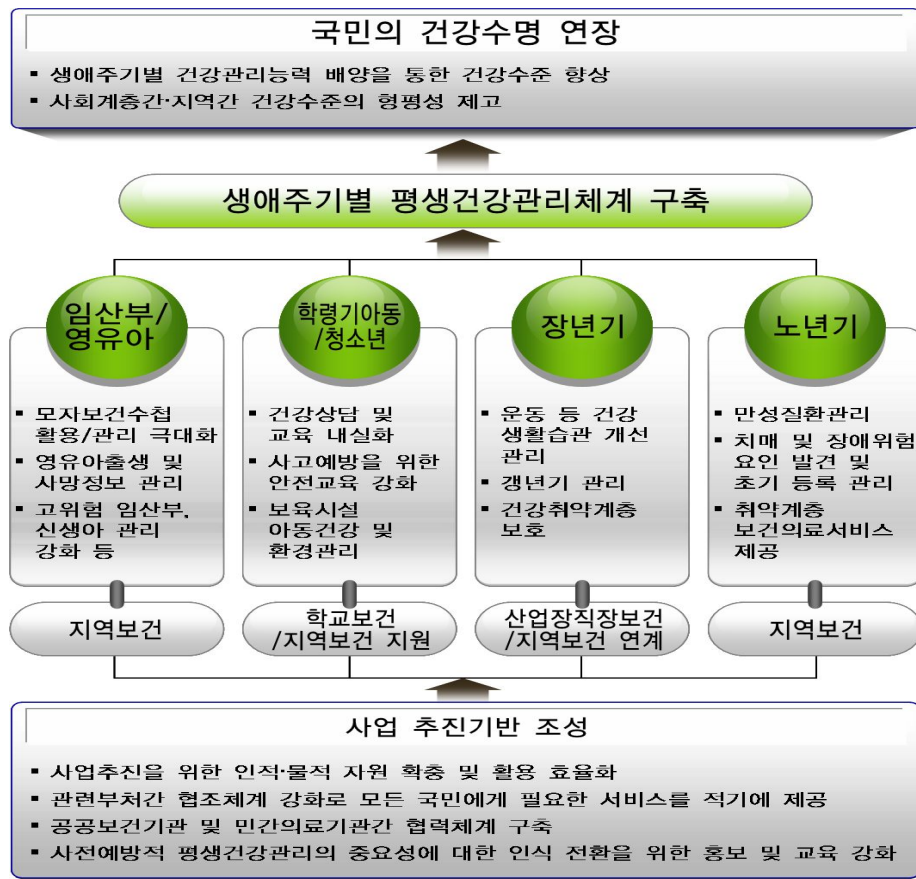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화관련 연구 필요성에 따라 설립을 추진중임.
- 「노화종합연구소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연구소 설치의 적합성을 검진하고 설립부지를 확보함. 또한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중임.

3) 추진방법

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지속적 추진

- ☐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이 되기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관리체계의 기본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그림 13-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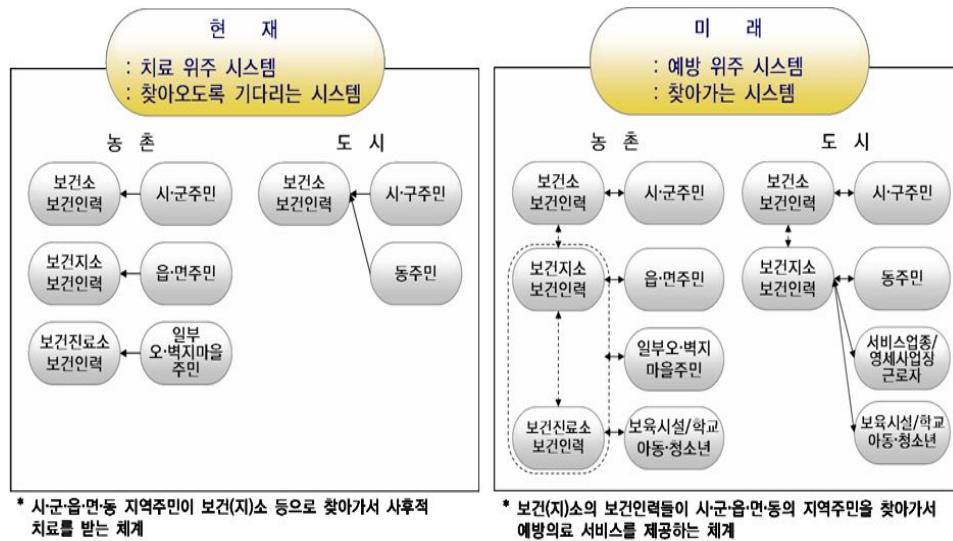
나) 예방 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의 재편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개선하여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저소득층 진료 및 전염병 관리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로 전환

- 만성질환 예방 관리의 중요 영역인 식생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영양교육 실시

[그림 13-2] 보건소 시스템의 예방위주 기능 전환 개념도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을 건강상태 등에 따라 등급별(1~4군)로 구분하고, 방문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 1군: 주1회이상 집중·지속관리, 2군: 월2~3회 정도 정기적 관리, 3군: 2~3개월에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관리, 4군: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 가능하나 문제발생시 도움
- 건강한 주민에게는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관련 홍보 실시
- 고위험 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치료정보, 식이요법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기능 전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개선

- 도시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보건지소 우선 설치
- 농어촌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수행
 - －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
 - －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동사무소, 경로당, 복지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에 예산·장비 우선 지원 인센티브 부여
- 도시 및 농촌지역 보건지소가 방문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력을 방문보건사업에 확대배치
 - 은퇴한 의사, 간호사, 병원 영양사 등의 지역인력 및 각종 민간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사회 등)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존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관련 지원 조직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개선사업 지원에 활용

라)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 노인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유지, 노화 및 노인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실시
 -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노화종합연구를 통해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의 건강 현황 및 건강관리 실태 분석과 노인건강관련 정책 대안 마련
 - 노인병, 건강, 식생활과 장수 등 연구 및 분야별 연구 체계화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
 - 치매 예방, 진단·치료기법 등 효과적인 수발체계 연구
-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구체적 설립 및 운영체계 개발

나.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1) 허약노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가)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미등급자(4~5등급)로 판정된 허약노인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악화를 초래할 위험에 있음. 따라서 허약노인의 건강악화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도입 필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등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 ‘노인보건센터’로 연계하여, 근력강화운동 및 노인영양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양보호대상노인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

나) 현황 및 문제점

- ☐ ‘07년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전국 16개소)의 ‘허약고령자 건강증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나,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사업 종결
- ☐ ‘08년부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 추진 중(전국 251개, 보건소 중 24개 보건소에서 실시 중)

다) 추진계획

- ☐ 보건소의 ‘노인보건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미등급자(허약노인)의 관리체계 구축
 - 현 보건소 치매센터와 통합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
 - 허약노인의 case management 방식으로 개별 관리체계 실시
- ☐ 허약노인의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지원
 -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백세 하나, 둘, 셋, ‘건강백세 건강밥상’ 프로그램 실시

2)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가)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의료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증가(1990년 8.0%→2007년 27.6%)
- ☐ 노인의 신체 특성상 만성질환이 많으며,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치료보다 관리의 개념을 요구, 질환에 따른 통합적 관리가 요구됨.
 - 노인환자에게는 지속적 관리(continuum of care)와 포괄적 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고령화에 따른 노쇠증상으로 노인 스스로나 가족들이나 노인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방침 선택에 대한 안내를 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 노인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과 협진을 필요로 함.
- ☐ 따라서 노인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의료비용의 절감효과를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의 도입 검토를 필요로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 노인 의료비 과다 지출
 - 노인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05년 노인의료비는 4조 2천억원이었으며, '20년이 되면 약 2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 의료의 분절적이며 중복적 이용으로 인해 진료 및 약물의 오남용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단과 전문의가 일차의료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환자가 전문진료과를 선택하며, 중복적인 만성질환으로 여러 전문과의 진료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약물의 과다이용 및 부작용이 우려됨.

□ 노인 건강관리의 일관성과 통합적 관리 부족

- 발병질환에 따른 복수의 병의원 이용으로 인하여 노인의 운동, 식습관, 건강상태의 개개인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부족
 - － 지속성과 포괄성이 결여된 의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저하
 - － 의료이용의 혼란

다) 외국사례

□ 주치의제도는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의료서비스의 문지기 시스템과 등록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지속성과 조정을 추구하고 있음.

○ 영국 주치의제도 : NHS 보험서비스

- － 영국전역에 걸쳐 인구비례로 설치되어 있는 의원에 근무하는 GP(가정의)를 주치의로 지정하며, 서비스는 NHS가 커버하는 진료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진료에는 경우에 따라 전화상담, 방문서비스도 제공
- － 영국의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하면 주치이에 의해 NHS 트러스트(병원)의 외래나 입원으로 의뢰되어 진료
- －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비와 관리운영비가 타 국가에 비해 적게 발생
- － 평균수명, 의료의 질, 영아사망률의 척도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낮고, 국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수용성을 보면 환자들의 경험에서 좋은 평가

○ 미국의 주치의 제도 : 관리의료(Managed care system) 방식

-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는 개인별 특성(성, 연령, 질병 등)에 무관한 정액 보험료(payment)에 의해 보험재정을 조달하고 일차 의료의사가 처음진료를 맡고 전문의에게 이송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문지기 역할을 하는 형태, 대부분의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실직적인 주치의 제도형태인 MHO에 가입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s)는 일차의료의사의 문지기 역할이 없어 진료의 조정을 가입자 본인이 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의사를 정하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
- 미국의 의료서비스 가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경영중심의 관리의료와 동시에 일차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일차의료기관에 위임하여 일차의료를 강화

○ 일본의 주치의 제도

- 노인보건시설 개원 의사가 노인환자의 주기적 관찰, 재가방문서비스에 대한 지휘·감독을 진료소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왕진서비스도 이루어짐.

○ 독일의 주치의 제도

- 지역질병금고(AOK)의 주치의제도 도입('97), 외래의사 중 보험의사는 가정의와 전문의로 나누는데 이중 주치의 역할은 가정의 중 독일 보험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 함.
- 주치의 참여의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의사자격 부여시 의료의 질 보고를 중요시함.
- 주치의 네트워크 형성
- 예산책임계약
- 환자의 자발적인 주치의제 참여유도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 이용시 3개월마다 진료를 받은 의사 1인당 10유로를 본인부담해야 하나 주치의를 이용시 본인 부담면제

라) 향후 정책방향

□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 수가제도 변화: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
 - 일상 진료행위에 대해 당분간 행위별 수가제 유지 → 공급자와 합의 통해 인

두제범위 확대

- 주치의의 자격 기준 및 공급방안 검토
 - － 일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한정
 - － 주치의 자격을 모든 개원의에게 개방
 - － 특정 전문의로 한정할 경우 원활한 주치의 인력 공급에 장애가 초래
- 주치의 제도의 제공서비스 개발: 진료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 전화상담과 방문 진료, 시간외 진료, 건강검진서비스
- 노인주치의 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3)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가) 필요성 및 목적

-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성질환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 환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여러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성인과 차별화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노인들은 만성질환과 중복질환의 치료를 위해 동시에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병원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 전문의를 통한 치료로 인하여 노인환자의 전체적인 상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료 약물의 과다진료 및 치료 효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질병 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노인병 전문의의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를 필요로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의 질환의 특성과 보건의료 이용 실태

○ 높은 만성질환율과 질환의 중복

- 노인의 90.9%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 중 2가지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19%, 3가지 이상은 54.8%로 전체 노인의 약 3/4가 최소한 2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음(정경희 외, 2005).

○ 노인의 상당수가 중복적 약물을 복용중이며, 또한 장기적인 복용의 비율이 높음

- 노인의 57.6%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음 그 중 23.5%는 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음(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 최근 3개월간 약물 또는 건강식품을 복용한 비율이 전체노인의 81.2%이며 그 중 의사 처방약은 88.9%임(정경희 외, 2005).

☐ 우리나라의 전문의는 26개 전문의 제도가 설치되어있음.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정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결핵과

☐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노인특화 과정 부족

- 의과과정에서 노인과 노인병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수적인 과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의과대학 중 일부만이 노인의학 또는 노인학, 성장과 노화, 가족·성장·노화와 같은 노인을 특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중 또한 매우 미비하여 1학점~3학점으로 배정되어 있음.
- 또한 의사국가고시에서도 노인 또는 노인병 질환에 관한 내용은 없음.

☐ 노인병을 전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한노인병학회와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병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시험을 통해 인정의를 양성함.
- 2006년까지 노인병 인정의를 발급받은 수는 대한노인병학회 2,547명, 대한임상노인의학회 1,137명으로 나타남.
- 현재 민간에 의한 노인병 인정의 제도는 인정의에 대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인정의 취득으로 인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하여 확대의 한계를 갖고 있음.
- 노인병 전문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현 다양한 전문의를 이용하는 노인의료체계는 노인의 복합적인 만성질환에 대해 각 전문 진료과의 의사 간 정보교환을 담당하고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음.
-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처방약 복약경험이 높으며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의료체계에서 노인환자는 각 진료과에서 별도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으며 투약관리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만으로는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함
- 노인병 인정의의 사회적 인식이 낮고 노인진료만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의료 역할자로서의 기능이 미흡함

다) 외국의 사례

-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양성형태
 - 영국,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병전문의 및 노인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병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후에 추가적으로 노인병 전문의를 취득하도록 함.
 - － 영국과 호주에서는 타 전문의 과정과 동일하게 노인병전문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13-2〉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양성형태

	양성형태	국가
추가전문의 방식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3년간 노인병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쳐 노인병 전문의가 되는 추가전문의 방식	일본,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전문의 방식	타전문과목과 동일하게 의사자격 취득 후 4년간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 노인병전문의 활성화 정도

- 미국의 경우 노인병전문의 자격 인증이 실질적인 진료활동이나 구직 가능성 및 연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인병전문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영국의 경우 노인의학이 가장 큰 전문분과로써 노인의 급성 및 재활 치료에 있어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병전문의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매년 노인병전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임.

라) 정책방안

☐ 노인병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 노인병전문의 제도도입의 타당성
- 노인병전문의 양성형태: 일반 전문의 후 추가적인 전문의 제도 도입 또는 별도의 전문의 제도로의 도입
- 노인병전문의 수요 개발

☐ 의과대학의 노인의학 과정 개설

- 의과대학 과정에서의 노인의학 과정 개설

☐ 국가의사고시에서의 노인의학 과목 개설

4)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적 대상으로 노인질병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가 필요함.
- 노인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 의치 서비스를 비롯한 노인의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재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가 요구되어짐.

나)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암 등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 호스피스 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한 표준화
 - 호스피스 수가 개발 및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화를 위하여 「호스피스제도 도입방안 마련 추진위원회 및 TF」 구성('07.8월), 호스피스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 제공범위, 호스피스 기관 인력/시설/장비 기준(안)에 대한 검토 중
 - 노인의 질환특성을 고려할 때 재택서비스의 급여 확대, 인플루엔자, 폐렴, B형간염 등 고령자에게 필요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예방서비스, 언어치료 및 배변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의 급여화가 매우 미흡
- 노인질병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발 및 시행
 - 요양병원 일당수가에 대한 시범사업('05.7~'06.6)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안)개발,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형 수가(안) 의결('07. 9.), 관련 법령의 개정 공포 후 시행('08.1.)

□ 노인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 노인의치보철사업

-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진실시
- 의치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9,000명 이상에게 의치보급

○ 방문구강보건서비스

-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위해 16,000명 이상의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스케일링 및 구강교육 등 실시
- 사업의 행정적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의치제작 및 유지 관리는 전적으로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맡고 있어 매년 지역단위에서 업무체계 구축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다) 추진정책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호스피스 서비스의 보험급여화

- 말기 질환자들이 과도한 치료비용 대비 적은 효과 보다는 품위를 지키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급여화 하도록 함.
- 호스피스 서비스의 요양급여기준과 시설기준 등을 제정하고, 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수가를 개발함.
- 호스피스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법안 제정 보다는 기존의 법안을 개정 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법의 제정을 검토함.

○ 방문간호 서비스의 보험급여화

- 거동이 쉽지 않은 노인이나 퇴원한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추진함.
- 직접 방문서비스 외에 화상을 통해 진단하고 관리하는 U-healthcare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함.

○ 노인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 노인의 의치보철에 대해서는 보험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함. 의치보철 관리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을 마련함.
-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과위생사를 동반한 방문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

□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 호스피스 서비스는 말기질환자의 과도한 치료비용을 줄임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적절한 수가를 개발하도록 함.
- 재택 노인환자에 대한 방문수가도 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 발생할 비용이나 노인이 질환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가를 산정함.
- 왕진진료는 현재 진료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요양기관에서의 의사 진찰료와 동일하여,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재산정이 필요함.
- 의치보철에 대한 수가수준도 적절한 수준에서 현실화하고, 의치의 관리를 위한 수가도 개발함.

□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등 노인구강질환 관리
- 노인 등 구강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방문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구강검진, 교육, 개별 구강질환예방서비스(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및 필수구강진료 제공
 - 저소득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기금과 지방비로 수행되어짐.

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1)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은 건강실천행위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데, 고액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주요 다빈도 만성질환은 운동 및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운동의 생활화는 노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회복 및 유지, 증진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생활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 활기찬 노년생활로 이어져 각종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Health plan 2010) 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분야의 운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는 바로 건강 및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의 규칙적 실천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운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은 노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감소의 효과가 예상됨.

2) 현황 및 문제점

□ 허브보건소 시범사업 운영 현황

○ 사업내용

- － 보건소를 대학,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 허브기관으로 육성함. 즉, 허브 보건소를 통해 노인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함.
- － 이를 위해서, 전국 시도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선정하여 2006년에는 ‘노인건강대학’ 및 ‘방문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시킴.
- － 보건소 운동전문인력을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공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순회 파견하여 운동지도 서비스를 제공

○ 미흡한 점 및 개선 필요사항

- －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사업은 지역사회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운동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민간단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

- 국민생활체육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중복성 문제로 '06~'07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함.

□ 노인건강대학운영

- 노인운동 교육자료 개발 보급
 - 허약노인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동영상 CD 및 매뉴얼 개발
 - 노인건강증진 KIT 및 노인영양교육자료(건강백세 건강밥상) 개발 보급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노인건강대학 운영(15개소), 운동지도자 과정(12개소), 가정방문·시설방문운동(14개소), 노인영양관리(1개소) 운영
- 주요성과
 - 노인건강운동의 효과를 측정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행 후 허약노인의 대상 범주에서 벗어난 기능 향상율은 32.4% 개선됨
 -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 확산 유도

□ 방문 운동프로그램 실시 현황

-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현황

-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개최: 년 1회
-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년 1회
- 시·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년 1회

□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 장수체조(노인건강체조) 지원
 - 노인건강 장수춤 체조 지속적 보급, 장수춤 체조 보급용 CD 및 비디오 제작 배포
-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 노인운동 전문인력이 지역 노인복지시설 등에 방문, 노인에게 적합한 체육활동

지도('06년 250명 → '10년 450명 증원)

－ 노인전담 체육지도자 배치

-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 협의회 300명 배치
- 지역별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등을 중점 대상 체육활동 지도
- 110,669회 지도, 2,473,563명 참여

－ 생활체육지도자 양성·배출(2급: 170명, 3급: 4,606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운동지원사업

〈표 13-3〉 노인운동강습 추진현황

목표횟수	목표등록 인원	목표인원 누계	실시횟수	추진율(%)	등록인원	참석인원 누계	참석률(%)
161,494	80,765	2,856,035	164,670	101.97	92,038	2,935,089	88.66

〈표 13-4〉 종목별 운영현황

계	체조	춤	구기	견기	수상	기구운동
4,588	3,852	499	192	4	3	38

○ 추진상 애로점 (혹은 부진사유)

－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부재

- 운동 외 영양, 구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 저소득 소외계층의 운동 저변확대 추진 필요

- 기준 등록인원(15인) 미달시 운영의 문제
- 저소득 지역인 경우, 경제활동으로 참여인원의 한계
- 시설당 등록인원 15인 기준에서 5인 이상으로 대상 시설확대 주친 필요

－ 지사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적인 목표

- 시설수와 운영기간, 강습횟수 등 지사 자율성 부여

3) 추진방법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 장수체조,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운동 지원사업
- 노인건강대학 운영: 운동지도 및 건강강좌, 노인장수춤, 태극권, 댄스스포츠, 식생활개선, 요실금, 노인안질환 등 질병의 예방·관리 등 건강교육
- 가정방문 운동프로그램 실시: 거동불편 노인운동프로그램, 방문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활용, 실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노인건강수첩’을 제작·배포

□ 추진방법

- 매년 일회의 행사로 진행되는 노인건강축제, 노인생활체육대회는 행사 준비과정에서 노인의 건강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효과가 있음.
 - 그러나 가능하면 노인건강축제와 생활체육대회는 통합하여 노인건강을 주제로 하는 대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 노인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사업은 추진체계와 추진방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역할의 분담을 명료화하고, 역할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의 필요성은 있으나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생활체육 지도자는 노인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에 앞서서 그 수요규모와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생활체육사가 직업인으로 생활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함.

- 노인건강대학과 노인대학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함. 노인대학 속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임.
-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운동프로그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요양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제2절 노인보호체계 강화

1. 노인요양보호체계 강화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수급대상자 확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가 우선적이어야 하고,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도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을 보면, 보험료수입비중이 전체의 60%를 넘는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보험료수입이 제도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 고령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계층의 서비스이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3-5〉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근거법	2007. 4.27 법률 제8403호 2007. 9.27 대통령령 20287호 2007.10.17 보건복지부령 418호

구분	내용
가입자(피보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급여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기타급여(재활, 복지용구 제공 등) -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발생, 신체정신상의 이유 ○ 특례요양비: 비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서비스수급시 ○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 입원시
서비스 수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이상인 경우, 원인불문하고 장기요양 신청 가능 - 65세미만인 경우, 특정의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등) 보유조건 - 신체기능 등 장애정도, 비스필요도에 따른 장기요양등급(1, 2, 3등급) 구분 (단, 등급외는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서비스제공 모색 중)하고, 1, 2차에 걸쳐서 등급을 결정 - 서비스이용가능의 월 한도 급여액 설정 (노인요양시설급여액: 등급별 일일 27,000 ~ 38,310원) (노인전문요양시설급여액: 등급별 일일 37,000 ~ 48,12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액: 등급별 일일 37,000 ~ 48,120원) (방문요양급여액: 1회당 10,680 ~ 39,500원) (방문목욕급여액: 1회당 39,590 ~ 71,290원) (방문간호급여액: 1회당 27,360 ~ 43,260원) (주야간보호급여액: 등급별 일일 31,140 ~ 40,580원) (단기보호급여액: 등급별 일일 35,230 ~ 42,490원) - 이용자본인부담액: 시설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의 15%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나,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1/2 경감)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부담, 보험료 및 이용자본인부담액 등으로 재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부담: 보험료예상수입의 20%,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4.05%(2008년: 월평균 2,700원) (단, 법정장애인으로 급여 미수급자 결정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비고	- 2008년 장기요양인정자수 추계: 17만명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4.2 국회 통과, 4.27 공포)
 - 1단계 시행령('07.9.27) 및 시행규칙('07.10.17) 제정·공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토대로 2단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수가 결정 (11월~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
 - '08.7월 제도 시행에 대비, 1차 시범사업('05.7~'06.3), 2차 시범사업('05.4~'07.4)완료하고, 3차 시범사업 중('07.5~'08.6)
 - － 3차 시범사업 지역 :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부산북구, 완도 인천 부평, 익산, 대구 남구, 청주, 하동(13개 지역)
- 2차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내용, 제도내용에 대한 재검토 등 제도 내적으로 제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비노인성질환의 65미만의 장애인 등 일상생활상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제한을 받고 가입자의 확대문제가 사안으로 제기고 있음.
 - －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장기요양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요양수가의 적절성 개발을 위하여 제도도입에 필요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음.
 - － 3차 시범사업 수가 개발(7.3)
 - － 3차 시범사업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마련(7.3)
 - － 간병비 지급여부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8월~9월)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 T/F 구성·운영(10월~11월)
 - －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수가 심의 (11월~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07.12.31) : 4.05%

다)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제1차 제도개혁을 실시 한 바 있음.
 - 제도개혁의 배경에는 경증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수급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보험급여지출의 급격한 확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보험급여수준의 축소(가입자이용부담 증가)를 기준으로 한 제도개혁을 단행함.
 - － 주요내용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개호보수 재검토에서 개가서비스수가는 소폭 인상하고, 시설서비스는 인하하는 방침을 수립하였고, 시설에서의 식비 및 주거비를 보험급여항목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본인부담화 하였으며, 경증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킴.

라) 추진방법

- 장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실시
 - 제도의 운영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향후 5년간(2009~14년) (가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모니터링평가단」을 설치, 운영
 - － 운영목적은 제도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내용상의 결함 등을 신속하게 파악, 수정보완하기 위함임.
 - － 평가단위원은 학계, 연구전문가, 시설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동 평가단은 제3의 입장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함.
 - － 평가내용은 장기요양인정체계,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체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내용으로 함.
 - 특히, 동 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시설(기관)의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제도외적인 평가내용으로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수지분석, 유관 사회복지제도와

의 관련성 분석 등도 필요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전체노인의 3.1%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경증상태의 일상생활기능 장애노인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일상생활동작(ADL)의 기능에서 1개라도 제한을 나타내고 있는 고령자는 전체노인의 7.9~9.9%(2001년,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임을 감안하면, 해당고령자의 3~40%가 급여대상자로 추정됨.
- ☐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점이상인 경우를 급여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서 54점이하인 경우를 경증기능 제한노인으로 간주하여 등급외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54점이하인 경우에도 ADL기능상의 경미한 제한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급여대상자로의 편입여부는 재정의 확보, 시설인프라 및 유관제도의 확보,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의지 저해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따라서, 등급외 해당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의 편입, 확대는 일정기간의 제도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1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	95점 이상
2	75~94점 미만
3	55~74점 미만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대상자 기준

나)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 일본의 경우, 경증의 기능제한상태를 보인 고령자까지 개호보험 급여대상자로 하

고 있지만, 2005년도 제1차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증대상자의 폭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증대상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개호서비스를 수급하기 위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경증대상자의 개호서비스수급은 오히려 자립적인 생활기능의 저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제기함.
- 독일의 경우, 경증의 기능제한상태를 보인 고령자는 제외시키고 중등증정도이상의 고령자만을 급여대상자로 책정,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급여대상자수가 제도도입이후 10여년간 전체노인의 10%내외로 안정화되고 있었음.

다) 추진방법

- 단계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확대방안 검토
 - 현행 제도의 운영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재정, 인프라 등 환경여건 조성 후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1안: 일차적인 대상으로 등급외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은 집단(현재에는 4등급 해당자)부터 확대하는 방안
 - 2안: 일차적인 대상으로 등급외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고저를 불문하고, 소득수준, 주거유형 등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부터 확대하는 방안

나.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1)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시설 및 인력의 인프라 확충이 선결적임.
- 그런데, '06~'08년 3개년간 집중적인 투자결과 당초 목표대비 실적은 초과 달성되었으나, 수도권은 제도시행 초기 요양시설이 부족예상

- '08.6월말까지 요양시설 전국 충족률은 94%(3천6백 병상 부족), 수도권은 85%(3천3백 병상 부족)로 예상
- 특히, 시설인프라의 경우 대도시 등 도심지나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재가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설치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잉설치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지역별 설치지원에 대한 차등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장기요양서비스 중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프라가 공공부문(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부문 재가서비스사업자에게도 시장참여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부문의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서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재원 투입의 제한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대할 수 있음.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요양시설, 소규모다기능시설, 노인그룹홈,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재가지원센터, 공립 치매요양병원 등 227개소 확충
 - － '08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06~'08년 3개년간 집중적인 투자

〈표 13-7〉 최근 노인요양시설 확충 실적 및 계획

연 도	계	요양시설	소규모시설	그룹홈	종합재가 지원센터	농어촌재가 복지시설	노인치매 병원
'06년실적	281	87	96	98	-	16	11
'07년실적	297	104	65	55	49	14	13
'08년계획	248	73	60	50	42	12	11

□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 노인복지법 개정은 '06년말 개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07.8.3 개정되어 '08년 2월초 시행 ('08년 4월 현재 교육기관 917개소, 수강생 56,000명, 자격증 발급 6,600명)

— '08년 4월 현재 교육기관 917개소, 수강생 56,000명, 자격증 발급 6,600명

-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안작성에서 장기요양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을 노인복지법의 기준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방문요양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배치를 의무화한 반면에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임의배치로 완화시켜주고 있음.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하에서의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이외에 요양보호사(1급)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외에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에서 직접인력이 아닌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의 간접인력에 한하여 임의배치를 허용하고 있음.

□ 공립치매병원 확충: 13개소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선진각국의 시설보호율을 보면,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이 전체노인인구의 6%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4~5% 수준, 독일, 네덜란드 등은 3%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OECD에서는 평균적인 시설보호율을 전체노인의 5%수준을 책정하고 있음.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민간재가서비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호보수(장기요양서비스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민간재가서비스의 확충이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3-8〉 EU 국가의 장기요양시설보호율

국 가	LTC총지출 (GDP대비)	시설보호율 (%)	재가보호율 (%)
벨기에	0.9	8.1	6.2
덴마크	1.1	1.7	21.4
독일	1.0	3.6	6.7
스페인	0.5	2.2	4.0
아일랜드	0.6	4.4	6.4
이태리	1.5	1.8	8.4
룩셈부르크	0.9	4.6	6.6
네덜란드	0.5	3.5	na
핀란드	1.7	6.8	6.2
스웨덴	3.8	6.7	9.2
영국	1.0	3.0	4.5
체코	0.3	5.5	4.0
폴란드	0.1	2.2	0.9

자료: EU

〈표 13-9〉 일본 개호보험의 재가서비스사업자 운영주체별 추이

구분	2001년		2005년		변화율	
	실수	(비율, %)	실수	(비율, %)	실수	(비율, %)
총수	33,238	(100.0)	60,289	(100.0)	27,051	(81.0)
지방공공단체	1,058	(3.2)	805	(1.3)	-253	(-24.0)
사회복지법인	18,635	(56.1)	22,968	(38.1)	4,333	(23.0)
의료법인	2,314	(7.0)	4,825	(8.0)	2,511	(109.0)
사단, 재단법인	392	(1.2)	533	(0.9)	141	(36.0)
협동조합	914	(2.7)	1,362	(2.3)	448	(49.0)
영리법인	9,038	(27.2)	26,872	(44.6)	17,834	(197.0)
NPO	667	(2.0)	2,574	(4.3)	1,907	(286.0)
기타	220	(0.7)	350	(0.6)	130	(59.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4) 추진방법

□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 수립·시행 (현행유지)

연 도	계	요양시설	소규모시설	그룹홈	종합재가 지원센터	농어촌재가 복지시설	노인치매 병원
'08년계획	248	73	60	50	42	12	11

□ 주택사업 계획시 노인복지시설의 의무설치제도 도입 및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 신도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주거환경정비,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관광지개발, 신활력사업, 전원마을 등의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제도 마련을 검토

다.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기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매고령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05년 364천명에서 2010년 460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치매고령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치매고령자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 할 수 있음.

- 따라서, 치매의 예방 - 조기진단 및 치료 - 보호(케어)와 같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운영이 필요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2007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요양병상 신·증축 등 용자 추천 : 19개소(2,028병상)
- 사업추진방식 개선(사전예고제 도입)으로 용자사업자의 실행실적 제고

- 예산액 대비 실집행율 : 47.9%('06년말) → 74.9%('07년말)
- 사전예고제 : 예산액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준비가 완료되고 용자가능성이 확인된 기관부터 최종사업자로 선정
- 장기요양병상 수급상황을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 장기요양병상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사업 중단

3) 추진방법

-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 보건지소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체계 구축
 - 치매 상담전담요원 배치 확대
- ☐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 ☐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치료 및 보호의 효과 제고

2. 노인권익보호 강화

가.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년기의 확장
 -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0.3%로 500만을 넘어섰음.
 - 평균수명이 78세로 연장된 것에 반해 건강평균연령은 2003년 현재 67.3세에 머물고 있음.
 -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평균건강연령은 완만한 증가를 보여 노인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
- ☐ 가족의 노인부양능력 감소
 - 가치관의 변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의 증가 등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능력은 크게 약화

- 반면, 노인부양을 위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

○ 노인부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노인학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임.

□ 사회·문화적 특성

-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매우 낮음
- 강한 가족주의 의식으로 인하여 학대자체가 은폐되고, 학대행위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아 반복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증대해가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신고-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체계적인 공적인 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실적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되었던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2006년에 이루어졌음.
- 2004년에 시도별 16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후 부산서부(2005년 개소)와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2006년 개소)이 설치되었음.
- 국고사업실시에 따른 노인학대상담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음.
 - 2001년 민간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증대
 - 신고건수는 민간사업에서 국고사업으로 전환된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

〈표 13-10〉 노인학대 상담건수 증가 추이

(단위 : 건, %)

연도	학대상담건수	증감(%)
2003	3,179	
2004	4,333	▲36.3
2005	13,836	▲219.3
2006	19,092	▲38.0
2007	27,492	▲44.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6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 노인학대 신고전화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배포 및 노인학대사업 홍보추진 등 활발한 홍보사업이 추진되었음.
 -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홍보의 일환으로 세미나 개최(‘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 등), 함께하는 UCC 및 함께하는 노인사진 공모전 개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전후 홍보캠페인, 노인보호모니터단 사업 등의 실시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처음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 실시
 - － 노인학대관련 연구사업으로 노인학대판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및 사정도구 개발’(2007)연구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치유적 프로그램’(2007) 연구를 수행.
- 관련예산 및 인력 현황
 - － 2007년 35억(국비 20억 지방비 15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에도 동일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 개소 당 상근상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총예산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2006년 현재 17개 기관중 12개소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13-11〉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총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총 예산(지방비 포함)	1,500	2,000	3,500	3,500

□ 문제점

-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 노인 인구 수 증가에 비례하여 학대문제를 상담하는 사례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18개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피학대노인의 보호 및 상담에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 － 특히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지방노인보호기관의 단계적 확대가 절실히 요청됨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인구 수, 학대 상담 건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도록 함.
 - 현재 경기도와 부산시에만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며, 노인인구규모에 대응하는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시설내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보호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확한 노인학대의 규모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 노인 및 노인학대사례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별 1개소의 기관만이 설치되어 있어 대응력에 한계가 있음.
-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학대노인의 인권 및 가족 프라이버시의 확보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인력은 2006년 6월 31일 기준 63명임.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 노인학대가 예방 - 조기 발견 - 보호의 연계 선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 예방과 상담 사업에 비하여 학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학대 피해노인 쉼터, 시설보호가 부족.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가) 선행연구 고찰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강제로 행해지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무관심, 배제,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 또는 언어적 표현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방임과 자기방임 포함(정경희 외, 2007).

☐ 노인학대 원인

- 노인관련 원인: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노인의 의존성, 노인의 일생 생활 동작능력, 자아존중감
- 가족상황적 요인: 동거여부, 가족의 기능과 결속력, 부양자의 연령 및 성격적 특성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연령, 경제상태, 성격 등의 부양자의 개인

적 특성

- 사회·문화적 원인: 노인차별주의, 강한 가족주의, 사회적 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 노인학대 실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

○ 노인학대 유형별 실태

- 신고접수 중 43.4%를 구성하는 단일학대의 구성: 신체적 학대 6.0%, 성적 학대 0.1%, 정서적 학대 50.7%, 재정적 학대 6.6%,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 36.6%
-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 20.9%, 성적 학대 0.4%, 정서적 학대 42.3%, 재정적 학대 11.3%,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 25.1%

○ 발생장소: 88.3%가 가정내, 병원 1.7%,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1.5%

○ 발생빈도: 매일 발생한다 31.8%, 2~3일에 한번, 10.2%, 일주일에 한번, 13.0%, 일회성, 10.8%

○ 지속기간: 1년 이상 56.2%, 1년 미만 26.0%

○ 피해노인의 특성

- 성: 여성 67.7%, 남성 32.3%
- 연령: 64세 이하 9.6%, 65~69세 12.7%, 70~74세 23.7%, 75~79세 19.9%, 80~84세 16.8%, 85세 이상 15.7%, 파악 안됨 1.6%
- 건강상태: (매우) 건강 11.1%, 보통 28.5%, 건강하지 못함 44.2%, 매우 건강하지 못함 10.0%, 파악 안됨 6.2%

○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동거 51.0%, 비동거 46.0%
- 성: 남성 69.3%, 여성 30.7%
- 노인과의 관계: 본인 2.5%, 배우자 7.3%, 아들 55.5%, 며느리 11.8%, 딸 10.4%, 기타 친척 4.6%, 타인 5.4%, 기관, 1.1%, 파악안됨 1.4%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노인학대의 사회문제화 : 노인학대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

-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피해자와 가해자 개입을 위한 법제정
- 노인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확대
- 노인학대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문애리, 2002).

나) 외국사례

☐ 성공사례 및 요인

- 미국의 지역내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수행
 -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사례평가 및 개입계획 수립
 -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사정 서비스, 상담, 법적지원, 원조 서비스, 가정폭력프로그램, 가해자프로그램,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방임방지프로그램 등
- 미국의 시설내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입소시설에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 LTCOP)
 - 재정적 지원, 매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준화된 노인인권보호체계가 확립 되어 있음
 - 개인적인 이슈나 시스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모두 거주자를 대표하고 거주자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역할 수행(정경희 외, 2002)
- 캐나다 지역보호접근 센터
 - 지역 내 가능한 서비스를 학대피해 노인에게 연결
 - 프로그램의 선택을 돕는 전문가가 활동(이연호, 2001)
- 일본
 - 시정촌·도도부현에 있어서의 고령자 학대예의 대응과 양호자 지원에 대한 매뉴얼 배포 (2006년)를 통한 서비스의 표준화 추구

☐ 실패사례 및 요인

○ 미국의 Long-Term Care Ombudsman 프로그램

- 보호조사관의 제한적 권위
- 보호조사관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인당 책임기관 수 과다(이연호, 2001)

□ 시사점

- 노인학대 피해사례를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작 기점을 확보해야 함
-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개입계획수립과 시행이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자원과 서비스의 다양화 및 포괄성 보장
- 정부차원의 서비스 표준화 등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마련 노력이 중요

4) 추진방법

□ 노인학대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통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정책 마련

- 노인학대 판정도구 개발
 -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시설보호를 둘러싼 변화에 앞서 시설에서 발생가능한 노인학대 유형의 구체화 및 규모 파악의 기반 마련
 - 지역사회 거주 노인 대상 노인학대 판정도구 개발
- 노인학대 규모파악을 위한 전국조사 실시
- 조사결과 파악된 규모에 기초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지방노인상담전문기관의 점차적인 확충

-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의 추가설치가 시급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하여 우선적 확대 추진
- 여타 지역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및 노인학대 사례의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각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인원 확충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시행

-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가해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제공 강화
 - 현재 미설치된 ‘학대 피해노인 쉼터’ 설치
 - 피학대노인의 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노인학대 예방 정책추진관련 예상되는 장애요인
 - 예산확보의 어려움
 - 시·도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증소
 - 노인부양 가족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피학대노인 전문쉼터의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나. 독거노인의 보호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08년 독거노인은 93만명으로 전체노인 중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13-12〉 독거노인 증가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노인수	4,586	4,810	5,016	5,193	5,357
독거노인 수	833	882	933	987	1,044
전체노인중 독거노인 비율	18.2	18.3	18.6	19	19.5

자료: 통계청 장애인구 추계(2006)

- '07년 6월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적 접촉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서비스 제공
 -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주거상태 점검, 필요한 서비스 욕구 파악 등
 - 생활교육 :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

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 실시

- 서비스연계 :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공공-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 및 연계

〈표 13-13〉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 대상

(단위 : 건, 명)

계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142,538	52,454	75,545	14,539

〈표 13-14〉 사업 추진실적('07.6~11월)

(단위 : 건, 명)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무더위쉼터 안내 및 이송
4,984,353	723,956	410,923	84,864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기본계획 수립 후 신규로 시작된 사업임.

3)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미국 플로리다 주의 독거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 1970년대부터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남성노인의 19%, 여성노인의 40%에 이릅니다
- 독거노인만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 플로리다(Florida) 주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독거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 가정연료 긴급보조서비스(emergency home energy assistance): 독거노인이나 저소득노인에게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서비스
 - － 노인사고예방 프로그램: 낙상, 화재, 독극물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가정생활 안전을 위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서비스 프로그램

- 독거노인 친구되어주기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노인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을 위해 교통서비스, 쇼핑, 조리, 친구되어주기 등의 자원봉사활동
- 긴급통보지원(emergency alert response): 병약한 독거노인이 위급한 경우 건강센터에 위기상황을 통보하는 긴급정보 프로그램
- 긴급주택수리: 집의 수리나 개조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원 프로그램
- 물자지원(material aid):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식품, 의복, 화재경보기, 안경, 보청기, 주택수리 물품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가정방문서비스(outreach): 독거노인이나 저소득노인, 소수민족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 전화확인서비스(telephone reassurance):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위급 상황시 특별 또는 긴급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4) 추진방법

-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확충
- ☐ U-care 시스템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전확인 시스템과 연계 및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DB '08. 2월 1차 개발 완료, '08. 4월부터 2차 개발, 이후 단계별 개발 추진
-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교육 확충 등을 통해 생활관리사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도모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임금 인상 및 퇴직급여 마련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확충
- ☐ 노인 관련 서비스 및 사업간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돌보미 사업부서의 통합화 등)

다. 노인의 권익보호

1) 소비자로서의 노인의 권익보호

가)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계층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비하여 노인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특히 판단능력이나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인 체험방 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이 증가하고 있음.

〈표 13-15〉 노인소비자 피해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노인소비자 피해건수	9,906	12,259	13,169

자료: 노인소비자 피해 실태

- ☐ 노인의 소비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다 해도 노인들은 교육 내용을 곧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음.
- ☐ 노인인구의 증대 및 소비지출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인소비자의 소비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원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대상 사기 예방 및 신고강화 사업 실시
- 2008년도 예산 0.5억원

다) 선행연구 고찰 및 외국사례

- 실버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변화에 대한 고려, 고령소비자의 안전문제와 건강관련 상품 및 서비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소비자 피해 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체제가 고려되어야 함.
- 노인소비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
 - 취약소비자로서의 고령소비자의 특성
 - － 경제적, 건강적 측면에 대한 불안을 느낌
 - －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 － 신상품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연성 결여 및 판매 방법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음
 - － 교육수준이 낮고 타인의 의견이나 속임수에 쉽게 현혹되기 쉬움(Wadell, 1975).
 - 시장환경의 변화
 - － 실버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령자의 소비생활 영역의 확대
 - － 상품·서비스의 급격한 발달 및 디지털화, 쇼핑환경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소비환경의 악화
 - 새로운 상품개발과 단기간의 모델변화, 외국어의 사용경향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에 비하여 소비생활에 어려움 경험
 - 쇼핑환경의 원거리화로 인한 고령자 스스로의 쇼핑의 어려움 제고
- 노인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 인식, 고령소비자를 고려할 수 있는 법체계의 확립, 노인관련 기관 및 단체,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적 행정추진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소비자 교육 등이 요구됨(송순영, 2006).
- 일본 사례
 - #8080을 누르면 각 도도부현의 센터에 전화가 걸리는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가 용이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함.

- 동경도, 오사카부, 고베시 등에서는 재산보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라) 추진방법

- ☐ 노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 ☐ 소비자보호 관련기관 및 단체와 노인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의 적극적인 실시

2) 성인후견인제도

가) 필요성 및 목적

- ☐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어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노인인권」의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정비할 시점이 되었음.
- 이를 위하여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성숙된 능력의 소유로서 존엄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결정」하에 삶이 영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 특히 사회적 약자인 무의탁 독거노인,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지적 능력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 재산의 관리나 수발, 신상감호에 관한 대응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활용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의 경우 노인뿐만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한 모든 성인을 위한 법적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 “성년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성년자”에 대해 후견·보좌·재판소보호 제도
- 미국: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Statutes)
- 독일: 성년후견수발법
- 일본: 「민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표 13-16〉 독일·일본의 성년후견제 비교

구분	독일	일본
법 명	1992 성년후견수발법	2000 민법의 일부개정
원 칙	보충성, 필요성, 개인적 신뢰	필요성 원칙에 적합한 유형분류
신청권	본인, 직권	본인, 4촌 이내, 지자체장, 후견인 등
원조자	수발인, 법인, 관청	후견인, 법인
직 무	다른 수발 우선적용 (보충성, 필요성 원칙)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조 사	전문가(정신과의사 등)	가정재판소 조사관
감 독	후견재판소, 수발社團	가정재판소
기 간	5년(갱신재심사)	없음
보 수	무보수원칙, 직업수발인 예외	가정재판소 결정

자료: 일본성년후견법학회(2005. 3), “市町村 권리옹호기능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회”보고서

〈표 13-17〉 일본 법정후견제도 개요

유형		補助	保佐	後見
기 관 명	본인 원조인 감독인	피보조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피보좌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성년피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개 시 요 건	대상자	정신상 장애로 사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	정신상 장애로 사리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정신상 장애로 사리판단 능력 없는 것이 통상 상태인 사람
	감정여부	원칙적으로 진단서 등에 의해 가름	원칙적으로 감정필요	

유형		補助	保佐	後見
개시절차	청구인	본인, 배우자, 4촌 등의 친족, 그 외 유형의 원조자와 감독인, 검찰관, 임의후견수임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 및 市區町村長		
	본인동의	필요	불필요	
동의권·취소권	부여범위	· 특정법률행위 (민법12조1항의 일부) · 일상생활행위 제외	· 민법12조1항 행위 · 일상생활행위 제외	· 모든 법률행위 · 일상생활행위 제외
	본인동의	필요	불필요	
	취소인	본인, 보조인	본인, 보좌인	본인, 성년후견인
대리권	부여범위	특정의 법률행위(신청범위내)		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 행위
	본인동의	필요		불필요
원조자책무	직무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생활, 요양간호,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본인생활, 요양간호, 재산관리의 사무
	일반적 의무	본인의사의 존중과 심신상태, 생활상황을 배려		

다) 정책방안

☐ 성년후견인제도 도입방안의 구체화

- 법적 기반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입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쟁점의 검토 및 합의 도출

- 민법개정(예:일본) 방안과 특별법제정 (예:독일)
- 후견제도의 일원화(독일식) 방식 대 다원화 방식(일본식)
- 후견인 신청권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설정
- 후견제도 도입 대상의 명확화

☐ 복지기관에서의 권리옹호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에 노인권리옹호에 관한 내용 포함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마련

제3절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1. 노인의 사회적 기여 기회 확대

가.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1) 필요성 및 목적

- ☐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개인에게는 빈곤·질병·고독 등의 고통을, 노인가족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의식의 희미해짐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국가·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의 급증에 따른 재정압박을 유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가경쟁력 위협요인으로 작용
- ☐ 노인 4명 중 3명(75%)은 초졸 이하의 학력수준, 노인 10명 중 6명(60%)은 과거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 노인 5명 중 1명(20%)은 독거노인, 노인 2명 중 1명(55%)은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 노인 4명 중 1명(24%)은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음
- ☐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비해 경제적으로 노후가 준비된 노인은 28.3%에 불과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
 - 일을 통한 보충적 소득 보전, 사회관계 개선 및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 4고(苦)’ 해결
- ☐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건강하고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은 57만명(11.8%)에 이르고 있으며, ‘12년에는 6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13-18〉 일자리 희망노인 추계

구분	(단위: 만명)				
	2008	2009	2010	2011	2012
65~84세 노인인구	470	485	498	514	531
일자리 희망노인인구					
(전체 노인대비 11.8%)	57	59	61	63	65
남자 (전체남성노인대비 18.8%)	37	38	39	41	42
여자 (전체여성노인대비 7.5%)	20	21	22	22	23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6. 11),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4)

- 저숙련·저소득·남성 노인계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희망욕구가 높으며, 희망일자리 선호도는 용돈마련을 위한 시간제 근로(52%)와 생계비 확보를 위한 종일제 근로(41%)로 양분(노인인력개발원, 2007)
 - 일자리 희망노인의 약 50%가 과거 농림어업(29.5%) 및 단순노무(20.6%) 종사자
 - 자산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등 기본적인 소득원 부족으로 경제상태가 일반노인에 비해 현저히 열악(개인기준 일반노인의 66%, 가구기준 77%)
- 일자리 희망노인의 가구형태는 일반노인에 비해 ‘노인독신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자녀동거노인가구’보다 높음.
 - 노인단독가구의 노인은 고령화되더라도 가구주로서 경제적 부담을 지속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특성
 - 참여노인 실태조사 결과 약 70%는 절대빈곤 계층이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동기 또한 75%가 생계비 마련이나 용돈 마련 등과 같은 경제적 욕구에 기반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운영 실태
 - 공익형 : 공익형의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질서확립 사업이 15.3%, 공공기관 및 시설관리사업과 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지원 사업 13.5% 순으로 나타남. 사업관리 방식으로는 참여자 활동일지 점검 및 팀장제 활용, 현장방문 등,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표 13-19〉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통계 현황('07년 12월 기준)

구 분		목표인원(개)	전체참여인원	평균참여기간	수행일자리수(개)
총 계		110,000	130,071	-	115,644
공익형		49,500	70,504	170일(5.7개월)	57,015
교육 복지형	소 계	44,000	47,394	206일(6.9개월)	46,401
	교육형	16,500	12,998	214일(7.1개월)	13,240
	복지형	27,500	34,338	203일(6.8개월)	33,160
자립 지원형	소 계	16,500	11,979	연중	11,979
	인력파견형	5,500	2,601	연중	2,601
	시장형	11,000	9,378	연중	9,378
통합형		-	252	연중	252

※ 공익형/교육복지형 수행일자리수 = 전체참여인원(누적참여자수) X (평균참여기간 / 210일)

※ 자립지원형/통합형 수행일자리수 = 전체참여인원(누적참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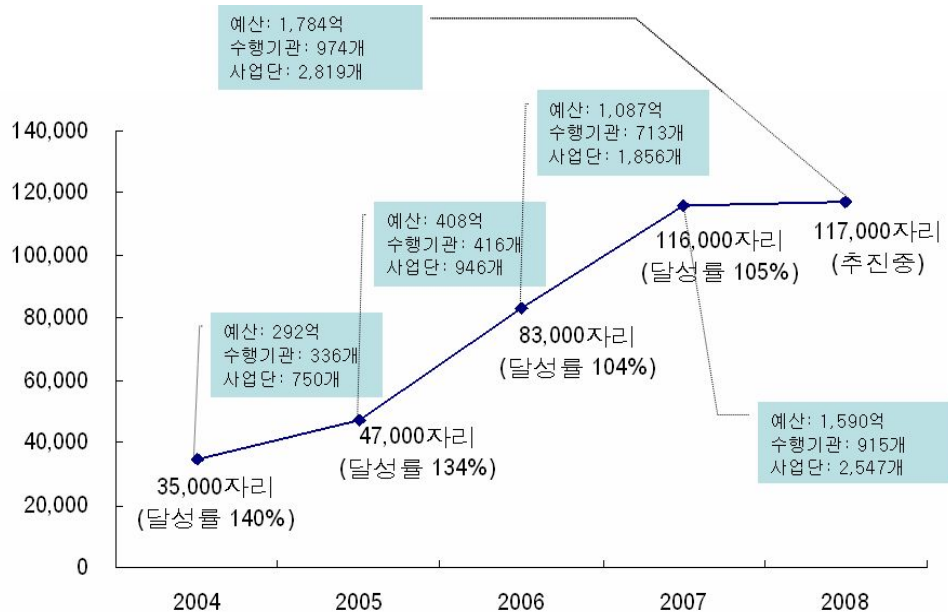
- 교육형 : 교육형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강사 사업이 전체 사업의 7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설사 사업이 20.2%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강사 사업의 교육 대상자 분석 결과, 아동 및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단의 32.9%,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22.4%로 나타났으며, 이 두 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39.9%로 나타남.
- 복지형 : 복지형 주요사업 분류 결과, 전체 사업 중 재가 노노케어가 53.5%, 시설 노노케어가 9%로 약 60%가 노노케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 기준으로는 약 74%가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1.5%, 기타 노인복지지원사업이 7.7%로 약 80%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시장형 : 참여자 기준으로 영농사업이 22.7%, 공동작업장이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식조리 및 판매사업과 인력파견식 서비스업도 각각 약 10%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력파견형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 참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전체 참여자의 4.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일 업종으로는 개발원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유원과 시험감독관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참여자규모로는 시험감독관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

합일반직은 전체 인력파견형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성 과

- 2004년 도입된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기준으로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5년 동안 약 4.7배의 목표사업량 증가를 이루는 등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 기조를 유지해 '07년 기준 19%의 욕구충족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목표사업량 증가(4.7배)에 비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증가폭은 2.9배에 불과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없이 과거의 양적성장 기조가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자칫 사업내실화 도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그림 13-3]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



□ 문제점

-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 참여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급자 편의에 의해 획일화 된 사업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욕구에 대한 기본적 맞춤 기능이 미약
 - － 특히, 전체 참여노인의 54%나 차지하고 있는 노인독신·부부가구이면서 동시에 빈곤노인인 경우 그 중 65%가 생계비 마련이 주된 참여이유라고 밝히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이러한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
- 지역밀착형 사업추진 한계
 - － 지역별 사업량 결정방식이 ‘Bottom-up(상향식)’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Top-down(하향식)’ 방식에 불과해 적실한 지역별 수요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사업유형별 비중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별 일부 사업 부실 초래 우려
 - －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 동력에 장애

3) 외국 사례

□ 미국 :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55세 이상 저소득 실업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주당 최대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실시
 - － 호스피스, 공원관리인, 급식제공원, 말벗도우미, 아동보호원, 주간보호원, 교사보조원, 법률보조원, 의사사보조원, 행정보조원, 기록원, 문서수발원, 타이프스트, 컴퓨터 자료입력원, 경리사원, 경비원 등

- 사업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및 공공·민간 비영리기관이 협력하여 수행
 - － 정부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는 고용율, 달성도, 투입시간, 고용유지율, 만족도, 소득상승 수준 등에 대한 현황보고 및 점검 등을 통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 : 고령인구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재정 압박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인력 활용 확대
 - 네덜란드
 - －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65+」에서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 검표원, 안내원, 버스운전, 우편배달, 주유원, 식사배달, 식품검역, 시험관리, 서류정리, 공사현장 관리, 기술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문제아동지도사 등
 - － 주 5일 근무 중 2일을 고령자 근무 분으로 전환,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사측 연금기여분 감면, 고령취업자 세금공제 등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프랑스 : 고령자 고용장려책과 연금제도 개혁 동시추진
 - － 고용연대계약(Contract Emploi Solidarité) : 50세 이상 26세 미만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분야에 주 20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워크셰어링 성격이 강함
- 일본 : 관공서, 각종기업, 가정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회원에게 알선한 뒤 배분금(보수) 지급
 - 실버인재센터
 - － 지정관리자제도의 실시로 인해 종래 공공기관에서 거의 독점해 온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의 업무에 주식회사 등 영리단체나 NPO 등의 민간도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됨
 -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니어 노동력 활용사업, 기획제안방식에 의한 실버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사업정체 해소방안 강구
 - 고령자협동조합

- 고령자들의 출자금에 의하여 일자리 창출
- '95년 노동자협동조합 주도로 설립, '01년 생활협동조합 법인으로 등록, 전국 33개 도(都)·도(道)·부·현에 설치

4) 추진방안

☐ 추진 목표 및 전략

- 30만개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보급
 - “활기찬 시장경제” 달성을 위해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표 13-20〉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단위: 자리)

구 분	'07	'08~'12					
		계	'08	'09	'10	'11	'12
일자리 (사회공헌형) (민간분야)	110,000	-	137,000 (117,000) (20,000)	180,000 (140,000) (40,000)	230,000 (170,000) (60,000)	280,000 (200,000) (80,000)	300,000 (200,000)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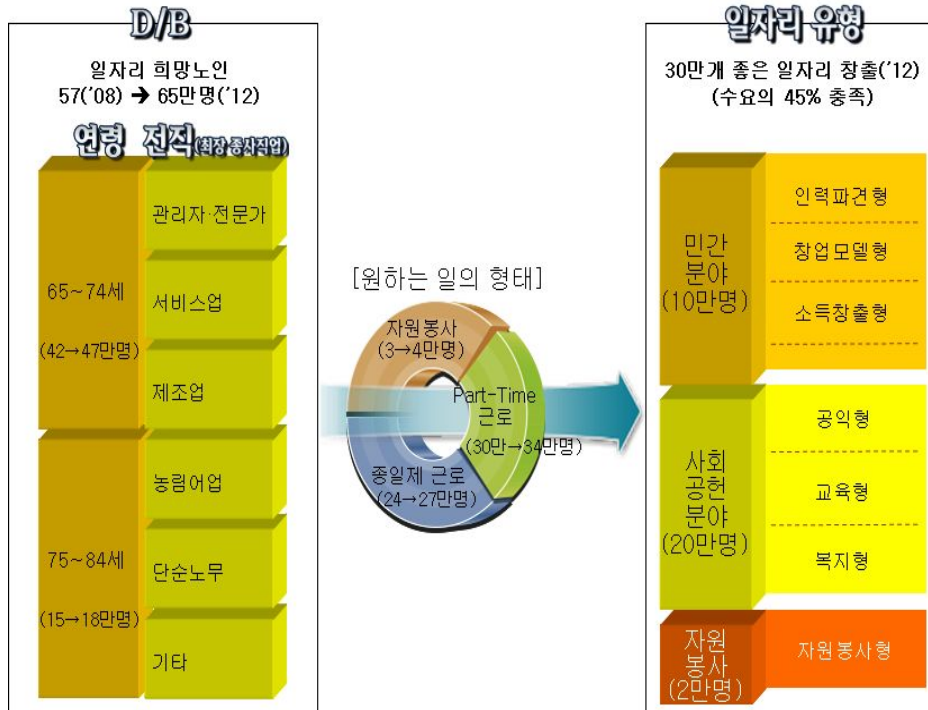
〔그림 13-4〕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 추진 방법

- 일자리 희망노인의 DB 구축을 통한 사정(Assessment) 기능 강화
 - 일자리 수행기관의 사정(assessment) 및 교육-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은퇴전·후 교육(PBL, SLCA)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원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원

[그림 13-5]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보급체계



○ 민간분야 노인전략직종 발굴

- 민간분야 일자리는 분야별 우수 아이템을 모델화하여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매년 20개씩 '12년까지 100개의 모델사업을 만들어 민간 일자리 최소 10만개 창출)
 - 노인의 경험을 활용 할 수 있는 틈새시장 진출
 - 실현 가능한 최우선 전략직종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노인주유원, 시험감독관, 아파트 택배, 노인검침원 등)

○ 사회적 유용성 강화

- “노인의 사회참여 제공”을 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참여 노인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확대('08년 11.7만개→'12년까지 20만개)
 - 공익성이 강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큰 사업아이템 개발·보급

- 사업예시 : 여성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NIE교육, 노-노케어 등
- 인적·물적 지원 및 사업여건 개선으로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참여 유도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규모 확대(120명당 1명→100명당 1명)
-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타부처 정책연계 등을 통한 사업내실화 도모
- 현행 심사승인방식을 프로그램인증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운영 절차 간소화 및 책임경영 강화
- 참여기간 및 임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충에 기여
- 현 20만원, 7개월 → 최대 30만원, 10개월('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지역사회(Community) 중심의 사업추진

- 사회공헌형(공익, 교육, 복지) 일자리의 유형별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사업운영 보장
- 지역별 사업량 결정방식을 실질적인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여 적실한 지역별 수요 파악 후 사업량 결정
-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해 민간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시·군·구 단위의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운영

나.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

1)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보급

가) 필요성 및 목적

□ 노인 사회공헌활동 실태

- 한국의 고령인구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실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함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인구는 1993년 6.9%(통계청, 1994), 1999년 14%, 2002년 16.3% (볼런티어21, 20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취약한 수준임.

- 미국의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02)에 따르면 65~74세 노인 41.4%, 75세 이상 노인 3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 경험 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14.7%로 저조한 참여경험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는 개인의 특성 가운데 특히 교육수준 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전문대졸 이상)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나(10.9%), 과거에 참여했었던 경험(21.8%)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향후 참여 희망을 또한 높게 나타남(36.2%).
 -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및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함(표 13-16 참조).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제특성과 다양한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됨.
 - 교육수준의 향상, 적극적인 사회참여에의 욕구 증대 등과 같은 미래 노인층의 제특 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표 13-21〉 노인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태
(단위 : %, 명)

구분	현재 하고 있다	과거에 참여했다	없다	향후 참여 희망율
교육수준				
글자모름	0.7	1.7	97.6	3.3
글자해독	1.8	4.6	93.6	5.6
초등학교	3.7	11.7	84.6	12.5
중·고등학교	7.5	19.8	72.7	23.1
전문대이상	10.9	21.8	67.2	36.2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3.2	7.3	89.4	10.5
50~100만원 미만	3.1	9.8	87.1	11.8
100~150만원 미만	4.3	12.0	83.8	15.4
150~200만원 미만	2.4	10.6	87.1	12.2
200~300만원 미만	6.9	14.0	79.1	15.3
300만원 이상	5.8	16.5	77.7	17.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05에서 재구성.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어왔음.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 － 정부는 공모를 통해 30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매뉴얼의 제작을 추진하였음.
 - － 그러나 사업이 초기단계로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됨.
- ☐ 기존의 사업은 양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간과함.

다) 이론적 고찰

- ☐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모델은 ‘인생에의 활발한 참여’를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 또는 필요조건으로 제시.

-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갖는 기회를 제공(Fischer&Schaffer, 1993).
 -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의 능력과 통제감을 증가시켜 자아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삶에 기여(Zimmer et al, 1995).
-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역할이 박탈된 노인들에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노인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기여(Payne, 1977).
 - 노인들의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 됨(한경혜, 1999).

라) 정책방안

-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
 -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및 종류의 명확화 및 체계화
- 노인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의 관심과 자원에 따라 적합한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
 - 미국퇴직자협회(AARP)의 자원봉사 신청서에는 일반적 흥미분야, 기술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일반적 흥미분야는 19개 중분류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중분류는 7~20개의 소분류로 나뉘어져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community-based) 노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필요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킴이’ 활동: 등·하굣길 교통정리, 학교주변 순찰(자전거 순찰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 위기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후원 활동 전개
 - 청소년·소녀 스카우트와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 단위대별로 청소년·소녀 스카우트와 공동으로 “행복나눔 봉사장” 선정 활동(※노인·장애인 등 대인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 문화재 보호, 역사해설, 환경보호 활동(환경문화지킴이)
- ☐ 전문분야 지원 및 해외지원 활동
 - 무료 법률 상담, 컨설팅 등 전공분야 강의 및 상담활동 전개
 - 스카우트 세계연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 해외지원 활동
- ☐ 자원봉사 지도자 프로그램 개발
 -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의 전문화 방안 마련
 - 지도자 교육을 통한 활동의 전문화를 가져오기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2) 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

가)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이 행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 노인 자원봉사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정비의 노력이 부족하며, 노인 사회공헌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노력 부족
- ☐ 그 결과, 노인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ex. 기업, 일반 민간단체, 종교기관 등)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노인의 잠재된 사회공헌에의 욕구를 발현할 기회를 사장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기회를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또한 노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회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나)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제1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07.5.21~22)를 한 바 있음.

- 전국 노인자원봉사자 56개 단체 1천명 참석
- 그러나 상설화된 조직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직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가시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행해지지 않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활동의 전문화 및 체계화는 물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 고민이 부족함.

다) 외국사례

□ 외국의 정책 사례

○ 미국

－ 미국퇴직자협회(AARP)

- 광범위한 노인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1958년 설립된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임.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신청자들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선정함. 또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파악하고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전국노인봉사단(National Senior Service Corps, NSSC)

- 55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조직이며 약 50만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음.
-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공안전,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동시에 노인들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자는 취지하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설립됨.

- 자원봉사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②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③노인말벗 프로그램(Senior Companions Program)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퇴직중역봉사단(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Association)
 -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기업의 중역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창립 및 경영에 관하여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 미국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의 협력하에 사업을 수행함.
- Civic Ventures
 - Ventures는 퇴직자를 포함한 미국내 시니어들의 지난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과 사회를 위해 환원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씽크탱크.
 - Corps, The Next Chapter, The Purpose Prize, Still Working 등의 사업을 운영함.
 - Corps :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교육분야에서 기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1995년에 5개 지역의 12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문맹퇴치프로그램으로서, 도심의 공립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며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인생에 필요한 자신감과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교사와 멘토로서 봉사하는 프로그램.
 - Next Chapter : 지역사회에서 보람된 일을 원하는 퇴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 진행.
 - Purpose Prize :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도전을 하였거나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중 매년 5명을 선정하여 \$100,000의 상금을 수여하고, 10명에게는 \$10,000의 상금을 수여하는 시상 프로그램.

- **Still Working** : 후반부 삶을 교육이나 보건, 비영리 부문으로 옮겨 활동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다큐멘터리화하는 프로젝트.

○ 영국

— WRVS

-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조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이 중심이 되지만 최근 세대통합의 차원에서 젊은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노인대상 자원봉사 활동 내용은 ‘노인 대상 재가 서비스’와 ‘노인대상 지역사회 서비스’로 구분됨.
- 노인대상 재가서비스 : 좋은 이웃 서비스(**Good Neighbours Service**), 식사배달 서비스(**Meals on Wheels**), 교통도우미서비스(**Community Transport**), 독서서비스(**Home Library Service**) 등.
- 노인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re**), 사회센터(**social center**), 런치클럽(**lunch club**), 커뮤니티클럽(**community club**) 운영.

— RSVP

-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 자원봉사 기구인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s)**의 하부조직으로 1988년에 형성된 5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단체.
- 초등학교 학생 독서활동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 지도, 소외된 사람들 및 장애인들 말벗 도우미,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대한 교통서비스, 수감자 가족 원조,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소외지역의 아동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등의 사업을 전개함.

○ 프랑스

— Relais Malakoff

- 조기퇴직자와 퇴직자들 대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조직. 현재 프랑스의 31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①지역사회 활동(청년층의 취업지원 활동, 양로원 지원 활동,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 지원 활동), ②웰빙건강활동, ③문화, 여가 관련 활동 등을 수행.

라) 정책방안

-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의 가시화·체계화를 위해 「시니어 스카우트」(가칭) 조직
 - 전국적인 조직망 결성 및 복장의 통일, 상징물 마련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화하고 가시화
 - － ‘보이 및 걸스카우트’의 조직을 바탕으로 「시니어 스카우트」 전국 조직망 구축(시니어 스카우트 본부 - 지방연맹 - 지구연합회 - 지역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스카우트 유경험자 및 시니어스카우트 활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
 - 사회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은퇴한 지도자의 적극적 참여 독려 및 홍보활동 실시
 - － 삼엽회 회원(전국 400여명)을 우선적 가입 조치하고, 전직 장·차관을 가입 권유하여 지도자로서 활동기회 제공
 -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과 같은 홍보효과 및 이미지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홈페이지 구축 및 DB 구축
- 노인 참여를 유도·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정비
 - 사회공헌활동 인센티브, 자원봉사 상해보험제도 도입, 노인 사회공헌활동가 포상 등과 같이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고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
 - － 스카우트 활동 참여시마다 활동내용 및 실적을 기록하고 단계별로 Challenge 배지 부여 및 포상 시 반영
 - － 시니어 스카우트 제복 및 배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봉사 활동 전개
 -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우수 시니어 스카우트에 대한 포상
- 노인의 사회공헌 활동에 다양한 주체들(기업, 일반 민간단체, 종교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고, 이들과 노인자원봉사 단체, NGO, 노인 개인을 연계
 - 전문분야 지원 및 해외활동 지원 등을 통한 노인전문인력의 활용 및 사회적 이미지 제고

2.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 제공

가.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 노인인구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여가활동 경험이 없는 세대이므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과 동시에 고령인구가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됨.
- ☐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인프라를 확보하고, 기존의 다양한 문화인프라의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노인의 문화여가활동을 활성화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율에는 지역별 편차가 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2007.12월말 현재 211개소 운영 중이나 설치율에 있어 지역별 51개 시·군·구에는 미설치되어 있음.

〈표 13-22〉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노인복지회관		노인 교실수	경로당수 및 평균노인수		프로그램 운영경로당	
	평균 개소수	1개소당 노인수 ¹⁾		경로당수	1개소당 노인수	운영경로당수	비율
시군구 평균	0.7	19356.2	4.3	225.6	111.0	68.4	33.0

자료: 보건복지부,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6.

_____, 내부자료.

- ☐ 경로당은 2007.12월말 현재 56,480개소 운영 중이며 지역노인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 인프라는 충분한 상태이나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됨.
- 노인교실은 2007.12월말 현재 1,082개소이며, 종교단체 등에서 임의로 운영되는

곳도 1,000여개소로 추정됨.

— 자원봉사자에 의뢰하는 형편이어서 교육내용 부실 초래

-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시군구 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등이 노인여가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시설기반임.

3) 정책방안

- 인프라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노인복지관 설치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관 분관제도 도입, 이동복지관 운영 등의 방안 마련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경로당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

- 여가문화활동 관련 인프라의 고령친화성 제고를 통한 시설인프라의 저변 확대

-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및 지역 문화여가시설의 연계방안 모색
-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등의 프로그램 및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성 제고

나.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1) 필요성 및 목적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은퇴생애주기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의 준비부족과 사회적 여건의 미약 등에 의해 현재 고령인구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여가생활이 아니라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음
- 고령인구는 청년, 중장년층과 비교해볼 때 문화활동 참가율이 취약함
 -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문화예술 관람이 60~64세, 65세 이상 모두 0.1%, 자기계발이 60~64세의 경우 0.2%, 65세 이상이 0.1%로 매우 낮음
 -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종교관련 사회활동과 사교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못함

- 65세 이상 노인 중 47.9%가 종교단체, 사교단체에는 35.5%에 가입하고 있으나 운동 단체는 3.9%, 정치단체 2.1%, 문화활동단체에는 0.9% 가입에 불과함.

- 다양한 노인세대의 문화여가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소극적인 여가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세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 노인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수행을 통한 노인의 생산적이며 활발한 여가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2) 실적 및 문제점 진단

-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행되었음.
- 그러나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수행인원 150,832명중 3,887명이 노인으로 2.6%에 불과하여 적용범위의 확대가 요구됨.
- 고령친화적 관광휴양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06.12월 확정)에 건강보양지구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아직 부지조성 중으로 '09년까지 부지조성 완료 후 '10년부터 국비 등 지원을 통한 본격 사업추진 계획할 계획에 있음.
- 문화예술활동의 생비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버세대 게임정보화 교육, 1080우린 한가족 게임 한마당 행사, 실버세대 게임 정보화 컨퍼런스 개최, 실버문화학교 개최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음.
- 교육장소의 확보 미흡 및 관련 기기의 노후화로 원활한 실행에 어려움을 겪음.
- 또한, 생비자로서의 노인역할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됨.
- 노인의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의 일환으로 노인관광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 실버문화학교가 복건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정진 재원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됨.
- 그러나 콘텐츠 개발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문화관광체육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정책방안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주도적인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제도 수혜 노인 규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관광휴양시설인 건강보양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구체화 추진
- 실버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에 있어 문화관광체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원활한 연계 및 협조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추진
-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의 지속적인 추진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전문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강화

제4절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1.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 주택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고령자가 주택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함.
-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갖추어

야 할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 기준이 고령자 주택의 설립 및 개조에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부부 또는 독신)의 50%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도시보다 농촌의 고령자 가구가 주거수준이 더욱 열악하며,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의 주거수준이 더욱 열악한 상태임.

〈표 13-23〉 고령자가구의 지역별/거주유형별 시설기준미달가구 비율

	자가거주자 중		임차거주자 중		전체거주자 중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율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율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율	
농촌	61.6%		72.9%		67.7%	
도시	40.3%		48.1%		42.7%	
전체	42.7%		67.7%		51.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활용하여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재인용)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 고령자의 주택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32.3%는 주택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시지역 거주자 또한 20.0%로 나타남.
- 고령자는 신체적 특성상 작은 사고가 큰 부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고령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의 비용 증가의 원인임.

〈표 13-24〉 고령자의 주택내 안전사고 경험율

구 분	2004년 조사 ³⁴⁾		2005년 조사 ³⁵⁾	
	도시	농촌	도시	농촌
고령자의 주택내 안전사고경험율	23.9%	31.6%	20.0%	32.3%

34)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4:188)

3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54)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①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②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③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고령자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중임.
 - 고령자가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공간의 주거기준과 무장애(Barrier-free)개념을 도입한 단차제거 및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이 설정됨.
 - 고령자용 주택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개발되어진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개조기준을 그림, 도면 등으로 구체화하여 매뉴얼을 제작·보급함.
 - 매뉴얼은 노인 등이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노인용 매뉴얼’과 개조공사를 직접 담당할 ‘전문가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작됨.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정책은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개조비용 지원계획수립과 주택개조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운영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임.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고령자 주거지원법(가칭)’제정이 추진 중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자가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기준 개발과 홍보 등이 이루어짐.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법의 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고령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정책방안

-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 기존 고령자 주택의 쾌적성,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준 마련
 -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 가구의 특성에 맞는 최소 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시

〈표 13-25〉 고령자가구의 최소주거공간규모(안)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 ²)
1인(고령자)	고령자 1인 가구	1 DK	18-25 (5.5-7.6평)
6인(고령자포함)	고령자부모+부부+자녀2	4 DK+18m ²	67(20.3평)

주 1)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표 13-26〉 주택개조 기준안

안전성 확보	단차 제거	출입구, 문턱 등 바닥의 단차 제거
	바닥 미끄러움 방지	현관, 욕실, 거실 등 바닥재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욕실,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독립성 지원	출입구 폭 확보	현관, 방, 화장실 등의 폭은 80cm이상 수준
	설비개조(욕실, 화장실, 부엌)	양변기로 교체, 싱크대 설치 등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개조 비용 지원계획 수립
 -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지원 대상, 방식 등 세부지원방안 마련
- 주택개조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운영
 - －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 주택개조 상담 제도 실시
 - －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방문·상담
- 고령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홍보 강화
 - － 주택개조 기준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주택개조 관련 업체, 고령자에게 보급
 - － 주택개조관련 업체 현황, 지원내용 등에 관한 정보망 구축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어진 「고령자 중장기 주거지원계획(안)」의 확정
-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어진 「고령자주거지원법(가칭)」 제정

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후 거주희망 형태의 변화로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함.
- 노후를 시설보다는 개인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지향하는 노인보호의 가치(Aging in place)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자가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고령친화적 설계가 고려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필요로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공급 실태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일부 지자체가 3~4인 정도가 입소하는 그룹 홈을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실적은 미미
 - 저소득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시설인 무료와 실비 양로시설은 2007년말 현재 308개소(입소정원 8,415명)로 노인인구의 0.17%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정책추진현황
 - 노인을 시설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양로시설은 점차 신규시설이 감소하고 있음.
 - 2002년 9월에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가족부양 권장
 - － 동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고령자를 부양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³⁶⁾

36) 신청 자격은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하며, 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 2004년말 기준으로 직계존속부양자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실적 미미
- 2007년 서울 신내3, 서울 신정3지구 총 891호에 대해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 2009년 입주 예정임.

〈표 13-27〉 고령자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 우선분양 현황 ('04년말 기준)

구 분	현 행	'04년 신청실적			
		구분	총공급	배정(A)	계약(B) 계약비율 (B/A)
국민주택 우선공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세대주 는 국민주택공급량의10% 범위 내 우선공급	공공분양	12,003	1,200	42 3.5%
임대주택 우선공급	- 65세 이상 1년 이상 부양 시 임대주택 공 급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	공공임대	4,329	432	48 11.1%
		국민임대	27,876	2,512	403 16.0%

다) 향후 정책방안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적정 공급량 및 공급방식을 결정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건강 및 복지관련 시설을 연계 운영

나.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가) 필요성 및 목적

-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을 고려한 고령친화적 도로·교통 환경의 조성은 노인인구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증대시키며, 지역에서의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50㎡ 미만 신청시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79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04년 기준 204만원) 이하여야 함.

기반임.

- 고령친화적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인구의 이용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교통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대중교통이용 및 보행환경 실태

-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의 31.7%가 도로 보행 중 보도턱,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으며, 노인들은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33.5%가 버스 승차중 버스의 급출발 또는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지하철 이용시에도 29.7%가 계단 등으로 인하여 지하철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한국교통연구원, 『장애인·노약자의 복지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2004)

□ 정책추진현황

- 대중교통 관련 사업
 - －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33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144대 설치, 수도권 전철 4개 역사에 32대 설치
 - － 버스정류장에서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底床)버스 도입을 실시, '04년부터 '07년까지 총 890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음.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버스정류장과 수평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로환경이 필요로 하여, 도로환경이 정비된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지하철(전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충
 - '02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을 마련
 - － 고령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확보의 일환인 특별수송

서비스 관련 사업은 자치구 및 복지관별로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 사업과 장애인용(노인 장애인 포함) 콜택시 및 무료수송 서비스 사업(서울시 등)이 운행중임.

- 대중교통의 운행빈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별수송 서비스의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비스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임.

○ 보행환경 관련 사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보도 설치사업, 도로·공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도의 턱 제거 사업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07.2)
- 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07.5),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지침제정('07.10)를 통해, 전국 3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변 보도설치('07년 56km)
- 노인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연장(전국 2,129개소)

○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07.3)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07.5월, 10월)
- 이동편의 시설 실태조사 및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추진('07.6.)

다) 향후 정책방안

☐ 고령친화적 도로·교통시설 설치기준 적용·시행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치를 위한 교육실시, 적용 및 시행을 관리

☐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육교 설치 억제 등 횡단보도 복원 확대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08년 100% 달성
- 저상버스 보급확대: '13년까지 전국 버스의 30% 보급 목표
 - － 저상버스 교체 비용 차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 지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콜택시 및 셔틀버스 도입 확대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노인복지시설 주변 및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도입
 - － 주요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1초당 1m에서 1초당 0.8m(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시간과 동일한 수준)로 연장하는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후 모든 횡단보도에 전면 적용 추진(2018년경 예상)

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가) 필요성 및 목적

-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가운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준의 신체 기능과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운전자 실태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 증가
 - － 노인면허인구는 952,303명('07.9)이며, 이는 노인의 약 20%에 해당됨.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9,468건('04년)에서 10,585건('05년), 11,868건('06년)으로 2년간 25%의 증가를 나타냄.

□ 정책추진현황

○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배포 및 홍보

- 고령운전자 차량의 실버마크 부착을 통해 노인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운전 문화를 조성하고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기대
- 실버마크 150,000매를 제작하여 지방경찰청별 배포('07.12)하였으며, 노인면허 인구의 약 15.8%에 해당되는 규모임.

○ 고령자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자 2,838,419명에 대한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07년).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한국생활안전 연합이 공동으로 야광안전모자 21,600개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농촌지역 고령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후 배포 예정('08.8~12).

○ 고령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제기되어지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적성검사 및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그 이유는 고령운전자들로부터 반대민원을 받게 되고, 안전을 위한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 때문임.

○ 따라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편의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되 고령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

다) 향후 정책방안

□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이 안전교육 이수 추진

- 5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능력을 측정하고, 위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무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 실버 마크(silver mark)의 확대 보급

- 노인 운전자는 시력 저하, 운동반응 지연 등으로 일반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한 그룹이므로,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실버 마크(Silver mark) 제도를 확대 보급
-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계속 추진
 - 노인운전자를 비롯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령화라는 사회변화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모델의 제시를 필요로 함.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역개발과 지역복지 등 지역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어, 지역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 고령화현상은 지역내 인적구성의 변화, 지역주민의 욕구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등과 함께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지역별 고령화율을 비롯하여 산업구조, 복지기반과 자원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지역복지모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원형과 자립형의 시범사업을 추진함.
 - 보건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제안
 - 시범사업 지역은 지원형으로 경북의성, 전북 순창, 충남 부여, 자립형으로 강원 원주가 선정(‘07.5.3)

나) 현황 및 문제점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고령자 복지수요가 급속히 증가
 - '05년 234개 시군구 중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지역이 63개 지자체로 이는 '00년 29개에서 대폭 증가한 것임.
-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수요자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에는 한계
 - 부처별 지역 지원사업은 부처별 연계성이 없이 지역주민 복지향상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미흡
 - 복지부 권역별전문질환센터, 건교부 개발촉진지구, 산자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 등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호 연계성이 부족
-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노력 부족
- 추진개요 및 현황
 -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의 하나로 「고령친화지역특구」 설치 추진계획 발표('06.8)
 - 고령친화모델 지역선정('07.5), 사업추진방안 수립('08.1)
 - － 고령화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고령친화모델지역 구상안 마련
 - 07년 시범사업 지역 선정 후 '08년 예산 배정(2억원)의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시점 부적절로 인하여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다) 외국 사례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
 - 선진국은 점진적 개발을 통해 살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서 고급유투양로시설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안정된 노후 연금제도 및 정부보조를 바탕으로 요양·보건·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 민간, 지방정부 참여 활성화

- 일본 고베 행복촌: 고령자, 장애자의 자립을 원조하는 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운동, 골프장, 캠프장 등 다양한 종류의 야외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숙박시설, 온천 시설 등 복합 시설을 제공
- 미국 아리조나주 선시티: 민간이 개발·분양한 세계 최대규모의 실버타운, 고령자만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개발·제공됨.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사업
 -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고령친화성의 특성을 부합, 고령친화적 지역사회(older friendly community)는 노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지역사회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일환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지역내의 자체적인 개발사업으로 고령자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실시되는 자발적 지역개발 사업임.

라) 정책방안

- 고령화를 사회적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차원의 대안 모색
 -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 및 국토정책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접근
 -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고령친화성(elder-friendliness)”과 “지역사회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 개념”을 실천
 - 보건·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지역사업으로 전국 확대추진
 - －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수립한 3대 분야 맞춤형종합서비스 제공
 - －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모델발굴 및 전국확대
 - 4개 지역(부여, 순창, 의성, 원주)에 대해 3년간(‘08~‘10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16개 시도로 확산

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자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개념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 도입을 필요로 함.
- ☐ 연령이나 개인 능력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 확대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
 - 교통과 도로, 건축과 주택, 생활제품 분야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나) 현황 및 문제점

- ☐ 사회적 약자의 증가 추세
 -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를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진행 예상
 - － 65세 이상 노인: ‘00년 7.2% → ’20년 14.3%
 - － 234개 시군구 중 고령화율이 20%를 초과수: ‘00년 29개 → ’05년 63개
 - 고령자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높은 비중
 - － 장애인, 임산부 등의 약자가 1,182명으로 총 인구대비 24.6% 비중

〈표 13-28〉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05년)

구분	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인구(만명)	1182	124	437	43	323	254
총인구대비	24.6%	2.6%	9.1%	0.9%	6.7%	5.3%
사회적 약자대비	100%	10.5%	37.0%	3.7%	27.3%	21.5%

* 영·유아 동반자 : 0~4세 인구수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은 미흡
 - 베리어프리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및 편의 제공
 - － ‘97년 이래로 기존 시설의 장애를 낮추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의 체

감도는 저조한 실정

- '03년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문조사 결과 체감도는 33.2% 수준
- 따라서 설계단계부터 배리어프리를 고려하고 나아가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기존 장벽을 제거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 고령자·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제품 및 생활환경을 디자인

□ 정책 추진 현황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분야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97년, 복지부)
 - － 편의증진 종합계획 수립·추진(1차:'00~'04, 2차:'05~'09)
 - － 편의시설 설치를 점검키 위해 5년 단위 전수조사 실시
 - － 대상시설 설치율의 증가추세: ('98) 47.4% → ('03) 75.8%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07년, 산자부), 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체계적인 관리
- 교통 및 도로 분야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05년, 건교부)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추진('07~'11)
 - － 교통, 여객,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
- 주택 분야
 - －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 지원법」 제정 추진 중('08년, 건교부)
 - －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계획수립의 의무화, 주거기준 수립
 -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개조 비용지원 검토
 - － 고령자용 주택 공급: 배리어프리가 고려된 고령자용 주택 공급

- 임대주택 보급확대 : ('05)855호 → ('06)575호 → ('07)1,100호
- 고령자용 주택 설계지침 수립
- 노약자 제품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96년, 산자부)
 -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원칙과 개념도입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추진(1차:'93~'97, 2차:'98~'02, 3차:'03~'07),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구축 사업수행('04~'07)
 - 고령자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품개발 추진 중: 고령친화형 자동차 개발(건교부'07~'12), 정보통신기기 개발(정통부'06~), 복지용구 표준 개발(산자부, '05~)
- 공산품을 위한 인체데이터 및 설계지침 제공(기술표준원)
- '03년부터 일반인, 장애인, 고령자의 인체를 측정, DB를 구축하여 기업과 대학에 제공하는 SizeKorea 사업추진 중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조명, 소리, 밝기, 글자 KS 도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07, 의원입법)
- 유니버설 디자인제품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 문제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원분야와 교통·도로분야는 법령을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이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는 미흡
 - 시설 관리주체(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 공원과 공동주택의 시설 설치율은 60% 수준
 - 건축주는 건축비 부담을 이유로 시설설치 기피, 복지부·건교부 공동으로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추진하고자하나 실효성 불확실
 - 건축물분야와 도로·교통분야의 담당부처가 이원화되어 사업연계성 부족
- 주택분야의 배리어프리 기준은 수립되었으나, 실효성 담보는 미흡
 -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은 있으나 재원부담에 따라 이행이 담보상태

- 노인양로시설, 요양시설의 설계KS도 강제 집행력은 미약
- 노약자 제품분야는 노인유니버설 디자인 제품개발과 보급 미흡
 - 제품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은 조성되고 있으나 R&D 예산확보 등 구체적 육성 지원책은 미흡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장기정책 미흡
 - 현행 제도들은 설비를 개선하는 배리어프리에 중점을 두어 이중 투자부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체제는 세계적 추세인 유니버설디자인 방향과 불일치

다) 정책방안

- 기본 방향
 - 공공성 : 안전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사업성 :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만족시키는 시장의 창출과 산업화추진
 - 경쟁력 : 융복합 기술향상 및 수출기회 확대로 국가경쟁력 향상
 - 효율성 : 배리어프리를 추진하되, 설계단계 UD도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절감 및 효율성제고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원분야와 교통·도로분야
 - 시설주관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수립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집행, 정책추진의 장애요인 점검
 - 건축물분야, 교통·도로분야의 법령 연계성 검토
 - － 관련법령을 통합관리하거나, 개별법을 운영하되 기술분야는 통합고시 방안 검토
- 주택분야
 - 주택 및 공공건물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강구
 - － 고령인구가 밀집된 농촌지역의 주택구조 개선책 수립
 - － 마을회관 등 농촌지역 공공건물의 배리어프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주택개조 비용지원 현실화
 - 노인복지법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 노약자 제품분야

-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 － 유니버설 디자인제품은 의료, 전자, 건설 등 기술이 융·복합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나므로 관련 부처간의 R&D 통합관리 방안검토
-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 그린시티, 유비쿼터스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 시범사업 추진
 - － 단지→블록→도시로 적용 범위를 확대
- 생활속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보급
- 산학연관 전분야로 확산
 -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니버설 디자인 포럼의 정례적 운영
 - 홍보·교육 강화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
- 각부처 계획의 종합관리 체제구축
 - 분산 추진하는 계획들을 통괄 관리하으로써 시너지효과 제고
 - － 편의증진 국가 종합계획(복지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건교부), 디자인 종합계획(산자부) 등의 주기적 점검 및 평가

2. 고령친화적인 문화적 환경 조성

가. 세대간 이해 증진

1) 필요성 및 목적

- 노인과 비노인 세대간의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세대간 통합이 가능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창

출하며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고령친화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인 가치기반의 조성이 요구됨.
 - 우리사회가 인구고령화에 적합한 사회구성원으로 변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그러한 결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이해 증진이 요구됨.
 - 사회에 만연해있는 연령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다양한 연령층과의 접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대간의 이해가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임.
- 한편, 현재 우리사회가 연령차별적인 사회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이 타 연령집단에 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노인존중이라는 가치기반의 마련이 요구됨.
 - 세대간의 이해와 노인존중에 기초한 사회는 우리사회의 집합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의 고령사회대책 대강령에서는 과제중 하나로 나이만으로 고령자를 차별대우하는 제도, 관행의 재검토, 세대간의 연대강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2) 실적 및 문제점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매력, 생산성, 건강함, 진보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두드러짐.
 - 노인의 86.3%가 한가지 이상의 노인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이는 캐나다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노인의 30.5%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8.1%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4.0%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56.2%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등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로 볼 수는 없음.
- 즉, 노인의 다양성이 부각되지 못한 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우리사회의 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가치기반 조성은 장기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므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체계적·장기적인 전략 없이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할 수 없을 것임.

□ 관련정책 추진현황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07. 8.3 제정·공포되어 '08.8.4부터 시행될 예정
- 지속적으로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져 2007년도의 경우 효행자 123명, 장한아버이 15명, 45개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에 대한 표상이 이루어졌음.
- 교과과정 개발 등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문제점

- '효문화' 고양과 정착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수행되어와, 노인에 대한 일방적인 공경만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의 모습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전략 부족

3) 정책방안

- ☐ 가치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 타연령층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사업
 - 노인의 사회공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
 -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양한 노인의 모습 소개
 - 각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령차별적,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각급 교과서에 긍정적 노인의 모습에 대한 내용 포함
 - 드라마, 광고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긍정적 모습 제시를 위한 콘텐츠 개발
- ☐ 연령차별 사례 접수 체계 마련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나. 노후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

1) 필요성 및 목적

- ☐ 가까운 미래에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불안감이 증가, 하지만 노후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사회적 기반 형성이 부족한 상태임.
-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노후설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은 전문한 실정이거나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함.
 - 민간 기업, 컨설팅 기업, NGO·NPO, 종교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는 노후설계 프로그램들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제공되는 실정이다 보니, 각각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미래의 노인이 구체적인 노후의 모습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후

설계를 지원하는 기반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2) 실적 및 문제점

- ☐ 정부차원에서의 노후설계를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단, 정부부처에 의한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에 의한 대학지원을 통하여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 현재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개인들도 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며 노년기를 내용적·질적으로 채워나갈 계획과 준비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음.
- ☐ 민간중심으로 재정설계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진정한 노후설계는 재정설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설계와 실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3) 외국 사례

- ☐ 영국
 - Life Academy: 올바른 퇴직 준비를 유도해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씽크탱크(think-tank).
 - 원래 퇴직 준비에 초점을 둔 조직이었으나 현재 생애설계(life planning)로 범위를 넓히고 있음.
 - 노후커리어 개발 및 퇴직 계획(Later Career & Retirement Planning), 생애설계사 자격증 코스(Postgraduate Certificate in Life Planning), 석사학위 코스(MSc in Mid-Life, Pre-retirement and life planning) 등을 운영.
- ☐ 프랑스
 - CLIC-Point Paris Emeraude(PPE): 노인들과 그 가정에 노년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해법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파리시내 각 행정구역 마다 PPE 설치(모두 15개)

4) 정책방안

☐ 다각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일, 재무, 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 여가, 주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재무와 관련해서는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은퇴 후 노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입각한 저축 및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구축하도록 함.

☐ 노후설계를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의 구축

- 노후설계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One-stop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 On-line 포털 구축을 통한 노후사회보장 제도 관련 정보, 노후설계 정보, 노후사회활동 정보, 노후여가문화 생활 정보, 건강정보, 평생교육 정보, 심리적 정보, 관련 단체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제반 콘텐츠 제공

☐ 생애설계 전문가 양성

-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ex.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사, NGO/NPO 활동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기업 인사담당자, 보험설계사 등) 중 생애설계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완적으로 획득한 사람들로 구성가능함.

☐ 생애설계 상담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들이 직접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 노년기,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며 교육시키는 인프라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평생교육 인프라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와 관련된 것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
- 노년기에 현실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년에 관련된 주제를 넘어서 현실에 밀접한 이슈와 주제들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노후설계 HUB 기구의 구축

-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다양한 민간차원의 실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에 대한 환류 등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허브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표준화
- 생애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표준화
- 교육 방식 및 강사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에 관한 세부적 규정 마련

제5부 성장동력부문 보완방안

제 14 장 성장동력부문 기본구성

- 성장동력부문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용 및 산업구조를 고령사회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여성, 고령자 등의 잠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인적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노후 금융소득의 보장을 추진하고, 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전제로 하여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추진 중에 있음. 즉,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성장동력산업으로써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임.
 - 각 영역별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아래 표와 같은데, 각 영역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즉, 첫 번째의 영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중, 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던 여성이나 고령자의 잠재인력,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계획수립이 필요하였고,
 - 두 번째의 영역에서는 기존 노동자의 평균연령이 상승해 감에 따라서 하락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하고,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력의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영역은 노동부문 이외의 금융재정 및 산업육성적 차원에

서의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즉, 주택관련 역모기지제도, 자산 운용, 장기국채시장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노후의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음.

〈표 14-1〉 성장동력부문 기본계획 구성내용

부문	기본계획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②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2.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①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②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지원 ③고령자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④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⑤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①외국적 동포의 활용 ②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③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④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①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②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③평생학습, 직업훈련 인프라 및 국가기술 자격제도 혁신
	2-2.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산업현장의 안전, 보건증진 ②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2.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 표시제도 도입 ③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제 15 장 성장동력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 방향

제1절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부문 중간점검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수준대에 머무르고 있어, OECD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임.
- ☐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진출 실태를 보면,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5개)을 선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실천계획(2006~2010)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 ☐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임용의 확대의 경우, 각 대학에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유도 하고 있으며, 대학평가지표에 여성교원임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그동안 점차적으로 여성교원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여성교장 및 교감의 임용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임용비율이 '06년도 12.8%에서 '07년 상반기에 14.1%로 증가하였음.
- ☐ 그러나, OECD 선진국가들의 실태와 비교하여 볼 때, 아직 우리나라가 낮은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나.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어 여성인력개발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근거로 한 정책개발이 요구됨.
- ☐ 여성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여 재직자훈련의 여성참여

율이 20%수준, 유급휴가훈련의 참여율은 7%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양상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이 수료율은 높으나 남성에 비하여 취업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요구됨.

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가.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지난 2008년 3.21일자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연령에 기인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게 되었음.
- 다만,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적용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장려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사업장에게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연장된 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정년 연장 후 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나.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수급자는 585명(1,538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근로형태의 다양화지원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만하여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보편적이지 못한 실정임.

다. 고령자고용인센티브 강화

- ☐ 고령자고용신규촉진장려금제도의 지원대상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음.
 - 고령자고용신규촉진장려금제도: 지원대상 50~64세, 실업기간 1~3개월 초과,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급)
 - － 고령자를 포함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004년 10월~12월간 8억원, 2005년 840억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 1,721억원이 집행되어 전년대비 104.9% 증가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제도: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1년 이상 고용된 55세 이상 고령자, 총지급기간 설정 5년
- ☐ 전직지원장려금은 2004년 14억원, 2005년 15억, 2006년 15억으로 안정적인 지급 추이를 유지

〈표 15-1〉 전직지원장려금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사업장수	5	21	16	31	28	38
인 원	679	7,408	583	2,696	1,440	1,845
금 액	43	432	641	1,428	1,514	1,522

라.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 공공훈련기관의 고령자전문훈련과정을 개선, 확대하고, 지역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3,072명(10개 직종): 단기적응훈련프로그램 참여
 - 2007년 고령자현장연수: 328명(중소기업 93개)
- ☐ 실버취업박람회도 2007년도 전국 15개 지역에서 857개 업체가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실시
- ☐ 사회적 기업육성법(2007.1)의 제정으로 민간부문에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마. 고령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 고령근로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3,448백만원 (13개사)을 투입
- ☐ 기타 고령근로자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등은 뚜렷한 사업실적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가.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의 활용

- ☐ 2007년도에 일반외국인 49.6천명, 특례외국인(동포) 60천명 도입을 추진함.

〈표 15-2〉 '07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 산업	어 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폐차업)		연근해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총계	109,600	69,300	14,900	20,600		3,600	900	300
일반	49,600	42,100	4,400	100	100	1,900	800	200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100	100

- ☐ 외국인력의 도입가능한 업종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음.
- ☐ 외국적 동포 추가고용 허용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 제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기준인원 만큼 외국적 동포 추가 고용을 허용(사업장별 허용 인원의 2배로 조정)함.
- ☐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우대하였는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기업

(비수도권)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상향조정함.

- 외국적 인력의 추가 선정된 송출국가에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 동티모르 5개국을 포함시킴.

〈표 15-3〉 외국인력 도입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06)	특례고용허가제('07)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좌 동	좌동
건설업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좌 동	좌동
	-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서비스업	-	- 음식점업(5521, 5522) -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5922·3) - 사회복지사업(86) -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 욕탕업(93121) - 개인 간병인(93993) - 가사 서비스업(95)	- '06년 허용업종 - 산동물 도매업(51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731) - 가정용품 도매업(51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 무점포 소매업(528)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 산업용 세탁업(93991)
	- 냉장·냉동 창고업(632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좌 동	- '06년 허용업종 - 육상여객 운송업(60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어업	- 연근해어업(05112·3) - 양식어업(0521)	좌 동 좌 동	좌동 좌동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좌 동	좌동

※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06년과 '07년 도입업종이 동일

단, 건설업 중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는 고용허용대상에서 제외

※ '06년 특례 고용허용업종 이외에 추가로 서비스업 중 업종별 인력부족률이 높은 가정용품 도매업 등 12개 업종 추가

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 ☐ 고용허가제 도입초기에는 사업이 저조하였으나, 2005년도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외국인구인신청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계획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외국인력 송출국가도 제도시행초기에는 6개국이었던 것이 현재 15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양적인 확충이 도모되고 있지만, 외국인력의 도입절차의 투명성 결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관리 미흡, 외국인력관련 통계인프라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다.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 ☐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지원 등의 사업이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 미혼의 외국인 체류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미흡함.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부문 중간점검

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 노동부의 사업결과를 보면, 중고생대상의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job school),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대상의 취업캠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직업심리검사, 구직자특성별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졌음.
- ☐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지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5-4〉 선정대학 명단 및 프로그램명

주 제	지정대학 및 프로그램
유학생 교육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정보대학: 연계형 기반 전문대학 유학생 3품 교육운영 · 영진전문대학: 취업약정형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 명지전문대학: 유학생 교육제도 개선 시범전문대학
일반 학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정보대학: 성인학생을 위한 학사행정 개선 운영 · 안동과학대학: 산학연동 POP-Edu 교육인증제 운영 · 경북전문대학: CELL 기반 블록형 생애교육시스템 운영

- 2007년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강정보대학의 성인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등 6개교의 프로그램을 「2007학년도 학사제도 개선 시범 전문대학」으로 지정했음.
- 또한, 시범대학 지정에는 전국 20개 전문대학이 신청하여, 학사운영 및 평가 전문가, 산업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구체적 실현가능성, 직업교육 개선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 학사제도 개선 시범 전문대학 지정은 그간 대학의 자율 주제선택 및 신청에 의해 지정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외국 유학생 증가 등 환경변화에 맞춰 “유학생 교육제도 개선”을 별도주제로 분리하여 지정하였음.
- 지정대학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유학생 교육제도 및 일반 학사제도 개선 각 3개교).

나.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카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 10.4일에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을 마련함.
 - 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명당 각각 보험연도내 연간100만원 까지 지원하되 총지원금액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 한도를 산정할 때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금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삭감하고 지원을 제한함.
 - － 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 － 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 － 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부터 1년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300인이하의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0인이하의 제조업, 기타업종은 100인이하임(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 － 현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회원협력사가 15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상기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됨.

다.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로 2007년 현재 총 76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 운영 중에 있음.
- ☐ 직업훈련인프라의 혁신내용은 공공훈련인프라를 개편하고, 민간훈련기관을 내실화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활발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 혁신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가.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증진

- ☐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취약부문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강화하였음.
 - 권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설치운영
 -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 중부권: 대전, 충북, 충남
 - － 영남권: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 －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내실화 및 화학물질관리의 체계화가 추진되었음.
 -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됨.
 - '08년 1월부터 불시측정(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가 도입, 실시됨.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1개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총 4개소의 확대설치를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됨.

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 ☐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급조건의 고용 유지기간 단축, 지급방법 등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도 630명(2,906백만원)에 이름.
- ☐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활수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직업훈련의 강화, 창업지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절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1.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 ☐ 2007년 역모기지상품이 개발, 도입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내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2007.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의 취급근거 마련(2007.4~5), 역모기지상품 판매개시(2007.7) 등이 이루어짐.
 - 2007년말 현재 515명의 수급자가 발생함.
- ☐ 본 상품의 적용대상기준(지역적 차별, 주택가액 등)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2.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조건의 최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차별적으로 완화시켰음.
- ☐ 금전신탁업의 진입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일임사의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펀드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공표된 상태에 있음.

3. 장기국채시장의 육성

- ☐ 초장기 국채는 2006년 3월이후 발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국채발행 규모가 당초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 그러나, 10년만기와 20년만기의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제의 발굴이 특히 요구되고 있음.

제4절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부문 중간점검

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고령친화산업관련 법에 제정 공포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6.12.28 제정, 2007.6.27 시행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2007.6.29 시행
- ☐ 다만, 고령친화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로드맵에서 관련법령의 제정으로 준비단계사업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으나, 표준화 확대사업, 제품 상용화, 고부가가치화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나.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 표시제도 도입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우수제품 표시제도를 개발 중에서 있음.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중 15개 품목에 대해 우수제품으로 선정 예정임.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고령친화제품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을 법령으로 고시하기로 함.
- ☐ 다만, 고령친화제품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욕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제품의 개발이 요구됨.

다.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 전국적으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2개소 선정하여 개소를 추진 중에 있음.
 - 2개 지역: 성남시, 대구시
- ☐ 다만, 체험관만으로는 제품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사용법 습득을 위한 교육연수기능을 지닐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

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간내 기술개발이 유망한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예를 들면, 노인성질환예방기술, 노인운동기기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특히, 기술개발시 UD의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고령친화용품의 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함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2008.1.1
 - 지식경제부 지정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확장이전: 2008.4.1
- ☐ 추가적으로 고령친화용품의 사용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양성기관의 설치가 요구됨.

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대상 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차원에서의 표준화보다는 노인복지적 차원에서의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제품(용품)에 대한 표준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의 선정과 함께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됨.
- ☐ 또한, 표준화된 제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 등에 대한 DB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제 16 장 성장동력부문 수정보완 방향

제1절 종합평가

-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으로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경제적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제정('07.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8.3)
 - 연공급적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의 고령자 고용기피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위축
 - 또한, 외국인력의 도입절차가 까다롭고 사회정착지원이 미흡하여 외국인력 활용도 어려움
-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현장성과 활용성이 낮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생산관리 등 고급훈련기회가 절실
 -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국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체계' 구축 필요
-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으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었으며, 향후 법령에 제시된 사업들의 단계적 추진 필요
 - 고령친화복지용구 연구개발(R&D) 및 산업 육성
 - 고령친화제품산업 DB 개발 및 구축,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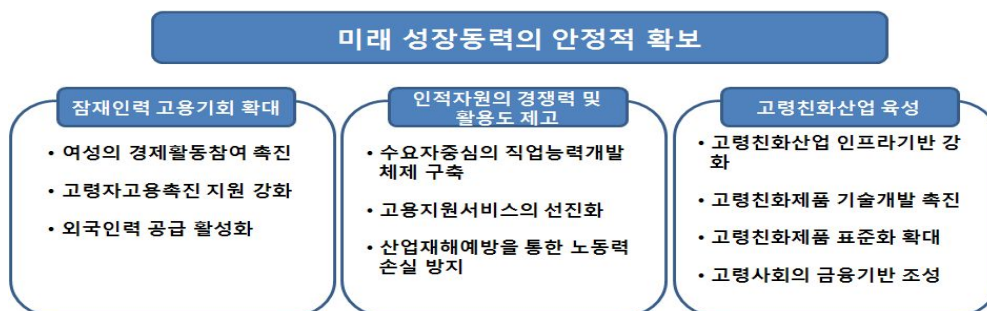
제2절 보완방향

-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수요자(기업, 근로자) 중심의 노동행정에 초점
-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
 - 현장 적합성이 약한 공급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 개발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효과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

[기본계획상 구성]



[보완 후 구성(안)]



〈표 16-1〉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과 신규목차 및 수정·보완안

주요내용	신규, 수정보완 방안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일부신규포함) ③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내 ‘일-가정 양립형 여성일자리 확대(신규)’ 내용 포함
1-2. 고용자 고용촉진 지원강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지원(일부신규포함)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일부신규포함)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지원」내 ‘임금피크제보수수당제도의 상시제도화(신규)’ 내용 포함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내 ‘고령자친화형 사회적 기업육성(신규)’ 내용 포함
1-3.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외국적동포 활용 우수외국인력의 적극조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선(수정·보완)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07년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구생제도 통합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선」 내용 수정·보완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내실화(일부신규포함)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기존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확대」을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내실화」와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로 분리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내실화」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대 및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신규)’ 내용 포함
2-2.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신규)	-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신규)
2-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설립 노인요양서비스산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목을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으로 수정(제목수정) - 노인요양서비스산업기반 구축(삭제)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 복지용구 연구개발(R&D) 및 산업육성(신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및 확충(일부신규포함)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신규)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및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R&D) 활성화(일부신규포함)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우수제품 전시기획 확대	<p>※ 단일 목차로 구성된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의 경우 각각의 추진계획을 한 쪽지로 간주하여 목차 재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신규) - 기존 지식경제부 지정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및 확충」에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신규)’ 내용 포함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개발 및 구축(신규) - 기존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에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R&D) 활성화(신규)’ 내용 포함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자·장애인 복지 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p>※ 단일 목차로 구성된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의 경우 각각의 추진계획을 한 쪽지로 간주하여 목차 재구성</p>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생애주기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신규)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수정·보완)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장기국채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신규) - 기존 「역모기지제도의 도입」 내용을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로 수정·보완

〈표 16-2〉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과 수정 전후 목차 비교표

수정·보완 전	수정·보완 후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일부신규포함)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1-2. 고용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1-2. 고용자 고용촉진 지원강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지원(일부신규포함)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일부신규포함)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외국적동포의 활용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3.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외국적동포 활용 우수외국인력의 적극조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선(수정·보완)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2-1.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일부신규포함)
	2-2.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신규)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장기국채시장 육성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3. 고령친화산업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설립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노인요양서비스산업기반 구축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설립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클러스터링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 복지용구 연구개발(R&D) 및 산업육성(신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및 확충(일부신규포함)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신규)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및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R&D) 활성화(일부신규포함)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우수제품 전시기획 확대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자·장애인 복지 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생애주기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신규)
	②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수정·보완)
	③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④ 장기국채시장 육성

제 17 장 성장동력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제1절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 경력단절형 취업유형이 보편적인 한국여성노동의 상황에서 경력단절후 재취업할 일자리 부족으로 고학력 여성이 영원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L자형 취업 유형이 정착되고 있음. 고학력 여성의 비활성화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절실
- ☐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진입시기, 퇴직시기에 걸쳐 일과 가족생활의 이중부담을 요구받는 한국사회 규범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형 여성일자리 확대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들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이란 별도의 명시아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없음. 그러나 200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인력종합계획보고서 「Dynamic Women Korea 2010: 여성인력 종합계획(‘06~’10)」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중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명시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동안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중요 정책목표로 제시, 이 중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44만 1천개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 사회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의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방안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예,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독려 등)
- 고학력여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국가전략 및 성장동력분야로의 여성진출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와 일자리-사람연계프로그램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가 높으나 현행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 내포

3) 향후 정책방향

-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 자체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임
 - －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여성비율은 2003년에 52.8%로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1998년 OECD 평균수준인 65.8%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
 -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간에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에 정책적 노력 필요
 - －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확대로 공공지출의 방향을 전환하면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창출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제고될 수 있음.
 - － 대부분의 저임금서비스경제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전반적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양호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서비스 수준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형태 유연화
 - 시차별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활성화
 - 재택근로 관련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적 규율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유형(M자형, L자형 취업곡선)을 생애지속적 취업유형(∩자형 취업곡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진입시기, 퇴직시기에 걸쳐 일과 가족생활의 이중부담을 요구받는 한국사회 규범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직업의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직업의식과 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상시켜줄 교육훈련기회에서도 여성은 취약한 상황임.
- 따라서 경력단절이 보편화된 여성노동공급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성 인지적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과제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역량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나,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 투자 미흡
- 재직자훈련의 여성 참여율은 20%에 불과하며, 유급휴가훈련의 여성 참여율은 7%에 불과

〈표 17-1〉 재직자 향상 훈련의 여성참여 비율

	예산	인원	여성비율
재직자향상훈련	191,931	1,696,820	-
사업주훈련	180,838	1,661,978	20.0
유급휴가훈련	6,869	5,665	7.0
수강장려금	4,224	29,177	59.1
학자금대부	63,476	27,772	41.8

자료: 노동부 훈련정책과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한 여성 참여율이 낮은 편임(각각 15.1%와 23.5%,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인원 중 여성비율, 2003)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수료율은 높고 자격취득률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그러나 취업률에 있어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후련에 참여하고 높은 수료율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취업률은 더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있음

〈표 17-2〉 고용촉진훈련의 성별 훈련성과

구분	참여자	참여자비율	수료자	수료율	자격취득자	자격취득률	취업자	취업률
전체	25,153	100	18,723	74.4	7,088	37.9	5,856	36.3
남성	8,794	35.0	6,155	70.0	2,361	38.4	2,072	40.3
여성	16,359	65.0	12,568	76.8	4,727	37.6	3,784	34.3

자료: 남재량(2004)에서 재구성.

3) 향후 정책방향

- ☐ 여성인력개발정책 활성화
 -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여성인력개발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개발 지속·확대 필요
- ☐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 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다.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연금이나 기타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4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100인이 비경제활동노인 16.4명 부양(실질부양비 기준)
- 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유지시 2050년 56.2%까지 증가
-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는 노동력인구의 생산성 문제로 귀결되며 인구 고령화를 우려하는 근본적인 문제임
- 고령사회에서 실질적인 부양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은 여성활동참가율 제고임. 따라서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필요

2) 현황 및 실적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 정도이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반적인 정세상태
- OECD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던 국가들이 큰 상승폭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국가로 남게 되었음

〈표 17-3〉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국가	1990	2003	증감률 (% 포인트)	구분	국가	1990	2003	증감률 (% 포인트)
A	스웨덴	82.5	76.9	-5.6	D	미국	67.8	69.7	1.9
	덴마크	77.6	74.8	-2.8		영국	67.3	69.2	1.9
	핀란드	73.5	72.1	-1.4	E	벨기에	46.1	55.8	9.7
B	노르웨이	70.7	75.9	5.2		아일랜드	42.6	57.6	15.0
	캐나다	68.3	73.0	4.7		그리스	42.6	51.0	8.4
	스위스	68.2	73.9	5.7		스페인	42.2	55.7	13.5
C	뉴질랜드	63.2	69.3	6.1	F	한국	49.9	52.8	2.9
	호주	61.5	66.0	4.5		일본	57.1	59.9	2.8
	프랑스	57.2	62.5	5.3		이탈리아	44.0	48.3	4.3
	독일	55.5	64.5	9.0		터키	36.0	28.1	-7.9
	네덜란드	52.4	68.4	16.0		멕시코	35.7	40.5	4.8

주: 15~6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에서 재구성, 2005.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을 5개 선정하여 공학교육시스템 개선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공대 여학생의 역량 강화 추진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방안」(2005년 10월)을 마련 후,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실천 계획」(2006~2010년)을 수립·추진중임
 - － 정부 R&D사업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노동시장 내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감안한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분야와 인접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
 - －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의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을 확충하는 한편,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자와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해소하고자 함
 - － 과학기술분야 취업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활용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축적·활용하는 등 구인·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취업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
 - －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여성인력 진출 확대라는 성 인지적 접근을 연계하여 사업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 대학에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평가를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 － 매년 우수대학 선정 및 지원,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에 ‘여성교원임용실적’ 반영(‘07.5)
 - －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 대상을 4년제 일반대학에서 산업대, 교육대, 방통대까지 확대(‘07.7)
 - 4년제 대학 여교수 임용률: ‘06)16.8% → ‘07)17.3 → ‘10)20%

- 여성교장, 교감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하고 그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여성교장, 교감 임용율: '06)12.8% → '07상)14.1 → '10)20% → '15)30%

3) 향후 정책방향

-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강화
 - '07년도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 결과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이 전년대비 1.6%, 0.8% 각각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율 자체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를 더욱 강화, 지속해야 함
- ☐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30%) 지속 추진
 - 5급 이상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 적극적 균형인사정책 강화하여 국가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
 - 2007년도부터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07~'11)' 수립 시행
 - 5~9급 공채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30% 미달시 추가합격) 지속 추진('08~'12)
- ☐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를 확대 실시하여 '10년까지 20% 확보('05년 16.2%)
 -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를 '10년까지 20% 달성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강화

가.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 우리 기업의 지배적 임금체계인 연공급과 경영환경간 부정합성은 기업내부 및

국가 차원의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

- 생산성대비 높은 임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압력요인으로 작용
-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는 순수한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 즉 생산성과 임금간의 괴리가 신규채용 회피 및 중고령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

2)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시행 및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컨설팅사업 '07년도 35개사 1,330백만원 지원
- 임금피크보전수당 '06년 227명 579백원, '07년 585명 1,538백만원 지원

□ 사회통합 저해 및 노동시장 왜곡

- 중고령자 고용회피 및 조기퇴직, 신규채용 회피로 인한 청년실업 증대 및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키면서 사회 통합 저해 및 노동시장 왜곡
 - 전체 실업률: '98년 7.8%→ '00년 4.7%→ '01년 4.3%→ '04년 3.5%→ '07년 3.7%
 - 청년실업률(15~29세): '98년 14.1%→ '00년 8.9%→ '01년 8.7%→ '04년 8.0%→ '07년 9.2%

□ 기업 활력 저해

- 숙련/지식이나 성과보다는 근속에 따라 임금체계는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및 동기부여 기능을 상실케 함으로써 기업의 활력 잠식
- 생산성과 무관한 교섭에 의한 일률적 임금인상은 연공급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임금경직성 강화

□ 기업경쟁력 저해

- 기업은 노동조합의 지나친 수량적 유연성 추구는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저해

3) 향후 정책 방향

□ 임금피크제보수수당제도의 상시제도화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연공급 체계를 직무급이나 성과주의 임금체제로 전

환시킴을 위한 상시적으로 전환

- ☐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고용연장형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민간기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
 - 지급요건 중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 ☐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시행,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모델 개발·확산, 지역별 임금직무혁신 네트워크 구축·확산, 부분실업급여 또는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점진적 퇴직 지원, 고령자고용 친화형 근무형태 도입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나.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 중고령 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숙련·저학력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조직구성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 50~64세 고령근로자의 65%가 고졸미만의 학력(OECD, 2005)
- ☐ 중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기관 및 훈련프로그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고령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가도 매우 저조
 - 2000년 우리나라 50~64세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가율은 9.6%로서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0%, 미국 39.9%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임(OECD, 2005)
- ☐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전제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 공공훈련기관의 고령자 전문훈련과정 개선·확대
 - 2007년 10개 직종에서 3,072명이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중 2,736

명이 취업하여 89.1%의 취업률 기록

-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시행
 - －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의 현장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재취업·창업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 － 2007년 총 93개 중소기업에서 328명의 고령자에게 현장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도 900명의 고령자에게 현장연수를 실시할 예정

□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자를 위한 실버취업박람회를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개최
 - － 2007년 15개 지역에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85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7,664명이 면접을 보았으며 이중 1,385명이 취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07.1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07.7월부터 시행중이며, 2차에 걸쳐 55개의 사회적기업 인증

3)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완화 등 개선제도사회적 기업육성법 개정 추진, '08)
 - － 사회적 기업의 범위(정의) 협소, 까다로운 인증 요건(취약계층 고용 50% 이상, 매출액 30% 이상 등) 및 절차 등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저해요인
- 재정 경영 조세감면·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조치 실시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 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촉진 지원('08년~)
- 고령자 친화형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08년 계획수립,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육성)

□ 중고령자 전직지원장려금 신설('09년 고용보험법령 개정, '10년 시행)

□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재직고령자 능력개발 활성화, 고령실업자 특성에 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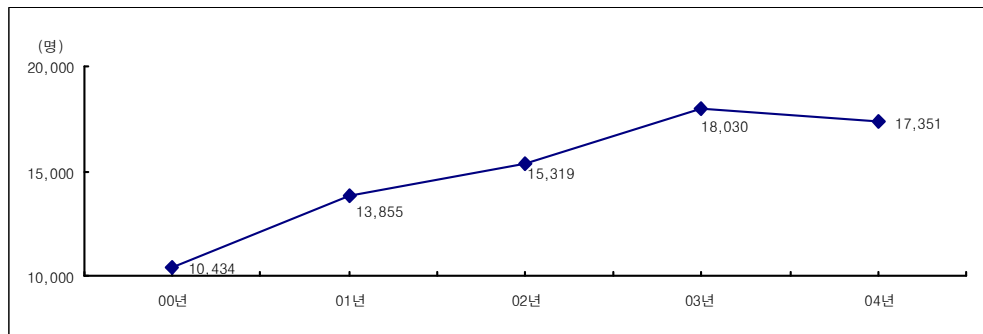
실업자훈련 확대,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 할당제 실시,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신설,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다.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1) 필요성 및 목적

-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발생빈도가 높으며 최근 증가 추세
-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25%이나 산업재해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04)

[그림 17-1] 55세이상 근로자 산업재해발생 추이



자료 : 노동부, 2005.

- 고령자의 기능적 장애출현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신체·기능적 취약성을 고려한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2)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작업시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

장애에 대해 융자지원(최고 10억원 지원)

- 공정개선, 물리적 환경개선, 간호서비스 제공 등 2007년 13개사 3,448백만원 지원

3)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중고령자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고령근로자 보건증진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라.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1)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성과와는 무관한 연령을 기준으로 중고령자를 우선 감안하거나 신규채용시 연령제한을 둠
 - 신규채용시 연령제한을 하는 기업은 전체의 50%(노동부,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제도의 사회적 영향분석’, 2004)
 - 정리해고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는 전체의 약 52%, 연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근속연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46%
 - 명예퇴직자를 선정하는 기준 또한 근속연수가 68.4%, 연령 55.5%로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조기퇴직시킴(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실태조사’, 2002)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없이 정년이 정제되어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고용관계상 연령차별과 사문화된 정년제도는 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2) 현황 및 문제점

- ☐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2007~2011년)
 -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고용자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전략적 목표 설정 후 계획 수립
- ☐ 정년연장장려금제도 도입·시행('08.1.1)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사업장에게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연장된 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정년 연장후 5년까지 지원
- ☐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임금피크제 및 컨설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확대·추진

3) 향후 정책 방향

- ☐ 연령차별 금지법 단계적 확산, 정년제도 개선, 고령자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재고 및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마.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많은 기업에서 고령자 기준고용을 미이행
 - 2006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 대상 1,950개 기업 중 988개(50.7%)가 기준고용율에 미달
 - '04.12말 기준 공공기관(215개소)의 우선고용직종 채용인원 28,122명중 준·고령자는 7,339명(고령자2,910, 준고령자4,429), 평균채용률은 26.1%에 불과
- ☐ 높은 수준의 고령자 기준고용율 미달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활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임금보조금의 활용도 저조

-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장려금 수준이 낮고, 장려금 수급 후 일정기간 고령자 해고금지 의무, 낮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으로 고령자 임금보조금 제도 활용 저조

□ 낮은 전직지원제도 활용률

- 지원요건의 엄격성, 서류준비 등의 복잡성,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노사의 관심 부족, 활용실적 저조기업 이미지 실추우려 등의 이유로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실적 저조

〈표 17-4〉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지원사업장	6	79	79	31	28	38
지원인원	679	7,408	2,917	2,696	1,440	1,845
지원금액	43	432	641	1,428	1,514	1,522

□ 고령자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미흡

- 구직자에 비해 구인인원이 적고 심층상담, 적성검사 등 고령자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미흡
- 인재은행의 경우 영세한 규모 및 전문성 부족으로 취업알선 기능이 취약하고, 관련 기관간 연계부족으로 취업알선정보의 공동 활용 미흡

3)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자 인재은행을 훈련 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09년 8개 개편에서 '12년 30개까지 확대)

□ 고령자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고령자 고용서비스 민간기관 지원강화, 고령

자고용지원 연구센터 운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퇴직 고령인력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강화, 고령자적합 직무·직종 개발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3.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가. 외국적동포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 동포의 비전문분야 취업을 위한 특례 고용허가제도의 현황

- 재외동포법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단순노무분야 외국적동포 국내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관리제시행(2002. 12), 동 제도는 ‘특례 고용허가제’ 통합시행(2004. 8.)
- ‘04.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동법에 포함하여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규정으로 운영

□ 재외동포 취업제도의 문제점

- 취업관리제의 대상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 보유자로 제한함으로써 국내 호적이나 친척이 없는 동포의 경우 취업대상에서 제외
- 운영상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재외동포는 방문동거(F-14)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비자(E-9)로 전환하던 것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외교마찰 등을 이유로 편법 운영
-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수는 223,464명(2007. 12), 외국적 동포의 불법체류 36,500명(16.3%), 이중 중국동포는 34,448명

□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내 재외동포 전담기관이 미흡하고, 재외동포재단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동포지원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재외동포 관련 포털 사이트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미비하고 사용자 접근성도 부족하며, 재외동포 DB는 재외동포재단 외에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개별관리하고 있어 상호 공유 미흡

2) 향후 정책 방향

- 외국적동포 지원방안 마련, 외국적동포 취업기회 확대 및 절차 개선, 외국적동포 체류활동 지원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 지속 추진

나. 우수외국인력의 적극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해외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유치 확대
 - － 해외우수학생연구원 156명, 해외신진우수과학자 8명, 해외과학고급과학자 81명 신규초청(2007년 총 245명 유치)
- 유학생 유치 관련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Study Korea 프로젝트)」을 수립·추진('10년까지 유학생 5만명 유치 목표)
 -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32,557명(06년) → 49,270(07년)
 - － 정부초청 장학생(07년 581명), 외국정부 국비 유학생(07년 511명) 유치

〈표 17-5〉 연도별 유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주: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 이후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문제점

-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업종 분류가 미비하고, 소관부처별로 고용추천서 발급시 대상·기준이 차이가 있는 등 체계적 시스템 미흡

〈표 17-6〉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등록('07.12월현재)

체류자격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등록외국인	1,269	17,197	2,278	163	411	3,781	6,955

주: 총 32,054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학의 국제경쟁력 취약, 비영어권으로서의 언어적 한계, 유학생 유치 인프라 및 투자 부족 등으로 유치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추이: 11,646명('01년) → 16,832명('04년) → 49,270명('07년)
 - 매년 약 55~70명인 정부초청장학생이 2007년 58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유학박람회(7개국 11개도시 176개 대학 참여)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그동안 유학생 유치 관련 사증 및 체류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전략이 미흡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 인프라 및 투자도 개선되고 있음.
 - 외국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지원(8개교, 학교당 0.5억원 지원)
 -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운영을 통한 홍보 강화

2) 향후 정책 방향

-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유치와 활용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동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의 저숙련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그동안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외국인력의 불법적인 고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
- 2002년말 289천명으로 늘어난 불법체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2003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 등을 거치면서 2003년 불법체류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불법체류자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12월 현재 223천명으로 총체류자의 21.0%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인 2007년 12월 현재 등록외국인이 107천명, 단기체류외국인이 114천명으로 나타나 단기체류에 의한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음
-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천명으로 비전문취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체류자 늘고 있어 정부정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표 17-7〉 비전문취업사증(E-9) 외국인력의 합법체류 여부별 추이

(단위: 명, %)

연 도	단순기능 인력 총체류자 ¹⁾	비전문취업(E-9)					
		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2004. 12	421,641	164,284	(39.0)	126,421	(77.0)	37,863	(23.0)
2005. 12	345,579	110,951	(32.1)	52,305	(47.1)	58,646	(52.9)
2006. 12	425,107	161,867	(38.1)	115,122	(71.1)	46,745	(28.9)
2007. 12	442,677	175,001	(39.5)	134,012	(76.6)	40,989	(23.4)

주: 여기에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선원취업, 연수취업 등을 포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취업한 외국인력은 2007년말 현재 291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사증(E-9)으로 입국)로 도입된 인력은 97천명, 특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로 도입된 인력은 194천명에 달하고 있음

-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97%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는 반면, 특례로 들어온 외국국적 동포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8〉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총 계	7,095	67,568	146,767	291,333	(100.0)
일반고용허가제	3,167	34,826	63,802	97,489	(33.5)
특례고용허가제	3,928	32,742	82,965	193,844	(66.5)

주: 총계는 연도별 누적인원임
자료: 노동부, 2008년 노동백서

〈표 17-9〉 일반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체결과 입국지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04.12	'05.12	'06.12	'07.1	'07.2	'07.3	'07.4
-외국인구인신청(A)	13,062	90,650	171,773	178,748	184,637	198,766	212,472
-고용허가서발급(B)	9,381	68,839	95,688	98,285	100,236	103,024	106,194
· 구인신청대비 발급비율(=B/A)	(71.8)	(75.9)	(55.7)	(55.0)	(54.3)	(51.8)	(50.0)
-근로계약체결(C)	7,116	56,046	80,660	83,147	85,155	87,537	90,431
· 구인신청대비 근로계약체결 비율(=C/A)	(54.5)	(61.8)	(47.0)	(46.5)	(46.1)	(44.0)	(42.6)
-입국(D)	3,167	34,826	63,802	65,429	66,912	69,025	71,032
· 구인신청대비 입국비율(=D/A)	(24.2)	(38.4)	(37.1)	(36.6)	(36.2)	(34.7)	(33.4)
· 근로계약체결대비 입국비율(=D/C)	(44.5)	(62.1)	(79.1)	(78.7)	(78.6)	(78.9)	(78.5)

자료: 노동부, 2007년 5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 고용허가제 도입초기에는 외국인 구인신청이 저조하였으나, 2005년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구인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구인신청자 대비 고용허가서 발급비율, 근로계약 체결, 입국자 비율은 여전히 낮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차질이 발생
- 고용허가제에 의한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송출국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향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 이처럼 고용허가제의 시행과정에서 당초계획에 크게 미달한 것은 고용허가제의 시행이 곧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2005년 이후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임
-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저숙련외국인 근로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님
-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절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관리체계, 외국인근로자의 귀국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2005년 3월 고용허가제의 제도 개선(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1社 1制度 원칙 폐지 등)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임
- 제도 도입이후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동 제도가 정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도입규모, 도입절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대신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07년 불법체류 외국인 22,546명, 불법고용주 5,706명 총 28,252명을 단속

2) 향후 정책 방향³⁷⁾

□ 외국인력 정책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12개 부처(정부통폐합 이전)가 관련되어 있으며 총괄조정
은 국무조정실과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
청,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 － 고용허가제 업무 중 각종 신청, 고용계약체결,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을 종합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일원화된 공공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 국제노동협력원, 한국어세계화
재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고용허가제 운영 업무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
-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위주의 외국인력정책을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 고숙련 기능
인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외국인력 도입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유연성 확대

- 송출국가의 선정 및 도입규모와 불법체류자와 연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
고 정치·외교적 이유로 송출국가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임.
 - － 인력송출국가는 제도 시행 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중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선
택의 폭은 확대
 - －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 구직자의 자기소
개서, 가족관계, 기능·기술수준, 직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 인력

37) 본절의 내용은 유길상 외,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7.10의 내용을 참고 정리하였음

채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pool DB 정보를 개선

- 외국인력 pool을 충분히 구축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추천해주는 소수의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 pool 전체에서 선택하게 하여 고용주의 선택의 폭을 확대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관리 효율화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관련기관 간의 정보 공유
 -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등), 관련부처(법무부, 지자체 등), 외국인지원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의 구축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 전담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체류관리, 인권보호, 국내적응 지원 등의 종합적인 외국인력 지원업무를 one-stop으로 제공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의 배치

□ 외국인력 관련 통계 인프라 개선

- 법무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전산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유관기관을 이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음.
-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취업현황 등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전산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책평가에 활용
 - 40만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현황, 임금수준, 주거상태, 가족관계, 자녀의 취학여부, 건강상태 등에 대한 통계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입하는 외국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장치 마련, 외국인 도입규모의 유연화, 불법체류자 대책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 지속적 추진

라.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사회 적응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수혜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또한 내국인 대상 다문화사회 적응 교육 극히 미흡
- 1990년대 이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미흡
- 2007년 국제결혼건수는 29,140건으로서 전체 혼인신고건수의 11.1%를 차지하면서 이제 국제결혼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06년 국제결혼 32,208건으로 전체 혼인의 11.9% 차지

〈표 17-10〉 국제결혼의 추이

(단위: 명)

연도	한국남+외국여	한국여+외국남	계
2000	7,304	5,015	12,319 (3.7%)
2001	10,006	5,228	15,234 (4.8%)
2002	11,017	4,896	15,913 (5.2%)
2003	19,214	6,444	25,658 (8.4%)
2004	25,594	9,853	35,447 (11.4%)
2005	31,180	11,941	43,121 (13.6%)
2006	32,208	9,482	39,690 (11.9%)
2007	29,140	9,351	38,491 (11.1%)

주: ()안은 전체 혼인신고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결과』, 각 년도

〈표 17-11〉 외국인 배우자 체류현황(2004. 9월말 현재)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	기타
전체	110,362	26,571	36,632	21,614	5,823	5,033	2,088	1,809	1,061	9,731
여자	97,236	23,976	31,066	21,513	5,297	4,881	2,060	1,779	1,014	5,650

자료: <http://kosis.nso.go.kr>

- ☐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체류 현황을 보면 중국인(동포 포함)이 전체의 57.3%를 점하고 있으며, 여성이 88.1%를 차지
-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 사회 적응이 어렵고, 귀화 전까지 불안정한 신분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
- ☐ 국제결혼 중개업체 규정미비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영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부재
- ☐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 결혼해 낳은 2세의 경우 외국인 모의 한국말 이해부족으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음. 한글교육 및 자녀상담 지원노력이 절실

2) 향후 정책 방향

-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 강화, 국제결혼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2세에 대한 지원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가.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내실화

1) 필요성 및 목적

- ☐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자가 근로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추진이 긴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제한된 인적자원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재직자 및 실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성 제고
-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상담을 강화하고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식비 등 훈련수당 지원을 현실화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의 필요성

-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평생 고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 이러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보다 낮고 직무관련성 학습 비율이 현저히 낮음
- 모든 기업·근로자에 대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구축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직업훈련 혁신 방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질적 수월성을 담보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 많음

- 낮은 수준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취약계층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존재

□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제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

- 정부주도적 행정감독 중심의 제도 운영 방식으로 기업의 수요 반영 미흡
- 지역 산업별로 인력수요가 차별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는 기재 미흡

□ 각 부처별 사업의 연계 조정이 미흡하여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학습 인프라 부족

□ 평생학습 참여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미흡 및 평생학습 참여의 양극화

-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해 평생학습의 결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지 못함
-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사무 관리직, 고학력, 20~30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저학력, 저숙련, 중고령자의 평생학습 기회는 제한적

□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의 분산 운영

- 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분야 학습비 지원에 집중
- 교육부는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인정체제 구축에 집중

□ 실적

〈표 17-1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 근거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 제고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참여 건수	20,000건	12,238건	61.2%	-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 조기취업+수료자수×100	54.3%	56.9%	104.8%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유급휴가 훈련 · 근로자 수당지원금	재직자 훈련참여율	재직자훈련건수/ 전체피보험자수×100	34.7%	39.5%	113.8%	-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계획대비 대부인원 비율	대부인원/계획인원	95%	76.5%	80.4%	-

※ '07년도 당해 연도말 실적(실업자훈련)

〈표 17-13〉 실업자 등 직업훈련 참여율 및 취업률 목표치 달성

구 분	신규·전직실업자	자활대상자	고용촉진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훈련실시인원	82,739명	1,501명	4,351명	894명	2,540명

〈표 17-14〉 재직자 등 직업훈련

구 분	직업능력 개발	유급휴가	수당 지원금	능력개발 카드	학자금 지원	학자금 대부
훈련실시인원	3,576,375명	7,133명	269,045명	12,238명	6,194명	25,225명

3) 향후 정책 방향

- 취약 근로계층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속적 확대 필요
- 근로자수당지원금, 근로자학습자금 및 훈련비 대부, 유급휴가훈련 등이 운영 중
이나 근로자 개인주도의 학습지원체제로서 활용 저조, 지속적 확대 필요

- ☐ 구직자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실업자에 대해 시범실시('08.9월)한 후 청소년,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0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08.11월)
- ☐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평생학습계좌제 지원대상 및 금액 등 학습경비 지원체제 수립 방안 마련('08.9)
 - 직업능력개발, 직무기초능력,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 증체제 구축('08.12)
 - 평생교육센터, 교육청, 고용지원센터 등 평생교육지원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08.12)
 - 교과부-노동부 상설 협의체 운영으로 평생직업교육 관련 부처간 기능적 협력체 제 마련(가칭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위원회')

〈표 17-15〉 평생학습계좌 운영계획

구분	중점 추진 내용	학습계좌제 지원 대상	학습비 지원 및 이력관리 평생학습영역
1단계'08년 하반기	제도확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 실시	저학력 성인,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 일부	성인 기초·문해교육 직무소양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 등
2단계'09년 ~	직업교육·훈련 등 평생학습 영역간 연계 활성화, 재원 마련 및 통합 실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일부,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청소년·제대군인 등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교육 직무소양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 등
3단계 11년~	전 국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일반 국민	평생학습 전 영역

나.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 확대 : (‘06) 57개 → (‘07)75개소
 - 기업·공공훈련기관·사업주단체·대학 등이 자체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용(훈련전담자 인건비, 홍보비 등)의 일부 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확대 : (‘06)112개소 → (‘07)150개소
 - 중소기업에서 학습조직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 학습조직화 활동 유형(10개) : 학습조직화 컨설팅(사전·사후), 학습조 운영,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학습공간 구축, 후견인 제도도입, OJT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학습휴가제, 지식공유시스템, 우수학습활동 지원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확대 : (‘06)17,600명 → (‘07)18,000명
 - 중소기업에 우수훈련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훈련받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 － 우수훈련과정(6개 분야) : 전략경영, 인사·조직, 마케팅·유통, HRD·리더십,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3) 향후 정책 방향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확대 계속 추진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확대 계속 추진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확대 계속 추진
 - 중소기업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고급훈련과정 개발
 - 민간훈련기관과의 연계, 우수 민간훈련기관 선정 및 재정적 지원
 - 대학과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08년 4월~) 홍보 및 활성화

다.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 질적 접근 중 노동력의 질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수 있는 평생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동의 양적인 투입보다 질적인 투입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가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부족,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부족,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국가차원의 일관된 생애진로교육·지도 체계 미흡하고, 교육과정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배출이 부족한 상태임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 노동시장 안에서의 직장·경력이동, 비경활 또는 실업에서 노동시장 이동 등을 지원하여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에 기여

2) 현황 및 문제점

- 이 영역에 대한 추진 실적은 노동부에서 추진한 실적만 집계되고 있음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Job School)
 - － 중·고교생 14,755명 참여(운영횟수 284회)
 - 취업캠프 프로그램
 - －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8,574명 참여(운영횟수 180회)
 - ‘07. 만족도조사결과, 잡스쿨은 91.5%, 취업캠프는 91.2%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5단계척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량등/ 자료 노동부 위크넷)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직업진로 실적도 같이 포함되어, 전 부처가 공동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임.
 -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직업심리검사 연구개발·보급(4종), 구직자 특성별 취업지원 프로그램6종(신규개

발 3종, 기존프로그램 보완 3종), 취업지원영상매체 제작·보급(1종), 직업지도담당자 전문교육 실시(1,250명)

-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해야 종합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음

3) 향후 정책 방향

-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연계, 교육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진로 지도의 강화와 직업정보의 지속적 제공
 - 직업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생애단계별로 체계적인 직업생활을 지원
 - 학생 및 성인구직자 대상의 각종 직업검사(직업가치관 검사·청소년 진로발달검사·직업인성검사·직무수행능력평가검사 등) 개발·보급
 -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업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신규 개발·보급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과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사업들을 포함할 필요성 제기

라.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1) 필요성 및 목적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
-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과 민간훈련기관 내실화를 통한 직업훈련 강화
 -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
 - － 공공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권역별 통합·대형화를 통한 훈련의 지방화·분권화 추진
 - － 자치단체와 공동·협력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체제 구축

- 민간훈련기관 내실화
 - － 훈련 평가의 강화
- 민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재빨리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훈련에 대한 시장 기제를 강화하여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
 -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수요 배정 또는 정부의 직접 공급을 지양하고 사업주가 공급기관을 선택하고 재직자, 신규인력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자격은 개인의 능력과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기업에서 승진, 직무배치 등에 활용되는 역할
 - 정부주도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으로 산업현장의 숙련수요와 괴리 등에 따라 사회의 평가와 보상이 미흡
 -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의 재구축으로 자격의 노동시장 통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웅진코웨이, 신도리코 등 107개 기관(대기업 17개, 중소기업 90개) 인증 신청 및 심사
 - － 32개(대기업 13개, 중소기업 19개) 기관 인증
 -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제의 실적도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07.4월)
 - － 검정시설·장비 공동투자제도 도입, 계속교육 도입, 자격검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위탁취소, 자격증 대여 중개자 처벌근거 마련
- 문제점
 - 노후장비의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직업능력개발의 현 실태는 양적·질적으로 여전히 미흡하고, 기업규모·고용형태별 교육훈련의 양극화 심각
 - －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교육훈련비('06): 10~29인 48천원, 30~99인 108천

원, 100~299인 144천원, 300~499인 276천원, 500~999인 348천원, 1000인 이상 876천원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숙련수준('06년, 직능원) : 4.72(1 단순노무, 2 견습, 3 단능, 4 단능숙련, 5 다능, 6 다능숙련, 7 기술적 다능)
- '05년 참여훈련('06년, 직능원) : 초급 49.0%, 중급 36.5%, 고급 14.4%
- 이는 수요자(기업, 근로자 등)의 숙련투자 부족 및 공급기관(훈련기관, 대학 등)의 경쟁력 취약, 수요와 공급을 매개·촉진하는 정책실패가 결부된 구조적인 문제

3) 향후 정책 방향

□ 교육훈련에 대한 시장 기제의 강화

- 훈련시장의 크기에 따른 지원 방식의 차별화
 - 미숙한 훈련시장은 공모제(시설·장비, 프로그램 개발 등 한시지원)로 공급기관을 육성하고 수요를 실현
 - 공급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나 수요와 공급 확대가 필요한 훈련은 수요자 자부담을 조건으로 실비기준 지원(예, 80%)
 -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한 훈련은 기준단가에 의한 정액지원(예, 실비의 50% 내외)으로 수요자 자부담을 높이고 지원수준은 낮추면서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성숙시장화
- 수요자(기업, 근로자 등)의 자부담과 재정지원을 결부(Co-financing)함으로써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한편, 숙련제고에 있어 수요자 책무성과 성과지향 강화
 - Co-financing에 의한 자기부담이 전제되어야 비용 대비 성과에 입각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구조 형성

□ 교육훈련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훈련기관 육성과 다양화

-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 조성
 - (진입장벽 최소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자기부담을 전제로 다양한 공급기관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경쟁적 시장 형성
 - (훈련과정 통합 운영) 비용부담주체(사업주/자기주도적), 학습자(재직자/실업자/

학생 등)별 칸막이 없이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수요자는 누구나 수강 가능토
록 규모의 경제 구현

- 현재는 사업주 위탁훈련/근로자 자율적인 수강지원금/실업자훈련 각각 폐쇄적
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되어 예컨대, 실업자는 사업주 위탁훈련이나 수강지원금
이용 불가

－ (정보제공 및 성과평가) 공급기관 · 과정의 상세정보와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
하여 수요자 선택에 의한 공급기관의 진입 · 퇴출

- 수요자가 선택한 공급기관은 생존 · 성장하고, 선택받지 못한 공급기관 자연 퇴출

○ 공급기관의 유형별 특성화

－ (민간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확대와 발맞춰 대형화(Department Store
형) 또는 전문특화(Category Killer형) 훈련기관으로 성장토록 하고, 프랜차이즈
(Franchise), 지부(Branch) 등의 형태로 전국적 확산

□ 현장중심의 국가자격제도 구축

○ 국가기술자격 영역을 필요 최소한(예: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분야, 시장실패, 기초
직무 등)으로 재설정하고,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검정하는 자격종목 축소(313종목→
276종목)

○ 산업수요 조사 ·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 · 폐합

○ 기존 검정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의)의 독점을 폐지하고 평가와 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확대

－ '07년 5개 종목(원자력발전기술사, 영사산업기사 등) 위탁 선정 → '08년 관계
부처 수요조사 결과 41개 종목 민간위탁 희망('08.12월 확정)

○ 자격관리 · 운영에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해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산업
계 2/3이상 위촉

○ 추진주체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자격 소관부처

○ 필요법령 제 · 개정사항

－ 자격종목 통 · 폐합에 따른 기존 자격취득자 및 소관부처의 반대 가능성 / 국
가기술자격법령 개정

2.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가.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 고용지원서비스 공급망 부족으로 공공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시급
- ☐ 공공 고용지원서비스망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고용지원서비스망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고용지원서비스 공급망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직업진로지도, 기업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07년말 현재 전국 84개소에 불과, 고객의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임(2008, 노동백서)
-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은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시장의 보완역할을 함. 그러나 현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영세하고 서비스 내용 미흡.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시장 육성 필요

3) 향후 정책 방향

- ☐ 서비스망 확충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희망복지 129센터, 민간협력기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 고용지원서비스망 대폭 확충
 - 출장·이동센터를 운영, 중소기업·FTA무역피해기업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08년 12개소 → '12년 50개소)
-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심층상담 전담제의 성공적 사례 지속 발굴, 전 직원에 확산

- 센터 및 유관기관을 통한 취약계층 특화형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 성과평가 공개, 보수·인사 반영 등 고용지원센터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08년~)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민간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의 구조조정 및 활성화
 -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을 위해 가격규제 개선, 우수기관인증제, 프로그램 민간위탁 확대 등 시행
 - －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기관 스스로 서비스 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

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1)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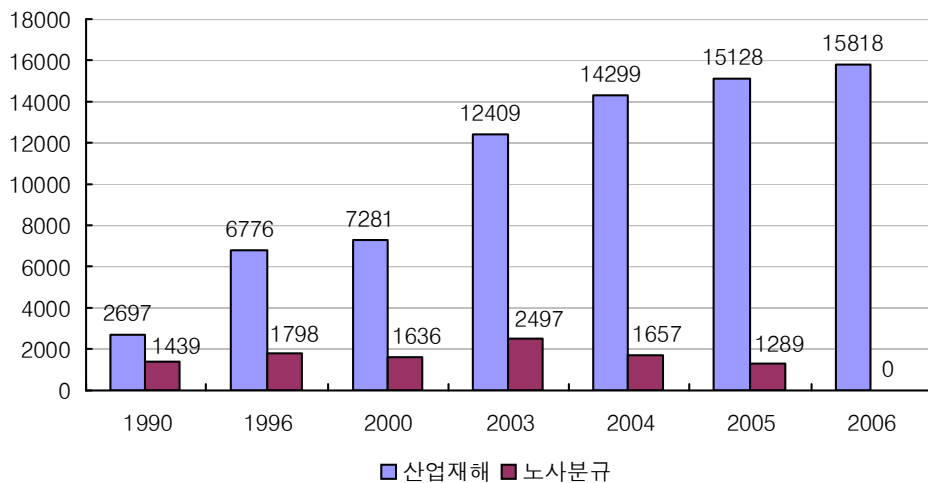
- 매년 약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약 2,800명은 사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노사분규보다 약 8배 정도 높은 수준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80,832명)에서 전체 재해의 89.9%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66,072명)에서 전체 재해의 73.4%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 작업의 안전·보건 증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필요

2) 현황

- 영세사업장(50인 미만)의 작업환경 개선
 - 매년 약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약 2,800명은 사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노사분규보다 약 8배 정도 높은 수준

- 2006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5조 8,188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2005년 1조 2,899억원)보다 높음
- 2006년도 전체 재해자 수는 89,910명(이중 사망재해자는 2,453명)
- 업종별로는 제조업(3,914명)이 전체 재해의 39.9%, 건설업(17,955명)이 19.9%를 차지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80,832명)에서 전체 재해의 89.9%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66,072명)에서 전체 재해의 73.4% 발생
 - － 우리나라의 사망재해만인률은 2.10('06), 2.25('05)로 일본 0.32('02), 독일 0.48('02), 미국 0.40('02)보다도 5~7.7배 높은 실정

[그림 17-2]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단위: 10억원)



- 영세사업장(제조업)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 － '07년 9,847개소 지원 결정
 - 2007년 목표 : CLEAN 사업장 인정 10,000개소

〈표 17-16〉 클린사업 주요성과

구 분	내 용
산업재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린인정 사업장의 지원 전·후 대비 재해율 감소 23.6% 클린인정 사업장 사망만인율 감소 32.2%
비용-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 재원대비 6.34배 편익발생
기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매출액 11.94% 증대, 불량률 1.13%p 감소, 모기업 평가점수 14.6% 향상 사업장당 평균 1.23명 고용 증가

□ 취업부문 감독강화

- '07. 12월까지 사망재해 다발 20대 작업 보유사업장 3,81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검찰합동점검 1,082개소 실시.
- 대형건설현장 2,871개소에 대해 취역시기 대비 해빙기·장마철 안전·보건점검 실시('07.12)
- 화학업종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05년 설치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4개소)를 통해 화학업체 787개소 PSM점검 실시('07.12)
- 사망재해조사 878개소 행·사법처리('07.12)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화학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 단기·장기 노출시 인체유해성, 노출기준 설정 국가 및 기준 등에 대한 연구('05년)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86종)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 완료('07.6.8)
 -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7-25호, '07.6.8)
- '06년도에 연구용역한 화학물질(42종)의 노출기준 제·개정안 마련
- '06.12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교육 및 홍보
 - － 전국 6개지역 설명회('07.3월, 988명 참석), 화학 산업단지(울산, 여수, 천안) 설명회 개최('07.7월, 303명 참석)
- 유해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정별 작업환경개선 기법 기술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허용기준제도(7.27) 및 신뢰성평가제도(5.18) 도입
 - － 허용기준 및 신뢰성평가 대상물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

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 1개소 설치(3.7) 운영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1,500개소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1,329개소
- 근골격계질환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61.29억원

□ 노사의 안전인식 제고

- 언론매체 등 홍보: TV캠페인(55편), 라디오캠페인(153편), 언론인 간담회(98회), 신문광고(232회), 기획특집 보도(32회), 전광판 운영(45개소) 등
- 안전문화 지원: 안전교육시범학교 운영(32개교), 안전운동 민간단체지원(8개소),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지원(2,898개소) 등
- 추진상 애로점(혹은 부진사유)
 -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의 상이함으로 인해 단순 비교가 어려움(객관적이고 정교한 측정도구 부재)
 - 안전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개발 중에 있음

3) 향후 정책 방향

□ 영세사업장(50인 미만)의 작업환경 개선

- 영세사업장(제조업)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속지원
-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지 제기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조건으로 자금지원
- 안전취약계층인 5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환경 지원체계 구축
- 유해공정보유 및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등의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개선 기술지원

- 허용기준 및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 및 작업장 노출기준의 합리적 개정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 (사) 한국안전학회 연구용역('06년) 및 산업재해 통계분석 결과

- 정부는 2001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총 3,56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약 15%(34,038개)를 지원.
- 2006년도에는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08개 사업장을 지원하여 그 중 8,600개소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2005년도에 지원한 11,330개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겸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 2007년말 현재 27,337개 사업장이 자금신청하여 1,128개소에 125억원을 지원.
- 연구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이 평균 20.6%가 감소하였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수 조사결과 사업장당 평균 1.23명(10.46%)의 고용이 증가.
- 비용-편익 분석 결과 클린사업의 편익이 비용에 비해 6.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진상 애로점(혹은 부진사유)
 - 사업주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의식의 부족으로 사업주 부담을 기피하고 기본보조금 내에만 시설개선하려는 경향
 -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제조업 중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기계·기구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어 사업장 방문지도시 업무 부담 초래
 - 재해율 감소는 설비개선 후 즉시 반영되기 보다 년차별 점진적으로 나타나 단기적 목표 설정은 다소 불합리

☐ 노사의 안전인식 제고

-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효율적 홍보사업 전개로 산업재해 예방 및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산재예방활동 촉진 및 언론매체, 안전교육시범 학교운영, 안전운동 민간단체지원, 무재해운동 추진
- 산재예방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관심 및 안전의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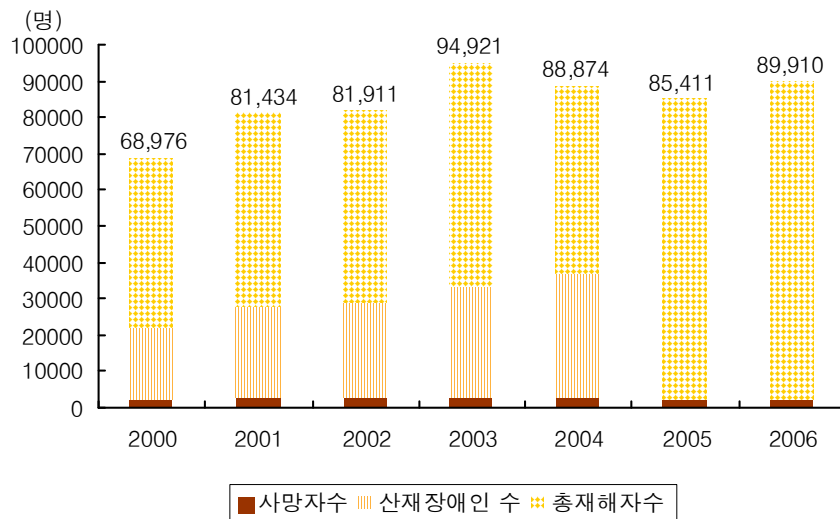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안전취약부문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발생은 연간 3만명 이상이나, 산재장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2%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개인적·국가적 인력손실이 매우 큰 실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1964년부터 오늘날(2004)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장애 1~14급)발생은 총 750,566명임.
- 이들은 개인 및 가정적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기업·국가적 측면에서는 기능노동력의 손실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이들의 직장복귀율은 40%정도(2000(37.0%), 2001(41.6%), 2002 (40.0%), 2003(40.2%), 2004(42.0%)이나 그나마 직장복귀 얼마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산재근로자의 직장 고용확대를 통하여 요양종결 즉시 직장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

[그림 17-3] 산업재해 현황



2) 현황

□ 직장 복귀 지원금 지원 확대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현황 ('07년)
 - － 수혜인원 630명, 지원금 2,906백만원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고용유지여부 조사('07. 2월)
 - － '06년 수혜자(554명) 중 취업자 500명(90.3%), 실업 54명(9.7%)으로 전년도 보다 고용유지율이 3.7%p 향상
- 산재장해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개정 ('07.12.14)
- 원직장 복귀 유도 및 고용유지 제고를 위해 제도 홍보
 - － '06년 장애등급 1~9급자 중 직장미복귀자(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직장복귀지원금 안내
 - － 보험사무대항기관 총 347개소 사업 안내문 발송
 - － 각종 사업주 단체 및 협회 34개소 홍보 안내문 발송

□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확대

- 직업훈련: 지원인원 5,731명(17,717백만원), 직업복귀율 61.9%
- 자립점포: 지원인원 125명(7,249백만원)
- 산재장해자의 직업훈련 촉진을 위하여 산재보험법 개정('07.12.14 산재보험법 개정)
- 직업훈련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평가시스템 마련
- 직업훈련수료자의 취업알선 업무 강화(노동부 워크넷 활용)
- 직업훈련기관 점검실시 (12개소, '07.3.26 ~ 4.2.)
- 직업평가체계 구축으로 적정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창업점포의 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강화
 - －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 협약 체결

□ 산재 근로자에 대한 재활상담 강화

- 재활상담 58,305명, 사례관리 대상자 선발 7,326명, 직업배치자 3,942명
- 재활상담사 30명 추가 충원

- 재활사업 직무교육 실시(재활상담사 137명)
- 사례관리목표제 실시('07년 7,370건)
- 재활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바이저 운영(7개지역)
- 우수 재활사례 발굴 및 재활사례관리 DB구축
- 산재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07.12.)

3) 향후 정책 방향

- ☐ 창업지원 확대 및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 지원 강화
 -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창업시 점포임대 지원 및 경영컨설팅 제공
 -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에게 1인당 1억원(서울시·광역시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대(연리 2%로 최장 5년간 지원)하여 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및 자립기반 구축
 -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및 자영업 창업 등 직업복귀 촉진
 - 창업점포 임대·지원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실효성 극대화 및 확고한 자립기간 마련 지원
- ☐ 민간위탁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상담 강화 등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지속적 추진

제3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가.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

1)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발전과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정책과 현안이슈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와 및 관련 산업체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촉구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

2) 실적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시행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제정 2006.12.28, 법률 제8110호, 시행일 2007.6.27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정 2007.6.26, 법률 제20106호, 시행일 2007.6.29

3) 향후 정책 방향

- ☐ 고령친화산업발전연구회 지속 추진

나.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1)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화사회 복지용구 및 요양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비 관리체계 필요
 - 고령화사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만성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요양서비스의 요구 증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
 -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복지용구 DB 구축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와 산업의 동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요구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
 -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급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요

- － 공적급여대상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및 코드부여 사업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기로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28)
- 2008.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됨. 새로운 제도에서 급여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보장과 건전한 사업자 지원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고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법적근거 명시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도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됨
 - 실제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현재 고령친화 우수제품 표시제도는 착수되어 운영 중임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중 15 품목에 대하여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우수제품 표시를 하도록 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도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정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건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도모함

2) 실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관리체계 정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에 대해 고령자를 배려한 안전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센터로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급여수가를 심의하고 급여품목을 결정, 고시하기로 함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기준 및 관련 지침 마련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정
 -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반 사항을 규정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의 공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 인력 풀 구성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한국녀성협회,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원 추천위원, 복지용구 관련 공학·의료·간호/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40인 내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우수제품 심사지침
 -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에 대한 심사 항목 및 기준 등 수립
 - 제품의 안전성, 조작성 편의성, 휴대·보관의 용이성, 세정·소독의 용이성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제품설명서 작성지침
 - 관계법령 검토,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게 품목별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작성 방법 등 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사진규격 지침
 - 품목별 필요 사진(필수, 선택) 수량 및 촬영기준 명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코드부여 기준개발 및 코드부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코드기준
- 고령친화 우수제품표시 사용 지침 개발
 - 과대(과장)광고 제한, 올바른 표시방법 제시 등 우수제품표시('s'마크) 사용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심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15개 품목에 대한 심사결과, 41개 업체의 135개 품목에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발급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개발 추진
 - 노인요양서비스 종별 표준지침 개발 추진 중

3) 외국사례

- 요양서비스 인증 및 DB운영
 - 일본은 실버서비스진흥회, 미국의 AAHSA(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and Services for the Aging), 호주의 노인요양표준 및 인증기구(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에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인증 및 우수사업자 지정 공

표 등의 역할을 수행해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사항을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없음

- 일본은 개호서비스정보공표시스템(<http://www.espa-shiencenter.org>), 미국은 AAHSA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and Services for the Aging)에서 'Find home and services'에서 요양서비스 인증 현황 등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함. 우리나라는 노인요양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정보를 제공 중임

〈표 17-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증 및 정보제공 현황 비교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법적 기준 및 서비스 표준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인력 기준 명시 · 장비 및 서비스 내용, 질관리 관련 기준 미비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인 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 준(후생성령 제39호) 지정개호노인보건시설의 인 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 준(후생성령 제40호)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후생성령 제41호)	· The Nursing Home Reform Act(1987) · The National Citizens Coalition for Nursing Home Reform(1995년, 1998년 개정)에 시설인 력기준 제시	건물기준 관련 인증 (Certification of Building Standards)에 따른 노인시설요양 서비스 시설 기준 (Residential Aged Care Building Standards)
서비스인증 및 우수 사 업자 지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12조에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표시 가능성 명시 · 구체적 추진 상황 없음	실버서비스진흥회의 S마크 - 방문개호 - 방문목욕 - 복지용구 대여/판매 - 식사배달	AAHSA(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and Services for the Aging)에서 우수요양원 선정 공표	노인요양표준 및 인 증기구(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에서 케어서비스와 관련된 인증 (Residential Aged Care Accreditation)
노인 요양 시설 관련 정보공개	▶ 정보공개사이트 없 음 ▶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 제한적 수준의 일부 정보 공개 · 정원	▶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 회 개호서비스정보공표시스템 (http://www.espa-shiencenter.org/preflist.html)에서 정보검색 가능 ▶ 개호시설서비스 경우 2008.1월 현재 총 628개	▶ AAHSA(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and Services for the Aging)에서 'Find home and services' 운영 ▶ 시설장의 재량에 따 라 해당 시설의 홈페이 지에 다양한 정보 공개	▶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 공개 · 정원 · 인력 · 시설위치 및 이용 료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 시설위치 및 이용료 · 장비확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등록 ▶ 제공정보 : · 시설운영법인에 관한 사항 · 시설에 관한 사항 · 인력 현황 · 서비스 내용 및 실적 · 서비스 이용료 ▶ 후생노동성 실시 '개호사업경영실태조사'시 재무재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 인력 · 시설위치 및 이용료 · 장비확보현황 · 재정운영현황 · 인증 현황 · 서비스 이용료 · 입퇴소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확보현황 · 재정운영현황 · 인증 현황 · 입퇴소자 현황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 국제비교, 2007

□ 호주 ACSAA

- 호주는 ACSAA(The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증, 관련 산업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옴
- － ACSAA 연혁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산하 기관
 -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에 따라 1997년에 설립
 - The Aged Care Act에 근거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지정 accreditation 기관으로 지정(1997)
- － 업무의 법적 근거
 - the Aged Care Act 1997
 - the Accountability Principles 1998
 - the Accreditation Grant Principles 1999
- － 주요 기능
 - 인증 기준(Accreditation Standards)을 적용한 노인요양서비스 인증사업 실시
 - 양질의 요양서비스 기준의 공고,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산업체를 지원함

- 인증을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와 긴밀한 연계
- ACSAA에서 개발한 호주의 요양서비스 인증지표는 다음과 같음

◆ 호주의 요양서비스 인증지표³⁸⁾

노인요양시설(35항목)

- 1 영역(17항목) 건강 관리
- 2 영역(10항목) 거주자의 생활양식(Resident lifestyle)
- 3 영역(8항목) 물리적 환경 및 안전 시스템(Physical environment and safe systems)

재가요양서비스(13항목)

- 1 영역(3항목) 정보 제공 및 협의
- 2 영역(1항목) 요양서비스 요구의 확인
- 3 영역(2항목) 종합적이고 계획되어진 신뢰할 만한 서비스의 제공
- 4 영역(2항목) 사회적 독립성
- 5 영역(3항목) 사생활, 개인적 존엄성, 비밀보장 및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개인정보 공유
- 6 영역(1항목) 불만 처리
- 7 영역(1항목) 보호자의 접근 용이성

4) 향후 정책 방향

- ☐ 고령친화 우수제품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추진
 -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각 서비스별 표준지침(Service Guideline) 개발과 활용활성화 방안 마련
-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사업 관련 규정 제정

38) Quality of care principle(The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1997)

- Community care standards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고시 추진('08.12)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지침 개발 및 시범 운영

〈표 17-1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별 우수사업자 시범 심사 및 지정 추진

연차	사업추진 내용
2008	①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사업 인프라 개발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지침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서식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및 관리규정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표시 사용지침 ②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재가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7종 별 각 일 기관 이상 현장관찰 평가
2009	①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사업 확대 적용 ② (가칭)요양서비스기관 정보마당 개발·운영
2010-2012	①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사업 확대·안정화 ② (가칭)요양서비스기관 정보마당 운영활성화 - 소비자의 informed selection 기회 확대 - 건전한 요양서비스 사업자의 경영활성화 등 기대

다.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설립

1) 필요성 및 목적

- 고령자와 부양가족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을 구축하여 수요기반 확산 및 내수시장 활성화 촉진 필요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기능, 정보홍보기능, 기업지원(전시)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제품 및 콘텐츠 구축
- 고령친화제품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수요 기반 확산을 통해 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 대구시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구축 추진
 - 사업자 선정공고('07.4.10부터 1개월)를 통해 성남시·천안시·대구시·부산시·전남도·강원도 등 6곳 지자체 신청
 - 현장실사 및 Presentation 등의 민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성남시와 대구시 2곳 선정('07.7.19일)
 - 사업시행 지자체 등과 협약 체결('07.10.9), 체험관의 실시 설계 및 용품설치 등을 통해 '08 하반기 개소 추진
- 일본의 경우 1996년 오사카의 ATC Ageless Center를 비롯하여 약 120여개의 복지용구센터의 운영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이 10여년 동안 4배 이상 크게 성장('00년 12조엔, '06년 34조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전기가 됨
 - 후쿠오카 지역의 종합보건복지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대규모 체험관 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합적으로 구성. 건강만들기센터, 복지용구플라자, 야간휴일응급센터, 장애복지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한 사례도 있음(위치 :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코쿠라키타구 7-1 종합보건복지센터)
 - － 주요시설
 - ① 야간·휴일 응급 센터(1층) : 야간 및 휴일의 구급 환자의 진료를 실시
 - ② 복지용구 플라자 기타큐슈(1층) : 복지 용구의 전시나 전문 상담, 개호·복지용구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전문 연수실시 강좌의 개최, 화상 전화 상담, 복지용구의 개발·보급
 - ③ 장애복지센터(3층) : 신체나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각종 전문 상담, 필요한 진단이나 판정, 훈련·조언 지도를 실시
 - ④ 보건소(4층) : 의료기관, 약국·양방, 식품·환경위생 시설 등의 신고·개설, 감염증 등에 대한 문의 및 상담, 의료 종사자 등의 면허신청, 식품·환경위생 관

계의 각종 신청은 각 구 관공서 보건복지과로 신청

- ⑤ 건강만들기센터(5층) :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신체·체력 측정의 결과로부터 개인에게 맞는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한 운동·영양·휴양 프로그램 제공, 트레이닝, 피트니스 스튜디오, 런닝데크, 샤워실 등의 운동시설 구비
- ⑥ 정신보건복지센터(5층)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정신 보건복지의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기관으로 1997년 4월 1일에 설치, 보건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보건소, 각 구 관공서의 보건복지 상담 코너와 함께, 지원이나 계발 등의 활동을 실시
- ⑦ 보건·의료·복지 정보센터(6층) :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도서, 잡지 등의 열람이나 대출 실시, 인터넷, 시립도서관 네트워크 검색 제공
- ☐ 미국의 경우 밀워키주 정부를 중심으로 UD(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Elite House"를 구축하여 운영함
- ☐ 독일의 경우 Stuttgart시 'Barrier Free House'를 통하여 노인을 배려한 주거공간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체험기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다. 향후 정책 방향

- ☐ 공급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육성은 성장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 수요창출을 유인
- 종합체험관 설립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 수요층 다변화를 위해 권역별로 추가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 수요층을 고려한 체험관 운영
 - － 강제적 유인보다는 자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

〈표 17-19〉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의 기능 설정

① 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공간별: 현관, 침실, 거실, 욕실, 주방 등 ◦ 품목분류별: 치료훈련용구, 의지·보장구, 퍼스널케어, 이동기기, 가사용구, 가구건축설비, 커뮤니케이션용구, 레크리에이션용구 ◦ 테크노하우스 : 고령친화 모델하우스 구축하여 사용환경 체험 및 평가 ◦ 기획전시 : 테마별 기획전시 등
② 체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체험 : 고령자의 신체 감각 및 근력 등 특성 간접체험 ◦ Barrier free 체험 : 휠체어 체험,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체험
③ 정 보	◦ 고령친화산업정보, 제품사용법, 금융, 자산 및 수발보험과 같은 QOL정보, 기업 교류 등 각종 정보 제공
④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종사자와 일반인 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능 ◦ 전문종사자교육은 교육의 효율성과 현장감을 위하여 전시체험기능과 연계
⑤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각종 전문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샵 및 행사 개최 ◦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마케팅 지원, 기업입주 등

〈표 17-20〉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의 보조기능

① 지역연계	재미와 유익이 추가된 강좌, 기본진료(고혈압, 당뇨, 혈당, 치매 등), 커뮤니티 형성
② 보급확산	제품현장 판매, 판매알선 및 상담지원

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가. 고령친화 복지용구 연구개발(R&D) 및 산업육성

1) 필요성 및 목적

-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복지용구 요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을 기준으로 2010년 복지용구 수요가 재가노인의 경우 35,929천명, 재가요양보호노인의 경우 6,30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³⁹⁾
- ☐ 우리나라 복지용구 관련 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제품 개발에

39) 장현숙 외. 고령친화 용품·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제품의 기획, 개발, 상품화 등 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방안 기획(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학기술부, 2007)
 - 고령화사회 대응 국가차원의 고령화 R&D 분류에 고령자의 활동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고령화사회 대응 국가차원의 고령화 R&D 분류에 고령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활동성 및 운동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의 지원 필요
 - 세부연구 주제: 심폐기능 향상 및 균형 감각 증진을 위한 운동기기 개발, 미끄럼방지용 신발, 목욕 보조용품, 보행 보조기구 개발,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및 전동침대, 전동휠체어 등 제품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품목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16개 품목 및 인정지침을 고시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품목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조차,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미끄럼 방지용품,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 － 품목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인정지침
 -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품질기준: 품목별 의료기기 신고(허가)증, KS규격 공인성적서, 단체표준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DB 구축 및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포함 총 135개 제품에 대해 1차 DB

구축

□ 복지용구에 대한 품질관리, 산업육성을 위한 수요창출 및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
시급

- 복지용구 품질관리는 의료기기에 속한 품목은 의료기기법, 공용품 및 공산품은 공산품안전관리법, 재활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관리 중임. 그러나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모호하거나, 표준 규격이 없고, 품질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복지용구 품질관리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급여 대상 노인수 제한, 복지용구 전시체험 기회 부족, 복지용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인증 미흡, 대여용품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복지용구 수요창출 인프라 미흡
 - － 2005년도 우리나라 고령친화제품 매출규모는 생산 4,690억, 수입 1,233억원
 - － 일본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5.9배(2,500만명),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약 15배(한화 9조원)에 달함
- 복지용구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복지용구 대여·판매 수요 기반 강화, 산업정보의 공유 및 DB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제시
 - － 복지용구 대여·판매 수요 기반 강화 :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불법사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시설 요양보호노인의 적정 복지용구 공급을 위한 복지용구 구비기준 마련,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적정화와 확대, 고령친화제품 종합 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역거점 체험관 설립 지원, 우수 복지용구 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복지용구 제조업체 금융지원 정책 마련 등
 - － 복지용구 산업정보 공유 및 DB 구축 : 복지용구의 품질 향상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 시장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복지용구 분류 및 DB 구축, 복지용구산업 통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운영
 - －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 확대 정착 :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 운영모델 조기 정착 지원, 인프라가 약한 농어촌 지역의 공공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소 개설 지원

- 고령화사회 대응 신규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3) 향후 정책 방향

- ☐ 국가 차원의 복지용구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기획
 - 고령자의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용구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복지용구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기획
 - 복지용구 연구개발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우수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상품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연계 지원 체계 마련
- ☐ 복지용구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R&D 지원사업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복지용구 R&D지원 프로그램 신설, 운영
- ☐ 주요 복지용구 산업실태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등 정책개발 지원
 -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주요 복지용구에 대해 우선 추진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품에 대한 심층 분석 병행

나.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지원 및 확충

1) 필요성 및 목적

- ☐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소비의 직접적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 향후 고령친화산업 관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
 - 현재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부분 고령친화 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미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10조에 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수행(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법 10조 2항 8호)
- 지원시설 설치 및 표준화 지원 등을 위한 기반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촉진

2)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08.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노인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대상 제품 선정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사업 수행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발급(13개 품목, 총 135개 제품)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심사의견서 발급(2개 품목, 총 18개 제품)

〈표 17-21〉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현황

구 분	품목수	제품수	기업체수	비 고
우수제품지정서 발급	13개	135개	41개	국내 (48개 제품) 국외 (87개 제품)

- 우수제품 홍보 및 지원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용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08.6.1
오픈)
 - － 홈페이지 운영, 제품정보(모델, A/S, 제조구분 등), 업체정보 등 DB 구축 및
정보제공
-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국제동향 파악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산업육성 정책과제 발굴 제시
 - － 고령친화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체계 정책포럼('08.3.14, 서울교육문
화회관)
 - － 노인요양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07.11.9, 대구EXCO)
 - －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포럼-복지용구산업 수요기반 강화

및 R&D 지원 확대방안('07.9.6, 일산 KINTEX)

-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진출활성화 전략 정책포럼('07.6.28, 서울교육문화회관)
- 고령화사회 대응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기능정립 심포지엄('07.5.28, 서울교육문화회관)
-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제도, 산업·시장, 주요통계 및 행사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산업체, 학계, 연구계 및 일반인 등 전 국민 대상의 정보제공 체계 개발 및 운영
 - 고령친화산업정보 : 정책·제도, 산업·시장, 주요통계, 세미나·포럼, 산업뉴스 등
 - 고령친화연구정보 : 주요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연구보고서 제공
 - 고령친화산업 관련 창업·경영정보, 주요행사정보 등 제공
 - 정보제공 현황: 산업(677건), 연구(48건), 새소식 및 행사(75건) 등 총 800건('07.11.27 현재)
- 고령친화산업 관련 경영자 및 일반인이 '08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급변하고 있는 법제도 환경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마련 등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노인의료경영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의료비 급여정책 방향, 민간 요양병원의 노인복지 접근 경영사례 등 교육('07.6.8, 진흥원 교육장)
 - 노인요양시설 경영과정 : 노인요양서비스기관의 기능정립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과제와 활성화, 다기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사례 등 교육('07.12.5 예정, 진흥원 교육장)
- 고령화사회 대응 고령친화산업 제품 및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D 지원현황 실태조사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 수행(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학기술부, 2007)
- 시제품 상용화 및 기술상담 지원,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표준규격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생활체험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 산업정보 DB 구축(총 1,915건, '07)

-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총 6회 301명 교육실시, '07)
- 지식경제부 지정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해피시니어(Happy Senior)』 확장·이전 개관('08. 4. 3)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개관
- 고령자 미래주거를 경험할 있는 '주택전시 체험관', 불편한 거동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 체험존', 치료,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건강증진기기 체험존', 노인생활용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존' 등 7개 구역으로 구성

〈표 17-22〉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구성

구 성	내 용
전시존	노인들의 생활용품 위주의 4개 부스 => 개인건강의료용품, 생활용품, 보호용품, 기능성신발, 기능성의류, 욕창방지용품, 이송용품, 여가활동용품
주택전시체험관	고령자를 위한 미래주거를 경험
이동기기전시존	휠체어, 전동스쿠터, 실버카 등 다양한 이동기기 경험
고령자유사체험존	근육억제대와 안경 등 특수제작된 장비를 착용하고 80대 정도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체험
정보통신기기체험존	거동불편한 노인을 고려한 첨단 정보통신기기 체험 => 특수 설계·제작된 킹(king)키보드, 모니터 화면 확대기, 확대독서기, 골도헤드 셋 및 골도전화기 등
놀이체험존	놀이와 치료기능이 복합된 다양한 용품을 체험
개인건강증진기기체험존	치료, 건강 유지 및 증진 위한 헬스케어기기 체험

자료: <http://www.seniorpark.or.kr>

3)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근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 확대 강화
-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강화
 - 고령친화산업정보 DB 확대
 -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산업체 현장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교육 실시

- 고령친화 우수제품 · 우수사업자 지정사업 확대 및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정부 정책의 시너지 창출 노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확대 및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사업 설명회 개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상담센터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기관 등 공동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의 원활한 서비스(One-stop Service) 제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내 「복지용구상담 · 접수실」 확대개편 운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산업육성 · 지원사업을 활용, 우수제품 지정업체 지원방안 마련
 - 해외진출 지원, 특허출원경비 지원사업 등과 연계방안 추진
- 제품 홍보 및 마케팅·판매 창구 역할 강화
 - 우수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기반 강화
 - 국내외 고령친화 관련 주요 박람회(전시회) 공동 참여방안 마련
- 지식경제부 지원 고령친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추진
 - 고령친화제품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 주역 상품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 IT, BT, NT를 연계한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중장기 핵심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다.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공적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 DB를

설계 및 개발이 필요

-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에 유용하게 전달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현상을 적시에 파악하여 정책제도 결정에 기여하고 국가통계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려는 필요성 증대
-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통합 DB를 개발 및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복지용구정보마당’을 구축하여 본격 운영 중임
 - ‘복지용구정보마당’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및 고령친화 우수제품 등록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16개 품목 중에서 현재 총 153종의 복지용구에 대해 품목명, 제품명, 소비자가격, 업체명, 무상보증기간, 기본사양, 기능용도, 사용방법, AS범위, 연락처, 제품설명서 다운로드 등 총 16개 항목의 상세정보를 구축함
- 현재 ‘복지용구정보마당’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동향, 매출액, 종사자수 등과 같은 통합 DB 구축을 위한 기능이 일부 있으나, 체계적으로 고령친화산업 통합 DB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하고 매출액 및 종사자수 등과 같은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표 17-23〉 복지용구정보마당 DB 세부 내용

구분	DB 세부내용
연구개발	특허출원(등록)건수, R&D 투자비, 공동연구(비)현황
생산/제조	제품명, 제품사진, 제조국가, 주요기능(용도), 기본사양(spec), 내구연한, 제조구분(자사제조, 수입), 모델번호, 무상수리 보증기간, 제품가격, 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법인(개인), 자본금, 종업원수 (기술직/사무직), 전년도 총매출량, 생산(취급) 품목현황, 대표연락처, 대표메일, 본사(공장)주소 등
수입	수입국가명, 국가별 수입량, 바이어 현황 등
인허가	품질인증서(KS, 단체표준, 자율안전인증, 의료기기 등) 및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기관명 등
국내유통	국내 판매처, 판매량,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판매량 등
수출	수출국가명, 국가별 수출량, 바이어 현황, A/S 실태 등
사후관리	A/S기준, 긴급 연락처, 소비자 보호방안 등

3) 외국사례

- ☐ 외국의 고령친화 복지용구 관련 DB는 일본의 TAIS, 미국의 ABLEDATA와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 각국의 DB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인 EASTIN(www.esatin.info)를 중심으로 복지용구 DB 구축 사례를 조사함
- ☐ 조사대상 DB에 따라 품목별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 복지용구 16개 품목별 미국과 유럽의 DB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비교 분석함.

〈표 17-24〉 품목별 외국의 복지용구 관련 DB 구축 내용 비교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수동휠체어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의자넓이 최대최소 의자깊이 최대최소 의자높이 최대최소 총너비 등받이높이 무게 최대사용자체중 가격	상품명 제조업자 사진 기능설명 높이 길이 무게 너비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유형 무게 외부치수(길이,높이,너비) 기능 시트치수 등받이 머리받침 팔받침대 다리받침대 발받침대 재질 손잡이높이 티핑레버 옵션유무 바퀴의 위치변경, 직경, 타이 어형식등 캐스터 핸드림재질 브레이크형식, 조작형식 색상 업체정보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전동침대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외부길이 외부폭 매트리스 길이 매트리스 폭 최대높이 최소높이 안전작동하중 가격	상품명 제조업자 사진 기능설명 높이 길이 무게 너비 가격	
수동침대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상품타입 적용범위(분야) 등받이정보(각도, 길이 등) 발받이정보(각도, 길이 등) 프레임설명 표면설명 개조설명 전반적치수-폭,길이,중량 가격	상품명 제조업자 사진 설명 높이 길이 무게 너비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유형 무게 외부치수(길이, 너비) 다리받이 높낮이 허용여부 다리받이 최대, 최소 동작각도 캐스터 여부 특징 업체정보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지팡이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최소손잡이높이 최대손잡이높이 무게 최대사용자무게 보관시길이	상품명 제조업자 사진 기능설명 길이 무게 너비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 조절여부) 손잡이길이, 폭, 재질 최대사용자체중 재질 지팡이 끝 고무 정보 색상 기능설명 업체정보
사발지팡이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다리개수 최대너비 최대길이 최소손잡이높이 최대손잡이높이 무게 최대사용자무게	상품명 제조업자 사진 기능설명 안길이 높이 무게 너비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축소여부 길이 손잡이높이 최대사용자체중 재질 조절방식 지팡이 발 개수 기능설명 업체정보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보행차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최대사용자체중 사용자의 키 너비 길이 휠직경 가격	상품명 제조업자 사진 기능설명 사용크기 보관크기 높이 무게 폭 손잡이 사이 폭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너비,높이/조절 치수) 손잡이높이 최대하중 재질 의자, 바구니유무 바퀴수 다리형태 브레이크 유무, 형태 기능설명 업체정보
보행보조차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사용설명 최대사용자체중 무게 폭 너비 깊이 앞바퀴 크기 뒷바퀴크기 좌석높이 좌석너비,길이 핸들높이 가격 옵션장비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기능설명 손잡이 조절높이 브레이크 시스템 접은크기 손잡이사이거리 바퀴사이거리 전체길이 전체폭 좌석높이 좌석크기 색상 무게 최대사용자체중 바퀴크기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 너비, 높이/조 절치수) 재질 손잡이높이 최대사용하중 바퀴수 앞바퀴 형식, 직경 뒷바퀴 형식, 직경 브레이크 유무, 형식 기능설명 업체정보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이동변기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세부내역 전체폭 좌석높이 좌석너비 좌석깊이 팔걸이폭 무게 최대사용자체중 가격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기능설명 외부폭 좌석깊이 좌석너비 팔받침대사이너비 너비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 높이, 너비) 의자형태(모양, 높이, 폭) 상판두께 욕조와의 연결 재질 등받이(유무, 형식, 높이, 각도) 팔받침대(유무, 형식, 높이) 다리받침(유무, 형식, 사이거리) 앞바퀴(타이어형태, 캐스터, 직경) 뒷바퀴(타이어형태, 캐스터, 직경) 브레이크 기타 업체정보
간이변기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사용자 재질 용량 가격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기능설명 길이 무게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 높이, 너비) 의자 폭, 높이, 재질 프레임재질 등받이 유무 팔받침대 특징 업체정보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안전손잡이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특징 손잡이 직경 사용가능한 벽두께 치수 색상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기능설명 사양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형태(모양) 외부치수 설치방식과 설치장소의 두께 재질 설치장소 기타(색상) 특징 업체정보
목욕의자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넓이 높이 최대사용자체중 가격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기능설명 길이 무게 너비 가격	사진 가격 모델명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폭/조정길이,폭) 의자형태 상판두께 재질 난간길이 등받이높이/조정유무 팔받침대 다리받침대 발받침대 앞다리 뒷다리 브레이크 유무/형태 특징 업체정보

품목별	유럽	미국	일본
자세변환용구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너비 길이 가격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사진 가격 모델번호 출시날짜 제품이름 수입구분 무게 외부치수(길이,두께,너비) 재질 기능 특징 업체정보
미끄럼방지용품	상품명 제조업체 사진 속성 규격 매트탄성 매트강도 색상 가격	-	-

자료: 장현숙 외.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4)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친화 복지용구 DB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 발전계획을 마련, 향후 국가 차원의 통합 DB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계획 제언함. 복지용구 DB의 종합 발전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목표와 세부 추진내용 등을 제언
 - 제1단계,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기반 강화기(2008년~2009년)
 - 1차 구축된 복지용구 DB의 시범운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점 발굴 및 만족도 제고
 - 복지용구 DB의 정확한 정보를 상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개발
 - 복지용구 DB 정보 확대를 위한 산·학·연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자 참여 촉구
- 제2단계,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확장기(2010년~2012년)
 - DB 구축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에서 복지용구 전체 범위로 확대
 -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전담 독립서버 등 하드웨어 확장 구축
 - DB 정보의 시계열 처리·분석 및 리포트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정보의 상시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적 홍보
- 제3단계,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성장기(2013년~2015년)
 - 고령친화 복지용구 관련 해외 DB와 연동체계 개발(필요시, 표준화 작업 병행)
 - 국내외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통합구축 및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 DB 구축 정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DB 품질 경쟁력 확보

라.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및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R&D) 활성화

1) 필요성 및 목적

- ☐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및 첨단기술 기반의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중장기 핵심 기술개발 추진
- ☐ 기술개발과 더불어 향후 고령화 R&D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성과 모니터링

2) 현황 및 문제점

- ☐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방안 기획(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학기술부, 2007)
 - 고령화사회 대응 국가차원의 고령화 R&D 정의, 분류 및 범위 설정
 - 2008년도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 성장동력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 개발 및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 : 실버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등 13개 과제 수행(계속)

□ 고령친화산업 분류 설정 및 분야별 연구개발(R&D) 지원

- 질병극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과 더불어 R&D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 질병의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노인의 육체적·정신적 기능 약화 개선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 전략 필요
-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분류 및 분야별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 17-25〉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R&D) 분류 및 세부 연구 분야(안)

분류	세부 연구 분야
생물학적 노화 연구	노화과정의 이해, 노화기전 규명 및 노화제어 등
고령자 질병극복	치매, 만성 퇴행성 질환, 심·뇌혈관질환, 근골격질환 등
고령자 활동성 증진	원격 진단·치료, 의료기기 및 치료기기 등
고령자 사회행동과학	고령자 자립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고령자 생활시설 등
고령자 사회행동과학	공공보건의료, 건강불평등, 고령자 심리 및 행동변화, 사회적 환경 등
인프라 지원	생물유전자원, 종합정보지원, 연구인재 육성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부.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방안 기획. 2007

□ 미국의 고령화 대응 연구정책은 주로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재활공학 또는 보조 기술 분야로 접근

- 연구대상 상위 인구집단으로 노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Policy(OSTP)의 과학기술전략 중 에서 삶의 질 향상 지원의 일환으로 Elder Tech Initiative(ETI)를 설정
- 노인들의 건강, 독립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들과 그들의 케어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보조기술 및 정보기술을 지원
- Elder Tech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인구를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하부구조 준비로 정보기술(IT)이나 나노기술(NT)과 같은 규모의 주요 기술정책 이니셔티브

를 Elder Tech를 중심으로 추진

- 일본의 고령화 대응 연구정책은 고령자의 건강확보, 자립적인 일상생활의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 특유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조사연구, 복지용품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명시
 - 고령사회대책 대강령에서 고령자 특유의 질환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령자의 이용에 배려한 복지용구, 생활용구, 정보통신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각종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반 정비로 연구개발 추진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고령화 R&D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확보 뿐 아니라 지원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
 - 고령화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단순히 R&D 지원 확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고령화’에 대한 범정부 합동의 국가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과 전담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및 성과 지향적 기획 및 운영 필요

3) 향후 정책 방향

-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추진
 - 장·단기 전략품목 선정에 따른 기술개발 추진
 - － 고령친화제품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 주력 상품화를 위한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상용화가 비교적 쉬운 단순 제품 및 기능 부가제품 등)
 - － IT·BT·NT를 연계한 신기술 융합제품 개발, 보급을 위한 중장기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추진
 - 의료서비스 동향 및 추세에 부응한 기술개발 고려
 - －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벗어나 고령자 스스로 질병예방, 조기진단 및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
 - － 기존 치료중심에서 건강관리 개념으로 확대된 신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차세대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재택·원격 진단

진료시스템 개발 등)

□ 고령친화 복지용구 연구개발(R&D) 지원

- 고령자의 자립 지원 및 일상생활 보조용 복지용구에 대한 R&D 지원 필요
 - －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

□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R&D) 성과관리

-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확대 및 과학적인 성과평가체계 마련
 - － 연구 분야별, 내용별, 주제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 검색할 수 있는 DB 구축·관리
 - － 연구개발 지원 현황 및 연구성과 관리 등 실태파악의 효율성을 위해 분류코드 부여·관리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 연구개발 성과물의 조기 발굴 사업화 지원 체계 마련
 - － 사업화를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모색

마.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1)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산업클러스터

가) 필요성 및 목적

- 지역별 특화 자원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별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별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을 통해 복지기기, 기능성식품, U-Health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 첨단의료기기업체의 지원을 위해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등 건립 및 의료기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추진(5년간 '05~'08)
- 충남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하여 실버 기능성 식품 및 실버 복지기기 개발(건양대, 3년간 '04.9~'07.7)
- 부산 고령친화 U-Home Healthcare 산업 육성 지역혁신 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U-Health Care 산업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 수행(부산대학병원, 3년간 '05~'08)
- 경기 U-Health Care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의 재가서비스와 민간부문의 헬스케어서비스 영역을 포함한 응급서비스 영역에 걸쳐 서비스 수행(경원대, 3년간 '05~'08)

□ 문제점

- 일부 사업이 지방의 자생적 성장발전 구축보다는 참여기관의 내부역량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기업의 매출 또는 일반 지역주민의 실질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면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 성과가 부족
 - － 지역이 자율적으로 연고산업의 성장모델을 개발 수립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지역산업으로 개편 필요

다) 향후 정책 방향

□ 년차별 단계적 사업 추진 방법 안 제시

□ 지속사업 일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 방안 제시

2) 고령사회 특화 지역복지모델

가) 필요성 및 목적

-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 지역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에 포함
- ☐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고자 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
- ☐ 고령친화모델지역에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과 함께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인프라를 구축

나) 현황 및 문제점

- ☐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선정·발표('07.5)
- ☐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

다) 향후 정책 방향

- ☐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
-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

바.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1)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친화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큰 선도기업들(Star Company)를 발굴하여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2) 향후 정책 방향

- ☐ 선발대상, 선발방식 및 지원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선발대상 : 고령친화산업체 중 차세대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고령친화제품 개발 전문기업
 - 선발방식 : 기술력·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지원관리 :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대지원 및 선도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 선도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적극 유도 등

사. 우수제품 전시기획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를 통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인식확산 및 수요 창출 촉진 및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기회 부여

-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복지기기의 인프라 시현
- 고령친화 및 헬스케어 산업 등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복지관련 산업의 인식 전환 유도
- 제품 및 서비스 전시회 등을 통해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고령친화제품 생산 업체 간 기술정보 교류를 강화 및 복지, 실버 등 관련 산업의 신규시장 개척 및 활성화 도모

2)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박람회(총6회) 참가지원 수행(총77개 산업체 지원)
 - 서울 2007 Kimes 의료기기전시회 참가('07.3.15~18, 4일간)
 - 2007 일본 오사카 복지건강박람회 참관('07.4.12~14, 3일간)
 - 2007 시니어 엑스포 박람회 참가('07.9.6~9, 4일간)
 - 부산 Kimes 의료기기전시회 참가('07.10.5~7, 3일간)
 - 2007 대구 복지기기전시회 참가('07.11.9~11, 3일간)
 - 2007 광주 국제실버박람회 참가('07.11.29~12.1, 4일간)
 - － 현장 판매를 통한 참여 산업체 매출기여(366,690천원)
 -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기회 부여(제품 상담횟수 1,266건)

3)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근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 확대 강화
 - 주요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홍보채널 마련, 대국민 홍보
 - 주요 고령친화 제품의 유통체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협력기관 발굴 및 MOU 체결
- '고령친화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해외진출 희망국가별 수출입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마련
 - 해외 유명박람회 공동 참석 및 우수제품 홍보 등
- 주요 제품(서비스)별 세계 유망박람회 선정, 한국관 개설 운영

- 해외진출 희망 제품(서비스)별 유망박람회 선정 및 산업체 공동 한국관 개설
- 수출유망 제품(서비스) 선정평가 및 부스설치비·팜플렛 제작비·통역비 등 경비 지원
- 수출희망국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초 인·허가 정보 사전에 수집 및 배포

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가. 고령자·장애인 복지 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1)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친화 제품 및 고령자 이용시설 관련규격 확보로 제품의 품질, 생활안전성 및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고령자 이용 시설관련분야, UD 분야 중 표준화수요조사, 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품목을 선정, 표준화 추진
- ☐ 제품의 품질, 생활안전성 향상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시킴으로써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고품질 제품 제조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제·개정함으로써 고령자 욕구 충족, 산업 활성화 등 유도

2) 현황 및 문제점

- ☐ 고령자 장애인 복지 표준화 제·개정
 - 가정요양침대, 수동휠체어 등 고령친화 복지용구 5종 규격 제정 및 개정
 -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의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화 연구 추진
 -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의지보조기 표준화 1종 제정
 - 미관용 의수 관련 색상 표준화 추진
- ☐ 고령자 관련 생활·복지 표준화 규격 부족으로 생산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

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 편의 증진도 미흡

- 의료기기·재활보조기구의 국가표준(KS)은 국제표준(ISO)에 맞추어 도입하였으나, 고령자 특성(신체 및 생활특성, 환경특성, 인지능력)에 맞는 생활·복지 표준화는 미흡
- 의료기기 표준(KS 503종), 재활보조기구 표준(KS 78종) 등 표준화 제정 사례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음
-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UD상품(공용품)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규격을 제·개정함으로써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서비스)을 제공함
- ‘사이즈 코리아’사업을 통해 고령자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 개선
 - 고령자에 대한 인체치수 자료가 없었으나 ‘사이즈 코리아’ 사업(‘02~05)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정비함에 따라 표준화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05년 고령자 인체치수 DB(1,170명)을 활용하여 욕창방지용 방석,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05년에 제품 전자표시 등 7종의 가이드라인을 KS로 제정함

3)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고령자 및 장애인의 복지표준화를 위해 총 60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07년부터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

〈표 17-26〉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화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06~'10					
	계	'06	'07	'08	'09	'1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억원)	60	-	10	15	15	20

※ 실제 예산 : 0.4억원('06년), 0.4억원('07년), 1억원('08년)

나.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1) 필요성 및 목적

- ☐ ISO위원회(TC/SC)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동향파악 및 자국의견을 개진하고 고령자관련 복지규격 제·개정 시 국제표준화 동향 반영
- ☐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고령자 관련 복지규격 제·개정시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관련 산업 제품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킴
- ☐ 각국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기술적인 협조 및 앞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국제기준 반영 시 활용

2) 현행 및 문제점

- ☐ 고령자관련 복지규격에 대한 ISO 위원회(TC/SC)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입장 반영
 - 한·중·일 표준협력체를 통한 고령자 배려 국제표준 협력 강화
 - Accessible design(접근성 관련) 분야 규격 4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안
 - ISO 9999:2007(재활보조기구 용어 및 분류 기준) 등 국제규격을 KS규격으로 도입 추진
- ☐ 세계 각국은 국제 표준화 활동을 자국 산업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
- ☐ 80년대까지 표준은 선진 기업들이 규격의 단순화, 통일화로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여 선진 각국에 의해 시장수요 확대 및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산업시대를 주도하였으며, 90년대 이후 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
-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개한 내용들은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ISO/TMB 산하 특별작업반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배려한 규격 개발지침(ISO·IEC 가이드 71)이 제정되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표준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고,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을 배려하는 국제표준화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음

3) 향후 정책 방향

- ☐ 한·중·일 표준협력체(S-Dialogue)를 통한 표준화 논의 가속화
 - S-Dialogue(한국 주도로 '02년 결성된 민간 표준 협력체로 한·중·일 3국이 매년 순회 개최)에서 고령친화제품의 표준 협력 및 구체적 발전방안 논의
- ☐ 국제 표준화 협력 강화 및 대응
 - 고령자관련 복지규격에 대한 ISO 위원회(TC/SC) 논의시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

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가. 생애주기 자산관리 컨설팅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은퇴 후 연령이 길어짐에 따라 저축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과 실행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현함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저축 수단을 활용하여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
 - 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형태의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
 - 모든 개인이 복잡한 상품의 본질을 적절히 파악하고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 개인의 전 생애주기(lifetime)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비의 패턴을 파악하고 필요한 저축 및 자산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보조하

는 금융서비스, 즉 생애주기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체제의 구축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가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이미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
 - 특히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의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개인의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 미국에서 신용상담은 근본적으로 비영리 미간단체에 의하여 운용되나 실비 정도의 상담료를 피상담자에 징구하고 있음.
 - － 그 외 금융전문인력·회계사·변호사 등의 자원봉사와 기업 및 정부의 지원으로 재원을 충당
-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상담 관련 산업이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최근 유럽 대륙 각국에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대중을 상대로 제공되는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
 -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일부 금융회사가 PB(private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매우 특화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고령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는 개인의 전 생애주기(lifetime)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비의 패턴을 파악하고 개인 별로 필요한 자산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적절히 관리하는 금융서비스
 - － 따라서 다수를 상대로 비교적 표준적인 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PB 서비스와 구분
 - 일부 신문이나 방송의 상담 코너, 또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운용 상담 서비스는 적어도 초기에는 수익성의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

- 전문지식을 갖춘 컨설턴트가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담료 징구가 필요할 것
-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상담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 얼마나 존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 시장 형성 초기에는 시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
 - 일단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에는 표준적인 서비스 체제의 확립 등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며
 -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층이 확대될 것이므로 자생적인 존립기반이 확보되어 갈 것으로 예상

3) 향후 정책 방향

- 은퇴 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상당수의 은퇴 후 노인들이 부동산으로 포함한 보유자산의 적절한 운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 일례로 공신력 있는 노인 단체가 금융회사 정년 퇴직자를 고용하여 일정한 재교육을 거친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상담료, 금융회사에서 수취하는 소개료(commission), 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은퇴 후 노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입각한 저축 및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나.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1)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가계의 상당수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가계 보유 자산의 약 80% 가량은 보유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이며, 60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 70%가 넘어 주거용 주택이 가계의 전체 자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 － 주거용 부동산을 활용하여 임대 소득을 획득함으로써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소수의 다주택 보유자나 대형 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가능한 대안
 - 반면 은퇴 후 노인층이 생활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
 - － 가계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극히 낮고,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각종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산의 축적이 지극히 부진한 상황
 - － 노인층의 현금흐름 확보에 상당한 공헌을 해오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 노인층이 보유 주택 지분의 일부를 유동화(liquidation)하여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의 제공은 노인층의 후생증대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
 -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하여서도 주택 자산의 유동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만기 도래 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 상황에 응하여야 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노인층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생존하는 동안 담보 대상 주택에 거주가 보장되고 장수위험(longevity risk)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한 주택 자산 유동화 방안은 노인층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상품인 것으로 판단
- 전적으로 시장에 의하여 역모기지 상품이 도입되고 운영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

- 금융회사 입장에서 역모기지상품은 현금흐름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위험관리가 까다로운 금융상품
 - － 특히 대출 자산의 장기간 잠금(lock-in)현상, 담보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출 자산 부실화, 채무자의 장수위험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은 매우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함.
- 정부는 대출 자산 매입, 공적 보증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
 - － 시장 도입 초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대출채권 조달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쳐 개입함으로써 시장 조성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는 대출 자금 조달과 대출자 선정은 민간 금융회사가 전담하고 공공부문은 대출자산 매입, 공적 보증 제공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지원에 주력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역모기지 상품이 도입

- 2007년 4월부터 각종 법령정비를 통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체가 되어 역모기지 상품이 도입
 - － 2007년 4월 「200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설치
 - － 2007년 4월과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2007년 7월 역모기지 상품 판매 시작
-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고령자에 대하여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존신토록 지급하고 이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가격, 금리변동, 계약자 장수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판을 금융회사에 제공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이며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요건 만족
-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보험료를 재원으로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위험의 발생에 대비하고 보증기금의 손실 발생 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 2007년 말 현재 515명에 44.4억원 공급
- 비록 도입 초기이기는 하지만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
 - 이는 근본적으로 본인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보유 주택을 후손에 상속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 현행 역모기지 제도가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계된 데도 원인이 있음.
 - 자격 요건으로 설정된 연령과 주택 가액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
 -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연금방식만을 허용하는 대출금 지급형태의 비신축성으로 인하여 자금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무리

3) 향후 정책 방향

- 역모기론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재의 대출 적격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
 - 부부 모두 만 65세가 넘도록 규정한 요건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소 낮추거나 남녀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지나치게 고가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역모기론의 대상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공시지가에 따라 보증료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에 일부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주택 보유를 전제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논리적 기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 형평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논리적 모순에 봉착할 수도 있음.

- 담보가치가 낮은 농촌지역 소재 주택을 역모기지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우인 제공 검토

다.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1) 필요성 및 목적

- 자본시장을 통한 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장기저축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으나 장기 저축수단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산의 구체적 운용을 위임하는 간접투자가 주류를 이룸.
 - － 간접투자의 대표적 형태는 투자신탁이나 주식투자회사(뮤추얼 펀드)
-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 장기간 지속된 음(-)의 주식프리미엄(equity premium) 등으로 말미암아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활황과 자산운용업의 역량 강화로 인한 신뢰 구축에 힘입어 전체 금융 중개 기능 중 자산운용산업이 담당하는 부분이 비약적으로 증대
- 투자자에 안정적인 장기저축 수단을 제공하고 산업부문에 장기적인 투자자금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투자자에 모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함께 자본시장 관련 각종 제도가 근본적인 변환을 겪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율 체제도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자산운용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동산·특별자산 등에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차별적으로 완화

- 펀드 운용과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펀드 모집 및 자산 운용에 관련되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내지 철폐
 - － 투자신탁·주식회사로 한정된 집합투자기구(펀드, Vehicle)의 법적 형태에 유한·합자·조합·익명조합을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산운용업 허용
 - －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여 종전의 제한을 철폐
 - －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 자산운용업 관련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펀드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
- 펀드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기반 강화를 추구
 - － 현재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펀드판매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펀드판매를 광범위하게 허용
- 장기자산운용 수단으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탁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
 - － 금전신탁업의 진입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하향 조정
 - －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신탁업 겸영 허용
 - － 신탁재산 운용대상 자산을 법령에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으로 확대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에 따라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종래 규율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와 감독의 틀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이에 걸맞게 정비되지 못한 측면은 존재
- 자산운용산업과 자본시장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필요 불가결한 전제 조건

-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경영에 따른 내부정보 차단막 정비, 민감한 개인정보 유통의 합리적 범위를 확정하고 위반 시에 가해지는 처벌에 대한 명시 등이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실행될 필요
-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금융회사나 종사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이미 상당한 무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형 은행 등 일부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
- 개인연금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수탁인 의무(fiduciary duty) 준수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

3) 향후 정책 방향

- 자산운용산업의 기반과 경쟁력 강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향후 시행과정에서 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감독 체계와 문화를 정비할 필요
 - 다만 세부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과제가 있으므로 이를 과제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
 - 가령 펀드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공표된 상태이므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한편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는 주로 고액자산가나 기관투자자의 중·단기 투자 활동과 관련되는 과제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다수 일반 국민의 장기적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본 기본계획의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향후에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
 - 현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경영에 따른 내부정보 차단

막 정비, 개인 금융정보 보호, 펀드의 불완전 판매 방지, 개인연금펀드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

라. 장기국채시장 육성

1) 필요성 및 목적

- ☐ 장기국채는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장기저축자산을 운용하는 연금과 생명보험의 핵심적인 자산운용 대상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그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부족 현상은 여전한 상황
 - － 생명보험사를 위시한 일부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운용에 필수적인 장기채를 찾아 해외 자본 시장으로 진출
- ☐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장기국채 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
 - 고령화의 진전은 각종 복지성 지출의 증가는 물론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를 결과하여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의 발생이 예견되고 상당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장기 국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정 적자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 만기 20년의 초장기 국채를 2006년 3월 최초로 발행한 이후 발행 물량이 꾸준히 증가
 - '07년 중 2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는 4.9조원(전체 국고채 대비 10.1%)으로서, 목표(07년 국고채 발행분의 10%)를 초과하여 원활하게 발행
 - 만기 10년의 기존 장기국채시장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3년 만기 국고채를

대신하여 지표채권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령화에 대한 금융부문 대책에 대한 논의의 상당수가 장수위험과 거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시장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
 - 장수위험에 대비한 금융상품으로는 각종 연금이 대표적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세제 혜택 등 많은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일부는 공적 연금의 형태로 국가가 직접 운용하기도 함.
 - 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거시경제위험은 인플레이션 위험이며 이에 대한 유력한 헷징 수단으로 물가연동장기국채(inflation indexed long term government bond)가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종류의 채권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 － 물가연동장기국채의 발행에 대하여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

3) 향후 정책 방향

-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미 발행 중인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
 - 현재 검토 중인 물가연동장기국채의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개인들이 장기국채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안정적인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채전문딜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발행하는 장기국채(예; 미국의 savings bond) 발행을 검토
 - 기존의 장기국채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간접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장기국채에 특화된 펀드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가령 장기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6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제 18 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보완방안

제1절 전략적 교육·홍보

1. 필요성 및 목적

- ☐ 저출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 필요
 - 결혼·출산·가족친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시키며, 활동적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치관 정립
 -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와 ‘나의 자녀’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지출이 우리사회의 지속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를 형성
- ☐ 가치관 형성기인 아동·청소년기부터 학교인구교육을 제도화시키고, 미혼층 및 기혼부부, 중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사회교육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개인 가치관 및 사회적 인식의 확립 필요
- ☐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수준 낮은 수준임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1998년 33.6%, 2006년 25.7% 등으로 계속 낮은 수준이며,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20% 미만으로 결혼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2000년 58.1%에서 2006년 53.8%로 오히려 감소함

〈표 18-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1998, 2006년)

구 분		반드시 해야함	하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음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음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1998년	계	33.6	39.9	23.8	1.1	0.2	1.4
	미혼	20.3	43.0	32.2	1.1	0.2	3.2
	유배우	36.3	40.5	21.4	1.0	0.2	0.7
2006년	계	25.7	42.0	27.5	1.8	0.4	2.6
	미혼	17.7	44.3	32.8	1.2	0.4	3.7
	유배우	27.4	42.5	26.0	1.9	0.4	1.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년, 2002년, 2006년.

〈표 18-2〉 유배우부인의 자녀의 필요성(1991, 2000, 2006년)

연도	반드시 가져야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90.3	8.5	-	-	1.2
2000	58.1	41.5	31.5	10.0	0.5
2006	53.8	46.2	34.1	12.1	-

자료: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전통적인 가족간 부양의식과 기능은 약화된 반면, 이를 대신할 사회적 대안은 미약함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98년 53.2%에서 2004년 43.5%으로 감소하였으며, 노부모의 부양책임이 ‘정부 및 사회(국가)’에 있다는 응답이 1998년 20.5%에서 2004년 40.9%로 매우 증가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정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의 제작과 보급, 슬로건·사연·논술 공모 등의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및 홍보

- TV 프로그램 및 신문 기획기사 제작 지원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 저출산·고령화 교육을 위한 홍보 팸플렛 및 동영상 제작 배포
-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회 확대
- 저출산 사이버 서포터즈, 노인정책 모니터링 운영
-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추진 및 홍보
- 임산부 10계명 선포 등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언론 홍보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와 제도 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 배포
- 주요 정책 대상자별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추진
 -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 등 각 계층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를 홍보매체로 활용
 - － 전통적인 방송매체 외에 인터넷, 블로그 등 신규미디어를 적극 활용함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홍보 및 교육
 - －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
 -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학생용 인구교육 교재 개발: 초·중등학생용 인구교육 참고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인구교육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저출산·고령화 정책 교육 실시
 - － 16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점검 및 교육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담당공무원 연찬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포럼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교육과정 운영: 정책과정 및 실무과정
-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의 중요성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가 및 교육기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회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과 연계하여 인쇄 및 영상 자료를 보급하고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 전광판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 기업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을 후원하거나 출산 지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에 동참

- 출산친화경영모델 설명회
- 언론·민간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광고 공동 캠페인
- 다자녀 가족, 임산부 초청 콘서트 및 연극 개최

□ 정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활발한 홍보활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2007. 12)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6년 78.5%에서 2007년 81.0%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6년 85.7%에서 2007년 84.5%로 약간 감소

□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활동의 양적인 성과는 높으나 각 홍보사업들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상호간의 상승효과는 미약

- 각종 홍보 이벤트들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종료되거나 홍보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가 제기됨
- 가족, 출산, 자녀 가치관은 전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개인에게 흡수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교육·홍보 결과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 사업을 연계·조정하는 정형화된 홍보조직체계가 부재

- 다양한 홍보 방법의 개발과 전략적 접근을 위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사회 각 층의 역할을 조정하고 각 홍보사업들을 체계화 하는 기능이 요구됨

□ 홍보·교육 목표와 대상자 분류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부족함

- 일반국민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홍보·교육 전략을 대상자 단위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자가 주로 활용하는 매체, 이용하는 시간대를 분석하여 홍보·교육의 완급,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인식 개선 등 고령화 홍보에 대한 상대적 부족

3. 향후 추진 방향

□ 정책의 완성을 위한 전략 홍보

-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별로 필요한 주요 세부정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의 신뢰도,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체 신뢰도 및 여론 파급력이 높은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안내 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 보급
- 저출산·고령화 세부정책은 기업에 비유하면 상품에 해당하며, 기업에서 상품 홍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같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별도의 교육·홍보예산 확보
- 유사 사업의 경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면 비용효율성 증대되므로 유사사업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

□ 가치관 전환을 위한 홍보

- 출산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 양성 평등적 가치관 확산을 위하여 정책 대상별 성향 및 매체 활용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캠페인 실행
- 바람직한 노후 생활상의 제시를 통해 사회 참여 및 일하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세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 실행
- 생애경로별 맞춤형 교육홍보 자료, 교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아동·청소년, 군인, 미혼 남녀, 무자녀 부부, 유자녀부부, 직장인, 고령자 등 대상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지속 전개

[그림 18-1]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교육계획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교육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 결혼·출산·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 － 세대통합적·고령친화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 |
|---|

단계	홍보교육 내용
아동·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인구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의 내실화, 인구교육 참고 교재 개발 - 생명의 소중함, 가족가치관 및 양성평등의식 정립, - 노인 및 부모 공경 인성 교육, 학교 폭력 예방 - 금연, 음주, 약물 남용 예방
↓	
청년기 (결혼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군대 사회교육 -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 가족·자녀가치관, 양성평등의식 강화 - 노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 결혼준비교육, 부모·가족생활교육 등
↓	
중년기 (출산·자녀양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회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및 홍보, 시민토론회, 포럼 등 - 학부모에 대한 인구교육, 직장·민방위 교육 활용 - 일·가정 양립, 출산 친화 태도, 양성평등의식 강화 - 세대간 통합의식 함양, 가족생활 교육 - 출산·육아관련 정보제공,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 - 가정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생활 체육·운동 등 홍보
↓	
장년기 (자녀성장·자녀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형 캠페인 확대 - 각종 박람회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 노후생활 대비 역량강화 교육 -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 캠페인, 노인학대 예방 홍보
↓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노인 역할 모델 정립 - 노후생활과 시간 활용에 대한 태도 개선 (자아개발과 적극적 사회참여) -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노인 역량강화) - 건강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적극적 참여 태도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재해 예방 등에 대한 홍보

□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 언론, 기업과 사회단체 등 협력 가능한 사회주체와 연계한 통합 홍보 기반 구축
- 민간 교육사업 지원 및 민관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사회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분위기 형성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추진시기에 따라 교육·홍보의 주요대상을 전략적으로 선택

-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사회적 지도층에 교육·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전문가를 교육·양성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 교육자원 확보
 -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아동·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 확대 실시

〈표 18-3〉 사업시기에 따른 교육·홍보 대상

구분	대상층	개인	기관
사업초기 ↓	사회적 지도층	정부 지도자, 관련 공무원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수행기관
		기업가, 사회지도자, 지식층, 교육자 등	경제계, 종교계, 여성시민계, 노동계, 언론, 보건의료 및 노인관련 협회·단체, 교육계
사업후기	중점대상층	기혼부부, 미혼 남녀, 직장인, 군인	일반기업, 군대, 사회문화시설, 결혼상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미래세대(아동·청소년층)	
	일반국민	중장년층, 고령층 일반국민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대국민 인식개선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계·조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홍보의 상승효과 유도
 - 세부사업의 주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인식개선사업의 교육 및 홍보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사회단체-소그룹 및 개인’의 다원화된 홍보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세부사업에 따라 홍보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역할을 분담하고, 생애경

로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

□ 홍보 추진 전략

〈표 18-4〉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핵심 대상	홍보 방향	메시지 전략	매체 전략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림 •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내용 및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도가 높은 토론 혹은 보도 프로그램 • 온라인블로그
오피니언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적 오피니언 리더의 확보 및 관리 • 우호적인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적극적 의견 표출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협력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간담회 • 워크숍 • 민간전문가 양성교육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를 선점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뉴스를 제공하는 등의 원원할 수 있는 관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 공감, 이슈화 •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공감 및 이슈에 대한 우선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간담회 • 공동 기획

〈표 18-5〉 결혼 및 출산에 유리한 가치관 조성을 위한 홍보전략

핵심 대상	홍보 방향	메시지 전략	매체 전략
20~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 메시지 전달 • 결혼에 대한 직간접적인 긍정적 이미지 소구 • 올바른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객관적 여론 형성 • 사회 참여 및 일하는 노후 생활의 소중한 가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가족과 형제의 의미, 자녀가 주는 기쁨 • 성평등한 의식과 부부의 의미 • 준비하는 노후 멋진 인생 • 젊어지는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일간지(생활, 여성중심) • 무가지, 스포츠지 • 여성매거진 • TV교양, 오락프로 • 공익 광고 • 라디오(출퇴근 시간대) • 직장/군대교육
40~50대 중장년층 및 노인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적인 가족, 자녀 가치 전파의 메신저 역할 부여 •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긍정 이미지 전달 • 안정적, 성공적 노후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달 및 실천 동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가족과 손녀, 자녀가 주는 기쁨 • 역동적인 노후 생활은 곧 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일간지, 시사주간지, 무가지 • 온라인 포털 • 직장 교육
10대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결혼에 대한 가치 전달 • 부모 및 노인공경 대한 가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행복함, 즐거움 • 바람직한 부모상,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를 위한 매거진 • 온라인 커뮤니티

		상, 노인상의 모습	• 학교인구교육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문화에 대한 지지를 통해 동기부여 • 노령 인력의 자산 가치에 대한 논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좋은 인력 유지 • 고령의 고급 인력에 대한 가치 재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일간지, 경제지 • 교양/보도 프로그램

〈표 18-6〉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홍보 전략

핵심 대상	홍보 방향	메시지 전략	매체 전략
시민단체,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여론 조성 역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언론
여성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가족, 남녀 성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 제시를 통해 해결책 제시 당부 •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에 관한 여론조성 역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가치관, 인식 변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언론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저변에 나타난 관련 현상에 대한 공론화 제시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체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속적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세미나, 언론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기업에 초래 할 파급효과에 공감하고 공익 캠페인 동참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범정 부적인 공익 차원에 서의 기업 동참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언론
국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경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발전적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심포지엄 • 공동포럼 • 언론

제2절 정책공동체 운영 및 사회적 합의 실천

1. 필요성 및 목적

-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응방향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사회 제부문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구체적 정책추진 과제와 계획에 대하여는 공감대 부족
-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 형성에 기여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쟁점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전 국민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참여 도출
-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원칙
 - 국가, 시민사회, 기업, 노동자의 민주적이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 도출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계급, 계층, 성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모범의 실현을 통해 가능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정부, 기업, 노동,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 사회부문이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출범('06.1)하고 사회협약 체결('06.6)
- 사회협약을 토대로 정부 및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단체의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실천사업 추진
 - 정부, 시민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 등 정책 파트너십 구축
 -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사회협약 체결('07.8)
 -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 폐지
- 지역차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양육 민·관 후원협의회」 구성 및 「지역사회협약」 체결 추진
 -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언론계, 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협약 체결

- － 민·관 협의회 구성(16개 시·도) 및 협약식 체결(14개 시·도)

〈표 18-7〉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국가(정부)	<input type="checkbox"/> 모든 국가 기관이 독립적 주체로서 정책대안 마련 및 실천에 참여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관련부처 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대안 및 재원에 대한 합의 도출 - 상시적 정책 조정과 합의 틀 마련과 정책 비전 제시 - 정책목표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 배정 협의 <input type="checkbox"/> 지방정부: 중앙-지방, 지방-지방 정부간 합리적 거버넌스 확보를 통한 정책의 실질적 참여 - 기본계획에 근거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input type="checkbox"/> 국회(정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 제정과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정치적 합의 도출 - 정파적 이해를 지양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정책실현의 근거(법) 마련과 정책적 합의 실현
시민사회	<input type="checkbox"/>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의 참여 <input type="checkbox"/>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써 역할 수행 <input type="checkbox"/> 책임 있는 비판과 정책대안의 원칙과 방향 제시 <input type="checkbox"/>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여론 공론화 <input type="checkbox"/> 여성, 노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 등에서 실질적·생활적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주체로서 참여
노동계와 기업	<input type="checkbox"/> 노동계: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조 및 노동문화를 남성·여성친화적인 노조 및 노동문화로 전환하고, 단체협상 등의 주요 의제로 가족친화적 정책 상정 <input type="checkbox"/> 기업: 미래 노동력과 소비자 확보라는 측면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비용분담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건에 적극적 참여
언론	<input type="checkbox"/> 특정 주체의 일방적 의사 전달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체간의 의견을 공평하게 전달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의 핵심적 쟁점에 대한 공론 활성화 역할 담당 <input type="checkbox"/>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 기능 수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2008.2)으로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심의기관으로 변경되고,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이 폐지됨에 따라 범사회적 대응체제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음

3. 향후 추진 방향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연석회의 설치·운영
 -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중앙연석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파트너십을 유지·강화하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각계 인사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 논의
 - 사회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실행하고 이행정도를 점검·평가
- 지역사회 차원의 자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약”의 추진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민·관 협의체에서 지역사회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실시
 - 정책대상군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공동체 역할 활성화
 - 정부차원의 중앙연석회의(가칭)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부과제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특히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연계 강화가 중요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요건임
 - 현재 중앙단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보건복지가족부 직제에 포함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총괄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평가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
 - － 특히,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사업관리기반이 미약함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연계의 강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집행’과 더불어,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시

켜 지자체 주도로 정책의 자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최종 수요자(수혜자)는 지역단위의 가족이 중심이 됨

- 따라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과 “중앙의 정책목표에 조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라는 연계적 접근이 필요
 - 이러한 연계적 접근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을 단위로 밀착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아동,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전체의 통합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역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함

나.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각종 정책은 12개 정부부처(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열거된 242개 세부사업들은 기존의 해당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어 담당 부서를 한 개의 실이나 국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함
 - 200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조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 국과 13개 과의 직제로 완전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5개 시·도(93.8%)가 과 또는 계 단위의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203개 시·군·구 중 10개 시·군·구(4.9%)가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 부서를 신설하였을 뿐이며, 70개 시·군·구(34.5%)는 총괄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23개 시·군·구(60.6%)는 총괄부서 뿐만 아니라 총괄담당자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대응 및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부족
 -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대응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접근방식임
 - 그러나, 지역간에 서비스 수요, 지역복지자원, 기존 시설충족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서비스 이용자 부담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통제위주의 평가, 보고위주의 지도감독방식이 유지될 경우 지역실정을 반영한 전략적 기획 및 이에 기반한 정책집행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음
 - 한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가 중요하나 실제 일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재하여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9개 시·도(56.3%)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근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88개 시·군·구(92.6%)가 저출산·고령화 총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3.8%는 전문성이 ‘높은 편’(평균 3.2)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7.1%가 ‘그저 그런 편’(평균 2.4)이라고 응답하여 담당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68.8%)와 20개 시·군·구(9.9%)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 인력이 지역계획 수립·조정·관리·감독·평가·환류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실무 전문교육이 필요함
 - 또한, 중앙 및 지방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전문강사, 교재, 참고자료,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등의 교육자원 개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지역협력네트워크 미비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단위로 한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
 -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짧아서 아직까지 지역협력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된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목표은 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지역협력네트워크의 미비는 지역에서 서비스 결정자, 공급자, 이용자 간에 유기적인 조정,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하여,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약화시키고, 부족한 지역자원 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 향후 추진 방향

-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정책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러한 경험 축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정책공동체에서는 구체적으로 핵심과제 발굴, 공동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FAQ 등을 통한 질의응답체계 마련
 - 공동워크샵,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 설명회 등 개최함
 -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상이하게 요구되는 역할의 조정과 저출산·고령

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술지도 및 업무교류(중앙기술지원단: 가칭)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현황 및 고령화 정도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여건이 상이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 특히 이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거나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미래사회 대응모델을 마련하고, 관련정책 시범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사전 검증한 후 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책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화 전문가의 지역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경험 및 자체역량 부족으로 인한 자율적 정책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조직, 인력 및 소요재원 확보 지원
 - 저출산·고령화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처별 접근이 아닌 전담조직 필요
 -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중앙-시·도-시·군·구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설치 지원
 - 또한 정책의 안정성, 장기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인력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을 기획·지도·관리·감독·평가하는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문교육과 보수교육 실시
- 기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과정이 저출산·고령화문제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공무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이 개발·보급
 - 심화교육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은 최소 1주일(35시간)이상을

배정하고, 교육방법으로는 그룹토의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체득할 수 있는 자율적 교육방식(self-learning study)을 도입

- 집합교육 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우수사례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주기적인 연찬회를 통해 이를 공유해 나감으로써 효과적인 실무교육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인력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이용하기 편이하도록 지역의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제공하는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을 개발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강사의 육성,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의 개발이 시급함
-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양성되는 전문강사에게는 ‘인구교육사’와 같은 자격증을 수여하여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가족생활교육, 인구교육 등의 사회교육을 확대

라. 참여주체별 역할

- 중앙정부: 정책 투명성 강화 및 강력한 조정력 발휘
 - 중앙의 다양한 부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정책 투명성 및 조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세부 정책별 성과 가시화까지 고려한 정책추진 필요
 - － 일례로 보육정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등은 가족수당 등의 지원정책, 주택혜택, 사회보장개혁, 노동력 정책 등에 비해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집행자 및 최종 대민 서비스 제공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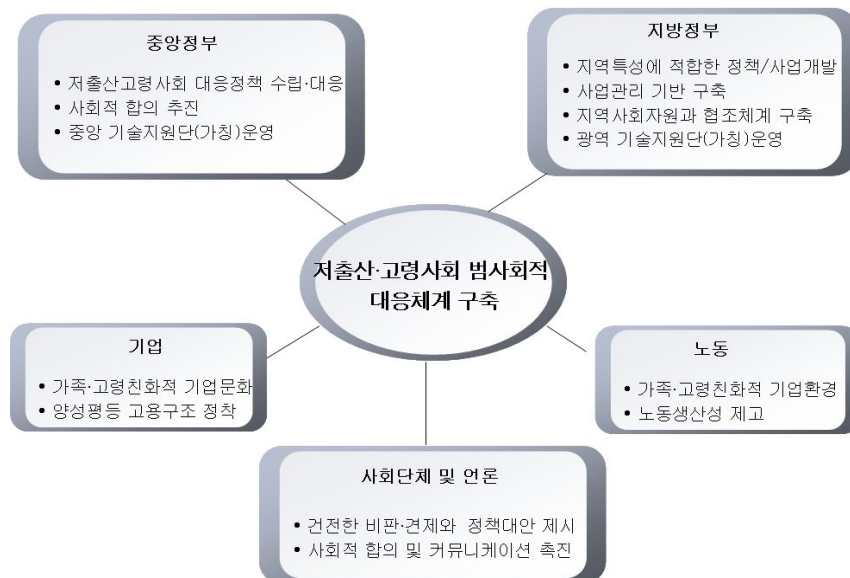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대응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짐. 따라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가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은 많은 비용 없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수 있는 장치이므로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심혈을 기울여야 함
 - －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만큼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지역 시민사회, 지역의 기업,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내는 지역단위 조직 및 이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
 -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하는 정책과 관련해 적절한 기능 및 역할 부여방안 검토
- 또한 일선 읍면동이나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중)는 최종적인 대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따라서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최종 수요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책노력 및 이로 인한 수혜를 체감함으로써 정책성고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일선 읍면동의 ‘정책 프로그램의 현장성’ 강화

□ 지역 시민단체 및 복지자원

- 지역의 시민단체 및 복지자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최종 수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는 동시에 형평성 측면에서 견제하는 역할 수행
-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
 - － 일례로 정부의 ‘육아·보육부담의 사회화’를 위한 세부 정책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성화 시켜야 함

- 또한 이들 지역 시민단체 및 복지자원은 역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노인, 여성,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을 욕구를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따라서 이들을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그림 18-2] 저출산·고령사회 범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민간기업

- 지역 민간기업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중의 하나인 여성의 양육부담 및 자기개발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지역 민간기업이 육아·보육부담을 덜어주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민간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유인책이 마련
 - － 지역 민간기업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유인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틀 내에서 세부 방안 마련

2.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관련 정책 수립·추진의 과학적 분석기반 마련
 - 인구변동의 횡단적 실태와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널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 원인분석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인과 관계 규명
- 효율적·비용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저출산 원인 규명 및 정책의 수요·효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이동 파악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패널 구축이 긴요함
 -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패널 DB 구축 목적은 현시점의 출산행위가 과거나 바로 직전의 어떤 요인에 의해 실천으로 옮겨졌는지 파악하고,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개인과 가족의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며, 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과 결혼·출산·양육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현재 국내에서도 패널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패널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직업, 임금, 노동, 교육, 사업체 등 특정영역에 초점을 두어 맞춰져 있어 인구정책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추진중인 주요 패널조사 현황>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패널, 사업체패널, 고령자패널 등 | |
| ▶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패널조사, 대졸자 패널 | ▶ 한국개발원: 소득패널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인적자본 기업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 | |
| ▶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패널조사 |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후소득보장패널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자활패널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

나. 실적 및 문제점

☐ 인구패널 및 DB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2007년에 전국 119개 조사구 1,520가구에 대해 예비조사 실시
 - 15세~49세 가임여성이 있는 가구 및 13세 이상 가구구성원
 - 조사표 설계: 가구조사표(공통), 청소년조사표(중·고등학생), 미혼자조사표(20세~49세 미혼 남·여), 기혼자조사표(15세~59세 기혼 남·여), 노인조사표(60세~)
- ☐ 당초 인구패널의 의미가 출생, 사망, 이동, 결혼, 이혼 등 인구와 관련된 제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음
 - 그러나 저출산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출산·고령화 원인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패널로 수정이 요구됨

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널 DB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 저출산 정책 패널과 고령사회 대응 패널조사를 분리하여 수행

- 저출산 정책 패널은 인구패널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
- 고령사회 정책 패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DB 구축

☐ 저출산 정책 패널은 조사대상을 핵심대상으로 축소

- 인구패널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대상이었던 13세 이상 가구구성원에서 결혼

및 출산에 가장 밀접하면서 직접적인 행위로 이행될 수 있는 만15세~49세 사이의 미혼자 및 기혼자로 축소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적정규모의 표본규모 확보 필요

- 대상가구에서 모든 대상자(기혼자, 미혼자, 청소년, 노인)를 만날 수 없는 실정
이므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
- 본 조사에서 만 15세~49세 기혼과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는 충분한 표본 확보

	【예비조사】		【향후 추진방향】
조사대상가구	15세~49세 가임여성이 있는 가구	⇒	15세~49세 가임여성이 있는 가구
조사대상자	13세이상 가구구성원	⇒	가구구성원 중 15세~49세 미혼자 및 기혼자
조사표 설계	가구조사표(공통) 청소년조사표(중·고등학생) 미혼자조사표(20세~49세 미혼 남·여) 기혼자조사표(15세~59세 기혼 남·여) 노인조사표(60세~)	⇒	가구조사표(공통) 미혼자조사표(15세~49세 미혼 남·여) 기혼자조사표(15세~59세 기혼 남·여)

□ 패널명칭의 명확화

- 인구패널은 인구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광범위한 현상의 파악을 위한 패널로 오
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저출산 해결을 위한 패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
록 그 명칭을 ‘저출산 정책 패널’ 등으로 조정함으로써 패널구축 목적을 패널명
에서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저출산 정책 패널 조사표는 결혼 및 출산에 집중하여 재설계

□ 패널관리 방안

- 패널분석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
- 저출산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의 지속개발과 분석

- 조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등의 도입을 검토
-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패널과도 연계방안 모색

참고문헌

- 가정간호학회, 『가정간호표준』, 2007.
- 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20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2006, 2008.
-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 자료, 2005.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 고보선·허준수, 「노인의 학대 대처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pp.125~141, 2005.
- 고양곤·김동배·임춘식·모선희·원영희·이금룡·박준기,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pp.147-166, 2001.
-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도 국내외 유학생통계』, 2007.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7.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nso.go.kr>
- 국민연금연구원, 『2007년 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추계모형 재구축 및 재정시뮬레이션』, 2007.
- 국민은행, 『'07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 근로기준협회, 2004.
- 김기수, 대한신생아학회, 자료집
- 김미숙·홍미, 「아동발달계좌(CDA)사업의 의의와 과제」, 2008.
- 김미숙·김효진·홍미, 『아동발달계좌(CDA)사업 관리운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김유경·서문희·임유경, 『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주현·한경혜,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pp.209-224, 2001.
- 김창진,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료서비스 개선방안 - 노인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동부,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노동부, 『2007년 5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2007.
- 노동부, 『2008년 노동백서』, 2008.
- 노동부,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제도의 사회적 영향 분석』, 2004.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 연도.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 노동부워크넷, 『'07. 취업캠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결과』, 2007.
- 노동부훈련정책과, 『재작자 향상 훈련의 여성참여 비율』
- 노인복지시설협회, 『한눈에 보이고, 한손에 잡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 시리즈』, 200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사업 운영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사업프로토콜』, 2007.
-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동목욕서비스지침서』
- 대한상공회의소, 2005.
- 대한신생아학회, 『신생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경영수지 분석보고』, 2004.
- 도병욱, 「한국에서의 환자중심진료 현황 -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운영전략」, 『가정의학회지』, 20(11), pp.1297-1304, 1999.

- 독일 통계청,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 2008.
- 문애리, 2002.
- 박기동,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 분석」, 『가정의학회지』, 24(4), pp.328-345, 2003.
- 박대식·마상진·심재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박민수 외,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별 지원현황 및 국가의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가정의학회 학술상원고, 2004.
- 박수미,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2002.
- 박수미,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생애주기별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4-03』, 2005.
- 박수미·남재량, 『고용촉진훈련의 성별 훈련성과』, 2004.
- 박영란 외, 2000.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계획』, 2006.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인정지침』,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 자료집』, 2008.
- 보건복지가족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6, 2007,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침』,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8. 3.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6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 발표』, 2007.
- 보건복지부,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내부자료』, 2007.
- 보건복지부,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2007.
- 보건복지부, 『2008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각 연도.
- 보건복지부,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지침』, 2007.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이론 / 실습』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업무편람』, 2000.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실적보고』
- 보건복지부,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2002.
- 보건복지부, 『2005년 보건복지백서』, 2006.
- 보육연구소, 2007.
-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2007a.
- 서문희 외, 『여성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서문희·나정·최혜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서문희·최혜선, 『영아보육 종합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b.
- 선우덕, 『선진 외국의 노인병전문 의 제도 현황』, 제 29차 대한노인병학회 춘계학술대회, pp.10-27, 2002.
- 성년후견제도 연구회, 『성년 후견제도 연구』, 사법연구재단, 2007.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왜 성년후견제인가』, 장애우권익연구소
- 송순영, 「고령자 소비자정책의 발전방향」, 『소비자문제연구』, 30, 2006.
- 송순영, 「일본의 노인소비자 정책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4, 2001.
- 스웨덴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스웨덴 통계청, 『Statistics Sweden』, 2008.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성능개선보고서』, 2007.

안상훈, 「우리 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 및 선진국들과의 비교분석」, 『가정의학회지』, 22(4), pp.483-497, 2001.

여성가족부,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 결과』, 2007.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07.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2005.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06.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2005.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실태조사』, 2005.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안 공청회』, 2006.

영국 통계청, Population Trends 132-summer 2008.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침』, 2008.

윤석명·김대철,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윤석명·이용하·김재경·박성민·김병률·김대철·신화연,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윤석명·정경희·신화연·문형표·권문일,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윤종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정의학회지』, 27(4), pp.501-504, 2008.

윤태형,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

윤홍식, 「OECD 국가들의 남성 돌봄 노동 참여 지원정책과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부모부성휴가를 중심으로」,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5.

이가옥, 「한국 노인자원봉사의 현황과 과제」, 『성공회대학논총』 10, 1997.

이금룡,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모집전략 방안: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노년학』 23(3), pp.79-94, 2003.

- 이금룡,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성인교육학회, 5(2).
- 이기숙·박은혜·김희진 외,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노동부, 2002.
- 이동목욕지침(일본자료. 출처 불명)
- 이삼식 외, 「남북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인구전망과 정책」, 2005.
- 이성천,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윤삼현,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 이연호, 「선진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pp.165-192, 2001.
- 이혜영, 「가정간호표준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日本 保育研究所, 『保育白書』, 2007.
- 日本 厚生労働省, 「小子女社會對策大綱に基づく重點施策の具體的 實施計劃について」, 2004. 12.
- 일본성년후견법학회, 『市町村 권리옹호기능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회보고서』, 2005. 3.
- 장현숙·남소영·이태범·진영란·최보아, 『방문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활성화방안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장현숙·유선주·김은경, 『공공병원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연계지침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 장현숙·유재성 외,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 장현숙·유재성 외, 『고령친화산업발전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 장현숙·유재성 외,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방안 기획』,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학기술부, 2007.
- 장현숙·유재성 외, 『제1차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보건

- 산업진흥원, 2008.
- 장현숙·진영란 외,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 국제 비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 장현숙·진영란 외, 『고령친화 용품·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장현숙·진영란·김정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간 기능역할 설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 장혜경·이미정·김영란 외,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장혜경 외, 『2005년도 전국 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5.
- 장혜경·홍승아 외, 『주요선진국의 저출산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05.
- 재가노인복지협회, 『요양보호사 교육교재』
-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사업통계백서』, 2006.
-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매뉴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본고령사회백서』, 2006.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내부자료』, 2008.
- 전철수, 「주치의제도 시행 제안」, 『가정의학회지』, 20(5), pp.470-486, 1999.
- 정경희·이윤경·오영희·김상철·노명우·박신영·설재훈·방효정,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6.
- 정경희·이윤경·이소정·오영희·방효정·권금주, 『노인학대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
- 정경희·이윤경·이소정·유삼현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 정경희·최현수·방효정·이현주·석재은,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 정경희·최현수·방효정,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7.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정경희 등,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
- 정경희 외, 2002.
- 정경희,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7, pp.11~26, 2004.
- 정경희, 「퇴직자의 제2의 인생설계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심포지엄 자료집』, 2007.
-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정부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6.
- 조남훈 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조병구 외, 2007.
- 조영태·정경희·최상희·이윤경·정소연·방효정,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 2006.
- 조은희, 「한국의 노인병 전문의 수요 추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
- 질병관리본부, 『내부자료』, 2008.
- 청목출판사, 『재가노인복지론』, 2002.
- 최성재,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최숙희·김정우, 『획기적 출산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6.
- 통계청, <http://kosis.nso.go.kr>
- 통계청,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 2007. 1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2005.
-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결과』, 각 연도.
- 통계청, KOSIS, 2008.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 프랑스 통계청, The population of France in 2007.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4.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 한국노동연구원, 『'03년 육아휴직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실태조사』, 2002.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200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기 노인일자리사업 백서』, 2008.
-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와 후견인제도』, 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20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 국제비교』, 200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체계 정책 포럼』, 2008.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통계』, 2006.
-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2005. 4. 1.

- 한영자 외, 『모성사망 수준 및 사망원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한영자 외, 『영아 사망·사산 원인 및 위험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한유미 외, 『스웨덴의 보육제도』, 학지사, 2005.
- 한정란·김동배·원영희·이금룡, 「노인 자원봉사의 교육노년학적 의미」, 『*Andragogy today*』, 4(3), 2001.
- 한정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 준비교육」, 『연세교육연구』, 11(1), pp.263-285, 1998.
- 홍승아, 2005.
- 황나미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체계 및 의료지원 방안』, 2000.
- 황나미 외, 『수요자 중심의 모자보건사업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2004.
- 후생노동성, 『일본의 모자보건』, 1999.
- 후생노동통계, <http://www.dbtk.mhlw.go.jp>

- Andersson, G., "The impact of labour 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6, 2000, pp. 293-333.
- Brendan M. Reilly, Gordon Schiff, Terrence Conway. "Primary care for the medically underserv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isease-a-Month*, Volume44, Issue7, pp.320-346, 1998.
- Chang, Jiyeun. 1996.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
- Christohperson, 1997, Gornick & Meyers, 2001에서 재인용; Morgan, 2005
- Cleveland G., & Krashinsky M,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an OECD Early Child Care Education and Care Workshop in Rotterdam, January, 2003.

- DHHS, 2005
- Dumon, 1992
-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90.
- European Commission, *The Job Creation Potential of Service Sector in Europe*
- Gustafsson, Kenjho and Wetzels(2002)
- Harper & Row,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ition), 1970.
- Hass, L., *Equal Parenthood and Social Policy: A Study of Parental Leave in Sweden*,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Health Canada, 2006-7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2007
- Health Canada, *Perinatal Health Indicators for Canada*, 2000
- Hoem, B. and Hoem, J.M.,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 1996.
- Hoorens, S., A. Parkison, and J. Gran,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 JASPA(Japan Assistive Products Association; 日本福祉用具・生活支援用具協會)(<http://www.jaspa.gr.jp>)
- Jo, Y.S., *A Study on Husband'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Nursing Science, No. 6, pp86-97, 1994
- Karoly, L. A., Kilburn, M. R., & Cannon, J. 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Proven Results, Future Promise*, RAND Report, 2005.
- KDI, 2004
- Khanna J., Van Look PFA, Griffin P.D., *Reproductive Health: a key to a brighter future*, WHO, 1992.

L. Gregg, 1998

Leria, A.,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ition), Harper & Row, 1970.

Midgely, J. Growth, redistribution and welfare: Toward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Review*, March, 1999.

Moen, P. 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ed.) by G. Elder Jr.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OECD, 2003.

OECD, *Babies & Bosses*, vol. 1-4, 2002-2005

O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OECD Country Note*, 2007. URL: <http://www.oecd.org/eccec>.

O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OECD Country Note*,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2001-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OECD, *OECD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8.

OECD, *OECD Factbook 2005-Actual Hours Worked*, 2005

OECD, *OECD family data base*. 2007.

OECD, *Start Strong I*, 2002.

OECD, *Start Strong II*, 2006..

OECD, 『Taxing Wages 2004/2005』, 2006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Volume 1*, 2002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ustria, Ireland and*

- Japan, Volume 2, 2003.*
-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2005.*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06-7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2007
- Quality of care principle - Residential care standards와 Community care standards(The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1997)
- RAND Report
- Rand, 2004
- Reynolds, A. J., & Temple, J. A, Prevention and Cost-Effectiveness in Early Intervention: A 20-year Follow-up of a Child-Parent Center Cohort, 2006.
- Sampson et. al, 2002
- Save the Children, 2006. 5
- Shaw & McKay, 1969
- Sherreden,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te, Ind, 1991.
- Silverstein, M.&Parker, M.,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Sweden", *Research on Aging*, Volume24 Issue5, pp.528-547, 2002.
- Sleebos, 2003
- Standard for home health, Personal care, Support services, and hospice(Joint Commission, 2007)
- Standard for home medical equipment, clinical respiratory,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services(Joint Commission, 2007)
-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2003)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 UN, 2004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United Nations,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World Bank, 2007 *The World Bank Group* (HNPStats), 2007.

<http://nip.cdc.go.kr>

http://www.phac-aspc.gc.ca/new_e.html

부 록: 분과별 과제 색인

I. 저출산분과

1. 결혼·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가. 신혼부부 출발 지원	136
○ 결혼준비교육 지원	136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	137
○ 결혼·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개선	138
나.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139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39
○ 질적인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서비스 제공 체계화	162
○ 보건소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투자	166
○ 영유아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범위 확대	167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간 연계실시 및 통합적·체계적 관리	167
○ 원치 않은 임신의 사전 예방 및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대책 강화	168
○ 정기적 종합적·체계적 주산기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	169
○ 임신에서 취학전 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169
○ ‘찾아가는 산부인과’ 프로그램 도입	172
○ 불임부부 지원	173
○ 산후 도우미 지원	180

다. 자녀양육 지원체계 확립	182
○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82
○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도 활성화	186
○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188

2. 보육·교육체계 선진화

가. 육아지원 시설 확충	192
○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강화 및 균형 배치	192
○ 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균형 배치	197
○ 통합적 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198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확대	200
나.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질 향상	203
○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203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208
○ 종일제 유치원 운영확대	211
○ 문화시설내 육아시설 설치 운영 지원	213
○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13
○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221
○ 보육서비스 정보 공시 의무화	223
○ 수요자 중심 보육·육아 정책 개편	226
○ 보육비용 지원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개선	227
○ 유아대상 기본보조금제 시범운영 후 도입 검토	228
다. 교육·보육 지원체계 구축	229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229
○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 지원	235

3. 직장-가정 조화

가. 휴가휴직제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237
나.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251
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258

4.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67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67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70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강화	274
○ 건강한 정신, 행복한 성장 정서지원 서비스 확충	277
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확립	280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의 강화	280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구축	283
○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285
○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286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289
○ 드림스타트 활성화	292
○ 아동발달계좌 확대	299
다. 국내입양 활성화	306

5. 가족사랑 문화조성

가.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312
나.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14
다. 가족문화 조성사업	317

Ⅱ. 고령사회 분과

1. 노후안정망 구축

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352
□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및 개선	352
○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355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357
□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및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재구조화	358
○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358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360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363
○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363
○ 개인연금 활성화	366
나.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367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367
○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지속적 추진	369
○ 예방 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의 재편	370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371
○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372
□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373
○ 허약노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373
○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374
○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377
○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81
□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383

2. 노인보호체계 강화

가. 노인요양보호체계 강화	388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수급대상자 확대	388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	388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확대	392
○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393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397
나. 노인권익보호 강화	398
○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398
○ 독거노인의 보호강화	406
○ 노인의 권익보호	409
- 소비자로서의 노인의 권익보호	409
- 성인후견인제도	411

3. 적극적 사회참여 보장

가. 노인의 사회적 기여 기회 확대	414
○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414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	423
-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보급	423
- 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가시화	427
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 제공	432
○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432
○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433

4.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가.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435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35
-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435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438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440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440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443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45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45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447
나. 고령친화적인 문화적 환경 조성	452
○ 세대간 이해 증진	452
○ 노후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	455

Ⅲ. 성장동력 분과

1.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81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481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483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484
나. 고령자고용촉진 지원강화	487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지원	487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489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491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92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493
다.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495
○ 외국적동포 활용	495
○ 우수외국인력의 적극조치	496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선	497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503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가.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504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내실화	504
○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507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508
○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510

나.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514
○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	514
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515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515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52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522
○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	522
○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523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설립	529
○ 향후 정책 방향	531
나.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532
○ 고령친화 복지용구 연구개발(R&D) 및 산업육성	532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지원 및 확충	535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539
○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및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R&D) 활성화	550
○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553
-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산업클러스터	553
- 고령사회 특화 지역복지모델	555
○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556
○ 우수제품 전시기획 확대	556
다.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558
○ 고령자·장애인 복지 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558
○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560

라.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561
○ 생애주기 자산관리 컨설팅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561
○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564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567
○ 장기국채시장 육성	570